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NABO Economic Outlook for 202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총 괄 |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 조정 |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 진 솔 경제분석관
김 원 혁 경제분석관

작 성 |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김 경 수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이 두 영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강 은 정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황 종 률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김 원 혁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설 경 원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황 소 정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김 윤 희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조 은 영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김 용 균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유 기 환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이 진 희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김 상 용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천 경 록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한 승 룡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홍 지 은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백 기 홍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 | 장 수 지 행정실무관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 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9.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외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의 경기 개선이 수출과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을 발간하였습니다.

제Ⅰ부 「동향」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 동향을 담고 있고, 제Ⅱ부 「지출전망」은 실질 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소비자물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Ⅲ부 「생산전망」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총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있으며, 제Ⅳ부 「소득전망」은 국민총소득을 비롯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전망을, 제Ⅴ부 「지속성장」은 잠재성장률,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 마련과 의정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NABO 2026~2030년 중기 경제전망: 지출]

(단위: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국내총생산		1.1	3.5	2.7	2.5	2.5	2.4
최종소비		1.8	2.5	2.2	2.1	2.0	2.0
민간소비		1.5	2.3	2.0	1.8	1.9	1.9
정부소비		2.7	2.8	3.0	2.7	2.5	2.4
총고정투자		-3.4	3.5	3.8	3.1	2.9	2.8
주체별	민간투자	-3.9	4.5	4.1	3.3	3.1	2.9
주체별	정부투자	-0.2	-1.4	2.0	2.0	1.8	1.8
유형별	건설투자	-9.7	0.6	1.5	1.0	1.0	1.0
유형별	설비투자	1.5	6.9	6.4	5.0	4.5	4.2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4.2	4.1	3.9	3.7	3.5
총수출		4.3	9.0	4.2	4.2	4.2	4.0
총수입		3.3	7.6	5.5	5.0	4.8	4.7
경상수지(억달러)		1,231	4,300	4,400	4,500	4,550	4,600
상품수출(통관)		3.8	54.0	10.0	5.0	4.7	4.3
상품수입(통관)		0.0	22.0	9.0	6.0	5.0	4.4
GDP디플레이터		3.2	17.8	4.4	2.5	2.3	2.2
소비자물가		2.1	2.7	2.4	2.2	2.0	2.0
명목 국내총생산		4.4	22.0	7.3	5.0	4.8	4.6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NABO 2026~2030년 중기 경제전망: 산업]

(단위: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국내총생산(RGDP)	1.1	3.5	2.7	2.5	2.5	2.4
총 부가가치	1.3	3.7	2.8	2.6	2.6	2.5
제조업	2.4	7.0	4.3	3.3	3.1	2.8
서비스업	1.7	2.6	2.4	2.4	2.5	2.5
건설업	-9.2	0.0	1.1	1.3	1.1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6	0.1	1.5	1.2	1.2	1.1
기타	0.1	0.1	0.3	0.4	0.4	0.4
순생산물세	-0.4	1.4	1.3	1.2	1.1	1.1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은 기타로 통합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NABO 2026~2030년 중기 경제전망: 소득]

(단위: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총소득(GNI)	4.4	21.8	7.1	5.0	4.7	4.6
피용자보수	3.8	9.0	6.9	4.1	4.0	3.8
영업잉여	6.3	69.5	9.4	6.4	6.0	5.8
고정자본소모	4.7	6.4	4.9	4.9	4.9	4.9
순생산및수입세	1.9	12.8	7.2	4.3	4.0	3.8
국외순수취요소소득	8.0	6.1	-4.0	5.5	2.4	1.5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4.4	22.0	7.1	5.0	4.7	4.6
가계총처분가능소득	4.0	7.0	5.9	4.2	4.1	3.8
총저축률(%)	35.1	44.1	45.4	45.8	46.2	46.5
1인당 국민총소득(만원)	5,244	6,391	6,843	7,183	7,525	7,875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만원)	2,918	3,115	3,298	3,435	3,576	3,714
취업자 수 증감(만명) (증감률)	19.3 (0.7)	13.4 (0.5)	18.0 (0.6)	10.1 (0.3)	8.4 (0.3)	5.4 (0.2)
고용률	62.9	62.9	62.9	63.0	62.9	62.9
실업률	2.8	2.8	2.9	2.9	2.9	3.0
임금상승률	3.1	3.2	6.5	4.7	3.3	3.2

주: 1. 소득 부문 변수는 모두 명목 기준임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3. 2025년 1인당 소득의 총인구는 인구총조사, 2026년 이후는 NABO인구전망을 이용하여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NABO 2026~2030년 중기 경제전망: 지속성장]

(단위: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잠재성장률	2.1	2.2	2.3	2.3	2.3	2.3
실질 국내총생산	1.1	3.5	2.7	2.5	2.5	2.4
노동의 성장기여도	-0.2	-0.4	-0.4	-0.3	-0.5	-0.5
자본의 성장기여도	0.7	0.7	0.8	0.8	0.8	0.7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0.6	3.2	2.3	2.0	2.2	2.1
국고채(3년) 금리	2.4	3.6	3.5	3.2	2.9	2.8
국고채(10년) 금리	2.7	3.9	3.8	3.4	3.1	3.0
회사채(3년, AA-) 금리	3.0	4.3	4.0	3.7	3.3	3.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요 약

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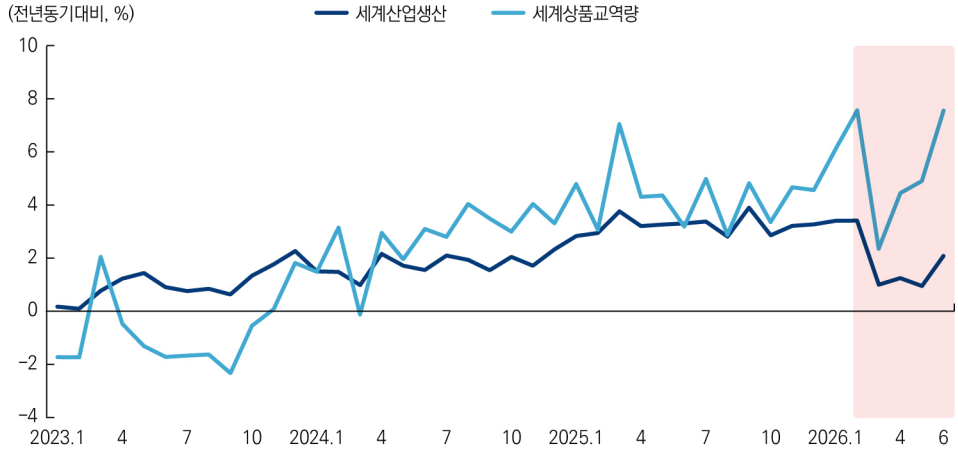
1. 세계경제

□ **2026년 세계경제는 AI 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계 산업생산은 AI·반도체·전자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통 제조업과 소비재 생산은 상대적으로 부진

○ 세계 교역량은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제품의 교역이 크게 늘며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 유지

[세계 산업생산과 상품교역량 추이]



주: 산업생산은 건설업을 제외한 생산가중치 기준
자료: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

□ **2027년 세계경제는 AI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세**

○ 세계경제성장률은 2026년 2.8%에서 2027년 3.1%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

- 중동, 미국 등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중동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가격, AI·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정도,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에 따라 국가별 성장률 변화 양상이 차별화될 전망

○ 세계교역량은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중동·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 완화와 교역 정상화, AI 관련기술 제품 교역과 공급망 재편 효과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6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나, 중동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입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공급 충격으로 발전될 가능성

○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및 걸프지역 생산이 회복되고 고유가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배럴당 77달러 수준(전년대비 -15.5%)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시장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단기 정책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

○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는 물가 상승 및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각국 중앙은행은 중동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정책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

○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달러화 강세

□ 전망의 위험 요인

○ (상방요인) 중동지역의 조기 안정 및 에너지시장 정상화, AI 투자 확대 및 생산성 증가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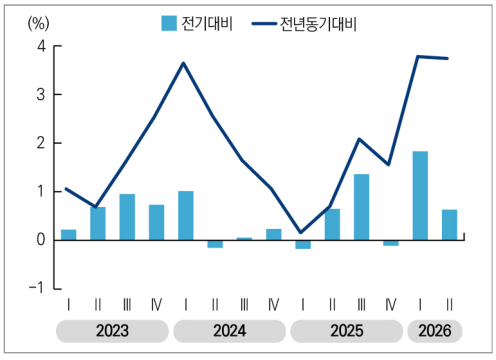
○ (하방요인)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비료 등 원자재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재상승과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

2. 국내경제

□ 2026년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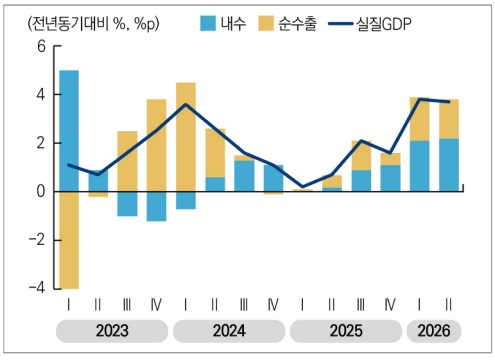
- ㅇ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ㅇ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등 최근에는 수출 호조가 내수 부문으로 확산하는 모습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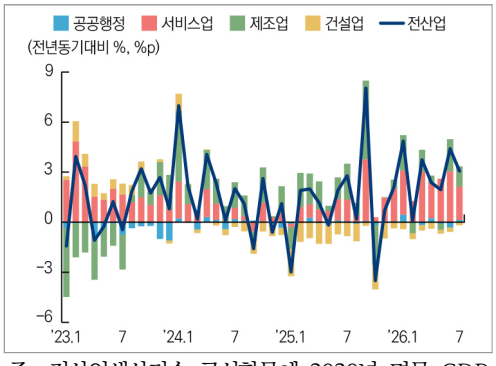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국내 경기는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율이 제고

- ㅇ 서비스업은 내수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
- ㅇ 제조업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대어 증가율이 상승
- ㅇ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업도 감소 폭이 줄며 업황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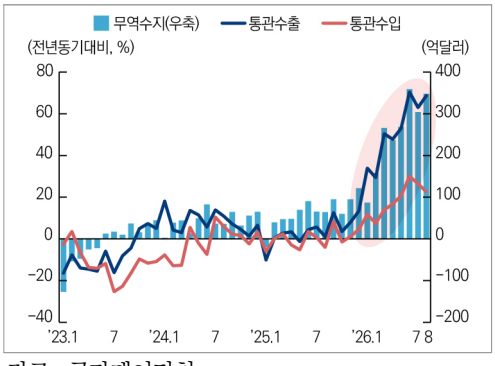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증가율]



주: 전산업생산지수 구성항목에 2020년 명목 GDP 비중을 적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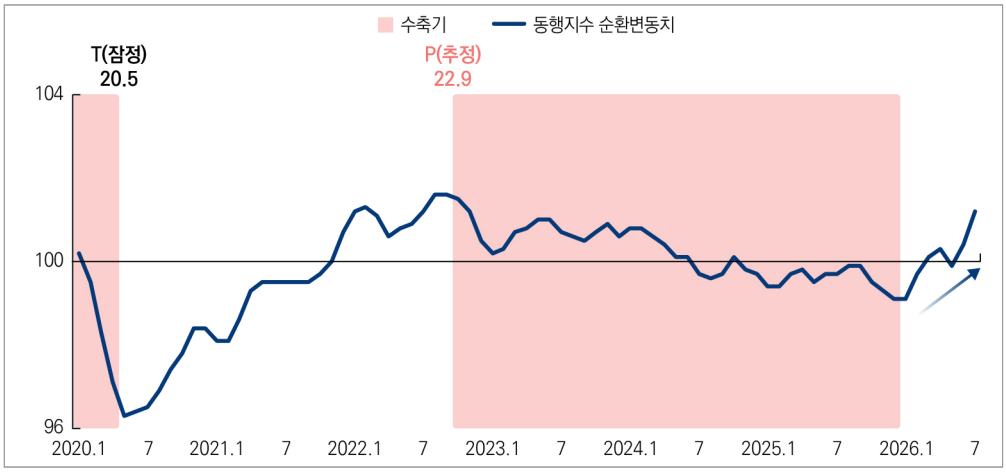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이후 상승하여 기준선을 상회

○ 동행지수로 본 현재의 경기수준이 추세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여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확장국면으로 전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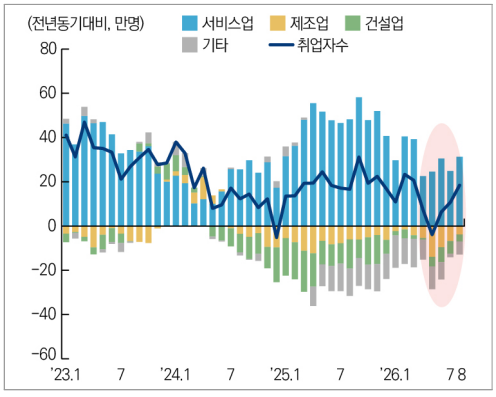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은 내수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 물가는 2% 물가안정목표를 상회

○ 취업자 수는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동전쟁 이후의 부진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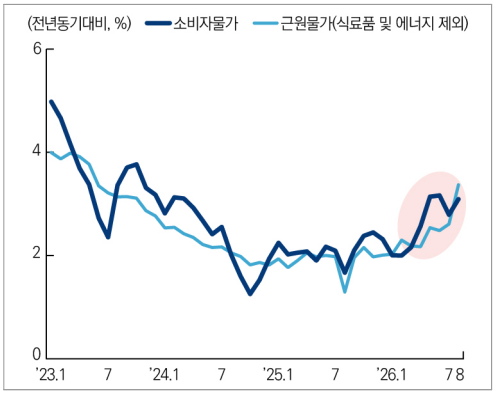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중동전쟁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 선을 상당 폭 웃돌고 있는 상황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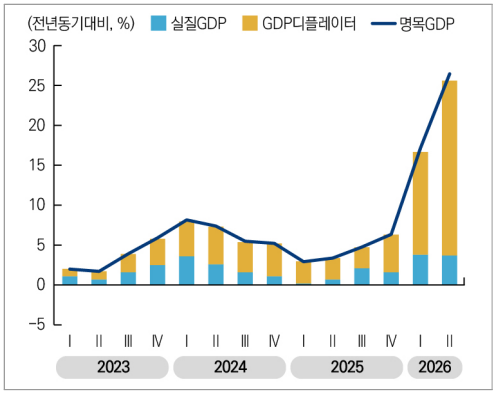
□ 명목GDP는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21.9% 성장

○ 금년 들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이 대폭 개선된 데 힘입어 GDP디플레이터가 상반기 중 17.5% 상승

- GDP디플레이터 증감률은 내수디플레이터 변화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더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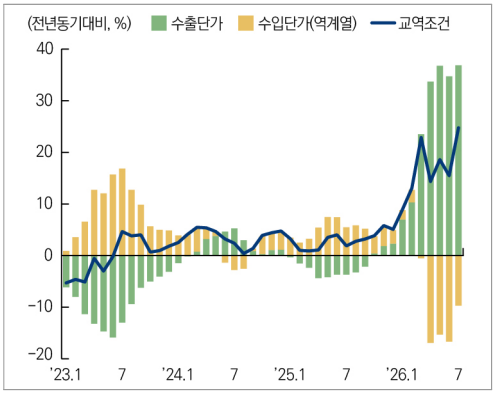
○ 다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교역조건의 추가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명목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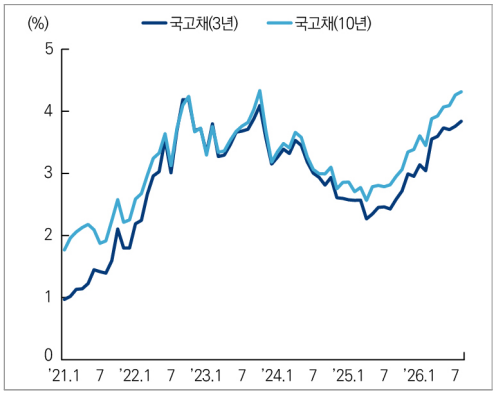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 국고채 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확대 속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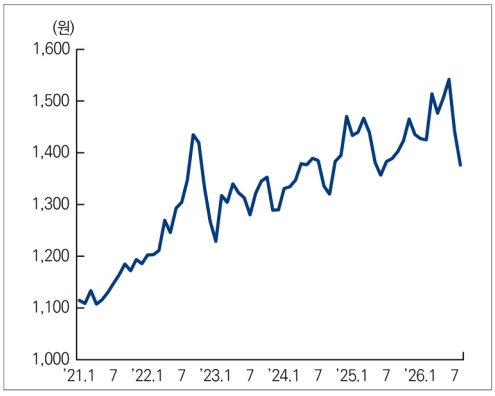
- ○ 중장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과의 동조화, 경기 회복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상승
- ○ 원/달러 환율은 수출 호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변동성 확대 속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전망의 위험 요인

- ○ (상방요인)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반도체 투자계획의 조기 가시화,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와 그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추가 개선
- ○ (하방요인)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 주가 등 국내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Ⅱ. 지출 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7년 실질 성장률은 2.7%로 지난 전망('25.9월)에 비해 0.6%p 상향**

○ 모든 지출 부문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설비투자와 총수입의 상승 폭이 컸음

2. 2027년 및 중기 전망

□ **2027년 우리 경제는 2.7% 성장할 전망**

○ 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3.0%, 하반기 2.5%로 전망되어 성장경로가 하반기로 가면서 낮아질 전망

- 2026년 실질 성장률은 3.5%로 예상(상반 3.8%, 하반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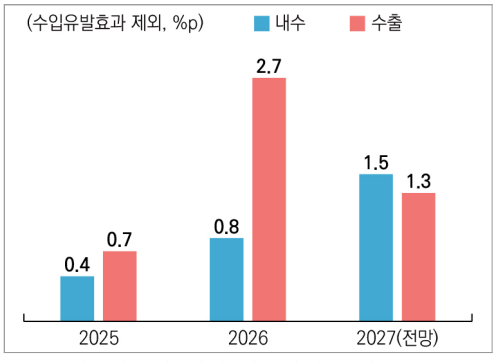
○ 요인별로 성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2027년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가세할 전망

- 확장적인 재정기조가 실질소득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면서 내수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다만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202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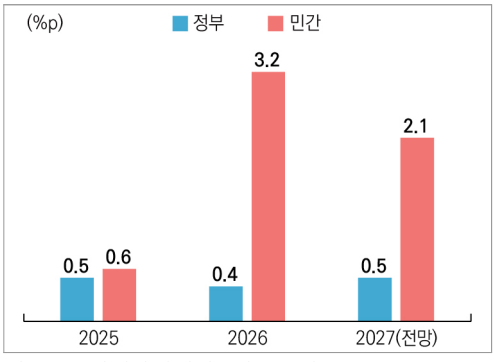
- 2027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민소득 통계 기준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와 직접 연관된 예산의 증가는 제한적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주: 수입유발효과 제외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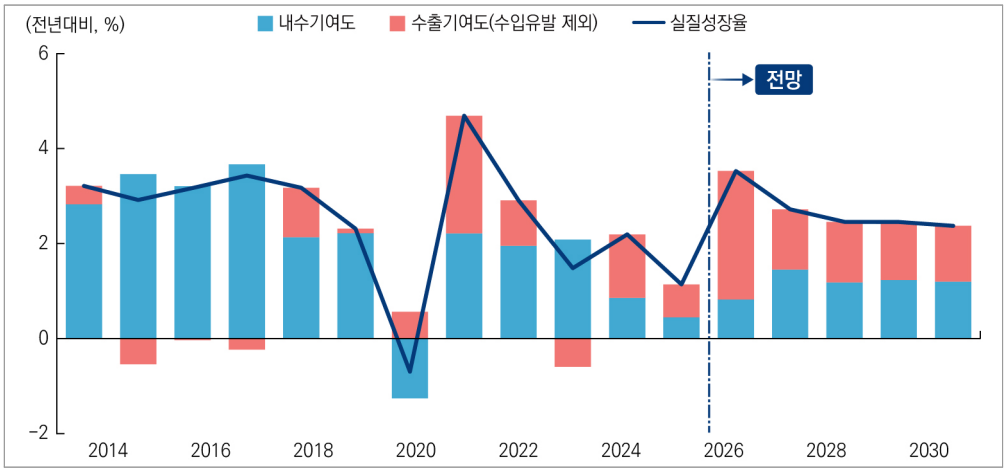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의한 소득여건 개선이 시차를 두고 여타 부문으로 퍼져나가며 내수와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

- 기업과 정부부문의 소득여건 개선이 설비투자와 정부 SOC투자 등을 연결고리로 가계부문의 소득과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

[내수와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성장률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둘러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주력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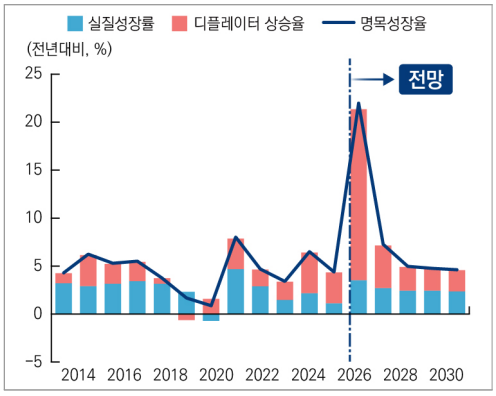
□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22.0%에서 7.3%로 낮아질 전망

○ 실질GDP 성장률은 2026년에 비해 하락할 전망(실질GDP 3.5% → 2.7%)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 교역조건 개선 폭이 줄어들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GDP디플레이터 17.8%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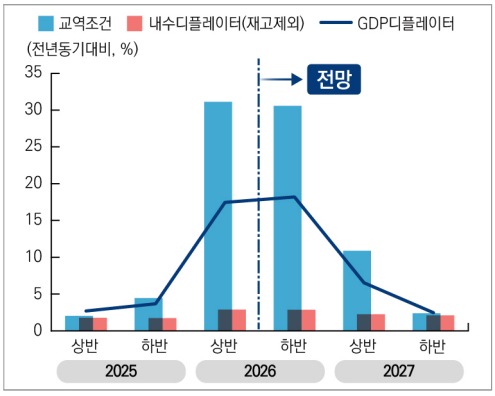
- 2027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되면서 내수디플레이터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2026년의 기저효과로 수출단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교역조건의 개선 폭도 줄어들 예상

[명목GDP 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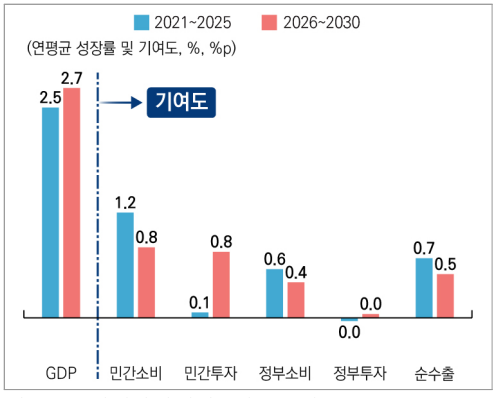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6~2030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7% 성장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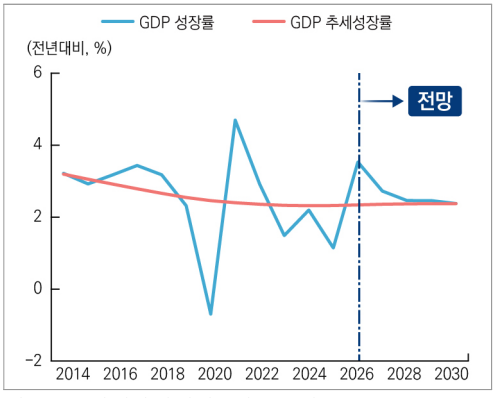
- ○ 실질 성장률은 이전 5년(2021~2025년)의 2.5%에 비해 소폭 높아질 전망
  - 민간투자의 기여도가 이전에 비하여 대폭 높아질 예상이며(0.8%p), 민간소비도 인구고령화 등 불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유지할 전망(0.8%p)
  -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 상승(이전 4.1% → 이번 8.4%)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와 직접 연관된 예산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
- ○ 실질GDP 예상 성장경로는 전망기간 중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실질GDP 중기 전망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실질GDP 성장경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7 국내 경제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1.1	3.8	3.3	3.5	3.0	2.5	2.7
최종소비		1.8	2.6	2.3	2.5	2.2	2.3	2.2
민간소비		1.5	2.6	2.1	2.3	1.9	2.0	2.0
정부소비		2.7	2.7	3.0	2.8	3.0	2.9	3.0
총고정투자		-3.4	2.0	4.9	3.5	3.9	3.6	3.8
주체별	민간투자	-3.9	3.7	5.1	4.5	4.3	3.9	4.1
주체별	정부투자	-0.2	-6.5	3.6	-1.4	2.0	2.0	2.0
유형별	건설투자	-9.7	-1.5	2.6	0.6	1.2	1.7	1.5
유형별	설비투자	1.5	5.4	8.3	6.9	7.1	5.7	6.4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8	4.6	4.2	4.2	4.1	4.1
총수출		4.3	10.3	7.9	9.0	4.5	3.9	4.2
총수입		3.3	7.3	7.9	7.6	6.1	5.0	5.5
경상수지(억달러)		1,231	1,910	2,390	4,300	2,250	2,150	4,400
상품수출(통관)		3.8	48.2	59.1	54.0	19.3	2.6	10.0
상품수입(통관)		0.0	16.8	26.9	22.0	14.0	4.6	9.0
GDP디플레이터		3.2	17.5	18.2	17.8	6.5	2.5	4.4
소비자물가		2.1	2.5	2.8	2.7	2.6	2.3	2.4
명목 국내총생산		4.4	21.9	22.1	22.0	9.7	5.0	7.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명목GDP 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4.4	21.9	22.1	22.0	9.7	5.0	7.3
실질국내총생산	1.1	3.8	3.3	3.5	3.0	2.4	2.7
GDP디플레이터	3.2	17.5	18.2	17.8	6.5	2.5	4.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6~2030년 국내 경제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국내총생산		1.1	3.5	2.7	2.5	2.5	2.4
최종소비		1.8	2.5	2.2	2.1	2.0	2.0
민간소비		1.5	2.3	2.0	1.8	1.9	1.9
정부소비		2.7	2.8	3.0	2.7	2.5	2.4
총고정투자		-3.4	3.5	3.8	3.1	2.9	2.8
주체별	민간투자	-3.9	4.5	4.1	3.3	3.1	2.9
	정부투자	-0.2	-1.4	2.0	2.0	1.8	1.8
유형별	건설투자	-9.7	0.6	1.5	1.0	1.0	1.0
	설비투자	1.5	6.9	6.4	5.0	4.5	4.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4.2	4.1	3.9	3.7	3.3
총수출		4.3	9.0	4.2	4.2	4.2	4.0
총수입		3.3	7.6	5.5	5.0	4.8	4.7
경상수지(억달러)		1,231	4,300	4,400	4,500	4,550	4,600
상품수출(통관)		3.8	54.0	10.0	5.0	4.7	4.3
상품수입(통관)		0.0	22.0	9.0	5.4	5.0	4.4
GDP디플레이터		3.2	17.8	4.4	2.5	2.3	2.2
소비자물가		2.1	2.7	2.4	2.2	2.0	2.0
명목 국내총생산		4.4	22.0	7.3	5.0	4.8	4.6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 2027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 2027년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 중앙정부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전년도 국회확정예산(727.9조원) 대비 12.8% 증가
- ○ 2027년 정부투자는 R&D 분야와 지역 및 도시 부문, 물류 등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증가
  - 2027년 R&D 분야 예산(39.5조원)은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26년 본예산대비 4.0조원(11.2%) 확대 편성
- ○ 2026~2030년 기간 중 정부지출은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사회보장현물수혜 관련 정부소비와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

□ 2027년 민간소비는 2.0% 증가할 전망

- ○ 2027년 민간소비는 가계 소득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 증가
  - 반도체 산업의 매출 증가가 관련 기업 종사자 피용자보수로 이어지며 소비를 뒷받침할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
  - 중기적으로 소득 개선이 소비를 견인하겠으나 평균소비성향 하락, 고령 인구비 증가 등의 경제구조 변화는 소비 증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7년 건설투자는 1.5% 증가할 전망

- ○ 2027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대비 1.5% 증가
  -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관련 공사가 본격화되며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
  - 주택건설 중심의 높은 투자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이어지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27년 설비투자는 6.4% 증가할 전망

○ 2027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의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6.4% 증가

-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장비 반입 단계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기계류 투자가 확대될 전망

○ 2026~2030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투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중기 설비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되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전망

□ 202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1% 증가할 전망

○ 202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6년(4.2%)대비 0.1%p 둔화될 전망

-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가 성장동력으로 가세하면서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2026~2030년 기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

- AI 관련 시장의 확대는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구축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연계되는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27년 총수출은 4.2% 증가할 전망

○ 2027년 총수출은 2026년(9.0%)대비 4.8%p 둔화될 전망

-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컴퓨터 등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26~2030년 기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AI 관련 수요 지속과 반도체 공급물량 확대가 맞물리면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예상

□ 2027년 총수입은 5.5% 증가할 전망

○ 2027년 총수입은 2026년(7.6%)대비 2.1%p 둔화될 전망

- 수출용 원자재·중간재 수입과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함께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

○ 2026~2030년 기간 중 총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와 관련된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며, 해외여행 등 서비스 수요 확대도 동반될 전망

□ 2027년 소비자물가는 2.4% 증가할 전망

○ 2027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2.7% 에서 하반기 2.1%로 물가안정목표(2%) 근처로 수렴할 전망

-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

○ 2026~2030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공급망압력 완화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의 영향

Ⅲ. 생산 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7년 실질 생산 GDP 성장률은 2.7%로 지난 전망('25.9월)에 비해 0.6%p 상향**

- ○ 반도체 업황의 큰 폭 개선에 따른 제조업 성장세 확대를 반영
- ○ 수출입 및 투자 관련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힘입은 서비스업 성장세 확대를 고려

2. 2027년 및 중기 전망

□ **2027년 실질 생산 GDP는 2.7% 성장할 전망**

- ○ 2027년 총부가가치는 반도체 업황의 큰 폭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세 확대로 2.8% 증가하고, 순생산물세는 1.3% 성장할 전망
  - 제조업은 HBM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로 4.3% 성장할 전망이나, 미국의 반도체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하방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업은 보건업 수요와 여행수요 증가로 2.4% 성장할 전망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이 성장 폭을 제한할 전망
  - 건설업은 주택 수요 침체와 지방 미분양 누적으로 1.1% 성장할 전망이나, 민간 건설수주 회복과 SOC 확대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실질 생산 GDP는 평균 2.7% 성장할 전망
  - 총부가가치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2.8% 성장하고, 순생산물세는 평균 1.2% 성장할 전망
  - 제조업은 중기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으로 강한 성장세(4.1%)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은 하방요인으로 존재
  - 서비스업은 고령 인구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중기적으로 성장 폭이 2.4%로 다소 제약될 전망
  - 건설업은 2027년 증가 전환 후 원자잿값 및 인건비 부담과 지방 미분양 해소 지연으로 평균 0.9% 성장에 그칠 전망

□ 2027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4.3% 증가할 전망

○ 2027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6년(7.0%) 대비 2.7%p 감소할 전망

- 2026년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겠으나, 글로벌 AI 관련 투자 확대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 지속, 세계교역 증가세 확대가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을 뒷받침할 전망
- (반도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WSTS)가 전년대비 29.4% 증가하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용 HBM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자동차)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수요는 이연된 구매가 실현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7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Global Data)는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화학) 세계 화학시장은 전년대비 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특수화학 소재, 배터리 · 바이오 및 친환경 화학소재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철강) 2027년 세계 철강 수요(WSA)는 중국의 감소세 완화와 인도·미국·유럽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2% 증가하며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

○ 2026~2030년 기간 중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4.1% 증가할 전망

-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가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으나, 성장세는 점차 완만해질 전망

□ 2027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4% 증가할 전망

○ 반도체, AI 관련 등 설비 및 R&D 투자,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은 도소매업, 인구고령화 등은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대출잔액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지속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7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1% 증가할 전망

○ 2027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1.5% 증가, 하반기 0.8% 증가하여 연간 1.1% 증가할 전망

- 차세대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 시장

안정화 정책은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지체되며 높은 수준의 건설비용과 착공 지연으로 인해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NABO 2027년 생산 부문별 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1.1	3.8	3.3	3.5	3.0	2.5	2.7
총 부가가치	1.3	3.9	3.6	3.7	3.1	2.6	2.8
제조업	2.4	6.9	7.1	7.0	5.0	3.5	4.3
서비스업	1.7	3.3	1.9	2.6	2.2	2.5	2.4
건설업	-9.2	-3.8	3.5	0.0	1.5	0.8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6	-2.5	2.9	0.1	2.7	0.3	1.5
기타	0.1	0.1	0.2	0.1	0.3	0.3	0.3
순생산물세	-0.4	2.4	0.4	1.4	2.0	0.7	1.3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은 기타로 통합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Ⅳ. 소득 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7년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7.1%로 지난 전망('25.9월)보다 3.3%p 상향 조정**

○ 해외에서 벌어들인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생산 증가와 수출가격 상승으로 명목 GDP 증가율 전망이 높아진 점을 반영

2. 2027년 및 중기 전망

❑ **2027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7.1% 증가할 전망**

○ 2026년의 큰 폭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완화되면서 증가율은 낮아지겠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국내 생산활동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26년 명목 GNI 증가율은 반도체 수요 증가와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21.8%에 이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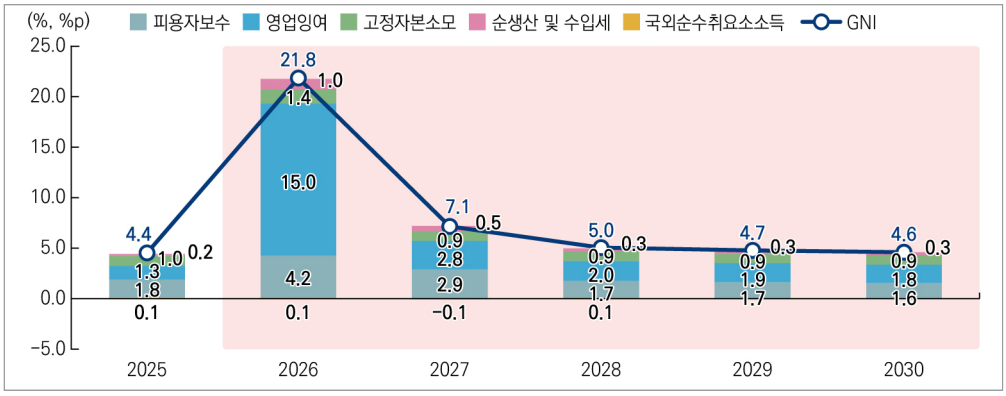
○ 2026~2030년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연평균 8.4% 증가할 전망

- 교역조건 개선과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증가가 영업잉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영업잉여 비중이 높아지는 구성 변화가 이어질 전망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7년 6,843만원에서 2030년 7,875만원으로 큰 폭 증가할 전망

- 1인당 GNI는 국민경제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기업과 정부의 소득도 포함하므로 가계의 실제 소득 수준과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

[2026~2030년 국민총소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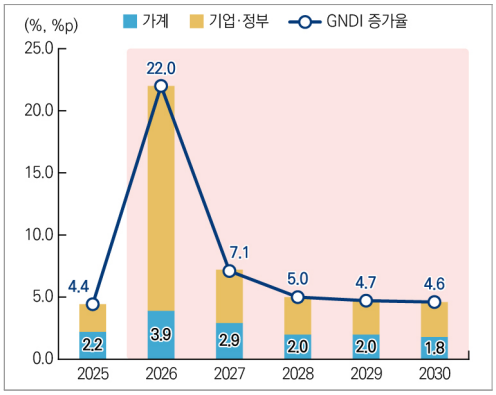
□ 가계총처분가능소득(HGNDI)은 2026~2030년 중 연평균 4.5% 증가

- ○ 2027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특별급여 확대와 가계의 재산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5.9% 증가할 전망
  - 영업잉여 증가가 기업 부문에 집중되어 가계로의 소득 파급이 제한적이며, 내수경기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파급에 시차가 존재

□ 총저축률은 2026~2030년 연평균 45.6%로 높은 수준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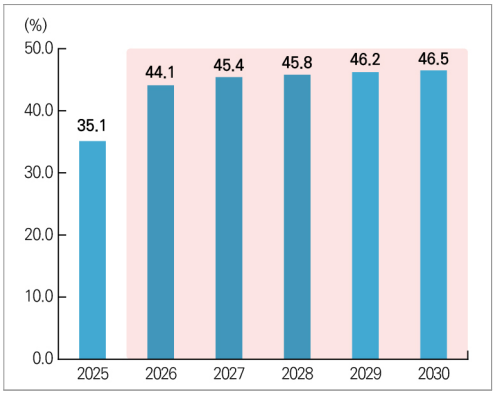
- ○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최종소비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저축률은 2026년 44.1%에서 2030년 46.5%로 높아질 전망
- ○ 다만, 향후 기업투자 확대가 고용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총저축률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

[가계-기업·정부 간 분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총저축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7년 생산요소별 소득증가율은 피용자보수 6.9%, 영업잉여 9.4%, 고정자본소모 4.9%, 순생산 및 수입세 7.2%

- ○ 2026~2030년 기간 중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
  - 2026~2027년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연동된 특별급여의 영향으로 피용자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4% 내외로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영업잉여는 연평균 17.2% 증가할 전망
  - 2026년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와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잉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기저효과와 반도체 중심의 수익성 개선세 둔화로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
  - R&D 투자 확대는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을 증대시켜 고정자본소모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2020년 이후 누적된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고정자본소모는 하향 안정화 될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순생산 및 수입세는 연평균 6.4% 증가할 전망
  - 2027년에는 명목 GDP와 총수입 증가로 세수기반은 개선되나 2026년의 높은 기저와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으로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2028년 이후 명목 GDP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도 2028년 4.3%, 2029년 4.0%, 2030년 3.8%로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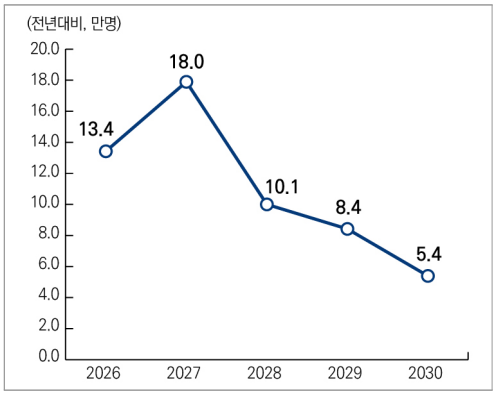
□ 2027년 취업자 수는 18.0만명(0.6%) 증가할 전망

- ○ 2027년 취업자 수는 2026년 대비 18.0만명 증가, 실업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2.9%로 전망
  - 민간소비 개선세 지속과 건설투자 반등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정책적 개입이 고용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농림어업 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제약할 전망
- ○ 2026~2030년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1.1만명(0.4%) 증가할 전망
  - 2029년부터는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연간 증가폭이 10만명을 하회할 전망

□ 2027년 명목임금은 6.5%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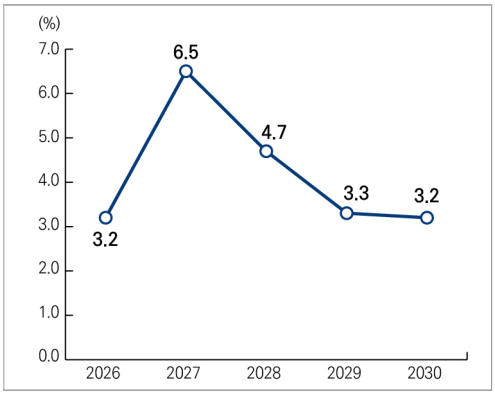
- ○ 2027년 명목임금상승률은 2026년(3.2%) 대비 3.3%p 상승할 전망
  -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대규모 특별급여 지급의 영향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2026~2030년 기간 중 명목임금은 연평균 4.2% 상승할 전망

[취업자 수 증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임금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6~2030년 국민총소득 전망]

(단위: 전년대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총소득(GNI)	4.4	21.8	7.1	5.0	4.7	4.6
피용자보수	3.8	9.0	6.9	4.1	4.0	3.8
영업잉여	6.3	69.5	9.4	6.4	6.0	5.8
고정자본소모	4.7	6.4	4.9	4.9	4.9	4.9
순생산및수입세	1.9	12.8	7.2	4.3	4.0	3.8
국외순수취요소소득	8.0	6.1	-4.0	5.5	2.4	1.5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4.4	22.0	7.1	5.0	4.7	4.6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4.0	7.0	5.9	4.2	4.1	3.8
총저축(%)	35.1	44.1	45.4	45.8	46.2	46.5

주: 음영은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Ⅴ. 지속성장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중기 실질GDP 성장률 전망의 상향조정으로 잠재성장률 및 기여도 전망을 상향조정**

- ○ 2026~2029년 중기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상당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추세인 잠재성장률도 상향조정
- ○ 자본의 기여도는 0.8%p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반면 노동의 기여도는 −0.4%p로 하향 조정되고 기타요소는 2.3%p로 상향조정

□ **2027년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경제 성장세 개선 등에 따라 상향**

- ○ 경제 성장세 개선, 중동 지역 분쟁 발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난 전망('25.9월) 대비 상향 조정
- ○ 2027년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 연평균 금리는 지난 전망 대비 상향된 각각 3.5%, 3.8%, 4.0%를 기록할 전망

2. 2027년 및 중기 전망

□ **2027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3%로 전망**

- ○ 총노동투입량의 감소폭 증가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전년대비 0.1%p 감소한 −0.2%p로 전망
- ○ AI 인프라와 관련된 설비투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생산자본스톡이 증가하여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7%p로 전망
- ○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전년대비 0.05%p 증가한 1.8%p로 전망

□ **향후 5년간(2026~2030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3%로 전망**

- ○ 이전 5년(2021~2025)의 잠재성장률(연평균 2.3%)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으로 자본과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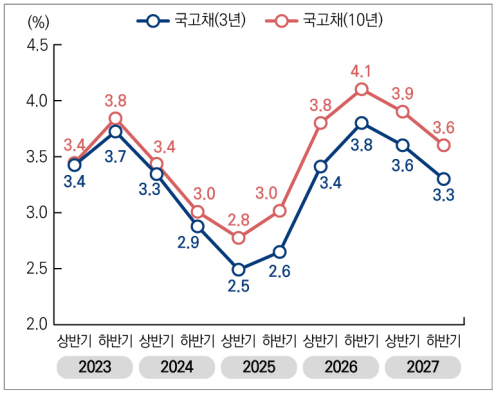
- 설비투자와 생산자본스톡 증가로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68%p에서 2030년 0.71%로 소폭 증가
- 향후 인구감소와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1%p에서 2030년 −0.2%p로 하락
- 생성형 AI의 활용률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효과가 반영되어 기타 요소의 기여도는 2026년 1.7%p에서 2030년 1.8%p로 증가

□ 2027년 국고채(3년, 10년) 금리는 각각 3.5%, 3.8%로 전망

○ 2027년 국고채(3년, 10년) 금리는 전년대비 모두 0.1%p 하락 전망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둔화와 경제 성장세의 완화 등에 따라 소폭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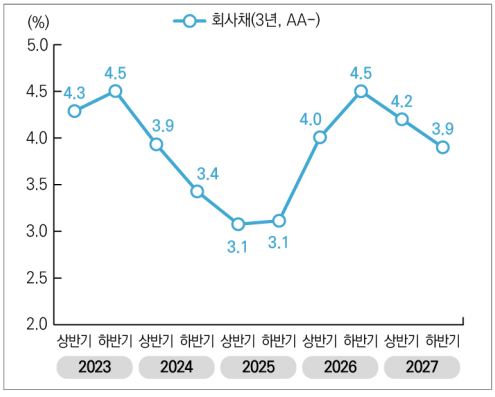
○ 2027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전년대비 0.3%p 하락한 4.0% 기록 전망

[국고채(3년, 10년) 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회사채(3년, AA-) 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27년 지속성장 부문별 전망]

(전년대비, %, %p)

	2025	2026			202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1.1		3.5			2.7	
노동의 성장기여도	-0.2		-0.4			-0.4	
자본의 성장기여도	0.7		0.7			0.8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0.6		3.2			2.3	
잠재성장률	2.1		2.2			2.3	
국고채(3년) 금리	2.4	3.4	3.8	3.6	3.6	3.3	3.5
국고채(10년) 금리	2.7	3.8	4.1	3.9	3.9	3.6	3.8
회사채(3년, AA-) 금리	3.0	4.0	4.5	4.3	4.2	3.9	4.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 차 례 ◂

제Ⅰ부 동향

제1장 세계경제 ····· 3

제1절 동향 ····· 3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9

제3절 국제 원자재가격 ····· 17

제4절 글로벌 금융시장 ····· 20

제5절 전망의 위험 요인 ····· 23

제2장 국내경제 ····· 25

제1절 경제 성장률 ····· 25

제2절 내수와 수출입 ····· 30

제3절 고용과 물가 ····· 34

제4절 금융시장 ····· 42

제5절 전망의 위험 요인 ····· 50

제Ⅱ부 지출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53

제1절 2027년 전망 ····· 53

제2절 중기 전망 ····· 55

제2장 2027년 및 중기 전망 ····· 57

제1절 경제성장률 ····· 57

제2절 정부소비 및 투자 ····· 69

제3절 민간소비 ····· 80

제4절 건설투자 ····· 87

제5절 설비투자 ····· 92

제6절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03

제7절 대외거래 ····· 108

제8절 소비자물가 ····· 118

제Ⅲ부 생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127

제1절 2027년 전망 ····· 127

제2절 중기 전망 ····· 131

제2장 2027년 및 중기 전망 ····· 133

제1절 제조업 ····· 133

제2절 서비스업 ····· 163

제3절 건설업 ····· 170

제Ⅳ부 소득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181

제1절 2027년 전망 ····· 181

제2절 중기 전망 ····· 183

제2장 2027년 및 중기전망 ····· 185

제1절 국민총소득 ····· 185

제2절 피용자보수 ····· 201

제3절 영업잉여 ····· 204

제4절 고정자본소모 ····· 207

제5절 순생산 및 수입세 ····· 211

제6절 고용 ····· 218

제7절 임금 ····· 221

제Ⅴ부 지속성장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27

제1절 2027년 전망 ····· 227

제2절 중기 전망 ····· 231

제2장 2027년 및 중기전망 ····· 235

제1절 잠재성장률 ····· 235

제2절 성장기여도 ····· 246

제3절 금리 ····· 251

▸ BOX 차례 ◂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 19

[BOX 2] 품목별·지역별 수출 ····· 32

[BOX 3] 청년층 최근 산업별 취업자 현황 ····· 36

[BOX 4]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 현황 및 시사점 ····· 45

[BOX 5]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48

[BOX 6] 중동 전쟁 상황 악화와 물가 불안 재연 위험 ····· 63

[BOX 7] 소득의 성격과 한계소비성향 ····· 85

[BOX 8]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본 기업의 리스크 인식 분석 ····· 99

[BOX 9]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상하방 리스크 점검을 통한 성장경로 시나리오 분석 ····· 115

[BOX 10] 제조업 AI 전환(M.AX) 정책의 주요 내용 ····· 138

[BOX 11] 반도체 수출 증가 점검 ····· 145

[BOX 12] 미국·EU의 철강 통상규제 강화 ····· 160

[BOX 13]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원인 ····· 176

[BOX 14] 반도체 호황의 소득귀착 : 늘어난 국민소득(GNI)은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가 ····· 196

[BOX 15]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추정 ····· 244

[BOX 16] 우리나라 금리 전망 방식 ····· 253

표 차례

제Ⅰ부

[표 Ⅰ-1]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9

[표 Ⅰ-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11

제Ⅱ부 지출전망

[표 Ⅱ-1] 2027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 54

[표 Ⅱ-2] 2027 국내 경제전망 ····· 60

[표 Ⅱ-3] 명목GDP 성장률 전망 ····· 60

[표 Ⅱ-4] 2026~2030년 국내 경제전망 ····· 61

[표 Ⅱ-5]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7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 67

[표 Ⅱ-6] 정부의 2027년 재정지출 계획 ····· 71

[표 Ⅱ-7] 2027년 R&D 분야 예산안 ····· 73

[표 Ⅱ-8] 2027년 SOC 분야 예산안 ····· 73

[표 Ⅱ-9] 2026~2030년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수지 전망 ····· 76

[표 Ⅱ-10] 중기 정부소비 전망 ····· 77

[표 Ⅱ-11]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 계획 ····· 78

[표 Ⅱ-12] 중기 정부투자 전망 ····· 79

[표 Ⅱ-13]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반도체 투자 규모 및 내용 ····· 97

[표 Ⅱ-14] 세계 및 국내 AI 시장 규모 전망(2025-2030) ····· 106

제Ⅲ부 생산전망

[표 Ⅲ-1] 2027년 생산국민소득 수정 전망(전망 차이) ····· 129

[표 Ⅲ-2]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 141

[표 Ⅲ-3] 세계 IT 시장 규모 전망 ····· 141

[표 Ⅲ-4] 집적회로(IC) 부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 142

[표 Ⅲ-5] 세계 철강 수요 전망 ····· 157

[표 Ⅲ-6] 세계 철강 생산능력 및 과잉설비 전망 ····· 157

[표 Ⅲ-7] 2026년 국내 철강재 수급 전망 ····· 158

제Ⅳ부 소득전망

[표 Ⅳ-1] 2026~2030년 국민총소득 성장률 및 구성비 ····· 189

[표 Ⅳ-2]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의 구성 ····· 193

[표 Ⅳ-3] 2025년 생산 및 수입세 실적 및 세목별 수입 실적 ····· 213

[표 Ⅳ-4] 2026년 1~7월 국세수입 실적 ····· 214

[표 Ⅳ-5] 최근 3년 1~7월 주택 매매거래량 ····· 215

제Ⅴ부 지속성장

[표 Ⅴ-1] 2027년 잠재성장률 수정 전망 ····· 228

[표 Ⅴ-2] 연도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 236

[표 Ⅴ-3] 연도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 239

[표 Ⅴ-4] 노동의 성장기여도 전망 및 결정요인 추이 ····· 247

[표 Ⅴ-5] 자본의 성장기여도 전망 및 결정요인 추이 ····· 248

[표 Ⅴ-6]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전망 및 결정요인 추이 ····· 248

[표 Ⅴ-7]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추이 ····· 250

그림 차례

제 I 부

[그림 Ⅰ-1] 세계 산업생산과 상품교역량 추이 ····· 3

[그림 Ⅰ-2] 세계상품 교역액과 교역량 ····· 4

[그림 Ⅰ-3] 2026년 1분기 지역별 교역량 증가율 ····· 4

[그림 Ⅰ-4]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생산 ····· 5

[그림 Ⅰ-5] 세계상품교역량과 교역단가 ····· 5

[그림 Ⅰ-6] OECD 경기선행지수 ····· 6

[그림 Ⅰ-7] 세계 전산업 PMI 월별 추이 ····· 6

[그림 Ⅰ-8]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PMI ····· 6

[그림 Ⅰ-9] 선진국과 개도국 서비스업 PMI ····· 6

[그림 Ⅰ-10] 주요국 CPI 인플레이션 ····· 7

[그림 Ⅰ-11] 주요국 정책금리 ····· 7

[그림 Ⅰ-12]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 8

[그림 Ⅰ-13]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 추이 ····· 8

[그림 Ⅰ-14] 세계교역량 전망 ····· 12

[그림 Ⅰ-15] 선진국과 개도국 교역량 전망 ····· 12

[그림 Ⅰ-16] 세계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13

[그림 Ⅰ-17] 불확실성 지수 추이 ····· 14

[그림 Ⅰ-18] 반도체 수출액 추이 ····· 15

[그림 Ⅰ-19]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 추이 ····· 16

[그림 Ⅰ-20] 대미 반도체 수출액 추이 ····· 16

[그림 Ⅰ-21] 국제유가 월별 추이 ····· 18

[그림 Ⅰ-22] 국제유가 연별 추이 및 전망 ····· 18

[그림 Ⅰ-23] 비에너지 원자재가격 전망 ····· 18
[그림 Ⅰ-24]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 20
[그림 Ⅰ-25] 글로벌 국채(10년) 금리 추이 ····· 20
[그림 Ⅰ-26] 주요국 대달러 환율 추이 ····· 22
[그림 Ⅰ-27] 달러인덱스 추이 ····· 22
[그림 Ⅰ-28] 실질GDP 성장률 추이 ····· 25
[그림 Ⅰ-29]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 26
[그림 Ⅰ-30]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 26
[그림 Ⅰ-31] 명목GDP 성장률 추이 ····· 27
[그림 Ⅰ-32] 전산업 생산 증가율 ····· 27
[그림 Ⅰ-33]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 27
[그림 Ⅰ-34]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 28
[그림 Ⅰ-35]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 28
[그림 Ⅰ-36]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 28
[그림 Ⅰ-37]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 28
[그림 Ⅰ-38]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29
[그림 Ⅰ-39] 제조업 재고순환선 추이 ····· 29
[그림 Ⅰ-40]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 30
[그림 Ⅰ-41]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 30
[그림 Ⅰ-42]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 31
[그림 Ⅰ-43]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 31
[그림 Ⅰ-44]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 31
[그림 Ⅰ-45]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 31
[그림 Ⅰ-46] 경상수지 추이 ····· 33
[그림 Ⅰ-47]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추이 ····· 33
[그림 Ⅰ-48] 취업자 수 증감 ····· 34

[그림 Ⅰ-49]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 34
[그림 Ⅰ-50] 최근 양대 고용 성장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35
[그림 Ⅰ-51] 최근 양대 고용 감소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35
[그림 Ⅰ-52] 월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 38
[그림 Ⅰ-53] 상용명목임금상승률 기여도 ····· 38
[그림 Ⅰ-54] 산업별 2026년 상반기 상용명목임금상승률 기여도 ····· 39
[그림 Ⅰ-5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 40
[그림 Ⅰ-56] 수입물가 변동요인 추이 ····· 41
[그림 Ⅰ-57]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 41
[그림 Ⅰ-58]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42
[그림 Ⅰ-59]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 42
[그림 Ⅰ-60] 회사채 금리 추이 ····· 43
[그림 Ⅰ-61]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 43
[그림 Ⅰ-62] 원/달러 환율 추이 ····· 44
[그림 Ⅰ-63]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 44

제Ⅱ부 지출전망

[그림 Ⅱ-1] 2027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 54
[그림 Ⅱ-2] 민간소비 비교 – 5년 ····· 55
[그림 Ⅱ-3] 총고정자본형성 비교 – 5년 ····· 55
[그림 Ⅱ-4]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 58
[그림 Ⅱ-5]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전망 ····· 58
[그림 Ⅱ-6] 내수와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성장률 기여도 ····· 59
[그림 Ⅱ-7] 명목GDP 성장률 전망 ····· 62
[그림 Ⅱ-8]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 62
[그림 Ⅱ-9] 실질GDP 중기 전망 기여도 ····· 66

[그림 Ⅱ-10] 실질GDP 성장경로 ····· 66
[그림 Ⅱ-11]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 68
[그림 Ⅱ-12] 실질정부소비의 분기별 증감률 추이 ····· 70
[그림 Ⅱ-13] 통합재정 경상지출 추이 ····· 70
[그림 Ⅱ-14]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추이 ····· 71
[그림 Ⅱ-15] 공무원보수 인상률 추이 ····· 71
[그림 Ⅱ-16] 실질정부투자 분기별 증감률 추이 ····· 72
[그림 Ⅱ-17] 통합재정 자본지출 추이 ····· 72
[그림 Ⅱ-18] 2025년과 2026년 중기 재정지출계획 비교 ····· 77
[그림 Ⅱ-19] 정부투자디플레이터와 자본재형태별 디플레이터 ····· 79
[그림 Ⅱ-20] 민간소비 추이 ····· 81
[그림 Ⅱ-21] 재화 형태별 소비지출 추이 ····· 81
[그림 Ⅱ-22]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 81
[그림 Ⅱ-23]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황 ····· 81
[그림 Ⅱ-24] 실질국내총생산 및 총소득 ····· 82
[그림 Ⅱ-25] 상용임금 상승률 기여도 ····· 82
[그림 Ⅱ-26] 산업별 명목임금 추이 ····· 82
[그림 Ⅱ-27] 소득구간별 실질처분가능소득 ····· 82
[그림 Ⅱ-28]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 83
[그림 Ⅱ-29] 주가지수 추이 ····· 83
[그림 Ⅱ-30] 용도별 가계신용 ····· 83
[그림 Ⅱ-31]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 83
[그림 Ⅱ-32]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 88
[그림 Ⅱ-33] 발주자별 건설투자 추이 ····· 88
[그림 Ⅱ-34] 공종별 건설수주 추이 ····· 88
[그림 Ⅱ-35] 건축 공종별 수주 추이 ····· 88

[그림 Ⅱ-36] 발주자별 주택수주 추이 ····· 89
[그림 Ⅱ-37] 공공부문 주택공급 계획 ····· 89
[그림 Ⅱ-38] 건설공사비지수 추이 ····· 89
[그림 Ⅱ-39] 주거용 건축착공 추이 ····· 89
[그림 Ⅱ-40] PF 신규, 회수·정리 및 익스포저 추이 ····· 90
[그림 Ⅱ-41] 미분양 주택 추이 ····· 90
[그림 Ⅱ-42] 설비투자 ····· 93
[그림 Ⅱ-43]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 93
[그림 Ⅱ-44]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93
[그림 Ⅱ-45] 자본재 수입액 추이 ····· 93
[그림 Ⅱ-46] 기계류 수입액 ····· 94
[그림 Ⅱ-47] 국내기계수주 ····· 94
[그림 Ⅱ-48]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장비 반입 일정 ····· 94
[그림 Ⅱ-49]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 95
[그림 Ⅱ-50] AI 반도체 시장 전망 ····· 95
[그림 Ⅱ-51]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 96
[그림 Ⅱ-52] 국내 반도체 기업 자본투자 전망 ····· 96
[그림 Ⅱ-53] AI 관련 기업 회사채 발행액 ····· 98
[그림 Ⅱ-54] 빅테크 사모신용 비중 ····· 98
[그림 Ⅱ-55] 전력망 병목 지연 시나리오 ····· 98
[그림 Ⅱ-56]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 98
[그림 Ⅱ-57]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 103
[그림 Ⅱ-58]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 103
[그림 Ⅱ-59]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기업 매출액 추이 ····· 104
[그림 Ⅱ-60] 정부 R&D 예산추이 ····· 104
[그림 Ⅱ-61] 수출 전망 ····· 109

[그림 Ⅱ-62] 수출 물량지수 추이 ····· 109
[그림 Ⅱ-63] 수입 전망 ····· 110
[그림 Ⅱ-64]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추이 ····· 110
[그림 Ⅱ-65] 반도체 및 컴퓨터 수출가격 증가율 ····· 111
[그림 Ⅱ-66] 주요 통관수출 품목 비중 ····· 111
[그림 Ⅱ-67] 성질별 통관수입 추이 ····· 111
[그림 Ⅱ-68]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입 ····· 111
[그림 Ⅱ-69] 경상수지 추이 ····· 112
[그림 Ⅱ-7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 119
[그림 Ⅱ-7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 119
[그림 Ⅱ-72]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 ····· 119
[그림 Ⅱ-73] 국제원유가격 ····· 119
[그림 Ⅱ-74]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 ····· 122
[그림 Ⅱ-75] Heat Index 35와 농축수산물 물가 ····· 122
[그림 Ⅱ-76] 시간당 명목임금지수 ····· 123
[그림 Ⅱ-77] GDP갭 전망 ····· 123
[그림 Ⅱ-78] 기대 인플레이션 ····· 123

제Ⅲ부 생산전망

[그림 Ⅲ-1] 2027년 생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 130
[그림 Ⅲ-2] 총부가가치 및 순생산물세 비교 ····· 131
[그림 Ⅲ-3] 세부 산업별 비교 ····· 132
[그림 Ⅲ-4]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134
[그림 Ⅲ-5]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 135
[그림 Ⅲ-6] 주요 무역 상대별 수출액 비중 추이 ····· 135
[그림 Ⅲ-7] 반도체·비반도체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 136

[그림 Ⅲ-8] 제조업 생산·출하·재고 추이 ····· 137
[그림 Ⅲ-9] 반도체 생산·출하·재고 추이 ····· 137
[그림 Ⅲ-10] 반도체 수출액과 D램 수출액 증감률 추이 ····· 143
[그림 Ⅲ-11] 파운드리 매출액 추이 (상위 10개사) ····· 144
[그림 Ⅲ-12]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 추이 (상위 10개사) ····· 144
[그림 Ⅲ-13]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 147
[그림 Ⅲ-14]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 규모 ····· 148
[그림 Ⅲ-15] 국내 자동차 시장 추이 ····· 150
[그림 Ⅲ-16] 세계 화학시장 규모 ····· 151
[그림 Ⅲ-17] 세계 화학생산 비중 ····· 152
[그림 Ⅲ-18] 국가별 화학제품 수출 비중 ····· 152
[그림 Ⅲ-19] 석유화학 생산액 ····· 154
[그림 Ⅲ-20] 석유화학 수출입 ····· 154
[그림 Ⅲ-21] 정밀화학 생산액 ····· 155
[그림 Ⅲ-22] 정밀화학 수출입 ····· 155
[그림 Ⅲ-23] 중기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162
[그림 Ⅲ-24]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감률 전망 ····· 163
[그림 Ⅲ-25] 서비스업의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 164
[그림 Ⅲ-26] 도소매업 생산 추이 ····· 166
[그림 Ⅲ-27] 업종별 도매업 생산 추이 ····· 166
[그림 Ⅲ-28] 75세 이상 인구 추이 ····· 166
[그림 Ⅲ-29]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 166
[그림 Ⅲ-30] 대출잔액 현황 ····· 167
[그림 Ⅲ-31] 금리 추이 ····· 167
[그림 Ⅲ-32] 주식거래대금 추이 ····· 168
[그림 Ⅲ-33] 코스피와 금리 추이 ····· 168

[그림 Ⅲ-34] 중기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169
[그림 Ⅲ-35]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171
[그림 Ⅲ-36] 건설수주액 ····· 172
[그림 Ⅲ-37] 건축허가 대비 건축착공 ····· 172
[그림 Ⅲ-38] 공공 공종별 건설수주액 ····· 173
[그림 Ⅲ-39] 민간 공종별 건설수주액 ····· 173
[그림 Ⅲ-40] 건설공사비지수 ····· 173
[그림 Ⅲ-41] 종합실적지수 추이 ····· 174
[그림 Ⅲ-42] 중기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 175

제Ⅳ부 소득전망

[그림 Ⅳ-1] 2027년 국내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 182
[그림 Ⅳ-2] 국민총소득 전망 비교 – 5년 ····· 184
[그림 Ⅳ-3]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전망 비교 – 5년 ····· 184
[그림 Ⅳ-4] 취업자 증감 전망 비교 ····· 184
[그림 Ⅳ-5] 임금 전망 비교 ····· 184
[그림 Ⅳ-6] 본원소득수지 ····· 186
[그림 Ⅳ-7] 투자형태별 국외투자소득 순수취 추이 ····· 186
[그림 Ⅳ-8] 외국인 국내 투자 증감 ····· 186
[그림 Ⅳ-9] 거주자 해외투자 증감 ····· 186
[그림 Ⅳ-10] 체류 외국인 수 및 증가율 ····· 187
[그림 Ⅳ-11] 장단기 체류 외국인 현황 ····· 187
[그림 Ⅳ-12] 체류 자격별 현황 ····· 187
[그림 Ⅳ-13] 2026~2030년 국민총소득 전망 ····· 189
[그림 Ⅳ-14] 국민총소득 구성비 및 전망 ····· 190
[그림 Ⅳ-15] 경제주체별 분배 ····· 194

[그림 Ⅳ-16] 총저축률 추이 ····· 194
[그림 Ⅳ-17] 예금주별 예금 추이 ····· 194
[그림 Ⅳ-18] 제도부문별 순저축 추이 ····· 195
[그림 Ⅳ-19] 임금근로자 증가율 ····· 202
[그림 Ⅳ-20]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 203
[그림 Ⅳ-21]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 205
[그림 Ⅳ-22] 영업잉여 대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비율 ····· 205
[그림 Ⅳ-23] 수출물량지수 ····· 205
[그림 Ⅳ-24] 수출금액지수 ····· 205
[그림 Ⅳ-25]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 206
[그림 Ⅳ-26] 자산별 감가상각률 비교 ····· 208
[그림 Ⅳ-27]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 비중 ····· 208
[그림 Ⅳ-28] 순고정자산 중 건설자산 비중 ····· 208
[그림 Ⅳ-29]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208
[그림 Ⅳ-30] 명목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및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비교 ····· 209
[그림 Ⅳ-31]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 추이 ····· 212
[그림 Ⅳ-32]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 GDP 대비 비중 ····· 216
[그림 Ⅳ-33]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 범위 ····· 217
[그림 Ⅳ-34] 노인일자리 현황 ····· 219
[그림 Ⅳ-35] 70세 이상 농가 비중 추이 ····· 219
[그림 Ⅳ-36]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 222
[그림 Ⅳ-37] 소비자 물가상승률 ····· 222
[그림 Ⅳ-38] 제조업 영업이익 및 증가율 ····· 222
[그림 Ⅳ-39]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222

제Ⅴ부 지속성장

[그림 Ⅴ-1] 2027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전망 비교 ····· 229
[그림 Ⅴ-2] 2027년 금리 전망 비교 ····· 230
[그림 Ⅴ-3] 잠재성장률 전망치 비교 ····· 231
[그림 Ⅴ-4] 실질GDP 성장률 비교 ····· 233
[그림 Ⅴ-5] 노동기여도 비교 ····· 233
[그림 Ⅴ-6] 자본기여도 비교 ····· 233
[그림 Ⅴ-7] 기타요소기여도 비교 ····· 233
[그림 Ⅴ-8] 국고채(3년) 금리 중기전망 비교 ····· 234
[그림 Ⅴ-9] 회사채(3년, AA-) 금리 중기전망 비교 ····· 234
[그림 Ⅴ-10]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 237
[그림 Ⅴ-11] 생산자본스톡 추이 ····· 237
[그림 Ⅴ-12] 총노동투입량 전망 ····· 240
[그림 Ⅴ-13]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 240
[그림 Ⅴ-14]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241
[그림 Ⅴ-15] 주당평균노동시간 전망 ····· 241
[그림 Ⅴ-16] 총생산자본스톡 전망 ····· 241
[그림 Ⅴ-17] 총고정자본형성 전망 ····· 241
[그림 Ⅴ-18]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 242
[그림 Ⅴ-19] 연도별 실질GDP갭률 및 전망 ····· 243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I

동향

제1장 | 세계경제
제2장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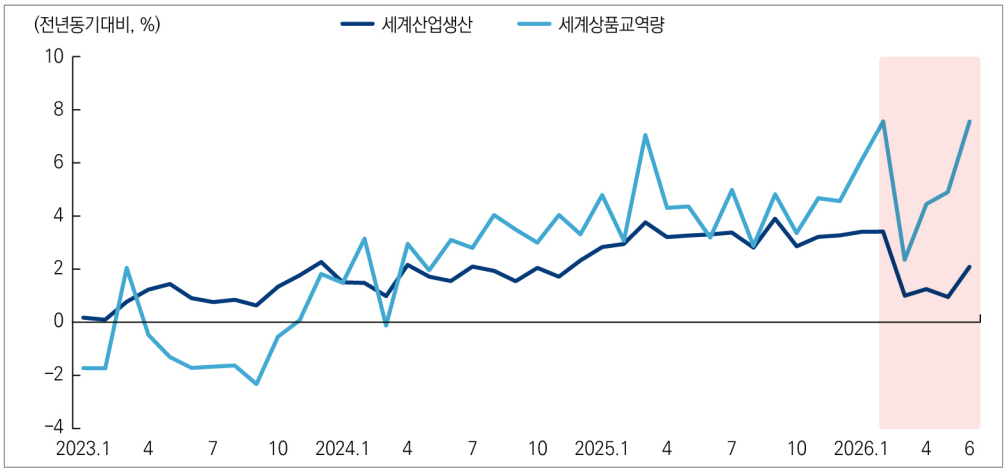
제1장 세계경제

제1절 동향

- **세계경제**는 생산과 교역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확대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제 원자재가격**은 오름세

올해 상반기 중 세계경제는 AI 제품 생산 관련 교역이 크게 늘며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세계상품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미 관세부과에 대응한 조기선적(front-loading)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제품의 교역이 크게 늘며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월 들어 중동지역 물류의 부분 정상화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였다.[1)]

[그림 Ⅰ-1] 세계 산업생산과 상품교역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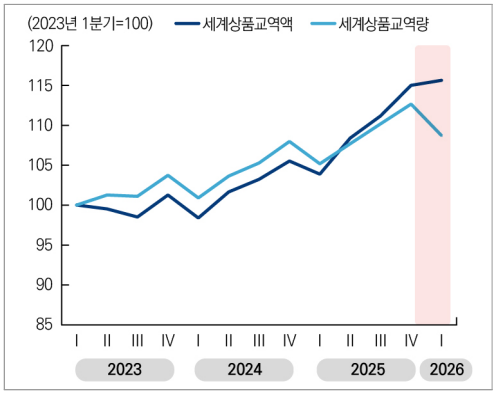
주: 산업생산은 건설업을 제외한 생산가중치 기준
자료: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1) 6월 중 세계상품교역량은 전년대비 7.5%, 세계산업생산은 2.1% 증가하여, 전월(세계상품교역량 4.9%, 세계산업생산 0.9%)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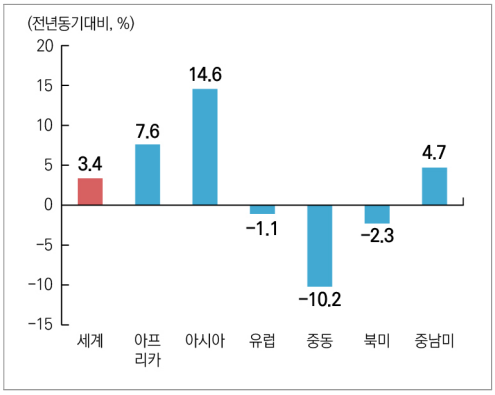
국제무역기구(WTO)는 금년 1/4분기 세계상품교역액이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특히 AI-enabling products[2]는 동기간 42%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별로는 AI 관련 제품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교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분기 이후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유 수급 차질과 에너지·식량가격, AI·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교역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Ⅰ-2] 세계상품 교역액과 교역량



주: 세계상품교역량은 수출량과 수입량의 평균
자료: WTO

[그림 Ⅰ-3] 2026년 1분기 지역별 교역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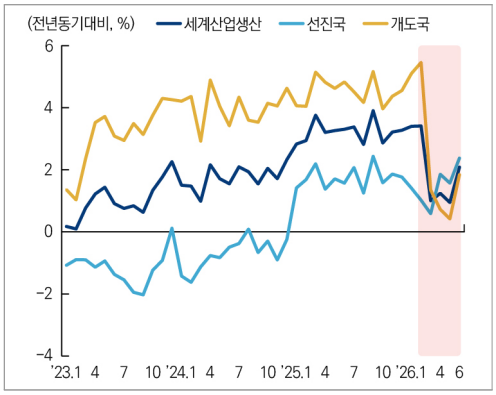


주: 세계상품교역량은 수출량과 수입량의 평균
자료: WTO

세계산업생산은 AI·반도체·전자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통 제조업과 소비재 생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3] 중동전쟁 이후 세계산업생산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으나, AI관련 제품의 생산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며 6월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4] 향후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AI 관련 투자 및 교역량 증가세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성장세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원자재 가격, 반도체 등 AI 관련 교역액이 늘더라도 실제 교역물량 증가와 제조업 생산 증가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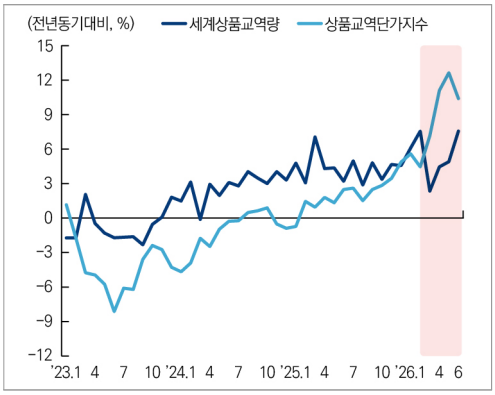
2) AI-enabling products는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GPU·NPU뿐 아니라, AI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데이터 전송·전력 공급·저장·냉각·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3) 미국의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소비재 생산은 0.4% 감소하였다.
4) 세계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 (1~2월) 3.4%, 선진국 1.2%, 개도국 5.3% →(3~6월)1.3%, 선진국 1.6%, 개도국 1.1%

[그림 Ⅰ-4]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생산



주: 산업생산은 건설업을 제외한 생산가중치 기준
자료: CPB

[그림 Ⅰ-5] 세계상품교역량과 교역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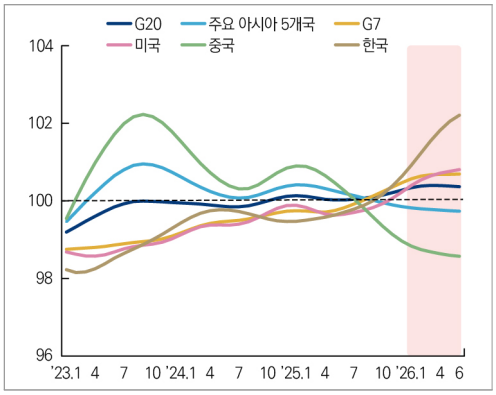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계열 기준
자료: CPB

세계경기의 주요 선행지표는 국가별·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6~9개월 선행)는 미국 등 G7 국가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아세안 5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승하였으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하였다. 특히 중국은 AI·첨단제품 수출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하회[6]하였다. 세계 전산업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7]는 제조업에서 생산·주문이 개선세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에서 최근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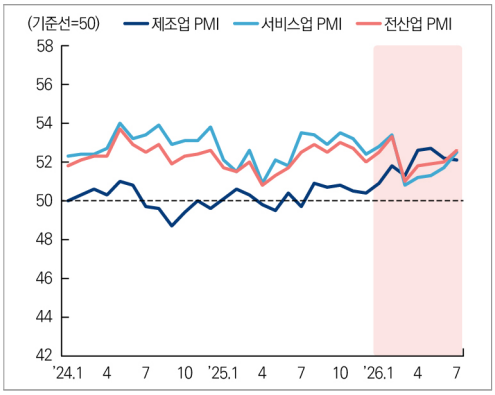
5) 2026년 상반기 중 세계상품교역량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동기산 세계상품교역단가지수는 8.5% 상승하였다.
6) 중국: ('26. 1월)98.8→('25. 1월)98.7→(3월)100.3→(6월)98.6
7)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그림 Ⅰ-6] OECD 경기선행지수



주: 1. 진폭조정(Amplitude Adjusted) 경기선행지수 기준
2. 주요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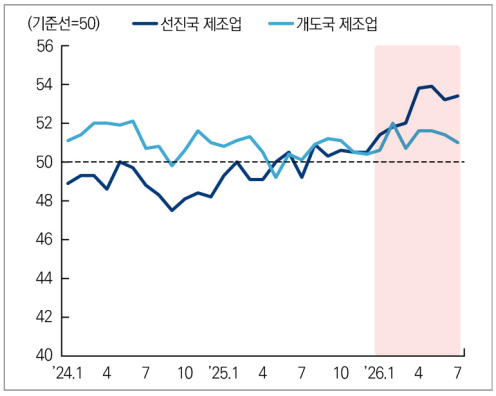
[그림 Ⅰ-7] 세계 전산업 PMI 월별 추이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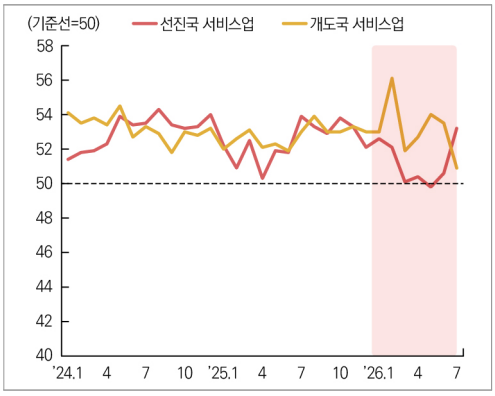
세계제조업 PMI는 선진국에서 기준선(50)을 넘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개도국에서 횡보하였고, 서비스업 PMI는 7월 들어 선진국은 큰 폭으로 상승(6월 50.6→ 7월 53.2)한 반면 개도국은 큰 폭(6월 53.5→7월 50.9)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Ⅰ-8]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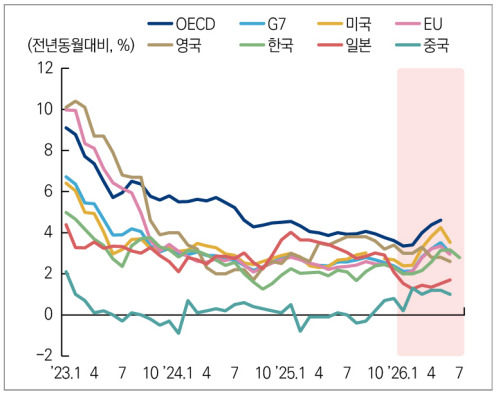
[그림 Ⅰ-9] 선진국과 개도국 서비스업 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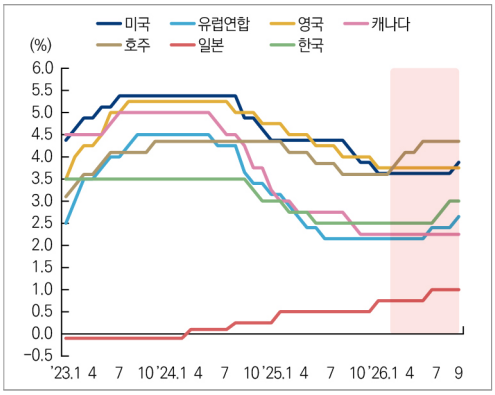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오름세이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선진국 물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3월 이후 미국, EU 등에서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6월 이후에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 물가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남아공 등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고,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이후 1%대로 상승하였다. EU, 일본, 한국, 호주 등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미 연준도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책금리 전망을 통해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8] 최근에는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지연과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횡단 송유관 공격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Ⅰ-10] 주요국 CPI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CEIC, IMF

[그림 Ⅰ-11] 주요국 정책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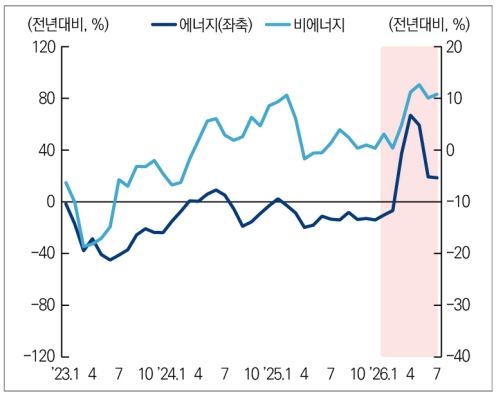
주: 미국은 정책금리 상한과 하한 평균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CEIC

에너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은 중동전쟁으로 원유, 가스, 비료 가격이 급등하였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 공급망 불안 등으로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6.3%, 비에너지 가격은 7.6% 상승하였다. 특히 국제유가는 1월 배럴당 60달러 초반 수준(두바이유 기준 63.9달러)에서 5월 94.7달러까지 상승하였고,

8) 미연준은 지난 9월 16일에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p 인상하였고, 정책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8명 중 16명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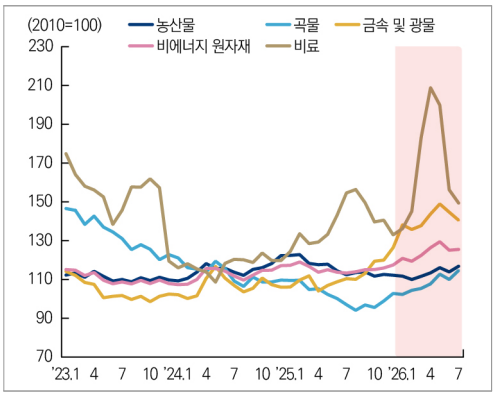
1~7월 중 전년동기대비 16% 상승(3~7월 중 28.3% 상승)하였다. 비에너지 원자재는 금속광물, 곡물, 비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비료는 중동산 암모니아, 요소 등의 공급차질,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 금속광물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였다. 비료사용 감소는 2026년 하반기 농산물 작황과 2027년 식품 가격에 후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Ⅰ-12]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Price Data

[그림 Ⅰ-13]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Price Data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202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1%, **세계교역량**은 3.5% 증가 예상
- **세계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선진국 2.4%, 개도국 4.8%)로 전제

1. 세계경제성장률

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직전 전망에 비해 올해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소폭 상향 수정하였다. IMF(7.8일), 세계은행(6.10일), OECD(6.3일)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이전보다 0.1%p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나, 2027년은 소폭 상향(IMF 0.2%p, 세계은행과 OECD는 0.1%p) 조정하였다. 중동전쟁에 기인한 공급측 충격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으로 중동국가와 유로지역, 일본 등 에너지수입국의 성장세 둔화 등을 하방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AI 관련 첨단 기술 확산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반도체 및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국의 성장세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표 Ⅰ-1]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2025	2026	2027
IMF (7.8일)	3.5	3.0(△0.1)	3.4(0.2)
(미국)	2.1	2.3(0.0)	2.2(0.1)
(중국)	5.0	4.6(0.2)	4.1(0.1)
세계은행 (6.11일)	2.9	2.5(△0.1)	2.8(0.1)
(미국)	2.1	2.2(0.0)	2.1(0.2)
(중국)	5.0	4.2(△0.2)	4.3(0.1)
OECD (6.3일)	3.4	2.8(△0.1)	3.1(0.1)
(미국)	2.1	2.0(0.0)	1.8(0.1)
(중국)	5.0	4.5(0.1)	4.3(0.0)

주: ( ) 안은 직전 전망 대비 수정폭(%p)
자료: IMF('26. 7월), OECD('26. 6월), WB('26. 6월) 세계경제전망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세계경제는 2026년 2.8%에서 2027년 3.1%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겠으나, 2027년에는 중동, 미국 등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동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가격, AI·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정도, 재정·통화정책여력 등에 따라 국가별 성장률 변화 양상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는 2026년 1.6%에서 2027년 1.8%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출과 AI 관련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2026년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고 2027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독일의 성장세는 재정지출과 공공투자 확대[9]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일부 재정지원으로 완화되고, 임금상승과 물가안정 등으로 내년에도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영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높은 물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었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27년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제는 2026년 3.7%에서 2027년 4.4%로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2026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 둔화 등의 부정적 요인을 수출과 첨단 제조업 호조 등이 상쇄하며 급격한 성장세 하락 위험이 낮아졌지만, 2027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지연,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AI·반도체 품목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출 차질로 급락하였던 성장률이 2027년에는 급반등할 전망이다.

9) OECD(2026. 6월)는 최대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 인프라기금 조성, 국방비 및 군사장비 투자 확대 등으로 독일경제가 2027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Ⅰ-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25	2026	2027
세계 경제성장률	3.3	2.8	3.1
선진국	1.9	1.6	1.8
미국	2.1	2.2	2.0
유로지역	1.4	0.8	1.2
독일	0.2	0.7	1.1
프랑스	0.8	0.7	0.9
이탈리아	0.5	0.5	0.6
영국	1.3	1.0	1.2
일본	1.1	0.6	0.8
개도국	4.5	3.7	4.4
중국	5.0	4.4	4.2
인도	7.7	6.4	6.8
아세안 5개국	4.5	4.1	4.3
러시아	1.0	1.1	1.1
브라질	2.3	2.4	2.2
중동·중앙아시아	3.7	0.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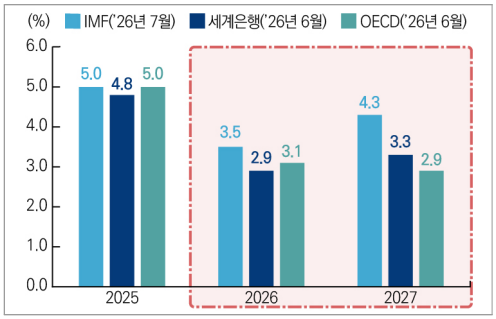
주: 1. 2026, 2027년의 세계경제성장률, 미국, 유로지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인도는 IMF('26. 7월), OECD('26. 6월), WB('26. 6월) 전망치 평균
2. 선진국과 개도국은 IMF('26. 7월), WB('26. 6월) 평균
3. 아세안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러시아, 브라질, 중동·중앙아시아는 IMF('26. 7월) 전망치

자료: IMF('26. 7월), OECD('26. 6월), WB('26. 6월) 세계경제전망

2. 세계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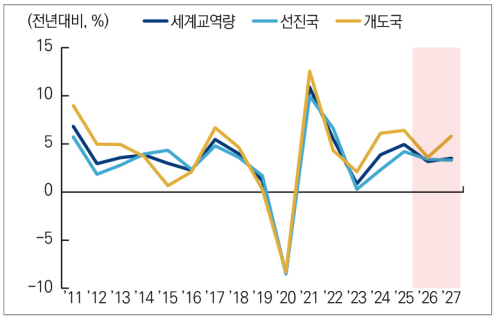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교역량이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세계교역 전망은 중동·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차질과 교역 정상화에 대한 가정, AI 관련기술 제품 교역과 공급망 재편, 관세의 시차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전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IMF는 AI 관련 제품 교역과 공급망 재편 효과[10] 등의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교역량이 2026년 3.5%에서 2027년 4.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OECD는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 충격과 아시아 지역 교역 정상화 지연 등을 반영하여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2026년 3.1%에서 2027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관세의 시차 효과[11]와 중동·호르무즈 해협 운송차질이 올해 세계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교역량이 2026년 2.9%에서 2027년 3.1%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Ⅰ-14] 세계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그림 Ⅰ-15] 선진국과 개도국 교역량 전망



주: IMF, 세계은행, OECD의 전망 평균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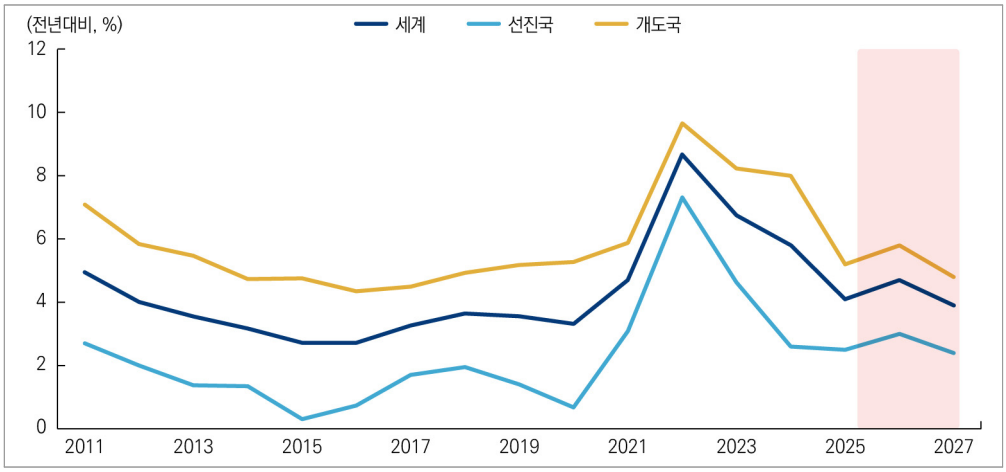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10) 공급망 재편 효과는 최근 아시아, 북미 등에서 AI 제품 역내 공급망이 확대되었고, 상품교역이 정체된 반면 클라우드·AI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금융·지식재산 서비스 등의 서비스교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현상을 말한다.

11) 관세의 시차효과란 2025년에는 미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조기 수입이 늘며 교역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는 반대로 미리 확보한 재고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최근 불확실성 확대로 설비투자와 공급계약을 지연시키며 교역량이 둔화되는 효과를 말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6년 4.7%에서 2027년 3.9%로 둔화될 전망이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과 운송비, 비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2023년 이후 지속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벗어나 2025년(4.1%)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지만, 2027년에는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2026년 3.0%에서 2027년 2.4%로 하락하고, 개도국은 2026년 5.8%에서 2027년 4.8%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OECD는 중동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 하에서 G20 소비자물가가 기본 시나리오(2026년 4.0%, 2027년 3.1% 전망)보다 2026년 0.4%p, 2027년 1.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단기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에너지·식품 가격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임금과 서비스 물가 등을 자극하여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 걸프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과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동반한 공급 충격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림 Ⅰ-16] 세계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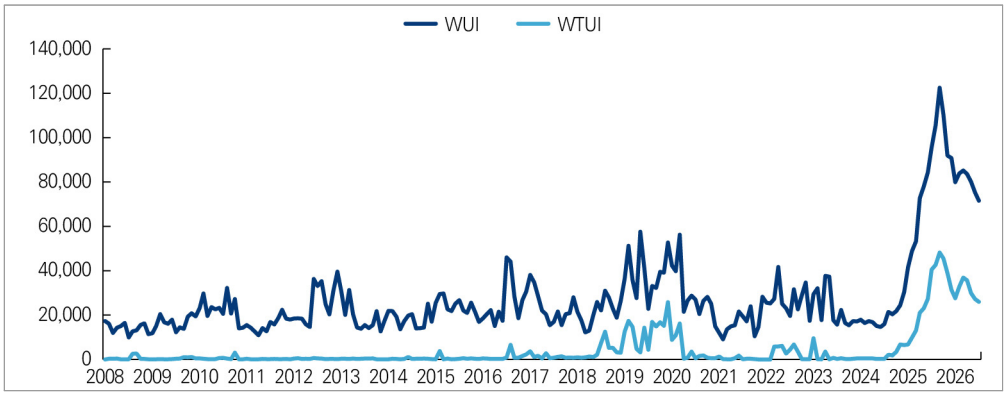
자료: IMF('26. 7월) 세계경제전망

3. 통상여건

-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AI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강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중동전쟁 또한 6개월이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높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가 불러온 세계경제의 재편 움직임에 더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미 자국의 거시경제적 위험이 드러나고 정책여력이 여의치 않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 국가 부채에 의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파편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재정적 정책 시행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비효율적 자원배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림 Ⅰ-17] 불확실성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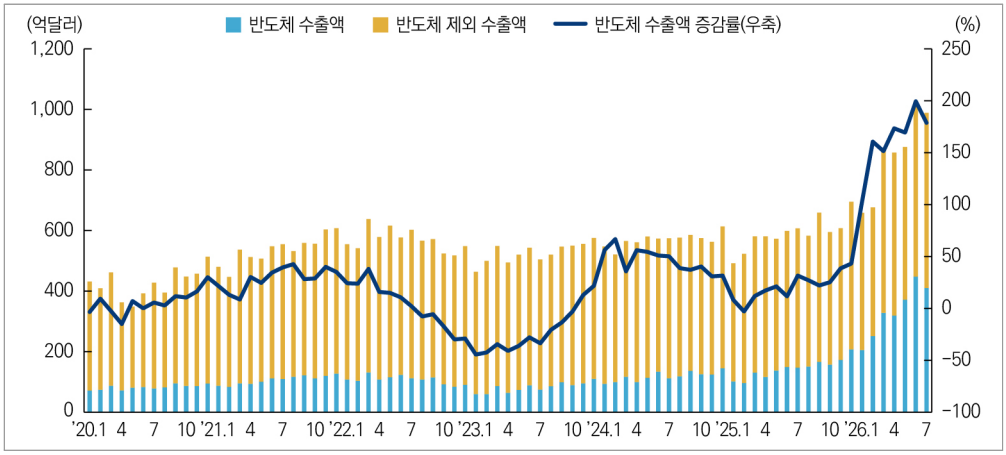
주: WUI(World Uncertainty Index)는 세계 불확실성 지수, WTUI(World Trade Uncertainty Index)는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의미
자료: World Uncertainty Index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 4. 14.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의 현실화는 공급망 안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더불어, 각국은 여러 세계경제의 위험과 충격으로부터의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정치적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기존의 국가 간 관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외정책이 동맹국들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의 파편화와 '다극화(multipolarity)'가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분명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은 반도체 및 AI 관련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에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1월 ChatGPT가 처음 소개된 이후, AI 기술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도 급격하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증가를 주로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도 압도적으로 큰 상품이었으나 최근에 그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수출액의 비중은 19.4%였던 것이 AI 관련 수요가 폭발하며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39.2%를 기록 중에 있다.

[그림 Ⅰ-18] 반도체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2025년 기준 반도체의 전체 수출액 1,734.1억 달러 중 27.5%를 차지하는 477.7억 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하여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국 내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요 또한 증가하여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0.0% 증가하였다.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2025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 477.7억 달러에 대비하여 28.8% 수준인 137.7억 달러를 기록하며 그 규모는 우리 반도체의 5위 수출시장이었다. 그러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6년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액 711.3억 달러 대비 43.1%까지 증가한 306.4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72.4% 증가한 것으로 최근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그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완성차)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 대한 같은 기간 자동차(완성차) 수출액은 182.6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자동차 수출액 대비 167.8% 큰 상황이다.

[그림 Ⅰ-19]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Ⅰ-20] 대미 반도체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3절 국제 원자재가격

- **2027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77달러로 전제
- 농산물, 금속광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전년대비 0.8%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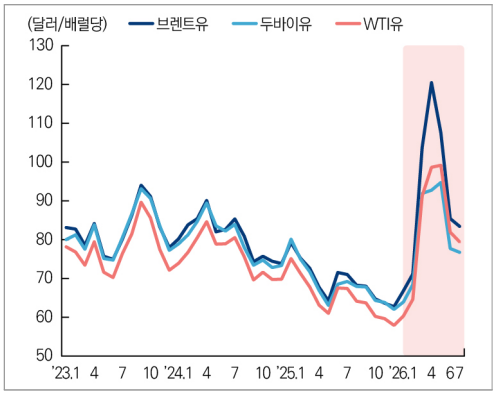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2026년 전년(배럴당 68달러) 대비 34%(배럴당 91달러) 상승하고 2027년에는 배럴당 77달러 수준(전년대비 −15.5%)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주요 국제기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및 걸프지역 생산이 회복되고 비OPEC 공급도 증가하며, 고유가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2026년 89~94달러, 2027년 76~80달러로 전망하였다.[13] 현재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단기 확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며 유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호르무즈해협 선박 공격에 더해 홍해·바브엘만데브에서도 후티 공격이 이어지고,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여 홍해 얀부항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횡단 송유관이 공격 후 가동을 중단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다.

당분간 양측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해상통제·항만봉쇄·경제제재 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군사적 소강과 호르무즈 해협 부분 봉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속도 및 걸프지역 생산능력 회복, 미국·브라질·캐나다 등 비OPEC 공급, OPEC+ 생산 정책, 세계 석유수요와 중국의 원유 수입, 정유 가동률, 재고와 전략비축유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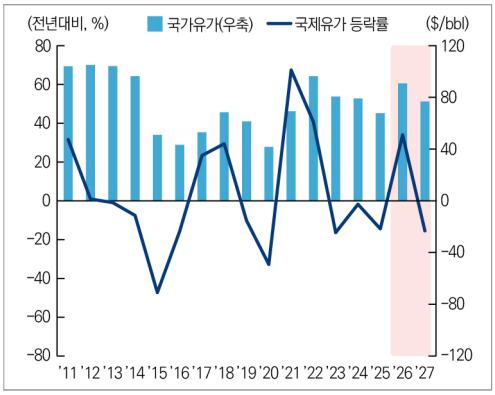
13) IMF는 국제유가가 재고 방출과 비걸프지역 생산 증가 등으로 극단적인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2026년 배럴당 89.3달러(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단순평균 기준)에서 2027년 78.7달러로 하락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생산시설 재가동, 기뢰 제거, 선박·보험 재배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2026년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36% 상승한 배럴당 94달러(브렌트유 기준)로 높게 유지되고 2027년에는 76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과 생산능력 훼손이 장기화될 경우 2026년 배럴당 11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는 단기적 공급차질을 기본 시나리오로 2026년 배럴당 92달러(브렌트유 기준)에서 2027년 80달러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걸프지역 생산과 수송 차질이 2027년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기본전망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Ⅰ-21] 국제유가 월별 추이



자료: CEIC,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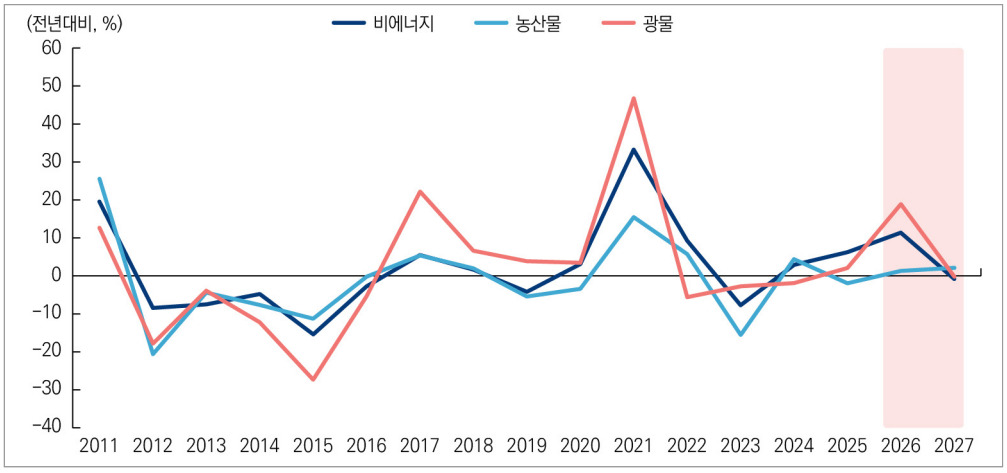
[그림 Ⅰ-22] 국제유가 연별 추이 및 전망



자료: 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단순평균 기준
IMF, WB

농산물, 금속광물 등 비에너지 원자재는 2026년 11.4% 상승하지만 2027년에는 0.8% 하락할 전망이다. 농산물과 금속광물은 2026년 각각 1.3%, 18.9% 상승하지만, 2027년에는 비료 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2.1% 상승하고, 금속광물은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Ⅰ-23] 비에너지 원자재가격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이번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전제치]

(단위: 전년대비 %, 달러)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계경제성장률	3.3	2.8	3.1	3.0	3.0	3.0
- IMF(2026.7)	3.5	3.0	3.4	3.2	3.2	3.1
- World Bank(2026.6)	2.9	2.5	2.8	2.8	-	-
- OECD(2026.6)	3.4	2.8	3.1	-	-	-
세계교역량 증가율	4.9	3.2	3.5	3.2	3.2	3.2
- IMF(2026.7)	5.0	3.5	4.3	3.2	3.1	3.0
- World Bank(2026.6)	4.8	2.9	3.3	3.1	-	-
- OECD(2026.6)	5.0	3.1	2.9	-	-	-
국제유가[1](달러/배럴)	67.7	90.8	76.7	70.3	70.1	69.8
- EIA(2026.9, 달러/배럴)	69.1	90.9	74.0	-	-	-
- IMF(2026.7)	-14.2	31.8	-11.8	-2.3	-0.3	-0.5
- World Bank(2026.6)	-14.5	36.2	-19.1	-14.5	-0.4	-0.3
비에너지 원자재가격[2]	3.9	11.4	-0.8	0.6	-	-

주: 1)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유 단순평균 기준 (단, EIA는 브렌트유 기준)
2) World Bank, IMF 전망치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IA, OECD, IMF,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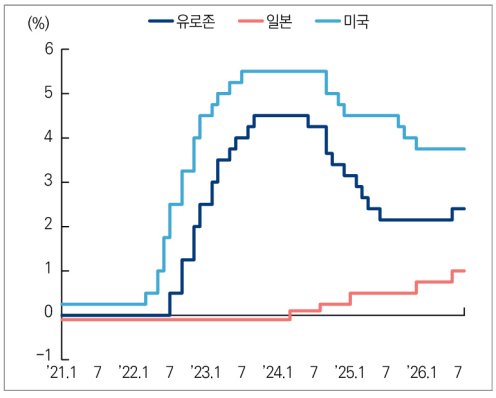
제4절 글로벌 금융시장

▪ **글로벌 금융시장**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단기 정책 금리의 인상 기조로 전환
-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는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각국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 금리는 인상 가능성 확대
-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달러화 강세

1.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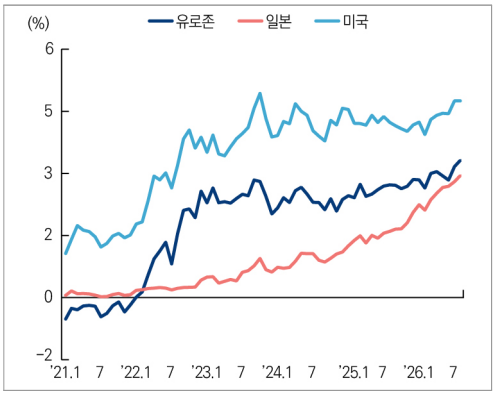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였다. 한편,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Ⅰ-24]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주: 유럽중앙은행은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기준
자료: CEIC

[그림 Ⅰ-25] 글로벌 국채(10년) 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유로존을 독일 국채 금리 기준
자료: CEIC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2025년 12월 기준금리를 3.50~3.75%로 인하한 이후 2026년 8월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함에 따라 연준은 9월 16일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p 인상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6월 기준금리(refinancing rate)를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였다. 일본은행은 6월 완만한 경제 회복,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각각 2.65%, 1.25%로 0.25%p 인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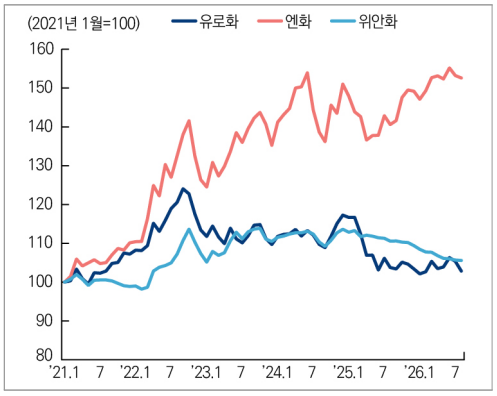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6년 1월말 4.2%에서 2월말 3.9%로 하락하였으나,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8월말 4.8%까지 상승하였다. 유로존 국채 10년물 금리(독일 국채 금리 기준) 또한 1월말 2.8%에서 2월말 2.6%로 하락하였으나 8월말 3.3%로 상승하였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월말 2.2%에서 2월말 2.1%로 하락한 이후 8월말 2.9%를 기록하였다.

2. 환율

2026년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화 환율은 2월말 발생한 중동 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심리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전환,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 지속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최근 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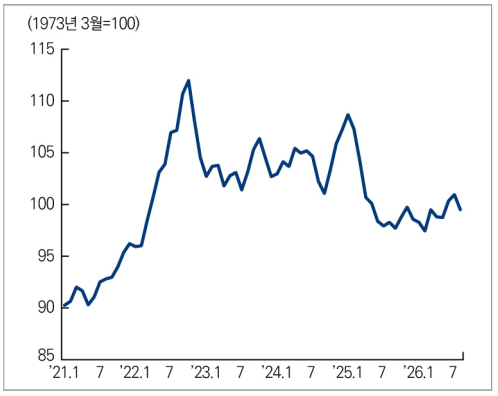
유로/달러 환율은 2026년 1월말 유로당 1.19달러에서 3월말 1.15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8월말 1.18달러로 상승하였다. 달러/엔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3.8엔에서 6월말 162.3엔까지 상승한 이후 8월말 달러당 159.6엔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달러/위안 환율은 달러화 강세에도 중국의 수출 호조와 대규모 무역 흑자 등으로 1월말 달러당 6.97위안에서 8월말 6.78위안으로 하락하였다. 이 기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4]는 1월말 98.3에서 7월말 100.9까지 상승한 이후 8월말 99.5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Ⅰ-26] 주요국 대달러 환율 추이



주: 1. 2021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CEIC

[그림 Ⅰ-27] 달러인덱스 추이



주: 1973년 3월 = 100 기준
자료: CEIC

14)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1973년 3월 = 100 기준)

제5절 전망의 위험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중동 지역 안정 및 에너지 시장 정상화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 AI 투자 확대 및 생산성 증가	• 보호무역 재강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관련 투자 확대	•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2027년 세계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 회복 강도는 AI 투자의 생산성 전환, 인플레이션과 금융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서비스업, 인프라 투자 등 내수 기반이 강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2027년 세계경제의 성장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하방 요인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비료 등 원자재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재상승과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위험 등이다. 상방요인으로는 중동지역 안정 및 에너지시장 정상화, AI 투자 확대 및 생산성 증가 등이다.

우선, 가장 큰 단기적 하방 요인은 중동분쟁 장기화와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지역 에너지 수송 차질이 장기화되면 원유·가스뿐 아니라 비료·식량·해상운임·보험료가 함께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물가상승에 대응한 고금리 기조가 심각한 성장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에 따른 하방 위험이다. 관세 및 수출통제가 확대되면 교역과 기업투자가 줄고, 특히 AI 장비와 핵심 투입재 규제가 강화되면 현재의 가장 큰 상방 요인인 AI 기술투자 자체가 약화될수 있다. 현재 미·중 관세전쟁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부과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가 11월 10일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미국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선택적 관세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관세 휴전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관세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위험이다. AI 관련 수익성과 생산성 기대가 낮아지면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격히 조정될 수 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시장과 AI 하드웨어 수출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의 효과와 금융 연계를 통해 소비·투자에도 성장을 제약하는 충격이 전파될 수 있다.[15)]

가장 직접적인 상방 요인은 중동전쟁의 조기 안정과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중동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수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어 원유·가스·비료가격이 하락하면 운송비와 제조원가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이는 가계 실질소득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AI 투자의 생산성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AI) 전환의 성장 효과는 반도체·서버·데이터센터·전력·광통신 장비 등의 AI 관련 투자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2027년에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제조업·금융·물류·의료·전문서비스의 실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확산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업무 과정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상승하고,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동아시아 중심의 AI 설비투자가 유럽과 여타 개도국으로 확산되는지도 중요하다.

15) IMF는 기술기업 중심의 높은 주가와 시장집중도를, OECD는 기술기업 가치에 노출된 사모신용·사모펀드를 금융 취약성으로 지적하였다.

제2장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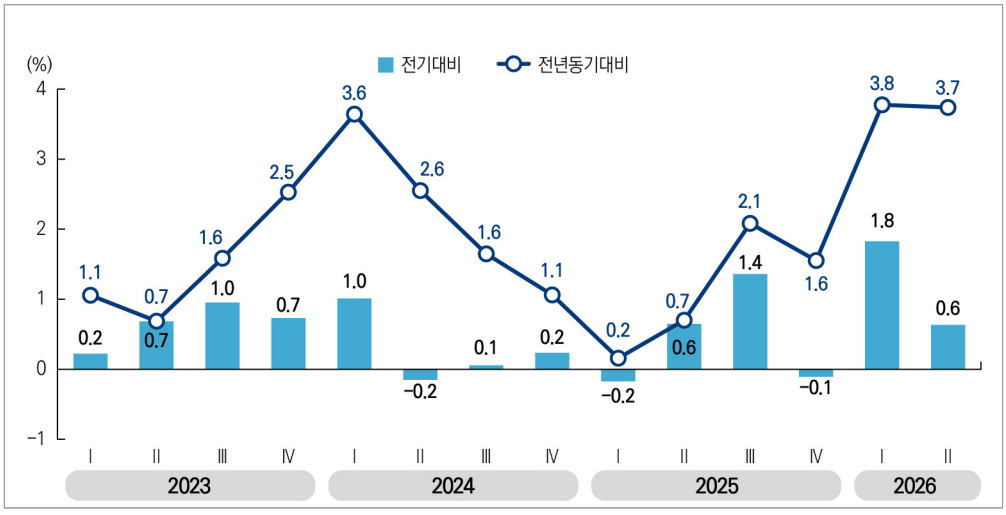
제1절 경제 성장률

- **2026년 국내 경제는 상반기 중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
- **경기**는 대내외적 충격에서 회복하며 2026년 1월 이후 개선

가. 경제성장

국내 경제는 2026년 상반기 중 실질GDP가 전년동기대비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금년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아졌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세가 가세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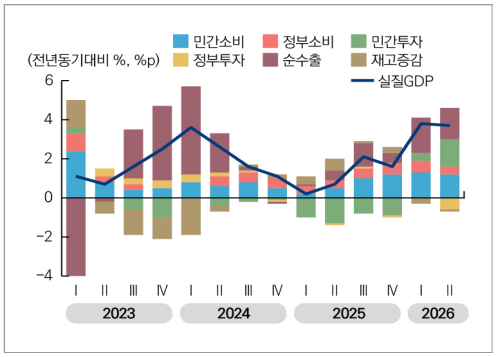
[그림 Ⅰ-28]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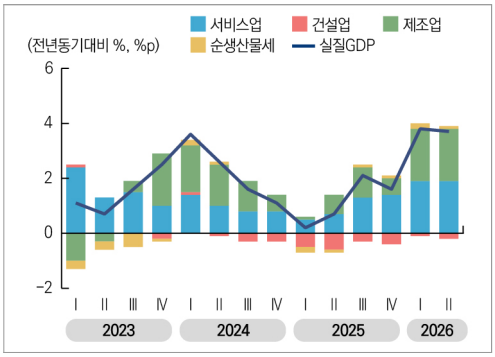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그림 Ⅰ-29]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30]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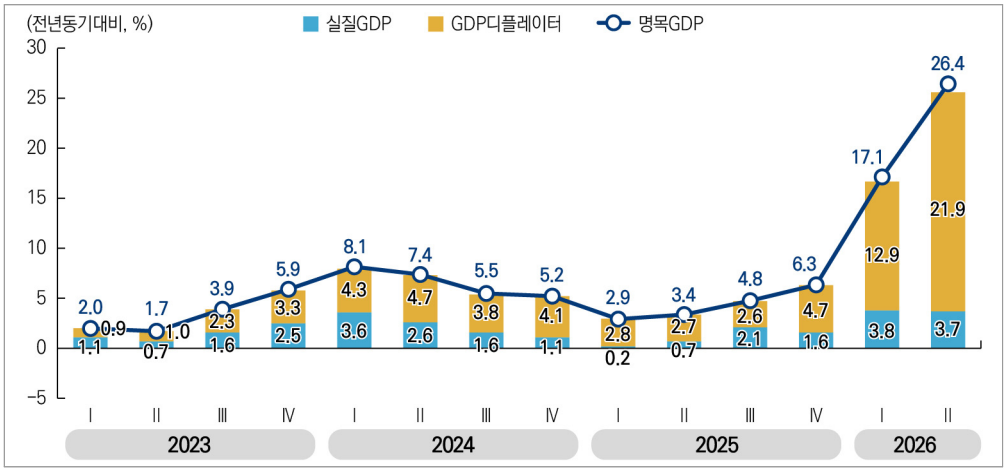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26년 상반기 중 2.6% 증가하여 2025년 하반기 2.2%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민간투자는 상반기 중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각각 5.4%와 3.8%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1.5% 감소하였다. 정부소비는 상반기 중 2.6% 증가하였으나, 정부투자는 같은 기간 중 6.5%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2분기 중 정부투자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16]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상반기 중 10.3% 증가하며 지난해 하반기(5.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총수입은 같은 기간 중 설비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7.3% 증가하였다.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 중 1.7%p로 지난해 하반기의 0.8%p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상반기 중 제조업은 수출 호조와 함께 성장률이 6.9%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업은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와 더불어 3.3% 성장하였다. 상반기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9%p와 1.9%p로 지난해 하반기의 0.9%p와 1.4%p에 비해 높아졌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상반기 중 21.9%의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하반기의 5.6%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이 3.8%로 높아진 데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GDP디플레이터가 17.4%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6) 2분기 중 정부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동전쟁으로 원유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아스콘 등 도로 건설용 원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석유 정제 부산물인 아스팔트와 골재(자갈, 모래), 채움재(석분)를 섞은 혼합물이다.

[그림 Ⅰ-31]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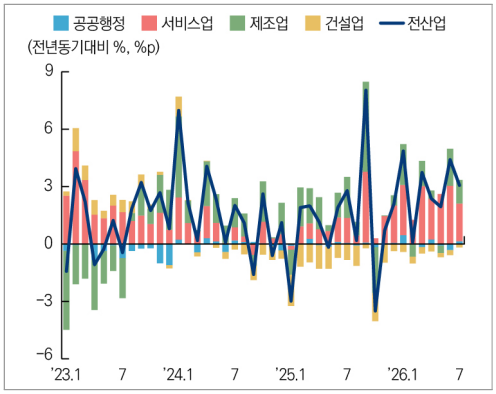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나. 경기국면 진단

국내경기는 2026년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3월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원유수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와 맞물리면서 다시 생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내수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업도 올해 들어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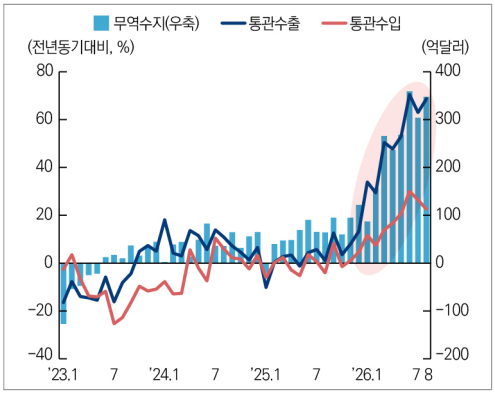
[그림 Ⅰ-32] 전산업 생산 증가율



주: 전산업생산지수 구성항목에 2020년 명목 GDP 비중을 적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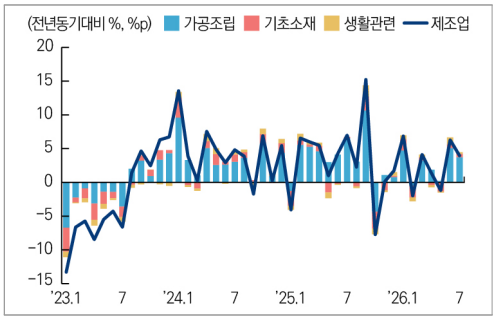
[그림 Ⅰ-33]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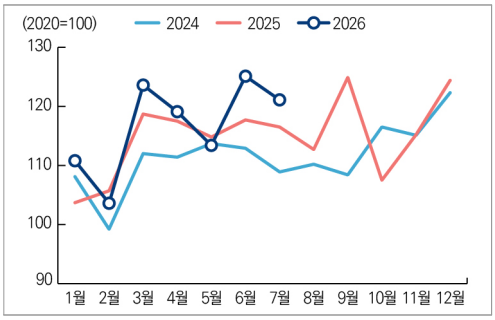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 등 가공조립형 제조업[17]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동전쟁, 관세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기초소재형 제조업과 더딘 내수 개선으로 제자리걸음 하던 생활관련형 제조업의 상황도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 수준은 2025년 수준을 상당 폭 웃돈다.

[그림 Ⅰ-34]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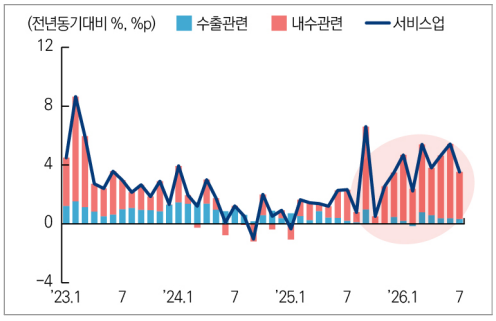
[그림 Ⅰ-35]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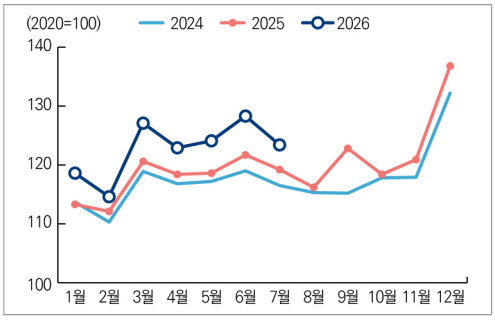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관련 서비스업[18]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낮은 편이다. 서비스업 생산 수준은 2025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Ⅰ-36]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Ⅰ-37]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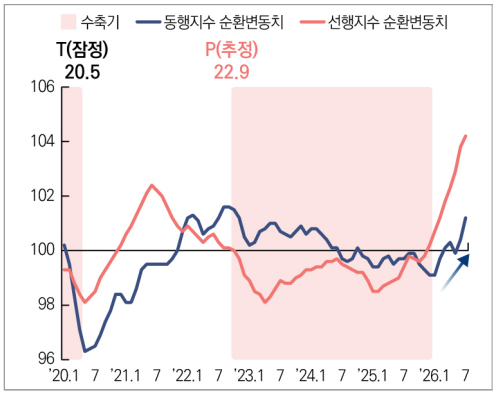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17) 제조업 생산지수를 산업형태별로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기초소재형(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목재, 펄프 등 제조업), 생활관련형(음식료품, 의복, 가죽, 가구 등 제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준년 비중은 58.2%, 29.1%, 8.0%이다(국가데이터처,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18)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수출관련 서비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과 그 외 내수관련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준년 비중은 14.4%, 85.6%이다(국가데이터처, 같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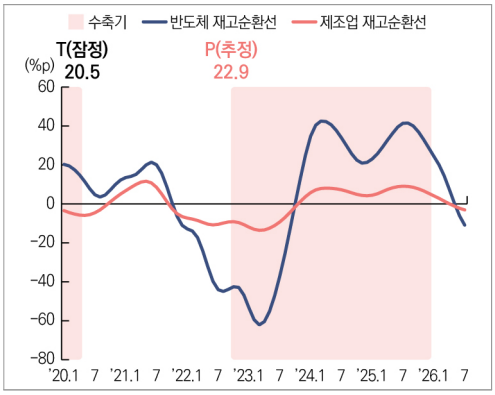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금년 1월 이후 상승하여 최근 기준선을 넘어섰다.[19]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다른 경기예고지표인 제조업 재고순환선(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은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1~8월 중 반도체 수출이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171.7%)을 기록한 점을 참고할 때 이는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생산 및 재고 증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Ⅰ-38]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Ⅰ-39] 제조업 재고순환선 추이



주: 1. 재고순환선 =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X-12에 의한 추세순환 요인 추정치 기준)
2.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종합하면, 우리경제는 중동전쟁,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꾸준한 내수 개선에 힘입어 회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상승을 제약하던 건설업도 최근 감소 폭이 줄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최근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확장국면으로 전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9)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다는 것은 동행지수로 본 현재의 경기 수준이 추세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동행지수/추세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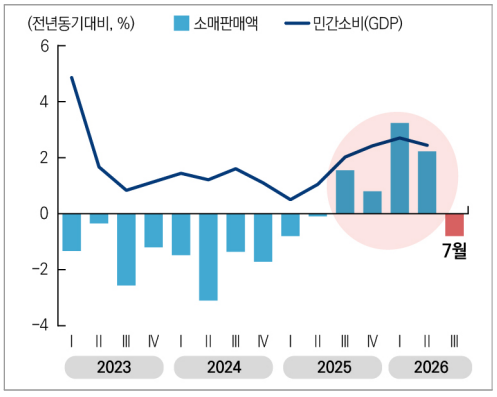
제2절 내수와 수출입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례 없이 높은 증가세
-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설비용 자본재 위주로 증가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 지속
-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소폭 적자

1.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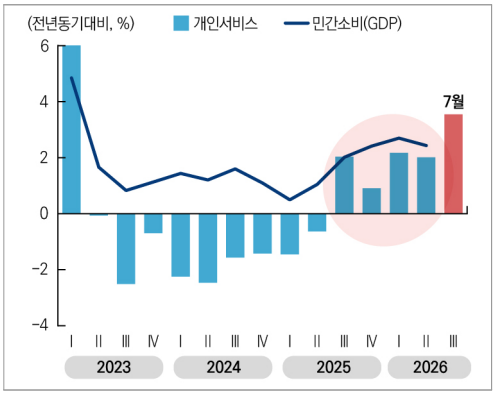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5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하였다(아래 왼쪽).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20]도 2025년 3분기 이후 줄곧 증가하였다(아래 오른쪽). 2026년 7월 소매판매액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21] 소폭 감소하였으나,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Ⅰ-40]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Ⅰ-41]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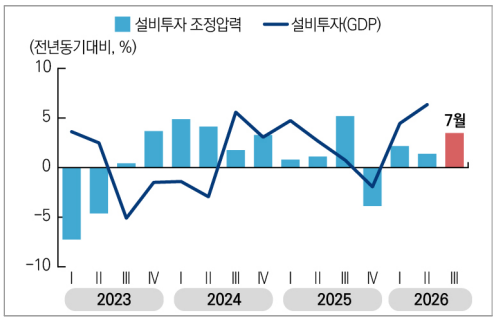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20)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수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21) 2026년 6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직전 신차 구매수요가 몰리고(7.1일 부터 3.5%→5%로 환원),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2026.6.8.~7.5일)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매출액 4조원, 상품권 환급액 8천억원) 소매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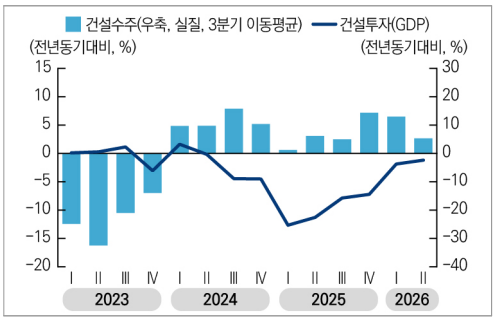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은 2025년 4분기 잠시 주춤하였으나 올해에는 2023년 3분기 이후의 상승 움직임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도 2024년 1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앞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평균 선행시차 1분기), 건설투자도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평균 선행시차 5분기).

[그림 Ⅰ-42]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주: 조정압력 = 생산 증가율 − 생산능력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Ⅰ-43]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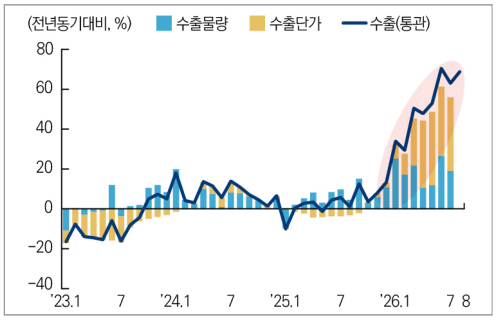


주: 건설수주액은 3분기 중심항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2.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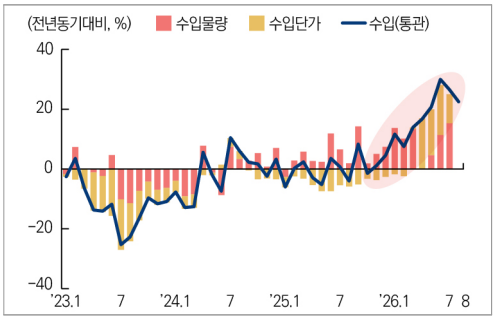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례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물량(실질금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수출단가 역시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3월 중동전쟁 이후 수입단가가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그림 Ⅰ-44]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그림 Ⅰ-45]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BOX 2] 품목별·지역별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전년동기대비, 비중 %)

	품목명	2025		2026(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22.2	24.4	171.7	40.4
2	자동차	1.7	10.1	-3.5	6.6
3	석유제품	-9.7	6.4	41.2	6.1
4	컴퓨터	10.4	2.3	302.4	4.6
5	일반기계	-8.2	6.6	-1.2	4.5
6	석유화학	-10.0	6.0	6.6	4.5
7	선박	24.1	4.5	11.3	3.1
8	철강	-7.6	3.5	-0.2	2.4
9	무선통신기기	-6.0	3.0	32.2	2.0
10	자동차부품	-6.0	3.0	-5.6	1.9
11	비철금속	8.2	2.4	34.3	1.8
12	바이오헬스	10.4	2.3	14.6	1.8
13	전기기기	-9.4	2.4	6.2	1.7
14	디스플레이	0.4	2.4	6.2	1.7
15	화장품	12.2	1.6	31.2	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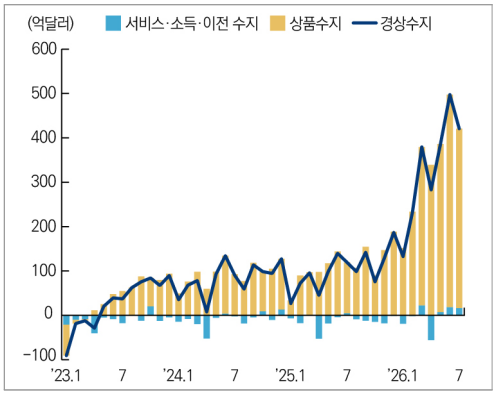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전년동기대비, 비중 %)

	지역명	2025		2026(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1	중국	-1.7	18.4	76.1	21.0
2	미국	-3.8	17.3	57.0	18.4
3	아세안	7.4	17.3	58.8	18.2
4	베트남	7.6	8.8	57.7	9.1
5	EU27	3.0	9.9	19.0	8.0
6	중남미	6.9	4.4	24.3	3.3
7	일본	-4.4	4.0	14.1	3.1
8	인도	2.9	2.7	30.8	2.4
9	중동	3.8	2.9	-9.7	1.7
10	CIS	18.4	1.9	-13.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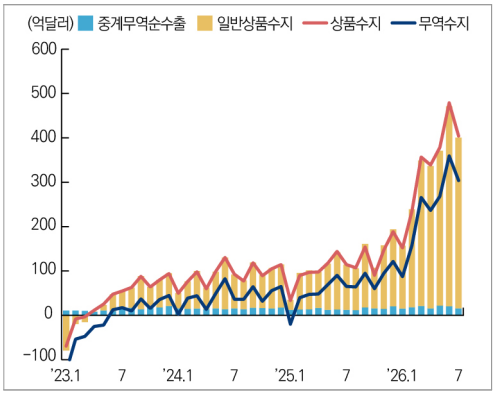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부

[그림 Ⅰ-46]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47]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추이



주: 무역수지(수출입차)는 통관 기준, 상품수지 등은 국제수지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금년 들어 흑자 폭이 매우 커졌다. 수출은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례 없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수입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원유 가격이 오르며 원자재 수입액이 늘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7월까지 2,330.9억 달러 흑자이다. 특히 흑자 폭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여 1월에는 132억 달러, 3월에는 379억 달러, 6월에는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상품수지가 흑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생산·수출한 국산품의 순수출액인 중계무역수지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2026년 7월까지 11.9억 달러 적자이다. 본원소득수지가 투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16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수지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137.4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전소득수지는 35.0억 달러 적자였다.

제3절 고용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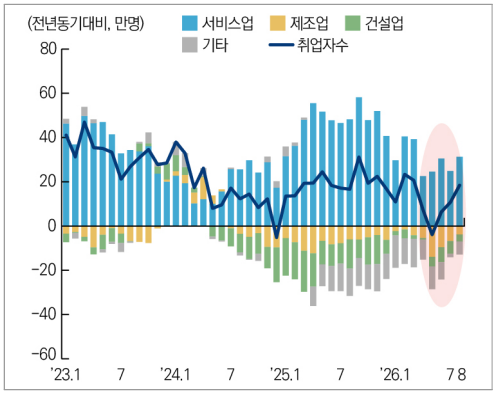
- **고용**은 내수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임금**은 특별급여의 큰 변동성 가운데 정액급여는 완만한 증가세 유지
- **물가**는 물가안정목표 2% 선을 상당 폭 상회

1. 고용

고용은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5년 이후 월평균 2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으로 2026년 5월 4만명 감소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8월에는 18.4만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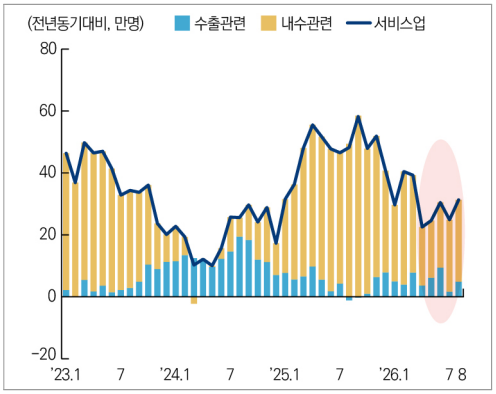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고용 비중이 가장 큰 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컸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최근 일자리 감소 폭이 줄며 상황이 나아졌다.

[그림 Ⅰ-48]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Ⅰ-49]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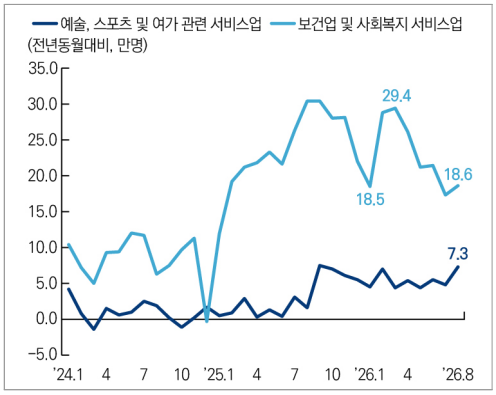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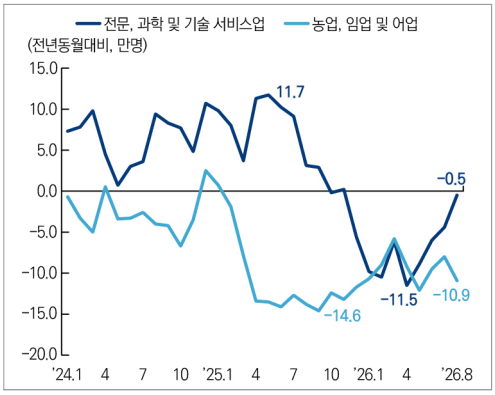
내수관련 서비스 업종별로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은 2025년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7만명 증가하였고 2026년 1~8월 중 전년동기대비 22.7만명 증가를 기록하여 전 산업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들어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고용이 호조세인 산업은 예술·스포츠·여가업으로, 2026년 1~8월 중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5.4만명 증가하였다. 반대로 최근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진 서비스 산업은 전문·과학·기술업으로, 2025년만 해도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5.4만명 증가하여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1~8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7.2만명 감소하여 농림어업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농림어업의 경우 2025년 전년대비 10.7만명, 2026년 1~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9.4만명 감소하여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Ⅰ-50] 최근 양대 고용 성장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Ⅰ-51] 최근 양대 고용 감소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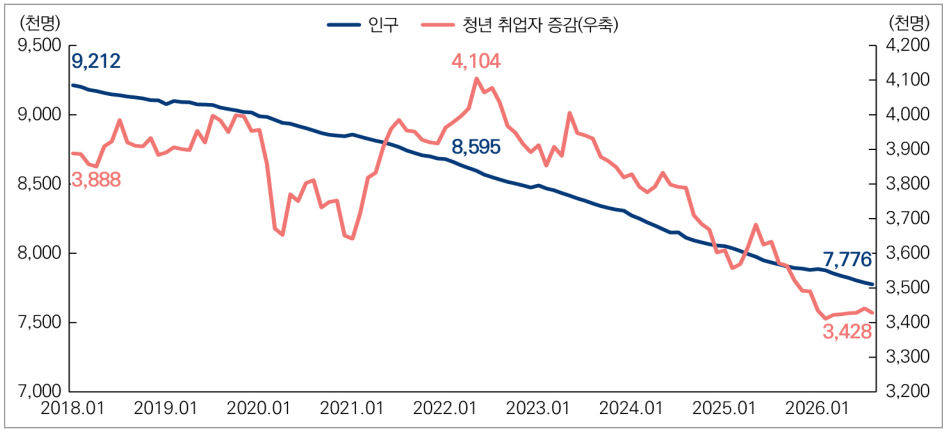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BOX 3] 청년층 최근 산업별 취업자 현황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5월 410.4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6년 8월에는 342.8만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취업자 감소에는 저출생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다. 15~29세 청년인구는 2022년 8월 853.1만명에서 2026년 8월 777.6만명으로 75.5만명(-8.9%)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의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를 상회하고 있다.

[청년(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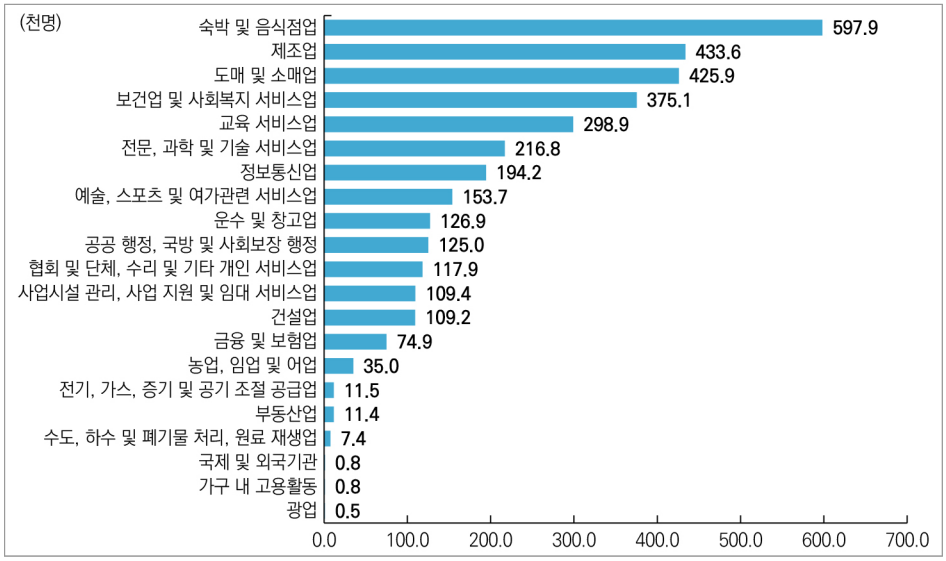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로 2026년 1월~7월 평균 청년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점업이 59.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43.4만명, 도매·소매업 42.6만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7.5만명, 교육서비스업 29.9만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1.7만명, 정보통신업 19.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1~7월 평균 청년 취업자수는 전년동기간 대비 18.7만명 감소하였는데, 감소분의 대부분은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업(-23.2%)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9%)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청년 취업자 수 감소는 청년인구 감소가 기초적인 하방요인이지만, 산업별 수요 변화도 함께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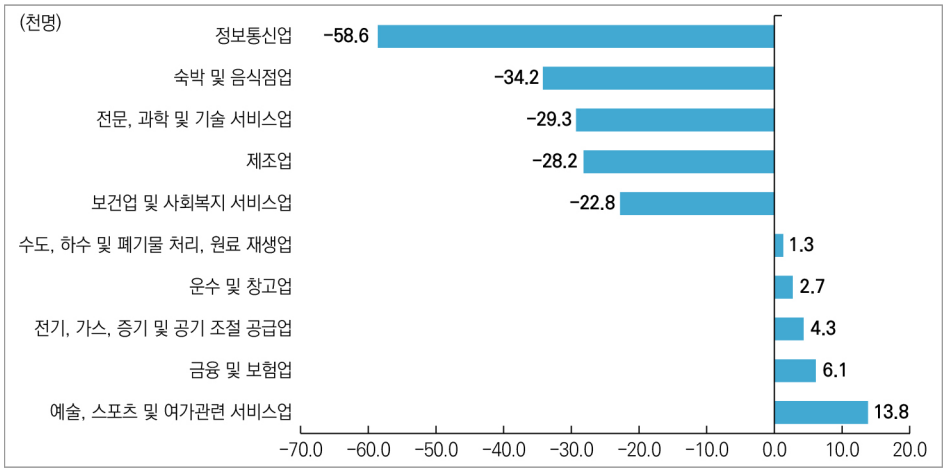
예술스포츠여가업은 1~7월 내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금융보험업은 최근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운수 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은 6~7월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 규모]



주: 2026년 1~7월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6년 주요 청년 취업자 증가/감소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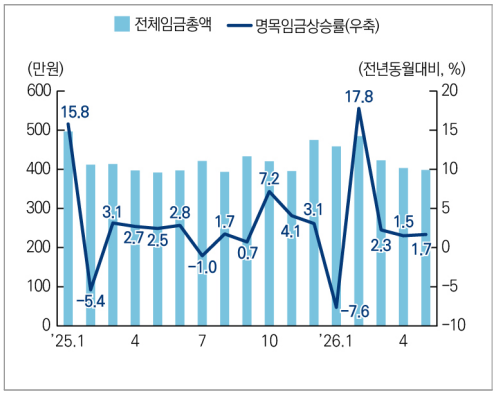


주: 2026년 1~7월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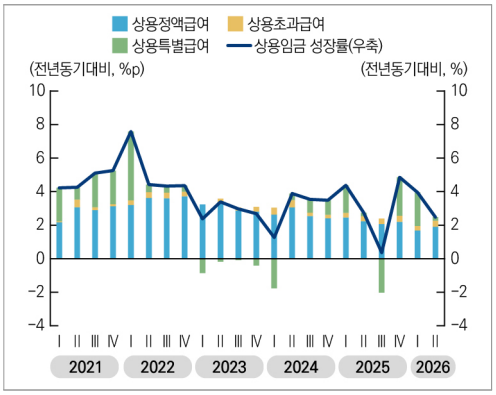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월평균명목임금은 403.6만원으로 전년동분기 월평균명목임금(395.3만원) 대비 2.1% 증가하였다. 명목임금은 2026년 1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이후 2월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월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상승(140.7%)하였으나 4월, 5월은 감소하며 2분기 명목임금상승률은 1분기 대비 축소되었다.

[그림 Ⅰ-52] 월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Ⅰ-53] 상용명목임금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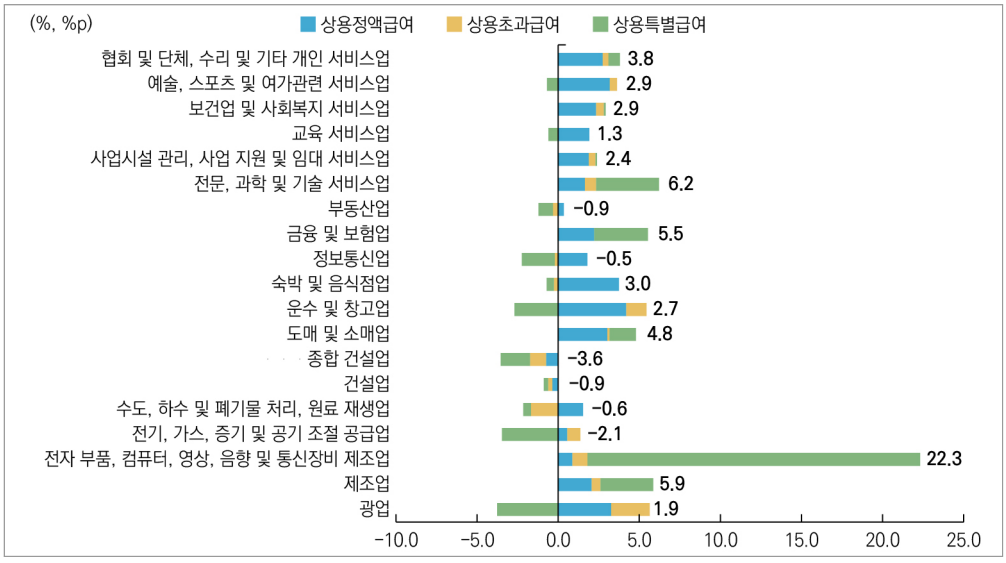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AI·반도체 업황 호조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에서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액급여는 전년동분기대비 1분기 1.4%, 2분기 1.4% 증가에 그친 반면 특별급여는 각각 62.8%, 106.7% 증가하였다. 다만 제조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종합건설업은 정액급여가 각각 1.2%, 0.6% 감소하였으며, 특별급여도 각각 25.2%, 3.1% 감소하였다.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9% 인상되고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서비스업의 상용임금은 대체로 정액급여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그림 Ⅰ-54] 산업별 2026년 상반기 상용명목임금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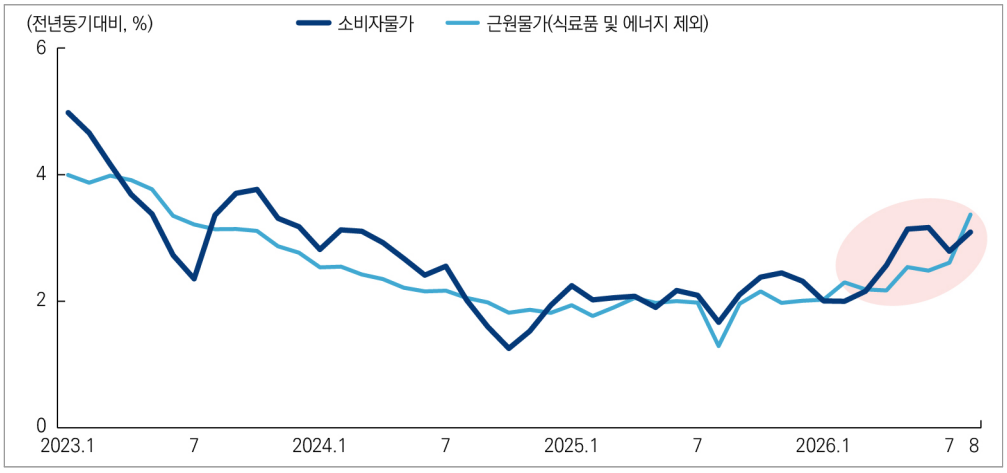


주: 전자부품 등 제조업과 종합건설업은 중분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3. 물가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모두 상승률이 중동전쟁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 선을 상당 폭 웃돌고 있다. 2026년 8월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3.1%와 3.4% 상승하였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8월의 휴대폰 요금감면[22] 기저효과 0.58%p를 제외하면 8월의 물가상승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입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3월 이후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림 Ⅰ-5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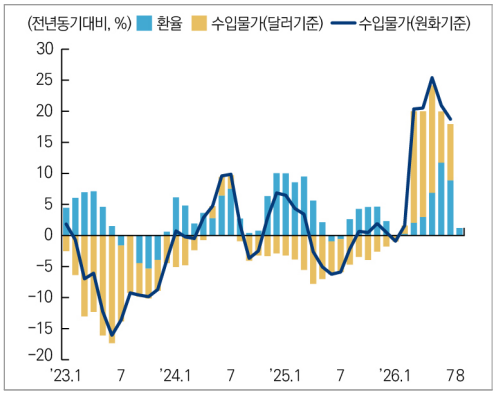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GDP디플레이터에 영향을 주는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은 수출단가가 반도체 가격과 함께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수입단가도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4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수출단가 상승이 이러한 상황을 압도하고 있다.[23] GDP디플레이터는 내수디플레이터 변화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더하여 결정된다.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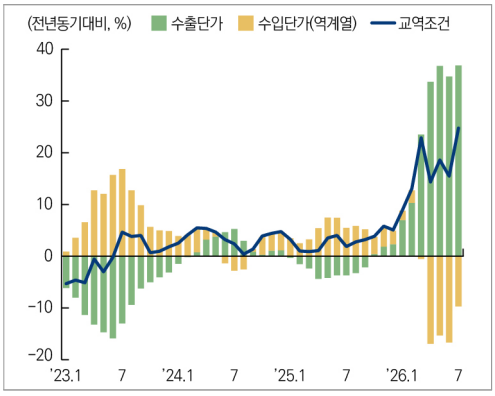
22)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통신료를 50% 할인하였다.
23) 수출 및 수입단가지수는 한국은행의 수출·입 금액지수를 수출·입 물량지수로 나누어 추산하였다.

[그림 Ⅰ-56] 수입물가 변동요인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Ⅰ-57]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제4절 금융시장

- **국내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확대 속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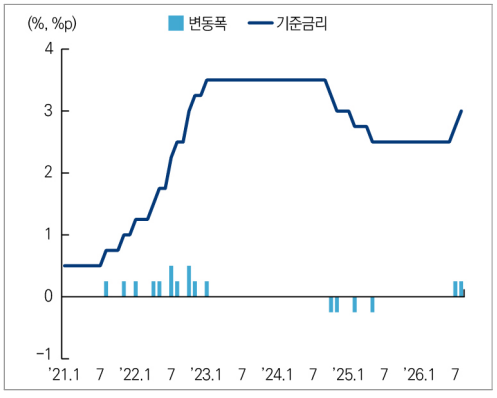
1. 국채 금리

2026년 상반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과의 동조화, 경기 회복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경제 성장세 개선,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였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함으로써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하였다. 8월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 연속 0.25%p 인상되어 3.00%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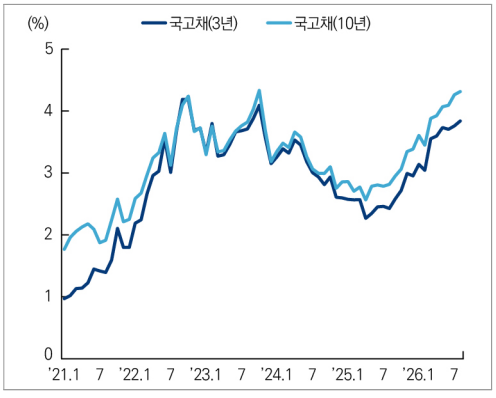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6년 1월말 3.1%에서 8월말 3.8%로 0.7%p 상승하였고, 국고채 10년물 금리 또한 1월말 3.6%에서 8월말 4.3%로 0.7%p 상승하였다. 물가 상승 압력, 장기 채권 시장 약세 등으로 국고채 장단기 금리 간 격차가 최근 확대되었다.

[그림 Ⅰ-58]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Ⅰ-59]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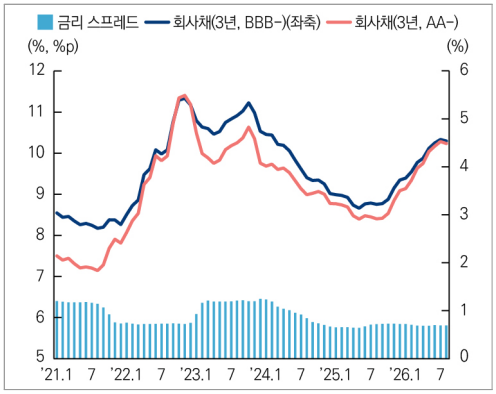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2. 회사채 및 대출 금리

2026년 회사채 및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과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사채(3년, AA-) 금리는 2026년 1월 3.5%에서 8월 4.5%로 1.0%p 상승하였고, 회사채(3년, BBB-) 금리는 동기간 9.4%에서 10.3%로 0.9%p 상승하였다. 두 회사채 간 금리 차는 1월 5.85%p에서 8월 5.81%p로 0.04%p 하락하였다. 최근 5년 회사채(3년, AA-)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11월 5.5%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2025년 5월 2.9%와 비교하였을 때 1.6%p 상승하였다. 최근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AI 관련 채권 발행 확대[24] 등은 국내외 회사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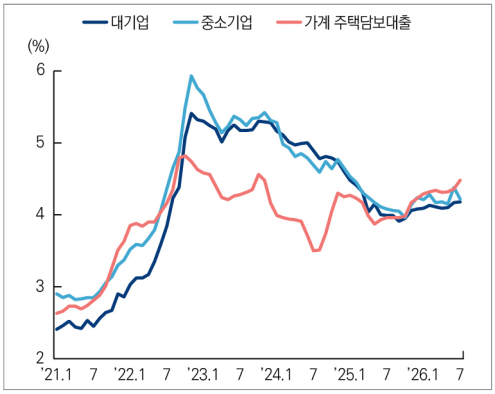
기업 대출금리와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 폭이 회사채 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026년 1월 4.1%에서 7월 4.2%로 0.1%p 상승하였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동기간 4.21%에서 4.22%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월 4.3%에서 7월 4.5%로 0.2%p 상승하였다.

[그림 Ⅰ-60]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Ⅰ-61]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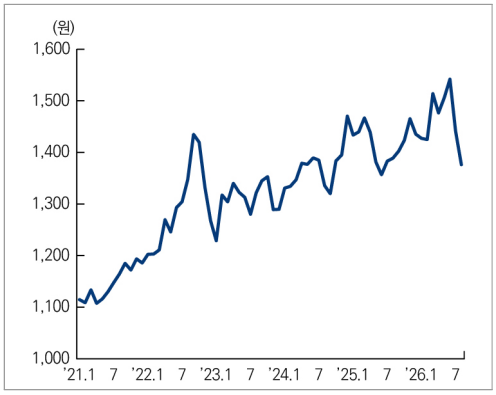
24) AI 관련 기업의 공모 달러채 발행액은 2023년 290억 달러에서 2026년 8월까지 2,300억 달러로 크게 증가(강현주,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6.)

3. 환율 및 위험지표 추이

2026년 원/달러 환율은 중동 분쟁 발생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반도체 수출 호조, 대형 기업(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달러 자금 유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하락하였으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2026년 1월말 원/달러 환율은 1,427원을 기록한 이후 6월말 1,542원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말 1,376원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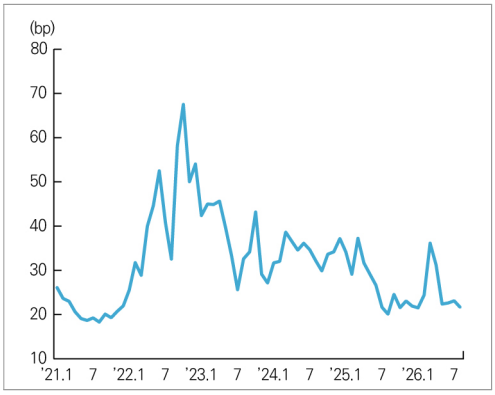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외신용도를 보여주는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25] 또한 중동 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1월말 21.5bp에서 3월말 36.1bp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말 21.6bp로 하락하였다.

[그림 Ⅰ-62]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63]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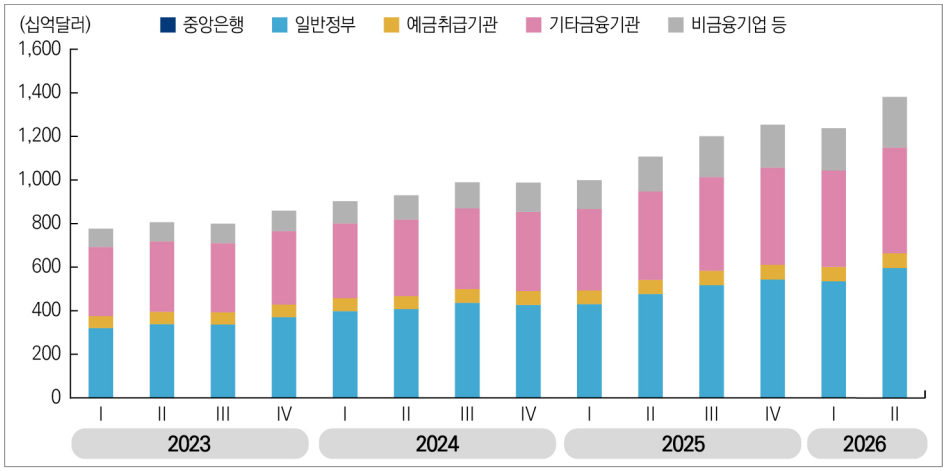
주: 한국 CDS 5년물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25)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는 도산, 지급실패, 채무불이행, 지불유예 등 신용위험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의미하고, 프리미엄은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을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BOX 4]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 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 잔액 기준 해외증권(주식이나 채권) 투자 규모는 2023년 1분기 7,768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 1조 3,808억 달러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규모는 2026년 2분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 2조 3,322억 달러의 59.2% 수준이며, 최고치를 기록한 2024년 4분기 117.5%에 비해 58.3%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투자 주체별 해외증권투자 투자 잔액]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IIP)(https://ecos.bok.or.kr/)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가 최근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26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3.9%, 2분기는 24.7%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는 동 기간 각각 69.4%, 121.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고, 해외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짐으로써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025년 6조 7,385억원을 순매도 하였고, 2026년 8월까지 164조 1,149억원을 순매도하였다.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 주체를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기금 등), 예금취급기관(은행 등), 기타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 등(비금융기관, 개인투자자 등)으로 구분할 때 비금융기업 등의 비중이 2023년 1분기 10.8%에서 2026년 4분기 16.8%로 6.1%p 증가하였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의 비중은 동기간 40.9%에서 35.1%로 5.8%p 감소하였다. 각 투자 주체별 해외증권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타금융기관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거주민의 해외증권투자는 미국 시장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 증권투자잔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45.0%에서 2025년말 63.2%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 22.1%에서 12.7%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해외투자 현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자료(SEIBro)에 따르면 2026년 8월말 기준 테슬라(TESLA INC)의 보관 금액이 215억 달러로 가장 많고, 엔비디아(NVIDIA CORP) 179억 달러, 알파벳 A(ALPHABET INC CL A) 85억 달러, 인베스토 QQQ ETF(INVESCO QQQ TRUST SRS 1 ETF) 47억 달러 순이다.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대상국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9	2022	2025
미국	45.0	44.6	57.2	63.2
중국	3.8	2.9	2.6	2.0
일본	4.8	4.7	3.1	3.0
유럽연합	22.1	25.2	14.5	12.7
동남아	5.8	4.9	3.2	2.6
중동	0.6	0.7	0.8	0.7
중남미	7.1	6.8	4.9	4.2
기타	10.8	10.2	13.7	11.6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해외투자 규모는 미국이 2016년말 35.3%에서 2025년말 32.3%로 소폭 감소하였고, 동남아 국가가 같은 기간 13.4%에서 17.6%로 증가하였다. 반면,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 24.6%에서 16.8%로 감소하였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연합의 비중이 2020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기타 국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 우리나라에 대한 증권투자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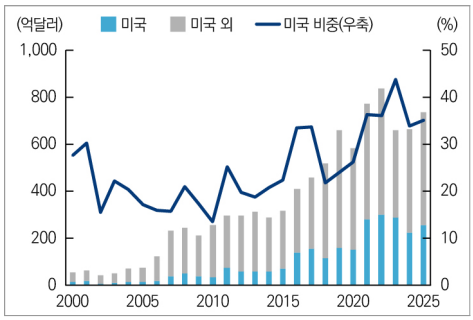
구분	2016	2019	2022	2025
미국	35.3	35.1	30.3	32.3
중국	4.1	4.8	5.2	3.6
일본	3.5	2.9	2.1	1.7
유럽연합	24.6	24.1	14.7	16.8
동남아	13.4	15.2	21.4	17.6
중동	3.7	3.1	3.2	1.8
중남미	2.9	2.5	2.1	2.5
기타	12.7	12.3	20.9	23.5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BOX 5]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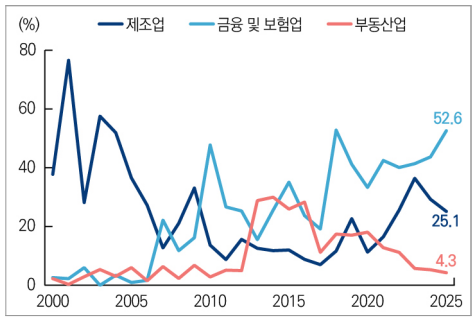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해외직접투자는 총투자액 기준 733.7억 달러로 전년보다 11.0% 증가했으며, 대미투자는 257.1억 달러로 전체의 35.0%를 차지하였다. 대미투자의 산업구조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2010년대 이후 금융·보험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2020년대 들어 미국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기업의 현지 생산시설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투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미투자는 금융·보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면서 첨단 제조업 투자가 병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대미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국내기업이 주도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6년 3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투자 수행기관과 재원 조성·운용방식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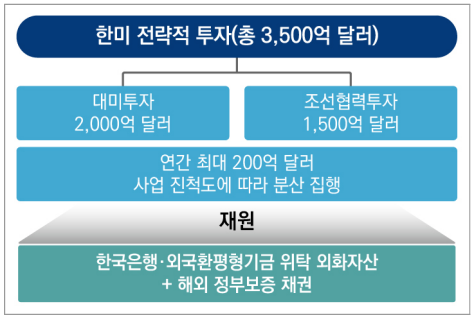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연간 200억 달러 범위에서 사업 진행단계에 맞춰 집행된다. 재원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과 해외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 채권 등으로 조달한다. 조선협력투자에는 기업의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보증·선박금융 등이 포함되므로 1,500억 달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미투자는 외화수요를 확대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전체 약정액보다 실제 집행 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 원화로 달러를 매입하면 외환수요가 증가하지만, 미국 현지 차입이나 해외채권 발행, 기존 외화자금을 활용하면 국내 현물환시장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보증은 약정만으로 외화유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지급시 외화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투자원금의 국내 환류 여부가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배당·이자와 회수된 투자원금이 국내로 환류되면 외환공급이 늘어나 환율 상승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재투자수익은 국내로 직접 유입되지는 않지만, 현지에서 후속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면 국내에서 새로 조달·송금해야 할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즉, 해외투자소득은 국내 환류 시 외환공급을 늘리고, 현지 재투자 시 신규 외환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외환수급 부담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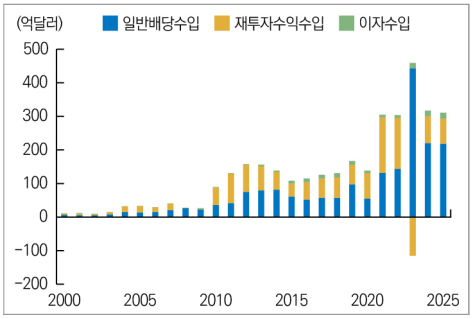
종합하면 대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은 실제 집행 규모와 시기, 국내 환전·조달 비중, 현지·역외 조달 규모 및 투자소득과 원금의 국내 환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집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글로벌 달러 강세나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면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특별법에 집행한도와 시기 조정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약정액보다 실제 외화조달·송금 규모와 투자소득의 환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규모 및 재원]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해외직접투자 소득수입]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5절 전망의 위험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가시화	•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
•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 등	• 주가 등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2026년 국내경제의 주요 상방 위험 요인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와 그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의 추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하방 요인으로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26]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과 주가 등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등이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나 아직까지는 부지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이 계획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며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이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반도체 기업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이익 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에 기대고 있는 반도체 수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주가급락과 유사한 형태의 조정이 주식시장 또는 여타 자산시장에서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이 공격으로 파손되는 등 중동전쟁 상황이 재차 악화되며 국제유가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26)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을 말한다.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II

지출전망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2027년 및 중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1절 2027년 전망

2027년 실질GDP 성장률은 2.7%로 지난 전망(2025.10월) 대비 0.6%p 상향 조정되었다. 지출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설비투자, 총수입, 총수출의 상승 폭이 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사회보장성 의무지출과 연구개발투자 지출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정부소비는 2.2%에서 3.0%, 정부투자는 1.6%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보건복지 분야의 현물성 사회보장 지출 수요 증가와 연구개발 투자지출 확대는 상방요인이나 도로·철도 부문의 SOC 지출 조정은 하방요인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득 개선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1.8%)에서 0.2%p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경제 전체의 소득 증가가 특정 산업 종사자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에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세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상승 및 착공 전환율 하락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2.0%)대비 0.5%p 하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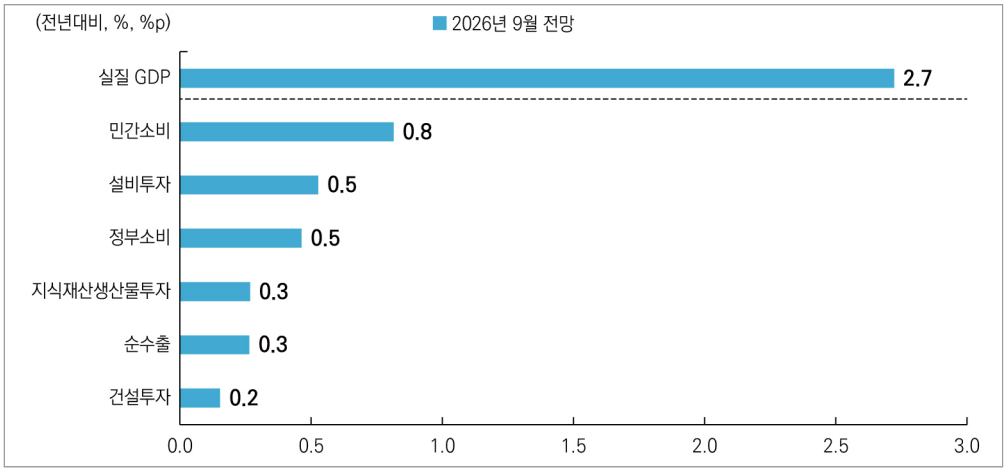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2026년 상반기 이후 반도체 장비 중심의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1.8%) 대비 4.6%p 상향 조정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최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전망(3.2%) 대비 0.9%p 상향 조정하였다.

총수출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 세계교역량증가율 개선 등을 고려하여 2.7%에서 4.2%로 상향 조정했으며, 총수입은 설비투자 등 내수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2.8%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거시경제분석과(macro@assembly.go.kr, 6788-3775)

[그림 Ⅱ-1] 2027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Ⅱ-1] 2027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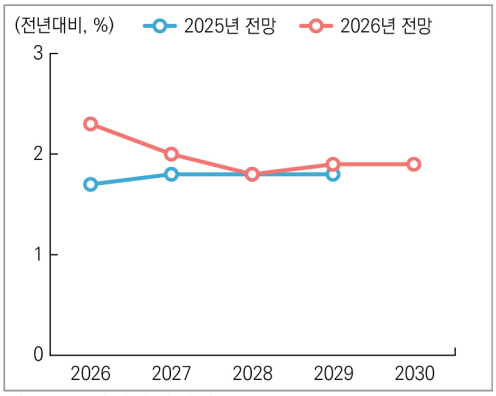
	'25.9월 전망	'26.9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2.1	2.7	0.6
민간소비	1.8	2.0	0.2
정부소비	2.2	3.0	0.8
건설투자	2.0	1.5	0.5
설비투자	1.8	6.4	4.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2	4.1	0.9
순수출(총수출-총수입)	-0.6	0.3	0.9
총수출	2.7	4.2	1.5
총수입	2.8	5.5	2.7

제2절 중기 전망

실질GDP 성장률의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7%로 지난 전망(2025.9월)의 2025~2029년 연평균 성장률 1.8% 대비 0.9%p 상승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성장률이 3.5%로 1.6%p 상향 조정되어 가장 변화 폭이 컸고 2027년, 2028년, 2029년의 성장률도 0.5~0.6%p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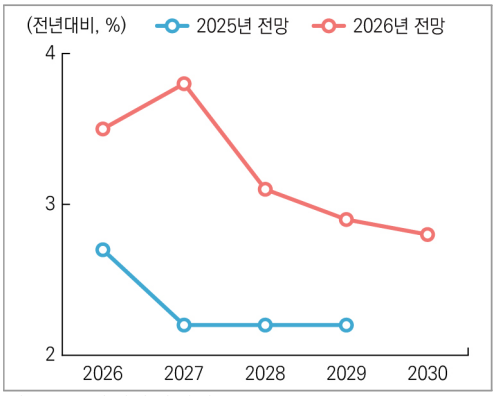
정부소비 중기 전망은 전년과 비교하여 연평균 2.3%에서 2.8%로 0.5%p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강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관련 정부소비 항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Ⅱ-2] 민간소비 비교 - 5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Ⅱ-3] 총고정자본형성 비교 - 5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간소비의 중기 전망은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매출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상방 요인이 하방 요인을 상회한 결과이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중기 민간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중기 전망은 전년과 비교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건설비 상승으로 건축수주의 착공 전환율이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설비투자 중기 전망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증가에 대응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잇단 생산능력 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전년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중기 전망은 기업의 투자 여건의 개선과 정부의 R&D 지출 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전년과 비교하여 상향 조정되었다.

총수출의 중기전망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반도체 호조세를 반영하여 5.1%로 지난전망(2.9%)과 비교하여 2.2%p 상향 조정했다.

제2장 2027년 및 중기 전망

제1절 경제성장률

1. 2027년 전망

▪ **2027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	3.8	3.3	3.5	3.0	2.5	2.7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 관련 반도체 슈퍼사이클	• 중동전쟁 상황 악화 및 국제유가 상승
• 설비투자, 소비 등 내수회복	• 미 관세 등 예기치 못한 통상여건 변화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가능성

우리 경제는 2027년 2.7% 성장할 전망이다. 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3.0%, 하반기 2.5%로 예상한다. 다만, 2026년 상반기의 성장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2027년의 성장경로는 상반에서 하반으로 가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성장률은 3.5%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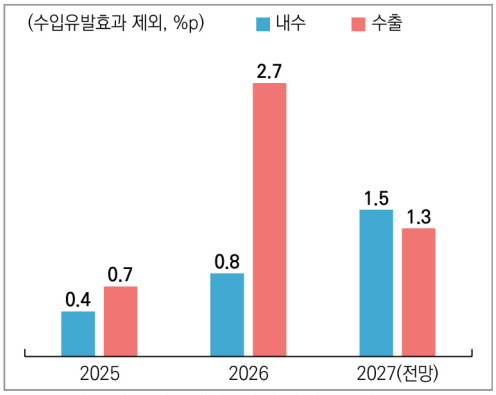
성장의 모습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2027년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가세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의 기여도[27]는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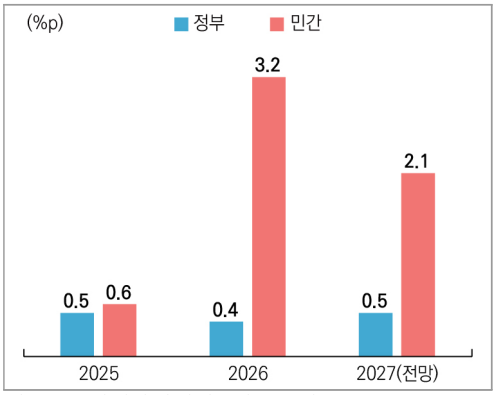
한편,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026년 0.4%p, 2027년 0.5%p로 2025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27년 총지출 규모가 2026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하여 예년의 평균 증가율 5.4%(2010~25년 평균)보다 크게 높으나,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28]

[그림 Ⅱ-4]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주: 수입유발효과 제외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Ⅱ-5]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의한 소득여건 개선이 시차를 두고 여타 부문으로 퍼져나가며 내수와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기업과 정부부문의 소득여건 개선이 설비투자와 정부 SOC투자 등 내수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부문의 소득과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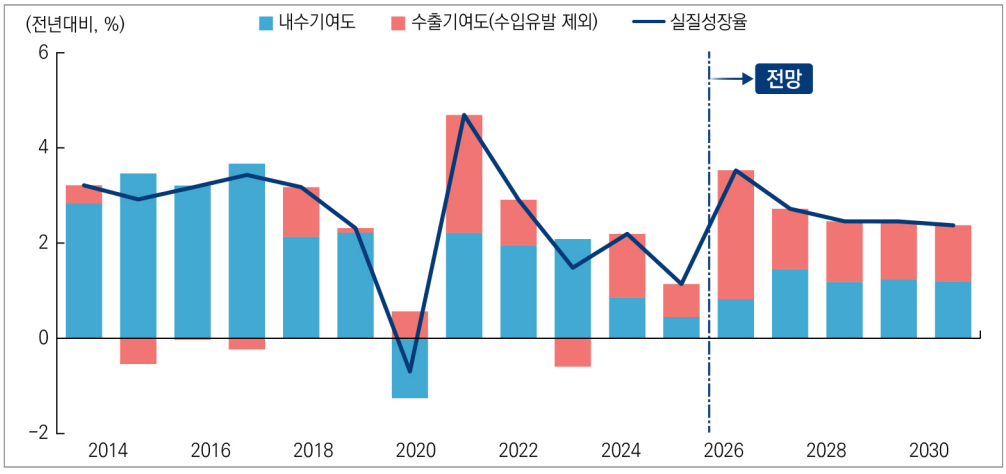
27) 순수출(총수출-총수입) 기준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과소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에서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효과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였다.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계산에는 산업연관표(2023년 연장표 기준)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중 수출의 수입유발액 비중(38.7%)을 활용하였다.

28) 국회예산정책처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2027년 정부 예산안 상세자료에 국민소득통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IMF의 '01 재정통계편람(GFS)을 적용하여 국민계정 기준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항목의 2027년 예산상 증감률을 자체 추산한 결과,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2026년 국회확정예산(추경포함) 대비 각각 5.5%, 7.6% 증가하여 예년 평균(2010~2025년) 4.2%와 6.2%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외 지출항목에서는 이전지출이 2027년 12.8% 증가하여 예년(6.0%) 대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이 있다. 다만 이전지출은 국민계정 상 정부의 최종지출(소비 및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정부의 재원이 민간 등으로 이전되어 지출되기 때문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부문으로의 쏠림이 심화하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반도체 포함 수출 주력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대로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수혜 업종 및 부문과 그렇지 아니한 업종 및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격차 확대가 자칫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Ⅱ-6] 내수와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성장률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Ⅱ-2] 2027 국내 경제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1.1	3.8	3.3	3.5	3.0	2.5	2.7
최종소비		1.8	2.6	2.3	2.5	2.2	2.3	2.2
민간소비		1.5	2.6	2.1	2.3	1.9	2.0	2.0
정부소비		2.7	2.6	3.0	2.8	3.0	2.9	3.0
총고정투자		-3.4	2.1	4.9	3.5	3.9	3.6	3.8
주체별	민간투자	-3.9	3.7	5.1	4.5	4.3	3.9	4.1
주체별	정부투자	-0.2	-6.5	3.6	-1.4	2.0	2.0	2.0
유형별	건설투자	-9.7	-1.5	2.6	0.6	1.2	1.7	1.5
유형별	설비투자	1.5	5.4	8.3	6.9	7.1	5.7	6.4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8	4.6	4.2	4.2	4.1	4.1
총수출		4.3	10.3	7.9	9.0	4.5	3.9	4.2
총수입		3.3	7.3	7.9	7.6	6.1	5.0	5.5
경상수지(억달러)		1,231	1,910	2,390	4,300	2,250	2,150	4,400
상품수출(통관)		3.8	48.2	59.1	54.0	19.3	2.6	10.0
상품수입(통관)		0.0	16.8	26.9	22.0	14.0	4.6	9.0
GDP디플레이터		3.2	17.5	18.2	17.8	6.5	2.5	4.4
소비자물가		2.1	2.5	2.8	2.7	2.6	2.3	2.4
명목 국내총생산		4.4	21.9	22.1	22.0	9.7	5.0	7.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표 Ⅱ-3] 명목GDP 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4.4	21.9	22.1	22.0	9.7	5.0	7.3
실질국내총생산	1.1	3.8	3.3	3.5	3.0	2.5	2.7
GDP디플레이터	3.2	17.5	18.2	17.8	6.5	2.5	4.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표 Ⅱ-4] 2026~2030년 국내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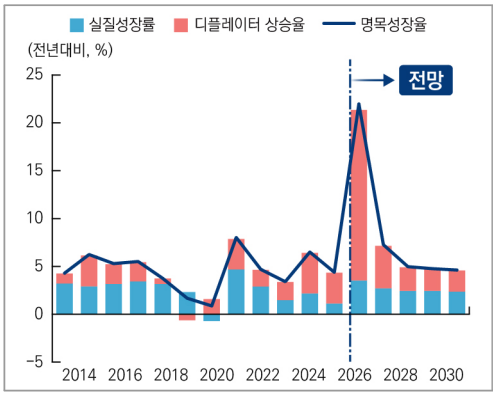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국내총생산		1.1	3.5	2.7	2.5	2.5	2.4
최종소비		1.8	2.5	2.2	2.1	2.0	2.0
민간소비		1.5	2.3	2.0	1.8	1.9	1.9
정부소비		2.7	2.8	3.0	2.7	2.5	2.4
총고정투자		-3.4	3.5	3.8	3.1	2.9	2.8
주체별	민간투자	-3.9	4.5	4.1	3.3	3.1	2.9
주체별	정부투자	-0.2	-1.4	2.0	2.0	1.8	1.8
유형별	건설투자	-9.7	0.6	1.5	1.0	1.0	1.0
유형별	설비투자	1.5	6.9	6.4	5.0	4.5	4.2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4.2	4.1	3.9	3.7	3.5
총수출		4.3	9.0	4.2	4.2	4.2	4.0
총수입		3.3	7.6	5.5	5.0	4.8	4.7
경상수지(억달러)		1,231	4,300	4,400	4,500	4,550	4,600
상품수출(통관)		3.8	54.0	10.0	5.0	4.7	4.3
상품수입(통관)		0.0	22.0	9.0	6.0	5.0	4.4
GDP디플레이터		3.2	17.8	4.4	2.5	2.3	2.2
소비자물가		2.1	2.7	2.4	2.2	2.0	2.0
명목 국내총생산		4.4	22.0	7.3	5.0	4.8	4.6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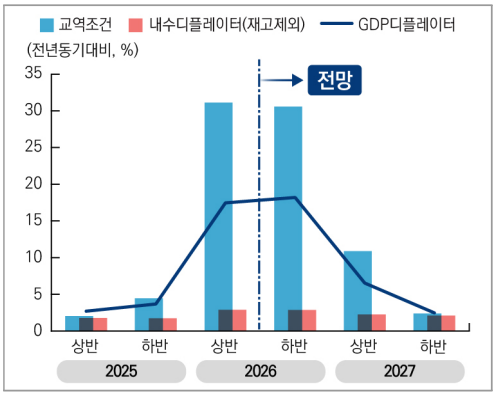
명목GDP 성장률은 2027년 7.3%로 2026년 22.0%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예상이며(3.5% → 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는 개선 폭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17.8% → 4.4%).[29] 이는 내수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0%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예상인 점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2027년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상황 개선, 세계적인 수요감소 등을 반영하여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27년에는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림 Ⅱ-7] 명목GDP 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Ⅱ-8]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9) 한편, 2026년의 명목성장률 22.0%는 실질성장률 3.5%와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7.8%의 합인 21.1%보다 크다. 차이의 원인은 디플레이터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로그 근사식(log approximation)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즉, 로그 근사값은 수학적으로 각 계산요소들의 변화가 작은 경우 참값에 가깝지만 계산요소들의 변화가 커지면 참값에서 멀어진다. 예컨대 2026년 2분기의 경우 실질성장률(3.7%)과 디플레이터 증가율(21.9%)의 합으로 명목성장률(26.4%)을 계산하면 차이(0.8%p)가 발생한다. 따라서 2026년과 같이 변화가 큰 해에는 로그 근사식 대신 수준 값을 이용하여 증가율을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BOX 6] 중동 전쟁 상황 악화와 물가 불안 재연 위험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이 2026년과 2027년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국제유가 예상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하여 보았다. 기준 시나리오는 이번 중기 전망의 기본전제로 IMF, 세계은행,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 등의 최근 예상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BOX 1], p.17). 악화 시나리오는 미국·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후티 등의 공격이 원유 대체 공급경로에 지장을 주며, 동절기 난방유 수요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2026년 4분기 배럴 당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후 2027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95달러 이상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가서야 80달러대로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 **(악화 시나리오: 중동전쟁 상황 악화 및 2027년까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

- 미국·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후티 등의 공격이 대체 공급경로에 간헐적으로 지장을 주며, 동절기 난방유 수요가 겹치는 경우를 상정
- 2027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90~110달러 사이를 오가며 불안이 지속

○ **(기준 시나리오: 전망의 기본전제)**

- IMF, 세계은행, EIA의 국제유가 전망을 단순 평균하여 설정

[예상 국제유가(달러/배럴) 시나리오]

시나리오	2026년 연평균	2027년 연평균
악화(A)	95달러 내외	90달러 내외
기준(B)	90.8달러 내외	76.7달러 내외
변동 폭(A-B)	4.2달러/배럴	13.3달러/배럴

자료: IMF, World Bank, EIA, S&P Global, Bloomberg

다만, 이상의 시나리오에 제시된 국제유가의 변동 폭과 지속기간 등은 양국간 협상 타결 가능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중동 전쟁 상황이 악화되어 국제 원유가격이 추가 상승하면 실질GDP 성장률을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며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30]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2025년 기준). 아래의 파급효과는 국제유가 기준 시나리오(2026년 90.8달러/배럴, 2027년 76.7달러/배럴) 대비 각 항목의 변동 폭을 의미한다.

- **(2026년)** 성장률은 0.06%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2%p 상승하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60억달러 감소
- **(2027년)** 성장률은 0.16%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2%p 상승하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70억달러 감소

[유가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 시산 결과][1)]

악화 시나리오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통관)	수입(통관)
2026년 95달러 내외	-0.06%p	0.12%p	-60	-0.09%p	0.88%p
2027년 90달러 내외	-0.16%p	0.32%p	-170	-0.24%p	2.44%p

주: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수출, 수입의 기준 시나리오(2026년 연간 90.8달러/배럴, 2027년 연간 76.7달러/배럴) 대비 변동 폭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에서 중동 전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제 원유 공급망이 복원되고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경우를 기준 시나리오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이 재차 악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검토한 악화 시나리오처럼 유가불안이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내년도 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2%p 정도 낮아지고 물가가 0.3%p 정도 높아질 위험이 있다.

30) 국제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경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NABO 경제전망」(2026.3.27.)의 "[BOX 5] 중동 전쟁 장기화 위험과 우리경제 영향"(pp.59~61)을 참조할 수 있다.

2. 중기 전망[31]

▪ **2026~2030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7% 성장 예상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1)]	2026~2030[2)]
3.5	2.7	2.5	2.5	2.4	2.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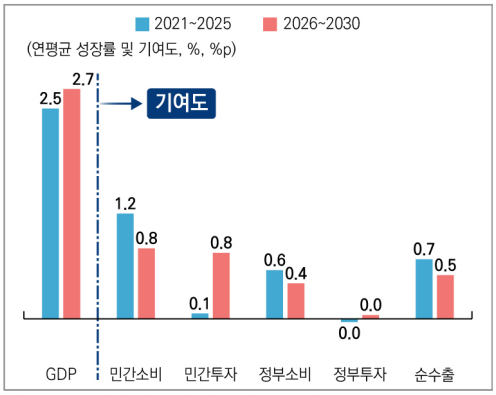
주: 1.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하 원고에서 동일 (소비자물가는 제외)
2.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하 원고에서 동일 (소비자물가는 제외)

2026~2030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7% 성장할 예상으로 이전 5년(2021~2025년)의 2.5%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투자 기여도는 0.8%p로 이전 기간의 0.1%에 비해 대폭 높아질 예상이다.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향후 5년 0.5%p로 이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이전 5년의 4.1%(국회확정예산 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이지만 국민소득통계 상 정부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 확대 속도가 민간투자와 수출의 증가율을 밑돌면서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실질GDP의 예상 성장경로는 한동안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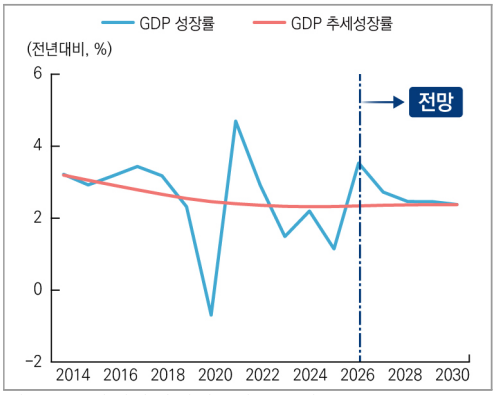
31) 이 전망은 예산안 심의시 정부 경제성장률 전제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경제정책 방향 및 관련 공청회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Ⅱ-9] 실질GDP 중기 전망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Ⅱ-10] 실질GDP 성장경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2027년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2.7%, 정부 2.2%
-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7.3%, 정부 4.6%

2027년 실질GDP 성장률을 국회예산정책처는 2.7%(2026년 9월), 정부는 2.2%(2026년 7월)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정부 전망치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높다. 그러나 여타 항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출(통관기준)과 설비투자 전망치의 차이가 크다. 이밖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전망치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았다.[32)]

2026년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3.5%, 정부가 3.0%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표 Ⅱ-5]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7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전년대비 증가율,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실질GDP	2.7	2.2
민간소비	2.0	2.1
정부소비	3.0	-
정부투자	2.0	-
건설투자	1.5	0.8
설비투자	6.4	3.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1	3.0
수출(통관기준)	10.0	1.0

주: 기획예산처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은 통관기준으로만 전망치를 제시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2026.7.14.)「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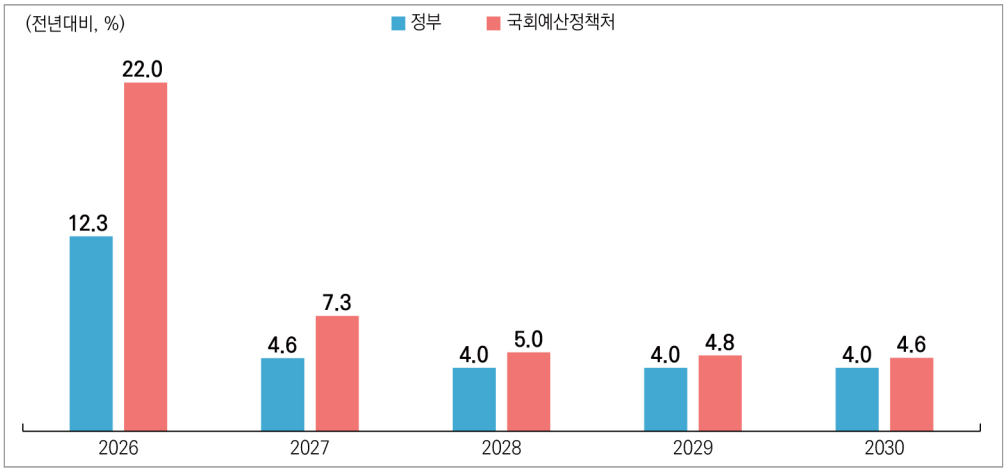
32) 정부 전망이 발표된 7월에는 중동전쟁의 전개방향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반도체 호조의 지속여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차이와 가용한 정보량의 차이가 정부와 국회예산처 전망치 간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7.3%, 정부가 4.6%로 보고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GDP 성장률을 2.7%로, 정부는 2.2%로 각각 전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중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여건 개선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4.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인 2.4%를 상당 폭 웃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로 정부의 2.2%보다 높게 잡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2027년 중 디플레이터 상승 가능성을 정부에 비해 더 높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6~2030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2026년 명목성장률 차이가 큰데 이는 2분기 26.4% 등 최근의 이례적인 실적치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I투자로 촉발된 반도체 초호황과 소득여건의 개선이 이 시간에 걸쳐 경제 각 부문에 흡수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다가 점차 추세 수준으로 낮아지는 성장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그림 Ⅱ-11]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2026.9.3.)「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정부소비 및 투자

1. 2027년 전망

▪ **2027년 정부소비 및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3.0%, 2.0% 증가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정부소비	2.7	2.6	3.0	2.8	2.6	2.7	3.0
정부투자	-0.2	-6.5	3.8	-1.4	2.2	1.8	2.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보건복지 분야의 현물성 사회보장 지출 수요 증가	• 도로·철도부문 SOC 건설 사업 투자 규모 조정
• 연구개발 투자지출 확대	

2027년 정부지출(실질정부소비와 실질정부투자)은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성 의무지출과 연구개발투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2027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3.0%, 2.0% 증가할 전망이다.

가. 정부소비[33]

2027년 실질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건강보험급여비[34]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 늘어 2026년(2.8%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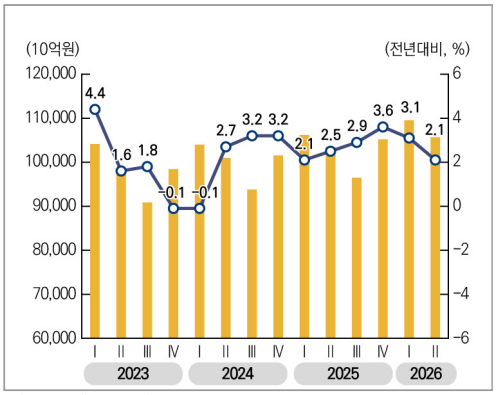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33)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는 제도부문 중 일반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최종소비지출을 의미한다. 국민계정에서의 정부소비는 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정부의 총산출에서 정부가 산업이나 가계에 판매한 상품 및 비상품 판매수입을 제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추계된다.

34) 건강보험급여는 무상급식과 함께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이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2024년 기준 일반정부의 명목소비지출(447.5조원)에서 건강보험급여비가 포함된 사회보장현물수혜(145.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피용자보수(169.5조원, 3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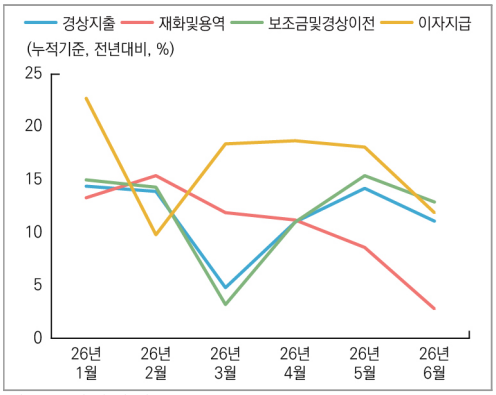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통합재정 총지출(396.5조원) 상 경상지출은 37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1조원(1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및 용역비는 5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원(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은 2025년 94.7조원으로 전년(87.5조원)대비 8.2% 증가하여, 예년의 증가추세(2016~2024년 중 연평균 8.2% 증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상반기 중 48.2조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예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중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 중 정부소비는 재화 및 용역비, 건강보험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여, 연간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Ⅱ-12] 실질정부소비의 분기별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13] 통합재정 경상지출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2027년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의무지출[35]과 재량지출에서 증가세가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 정부예산안」 상의 중앙정부 총지출[36]은 820.9조원으로 전년도 국회확정예산(729.9조원) 대비 12.8% 증가할 전망이다.[37] 의무지출은 426.8조원으로 전년대비 10.1%, 재량지출은 394.1조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38]

35)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의 합계를 의미하며,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재정지출로 규정한다.(「국가재정법」 제7조)
36) 총지출은 총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일반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과 융자지출을 합한 규모이다. 정부의 복지·경제·국방 등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도입한 개념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계 기준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유가증권 취득 및 재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이다.
37) 2026년 1차 추경예산(753.0조원) 대비로는 9.0% 증가한다.
38) 2026년 1차 추경예산 대비로는 의무지출은 7.4%, 재량지출은 10.8% 증가한다.

[표 Ⅱ-6] 정부의 2027년 재정지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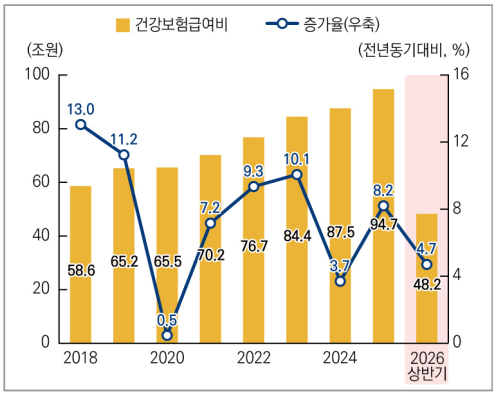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6년*		'27년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증가율)	727.9 (8.1)	753.0 (11.8)	820.9 (12.8)
-의무지출 (비중)	387.7 (53.3)	397.5 (52.8)	426.8 (52.0)
-재량지출 (비중)	340.2 (46.7)	355.6 (47.2)	394.1 (48.0)

주: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1차 추경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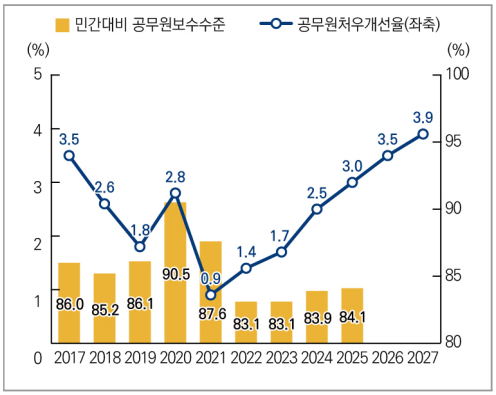
2027년 명목정부소비는 2026년 추경편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26년(5.6%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어 전년대비 5.5%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39] 상승률은 2.5%로 2026년(2.8% 전망)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는 하락 요인이지만,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3.9%로 2026년 3.5%보다 인상폭이 확대되어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40]

[그림 Ⅱ-14]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추이



자료: 건강보험공단

[그림 Ⅱ-15] 공무원보수 인상률 추이



주: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봉급, 수당)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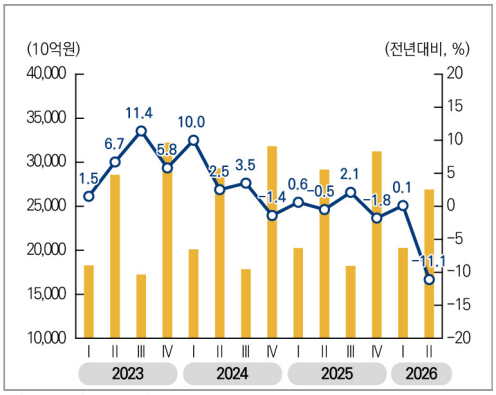
39) 정부소비디플레터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의 비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가격지수이며, 정부소비디플레이터의 상승(하락)은 실질정부소비를 감소(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0) 공무원처우개선율(전년대비, %): ('22)1.4 → ('23)1.7 → ('24)2.5 → ('25)3.0 → ('26)3.5 → ('27)3.9
2024년 기준 일반정부의 명목소비지출(447.5조원)에서 피용자보수(169.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9%였다.

나. 정부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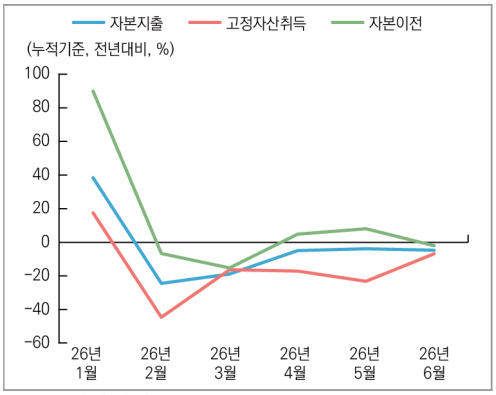
2027년 실질정부투자는 R&D 분야와 지역 및 도시 부문, 물류 등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늘어 2026년(-1.4%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중 실질정부투자는 1/4분기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고 2/4분기에는 11.1% 감소하며 전년대비 6.5%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부진하였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겠으나, 연간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자본지출은 고정자산취득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였다.

[그림 Ⅱ-16] 실질정부투자 분기별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17] 통합재정 자본지출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2027년 R&D 분야 예산(39.5조원)은 과학기술·통신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26년 본예산대비 4.0조원(11.2%) 확대 편성되어 정부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7년의 R&D 분야 예산 증가폭은 2026년 5.7조원(19.3%)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2027년 SOC 분야 예산(28.9조원)은 지역 및 도시부문, 물류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전년(27.7조원)에 비해 1.2조원(4.0%) 확대 편성되었다. 그러나 증가폭은 도로와 철도부문을 중심으로 2026년(2.0조원, 8.3%)에 비해 축소되었다. 2027년 명목정부투자는 4.0% 증가하여 2026년(1.9%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로 건설투자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의 영향으로 2026년(2.3% 전망)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표 Ⅱ-7] 2027년 R&D 분야 예산안

(단위: 조원)

구 분	'26	'27 예산안	주요 내용	증감액 (조원)	증가율 (%)
과학기술 통신 분야	11.7	14.1	• 개인기초연구(2.4) • 집단연구(0.5) • 바이오의료기술개발(0.5)	2.4	2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8.7	9.8	• 소재부품기술개발(1.2) • 투자연계기술개발(1.4)	0.9	10.6
교육 분야	1.7	1.7	•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0.6) • 인문사회 기초연구(0.3)	0.1	4.2
보건 복지 분야	1.6	1.6	• 국가신약개발사업(649억원) • 연구중심병원 육성 (550억원)	0.0	1.0
교통 물류 분야	1.1	1.1	•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사업 (605억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350억원)	0.0	-1.4
기타 부문	10.6	11.1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1,054억원) • 차세대네트워크산업기술개발(709억원)	0.5	5.1
합 계	**35.5**	**39.5**	**전년대비 11.2% 증가**	**4.0**	**11.2**

주: 2026년은 국회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표 Ⅱ-8] 2027년 SOC 분야 예산안

(단위: 조원)

구 분	'26	'27 예산안	비고	증감액 (조원)	증가율 (%)
도로부문	6.3	5.3	• 민자도로(0.1) • 국가지원지방도(0.4)	-1.0	-16.0
철도부문	8.9	8.3	• 강릉-제진(0.4) • 고속일반철도시스템개량(2.0)	-0.6	-6.5
항만수자원부문	4.5	4.9	• 수자원공사출자(0.3) • 군장항(2단계)(0.2)	0.4	8.9
지역 및 도시부문	2.3	3.1	• 대통령세종집무실(0.2)	0.8	35.9
물류 등 기타	4.1	5.9	• 자율주행실증도시(0.8) • 대중교통비환급(0.9)	1.8	44.7
항공·공항·산단	1.6	1.3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350억원)	-0.3	-21.1
합 계	**27.7**	**28.9**	**전년대비 4.0% 증가**	**1.2**	**4.0**

주: 2026년은 국회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정부소비 및 투자**는 각각 연평균 2.7%, 1.2% 증가 예상

(전년대비, 연평균,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 ~2025	2026 ~2030
정부소비	2.8	3.0	2.8	2.6	2.4	3.3	2.7
정부투자	-1.4	2.0	2.0	1.8	1.8	-0.7	1.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중기적으로 정부지출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사회보장현물수혜 관련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재정수입(총수입) 증가율(연평균 9.9%)을 밑돌고, 동기간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증가세는 연평균 각각 2.7%, 1.4%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 혹은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실증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41] 향후 5년간 재정지출 규모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총지출/GDP 비율,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GDP 비율을 전제하였다. 정부소비는 명목정부소비를 예측한 후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예측치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와의 장기균형관계를 고려하여 전망하였다.[42]

중기 정부투자는 정부지출 규모와 재정수지 간의 실증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명목정부투자/GDP 비율과 총지출/GDP, 통합재정수지/GDP 비율 간의 통계적 관계를 추정한 후 관련 변수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명목정부투자를

41)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명목정부소비/GDP 비율을 자기시차변수와 총지출/GDP 비율, 통합재정수지/GDP 비율의 시차변수로 회귀 분석한 예측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42) 1980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과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장기균형관계를 각각 추정한 결과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각각 1.07와 1.02이었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소폭 상회하였지만, 경기하강기에는 관계가 역전되어 상당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하였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규모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총지출/GDP 비율,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GDP 비율을 전제하였다. 명목정부투자를 전망한 후 정부투자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정부투자디플레이터는 건설투자디플레이터, 설비투자디플레이터와의 실증적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43]

43) 1980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상승률과 건설투자디플레이터 상승률, 설비투자디플레이터 상승률 간의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추정계수는 각각 0.82와 0.19였다.

가. 정부소비

2026~2030년 기간 중 실질정부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하여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3.3%)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재정수입(총수입) 증가율(연평균 9.9%)을 상회한다. 지출 성격으로 보면 의무지출은 동기간 연평균 8.5%, 재량지출은 8.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전제한 명목GDP성장률은 연평균 5.8%[44]로 전년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2026~2029년 기간 중 연평균 3.9%[45]에 비해 동기간 연평균 2.3%p 상향 조정되었다.

[표 Ⅱ-9] 2026~2030년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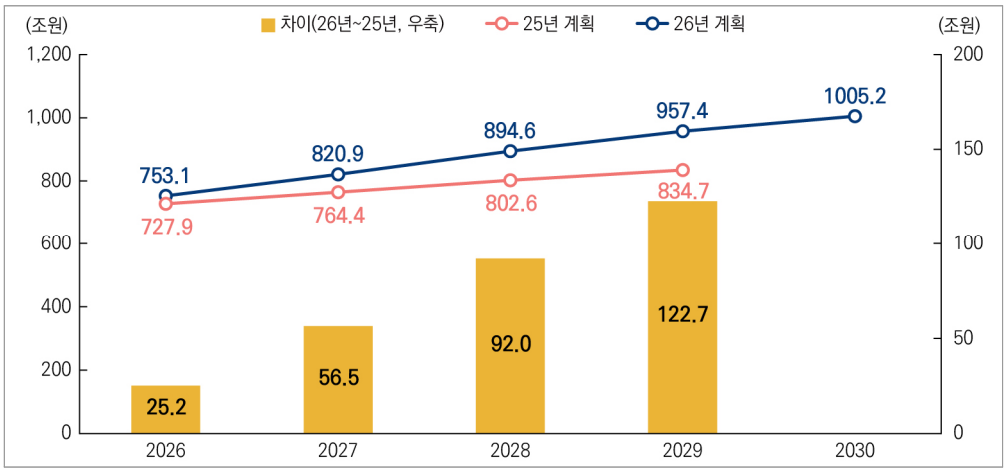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675.2	700.6	880.8	920.5	951.8	984.6	9.9
(증가율)	(3.6)	(7.5)	(15.8)	(7.3)	(5.4)	(4.9)	
재정지출	727.9	753.1	820.9	894.6	957.4	1005.2	8.4
(증가율)	(8.1)	(11.8)	(12.8)	(9.0)	(7.0)	(5.0)	
-의무지출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8.5
(비중)	(53.3)	(52.8)	(52.0)	(52.7)	(53.5)	(53.5)	
-재량지출	340.2	355.6	394.1	422.8	445.5	467.3	8.3
(비중)	(46.7)	(47.2)	(48.0)	(47.3)	(46.5)	(45.5)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25.8	-5.6	-20.6	-
(GDP대비,%)	(-1.9)	(-1.9)	(1.9)	(0.8)	(-0.2)	(-0.6)	-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48.0	-83.4	-100.8	-
(GDP대비,%)	(-3.8)	(-3.8)	(-0.1)	(-1.5)	(-2.5)	(-2.9)	-

주: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2026년 본예산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44)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전제한 명목성장률은 2026년 12.3%, 2027년 4.6%, 2028년 4.0%, 2029년 4.0%, 2030년 4.0%이다.
45)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전제한 명목성장률은 2026년 3.6%, 2027년 3.9%, 2028년 4.0%, 2029년 4.1%였다.

2026년 중기 재정 지출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가능한 2026~2029년 중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74.1조원(의무지출 24.5조원, 재량지출 49.6조원) 확대 편성되었다. 확장적 재정운용기조가 전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무지출을 제외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2026~2030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약 8.7%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46]

[그림 Ⅱ-18] 2025년과 2026년 중기 재정지출계획 비교



주: 2026년 계획의 2026년 재정지출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과 2026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명목정부소비와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예측에 기초한 중기 실질정부소비 전망치는 아래와 같다.

[표 Ⅱ-10] 중기 정부소비 전망

(전년대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실질정부소비	2.8	3.0	2.7	2.5	2.4	3.3	2.7
명목정부소비	5.6	5.5	5.0	4.8	4.5	6.1	5.1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2.7	2.5	2.2	2.2	2.1	2.7	2.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6) 2026년 71.2조원에서 2030년 99.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 44)

나. 정부투자

2026~2030년 기간 중 정부투자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0.7%)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 정부투자가 각각 전년대비 -4.5%, -7.7%로 위축된 영향으로 지난 5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확대되지만, 팬데믹 이전(2016~2020년, 연평균 5.4%)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건설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은 각각 연평균 8.2%와 3.7%이다. 이전 5년(2021~2025년) 기간 중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4.5%, 2.9%였다. R&D 분야는 인공지능, 미래에너지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R&D 역량 및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R&D 분야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2026~2030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약 8.2% 수준으로 전망하였다.[47] SOC분야는 누적된 인프라 투자의 성숙기 진입으로 도로·철도 부문 SOC 건설 사업은 투자 규모가 조정되지만,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동력과 국민 교통비 경감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Ⅱ-11]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R&D	35.5	39.5	42.4	45.8	48.6	
(증가율)	(19.9)	(11.2)	(5.7)	(5.6)	(5.1)	(8.2)
SOC	27.7	28.9	30.0	31.1	32.1	
(증가율)	(9.1)	(4.0)	(4.0)	(3.8)	(3.2)	(3.7)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7) 2026년 35.3조원에서 2030년 48.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 45)

명목정부투자와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예측에 기초한 중기 실질정부투자 전망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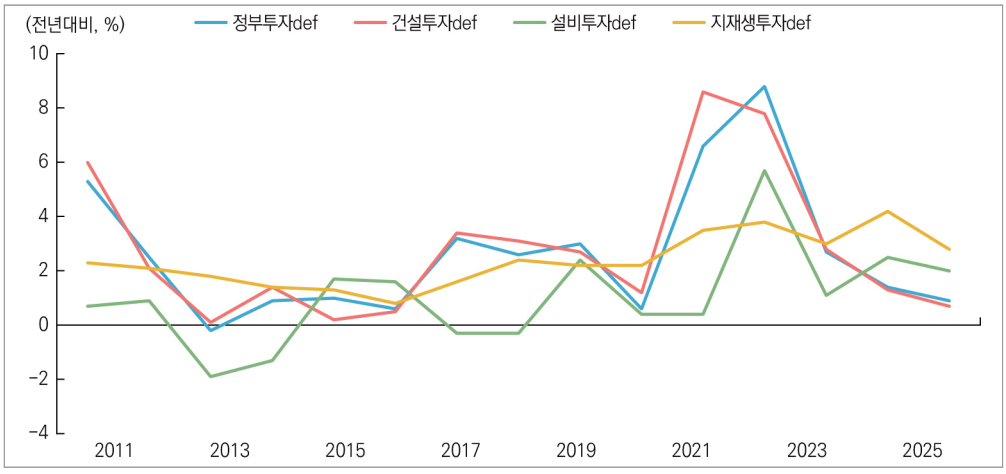
[표 Ⅱ-12] 중기 정부투자 전망

(전년대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 ~2025	2026 ~2030
실질정부투자	-1.4	2.0	2.0	1.8	1.8	-0.7	1.2
명목정부투자	2.6	4.0	3.4	3.2	3.2	3.2	3.1
정부투자 디플레이터	4.0	2.0	1.4	1.4	1.4	4.1	2.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Ⅱ-19] 정부투자디플레이터와 자본재형태별 디플레이터



자료: 한국은행

제3절 민간소비

1. 2027년 전망

▪ **2027년 민간소비**는 2.0%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5	2.6	2.1	2.3	1.9	2.0	2.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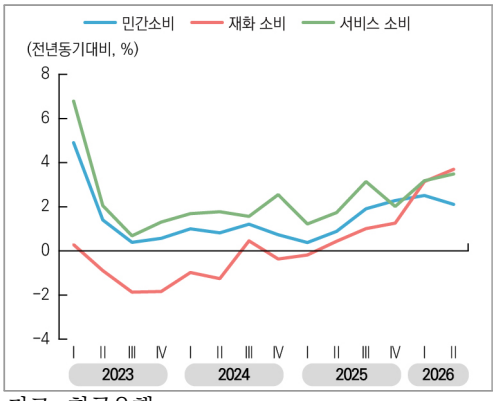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가계 소득 개선	• 가계부채 부담
• 실물 및 금융자산 가격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

2027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소비 증가율은 가계의 소득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향후 반도체 제조업의 매출 증가가 관련 산업 종사자의 피용자보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이 소비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실물 및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 증가율을 소폭 견인할 전망이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한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은 누적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경원 경제분석관(kwseol@assembly.go.kr, 6788-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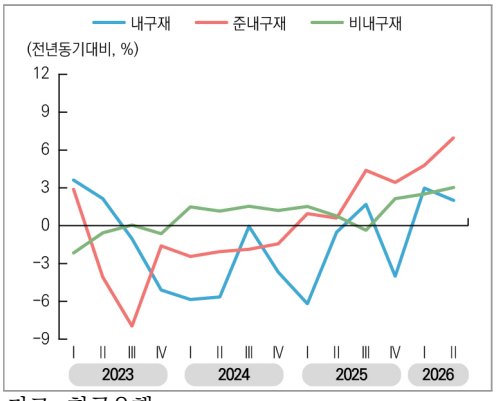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소비재 형태별로 살펴보면 재화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민간소비 개선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그림 Ⅱ-20]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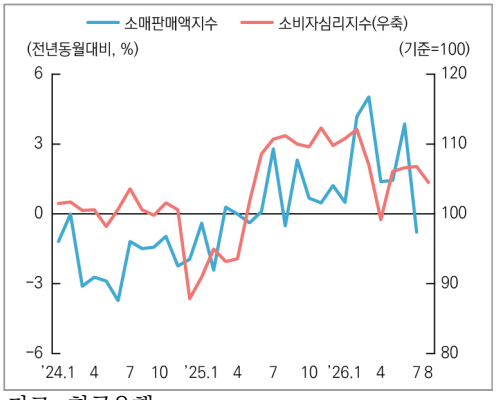
[그림 Ⅱ-21] 재화 형태별 소비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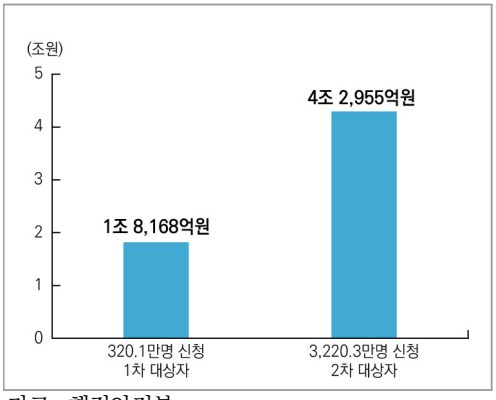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에는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소비심리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였다. 다만,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이 개선되어 소비심리는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용되어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48]

[그림 Ⅱ-22]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23]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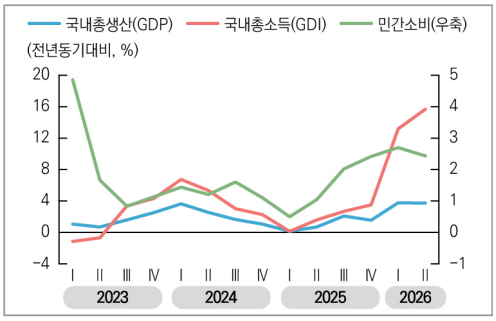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48)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 3조 5,492억 원 중 3조 4,542억 원(97.3%) 사용완료(8.18.(화) 8시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2026.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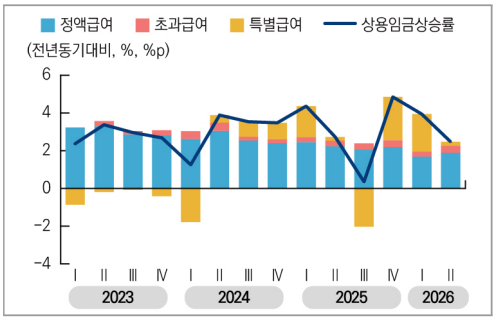
민간소비의 기초 여건이 되는 소득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큰 폭 상승하였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산업 명목임금도 2026년 상반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총소득은 큰 폭 증가하였으나, 그 구성을 살펴보면 소득 개선세는 산업·소득분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분위별 실질처분가능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26년 1분기에 최상위 분위(700만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실질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였다. 즉,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전체 평균은 늘었지만, 중간 소득계층의 구매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다. 산업별로도 호황을 보이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여타 산업의 임금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최근의 소득 증가는 일부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향후 소비 증가폭은 소득 증가폭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소득 증가가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증가에 비롯된다는 점에서 소득 증가가 소비로 귀착되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Ⅱ-24] 실질국내총생산 및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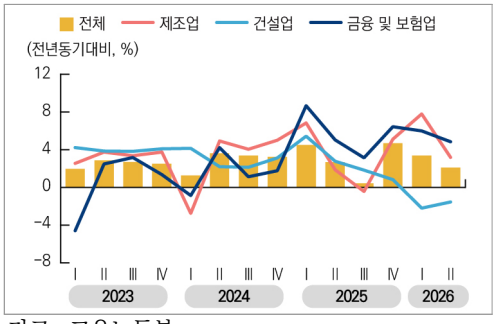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25] 상용임금 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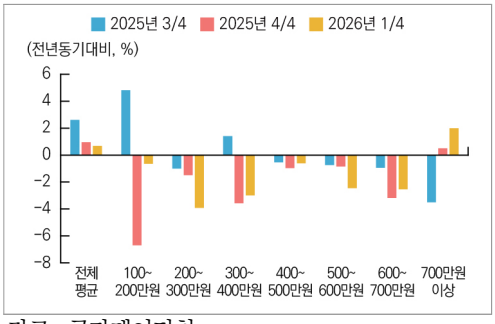
주: 전규모(1인이상) 명목임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Ⅱ-26] 산업별 명목임금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Ⅱ-27] 소득구간별 실질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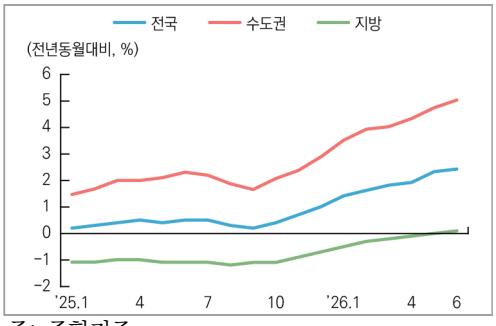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도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주가지수도 2026년 8월 기준 2025년 1월 대비 2.8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는 점과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효과는 계층 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가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그 지속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주택 가격 상승이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임차가구의 소비 여력을 약화 시켜 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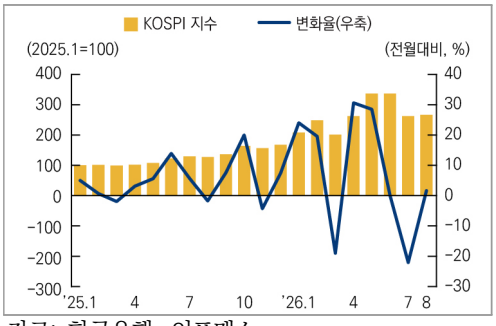
한편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재확대되는 모습이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도 상승 전환하였다. 이러한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는 민간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Ⅱ-28]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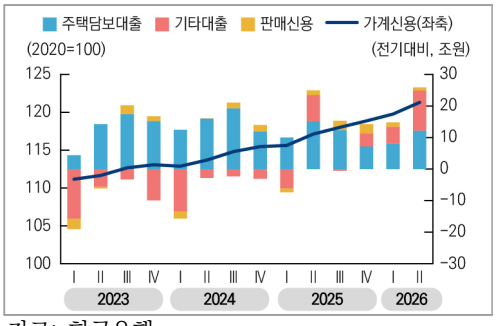
주: 종합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Ⅱ-29]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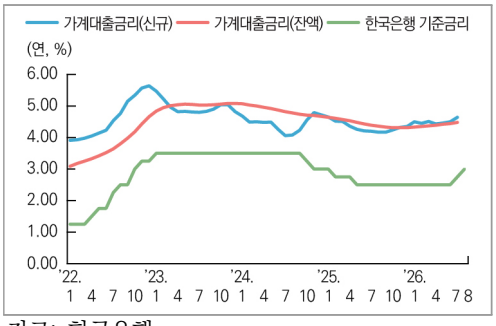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그림 Ⅱ-30] 용도별 가계신용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31]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0% 성장 예상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2.3	2.0	1.8	1.9	1.9	2.6	2.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이 중기적으로 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하겠으나, 산업별·소득계층별 소득 격차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민간소비의 구조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 실적 개선이 소득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계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산업 편중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별·소득계층별 소득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소비 역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 전체의 평균 소비 증가율이 양호하더라도 계층별 체감 소비 여건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하여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2026년 1분기 기준 50대가 75.2%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69.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인구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가구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점은 민간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예상이다.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BOX 7] 소득의 성격과 한계소비성향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배경으로 관련 제조업 매출 증가가 임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나타난 임금 상승의 특징은 정액급여보다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증가가 총임금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1분기 전산업 근로자의 상용특별급여는 전년동기대비 11.9%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상용임금총액 상승률 3.9% 가운데 2.0%p 기여하였다.

임금 상승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임금 총액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가계가 추가로 얻은 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 소득의 지속성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이론의 출발점인 항상소득가설(Friedman, 1957; Hall, 1978)에 따르면 가계는 현재의 소득 자체보다 생애에 걸쳐 기대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증가는 소비를 거의 같은 폭으로 늘리는 반면, 일회성 소득 증가는 잔여 생애에 걸쳐 분산되므로 당기 소비 증가는 매우 작고 대부분 저축으로 귀결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일시적 소득 충격에 대한 소비반응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권규호(2017), 정용승·김영일(2019), 홍기석(2021)은 모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시소득 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이 가운데 홍기석(2021)은 Hall and Mishkin(1982)의 공분산구조 방법론에 기초하여 항상소득 충격과 임시소득 충격에 대한 소비반응을 각각 추정하였는데, 추정된 소비의 소득탄력성에 표본기간 평균소비성향 곱하여 한계소비성향을 환산한 결과 임시소득 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약 0.15, 항상소득 충격에 대해서는 약 0.2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모형과 표본기간에 따라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임시소득 충격에 대한 소비반응이 항상소득 충격에 대한 반응보다 작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실제 소비행태가 항상소득가설의 예측을 언제나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소비반응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욱(2021)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금 가운데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 소비로 이어진 비율을 평균 약 0.22로 추정하였다.

[임시소득 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추정 관련 선행연구]

연구	분석 자료	일시소득에 대한 MPC	주요 특징
권규호(2017)	한국노동패널	0.149 (2009년 이전), 0.035 (이후·비유의)	금융위기 이후 소비평탄화 강화
정용승·김영일 (2019)	한국노동패널	0.125	유동성제약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홍기석(2021)	한국노동패널	약 0.15	소비탄력성에 평균소비성향을 적용해 MPC 환산
이영욱(2021)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	0.217	코로나19 피해가 큰 가구일수록 높음

자료: 홍기석(2021),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한계소비성향 분석」의 내용을 재구성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일시적 소득 증가는 지속적 소득 증가에 반해 소비로 귀착되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임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0.15 내외로 추정하여 추가적인 일시소득의 상당 부분이 곧바로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최근의 특별급여 중심의 임금 상승을 민간소비 전망에 반영할 때 임금 상승률의 크기뿐 아니라 그 구성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과급은 기본급 인상과 달리 기업실적 등에 따라 변동하며 지속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일 금액의 정액급여 증가보다 소비로 전가되는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 임금 상승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하겠으나 그 파급력은 표면적인 임금총액 증가율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제4절 건설투자

1. 2027년 전망

▪ **2027년 건설투자**는 1.5%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9.7	-1.5	2.6	0.6	1.2	1.7	1.5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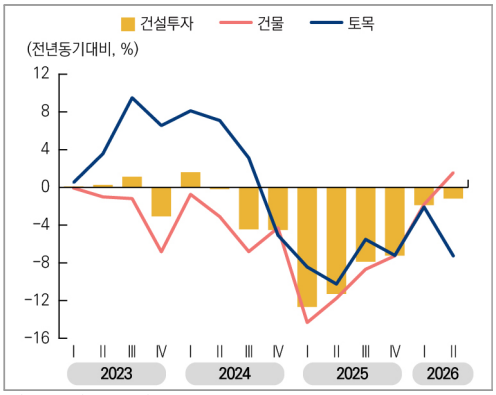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 건설비 상승
• 비주거·산업 건축 확대	• 건설 착공 전환율 하락

2027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건설투자는 민간의 비주거 건축을 중심으로 개선되며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향후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점진적 진행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 투자 확대가 비주거용 건축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자재 가격 및 건설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확대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그간의 높은 건설수주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부담으로 착공 전환율이 낮아진 점은 향후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설경원 경제분석관(kwseol@assembly.go.kr, 6788-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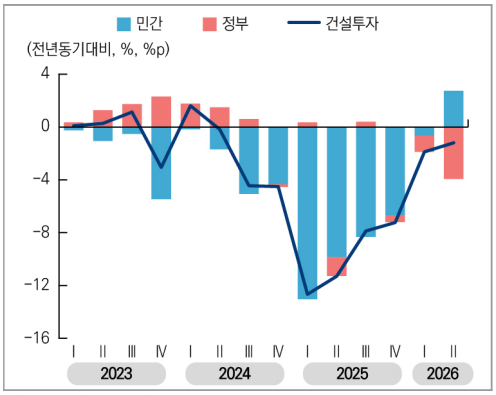
최근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025년의 두 자릿수 감소에서 벗어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의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이 개선되어 건설투자 부진이 완화되었다. 반면 공공 중심의 토목건설은 2026년 2분기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관련 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감소하였다.

[그림 Ⅱ-32]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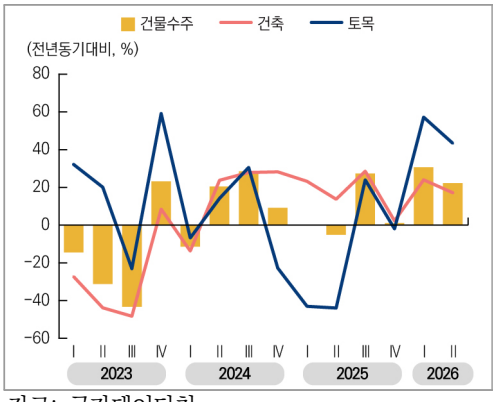
[그림 Ⅱ-33] 발주자별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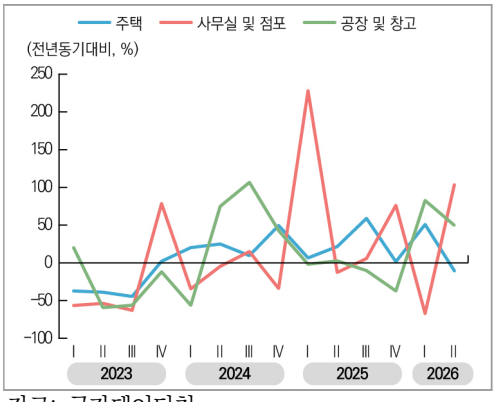
공종별 수주는 2026년 상반기 중 토목부문이 회복을 주도하였으며, 건축부문에서도 공장·창고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가 기성으로 이어지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건설투자가 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향후에는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Ⅱ-34] 공종별 건설수주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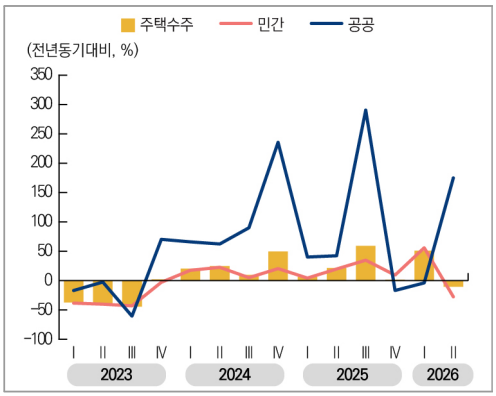
[그림 Ⅱ-35] 건축 공종별 수주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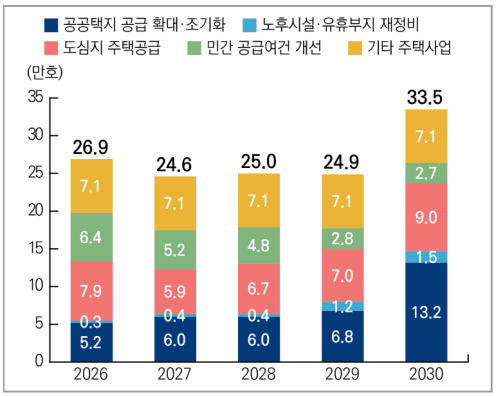
그간 건설투자를 주도해 온 주택 부문의 건설수주를 살펴보면, 민간 부문의 수주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민간 주택건설의 부진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나 공공 주택 수주 규모가 민간의 1/3 수준에 그쳐 전체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36] 발주자별 주택수주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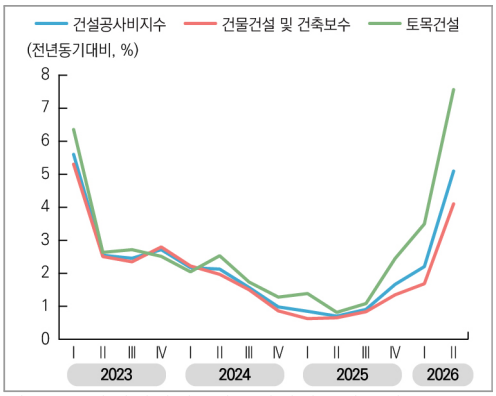
[그림 Ⅱ-37] 공공부문 주택공급 계획



주: 착공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수주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상승이 실제 공사 부담으로 이어져 착공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이다. 최근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의 증가율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25년의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실제 2026년 2분기 착공면적은 장기평균의 83%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건설비가 재차 상승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38] 건설공사비지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림 Ⅱ-39] 주거용 건축착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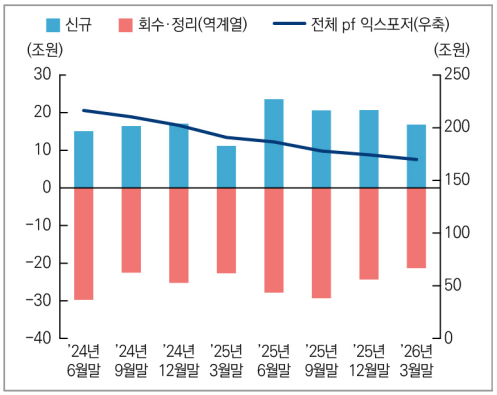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은 향후 건설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7월과 8월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건설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긴축 기조와 달리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49]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다만 프로젝트 금융이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 신규 자금 공급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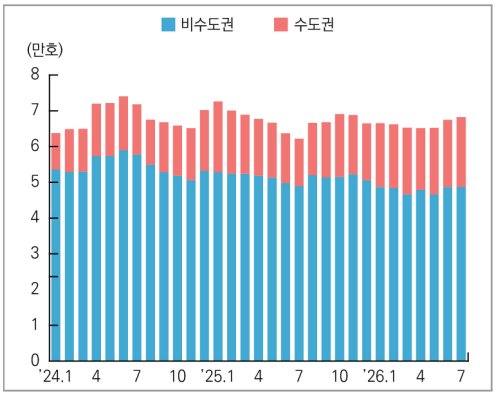
한편,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된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호 후반으로 지난 10년(2016~2025년) 평균 5.4만호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비수도권 비중은 약 72%를 차지한다. 향후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거점 투자[50]가 지역 간 건설투자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겠으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주택 부문 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Ⅱ-40] PF 신규, 회수·정리 및 익스포저 추이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Ⅱ-41]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49) 정부는 '26.6월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 총 9건 중 6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PF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2026.7.3

50)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호남권·충청권 등에 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2026.9.3.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0% 성장 예상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0.6	1.5	1.0	1.0	1.0	-3.2	1.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3~2025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나, 건설투자의 뚜렷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가 건설투자로 이어지며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 역시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된 미분양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거와 같은 가파른 주택 건설투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분야 지출계획 규모를 이전 계획 대비 상향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 증가 기여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명목 지출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 높은 공사비가 지속되면서, 공사 물량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전망은 최근까지의 건설수주 수준과 착공전환율 등 선행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예정된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신규 투자가 추가로 구체화될 경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건설비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자금조달 여건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회할 위험도 상존한다.

제5절 설비투자

1. 2027년 전망

▪ **2027년 설비투자**는 6.4%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5	5.4	8.3	6.9	7.1	5.7	6.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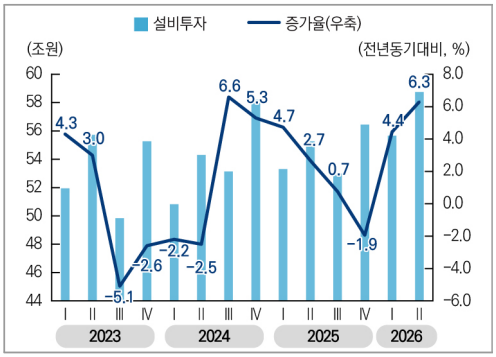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반도체 장비 중심의 자본재 수입 증가	• 메모리 반도체 업황 조정
• AI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	• AI 투자 자금조달 제약 및 일정 조정

2027년 설비투자는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5% 증가에 그쳤던 설비투자는 2026년 상반기 실적이 5.4%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증가세가 유지되며 하반기에는 8.3%, 연간으로는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상반기 7.1%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나,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간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7%까지 낮아져 연간으로는 6.4% 증가할 전망이다. 2026~2027년 중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율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AI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장비 반입 등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설비투자는 2025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며 부진하였으나, 2026년 1분기 4.4%, 2분기 6.3%로 두 분기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2026년 상반기 실적(5.4%)은 지난 2026년 3월 전망치(1.9%)를 3.5%p 상회하였다. 제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 역시 2025년 4분기 -3.7%p에서 2026년 1분기 2.1%p, 2분기 1.4%p 로 플러스 전환하였다. 이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생산능력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충에 대한 유인이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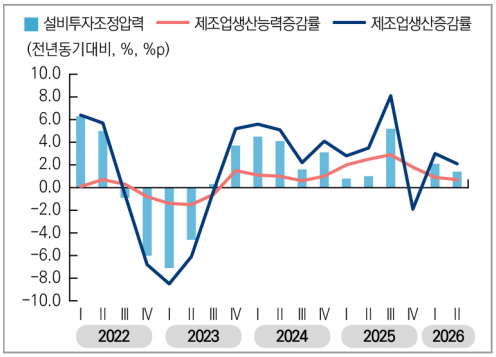
황소정 경제분석관(sjhwang@assembly.go.kr, 6788-4656)

[그림 Ⅱ-42]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43]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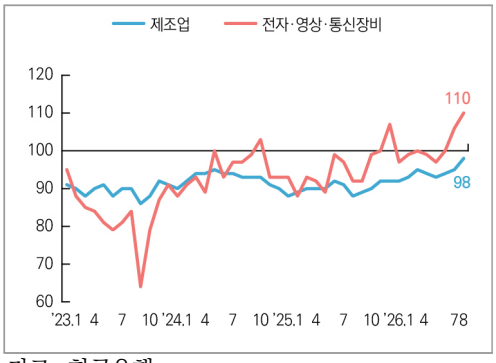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기업의 경기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6년 1월 92에서 8월 98까지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하였다. 특히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설비투자전망 BSI는 8월 110으로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 의사가 심리지표로 확인되고 있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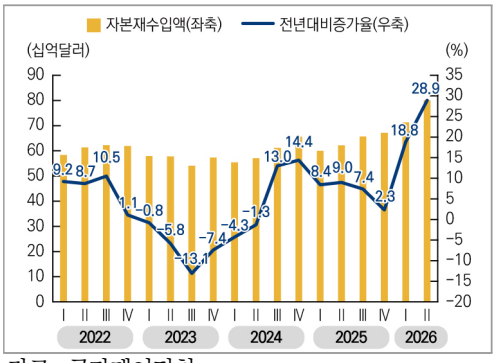
설비투자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은 2025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2.3% 에서 2026년 1분기 18.8%, 2분기 28.9%로 증가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2분기 8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기계류, 그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주도하고 있다. 기계류 수입액은 2026년 7월 98.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24.9억 달러로 84.5% 증가하였다.

[그림 Ⅱ-44]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45] 자본재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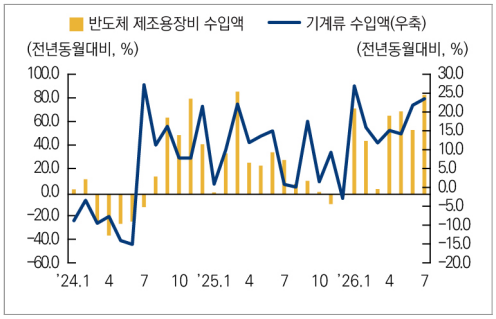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51) 다만, 제조업 업황 전망 BSI 지수는 2026년 7월 78, 8월 81로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업황에 대한 심리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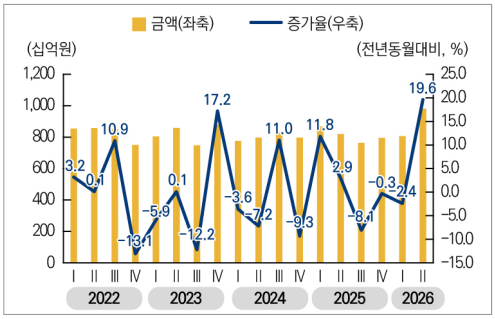
국내기계수주 또한 2026년 1분기 2.4% 감소에서 2분기 19.6%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였고, 제조업 부문의 수주는 2분기 36.0% 증가하였다. 이렇게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수주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어, 2026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실적에 대한 강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Ⅱ-46] 기계류 수입액



자료: 국가데이터처,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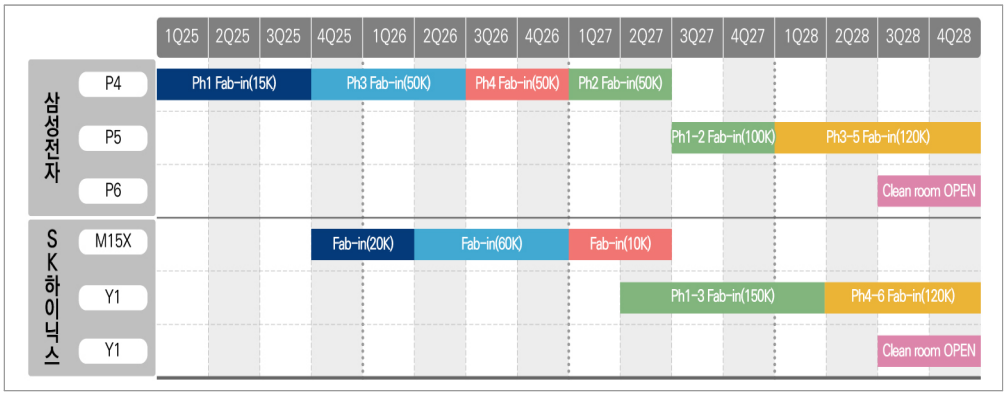
[그림 Ⅱ-47] 국내기계수주



주: 국내수요, 선박·선박용 내연기관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번 전망은 2026~2028년 중 국내 반도체 신규 팹의 장비 반입(Fab-in)이 집중된다는 계획을 반영하였다. 반도체 자본투자는 토지·건물·인프라 지출과 기계장비 지출로 구분되는데, 팹 건설 초기에는 인프라 지출이, Fab-in 단계에서는 장비지출이 전체 투자를 좌우한다. 따라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건설 착공 시점보다 Fab-in 시점에 연동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별 장비 반입 일정을 보면, 2025~2026년간 기존 팹의 후속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삼성전자 P5, SK 하이닉스 Y1의 신규 팹에 대한 장비 반입도 대거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48]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장비 반입 일정



자료: SK증권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5.4% 성장 예상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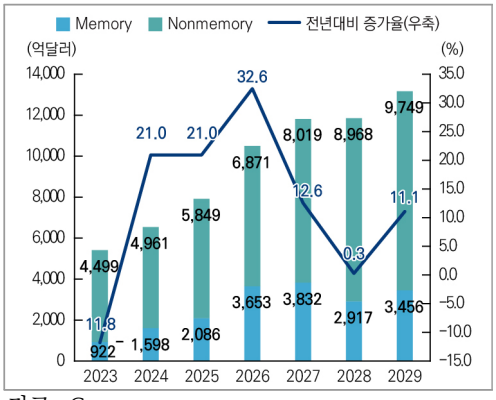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6.9	6.4	5.0	4.5	4.2	2.4	5.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2025년 평균 2.4%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직전 전망(2025~2029년, 연평균 2.1%)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다만 연도별로는 2026년 6.9%를 정점으로 2030년 4.2%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로를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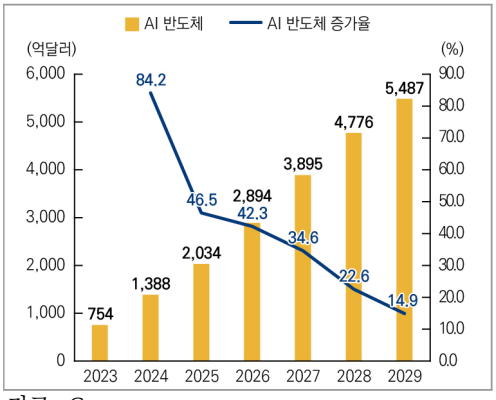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나 증가율은 빠르게 낮아질 전망이다. Gartner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증가세가 둔화하며, 특히 메모리 시장은 2028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5.6%에서 2029년 4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반도체는 AI 관련 반도체의 수요 위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Ⅱ-49]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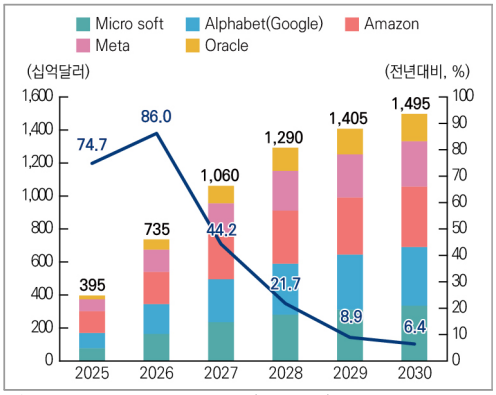
[그림 Ⅱ-50] AI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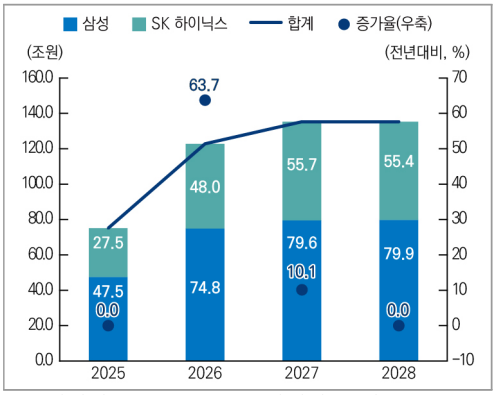
기업의 자본투자 계획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나, 2027년 이후로 증가세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의 자본투자는 2027년 44.2%로 크게 확대되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증가율이 6.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자본투자도 2027년 10.1% 증가 이후 2028년에는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설비투자의 중기 증가율 둔화는 이러한 기업별 자본지출 계획의 평탄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림 Ⅱ-51]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자료: Goldman Sachs (2026.6)

[그림 Ⅱ-52] 국내 반도체 기업 자본투자 전망



주: 연결현금흐름 CapEx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2026.7)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반도체 투자 계획은 그 규모가 역대 어느 때보다 크나, 실제 집행 시기와 속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2040년까지 2,106조원, SK 하이닉스는 2033년까지 1,1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업이 밝힌 바[52]와 같이 투자액은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가시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계획된 규모를 중기 전망에 직접 반영할 수는 없으나,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있어 상당한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SK 하이닉스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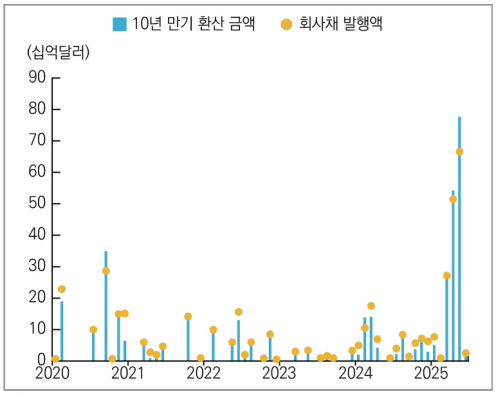
[표 Ⅱ-13]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반도체 투자 규모 및 내용

기업	투자규모	지역별 규모	내용
삼성전자 (~2040년)	2,106조원	호남권 400조원	(광주) Fab 2개 신설
		충청권 56조원	(천안) HBM 5개 라인 (온양) HBM 신축
		수도권 1,650조원	(평택) P5 완공 (용인) DRAM 확대
SK 하이닉스 (~2033년)	1,100조원	호남권 400조원	(광주) Fab 2개 신설
		충청권 100조원	(청주) M17 NAND 80조원, 29년하 (청주) PKG 20조원, 27년하
		수도권 600조원	(용인) 용인클러스터, ~33년

설비투자 전망에 있어 주요 하방 요인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AI 관련 투자 자금조달 구조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AI 관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2025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였는데, 2026년 중 AI 관련 장기채 공급이 최대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53] 이는 미국 국채 공급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또한 2026년 중 빅테크 자본지출의 40% 내외가 사모신용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주요 5개사의 총투자액 6,500억 달러 중 사모신용 조달 규모는 2,050억 달러(31.5%)로 파악된다.[54] 이 경우,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거나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자본 지출 계획이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 수요 하락과 장비의 발주 지연 등으로 파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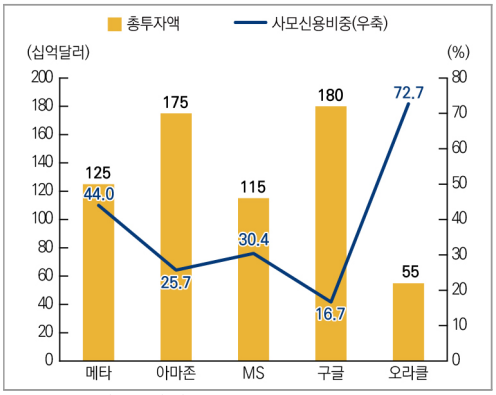
53)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How AI debt financing impacts duration supply and interest rates', 2026.2.10.
54)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6년 하반기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6.6.

[그림 Ⅱ-53] AI 관련 기업 회사채 발행액



자료: FR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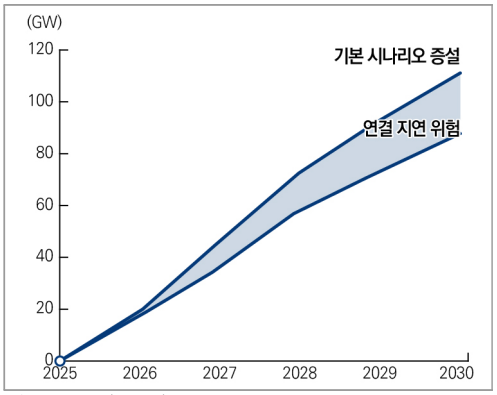
[그림 Ⅱ-54] 빅테크 사모신용 비중



주: 2026년 추정치
자료: CF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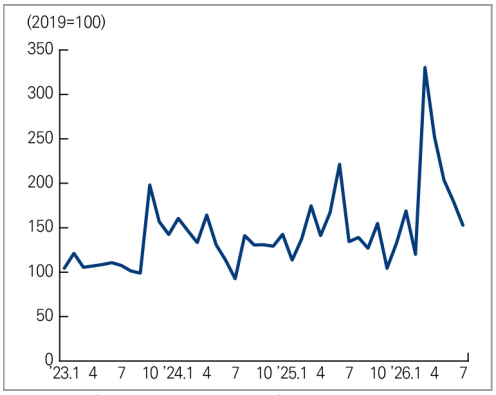
이밖에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력망 병목과 지정학적 위험을 들 수 있다. IEA는 전력망 제약으로 2030년까지 건설 예정인 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20%가 계통 연결 지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55] 전력망 병목에 의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은 AI 반도체 수요의 시점을 이연시켜 국내 반도체 장비 투자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재차 고조될 경우 공급망과 투자 심리의 측면에서 설비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Ⅱ-55] 전력망 병목 지연 시나리오



자료: IEA(2025)

[그림 Ⅱ-56]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주: GPR(Geopolitical Risk)Index
자료: Dario et al.(2022)

55) IEA (2025), Gobal data centre capacity additions in the Base Case and capacity at risk of connection delay due to grid constraints, 2025-2030

[BOX 8]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본 기업의 리스크 인식 분석

2022년 11월 ChatGPT의 출시 이후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유례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의 합산 자본투자는 2023년 1,50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7,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3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등장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붐이 수반되었기에, AI 기술혁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그와 유사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느 투자 붐보다 AI 관련 자본지출 붐은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중이다.[56] 특히 앞으로 생성형 AI가 멀티모달, 에이전틱, 피지컬 AI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한동안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러한 AI 투자 사이클은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 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다. 인프라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AI 반도체 수요로 직결되므로, 반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반도체 납품 계약(수주잔고) → 자본투자 집행 → 장비 발주 → 생산능력 확충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전달된다.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확대는 곧 국내 반도체 2개사에 대한 증설 유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설비투자를 비롯한 우리 경제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2026년 들어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원인으로써 투자의 출발점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현 상황 인식과 변화 추이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가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발표 텍스트를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기업의 실적발표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경영진이 성과, 투자 및 기대치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인식 변화를 가장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써 최근에는 경제 분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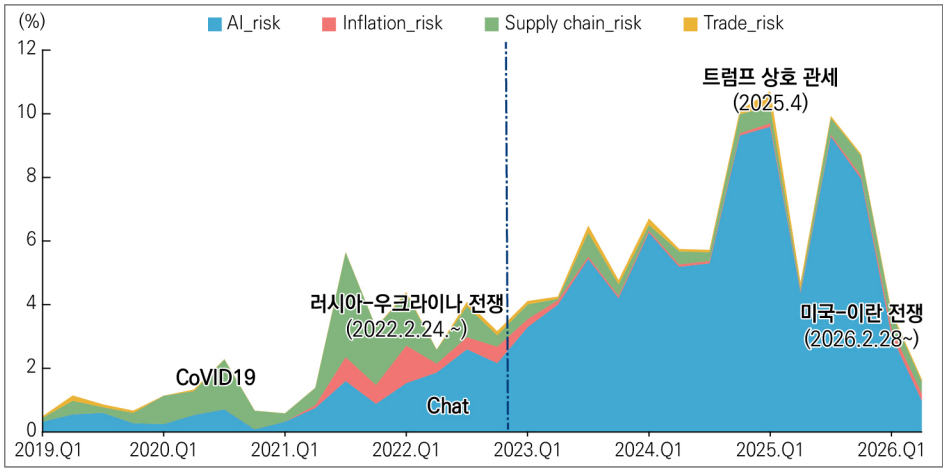
56)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은 붐 시작(2023년) 3년 만에 저점 대비 약 5배로 증가하여, 미국의 운하 붐(1853년), 영국 철도 붐(1843년), 1920년대 호황(1921년), 닷컴 붐(1995년)의 저점 이후 정점 경과 연수를 모두 상회

57) Hassan et al(2025). Text as data i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텍스트 분석의 대상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5개사이며, 2019년 1분기~2026년 2분기의 분기별 실적발표 원문을 발표문과 질의응답(Q&A) 세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발표문은 준비되고 정제된 메시지라면, Q&A는 즉석에서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경영진이 응답하는 형태이므로 두 세션 간의 차이도 텍스트 분석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먼저,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텍스트에 자주 언급되는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무역 그리고 AI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전체 발표 문장 중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언급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2020~2022년에는 팬데믹에 기인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논의를 주도하였으나, ChatGPT 출시 이후로는 AI가 리스크 논의의 중심축으로 이동하였다. AI 리스크는 2021년까지 전체 문장에서 1%의 비중으로 머물다가 2025년에는 12%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의 리스크에 관한 담론이 전반적인 거시 불확실성 충격에서 AI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이동한 것이다.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텍스트 중 리스크 유형별 언급비중]



자료: 통계청

이를 다시 발표문과 Q&A 세션으로 구분하고, 전반적인 리스크 언급비중, AI 리스크 언급비중, AI 자체에 대한 언급비중, AI에 대한 심리지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9(3), 193-220.; Serdar et al(2026), "AI and Productivity: What Firms Are Saying on Earnings Calls," St. Louis Fed On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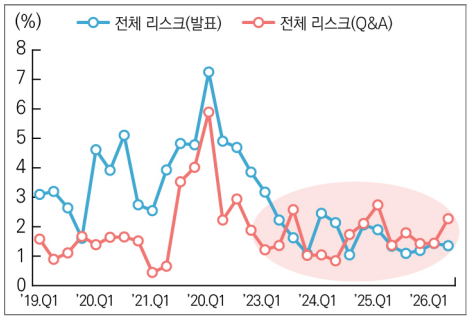
첫째, 전체 리스크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발표문과 Q&A 모두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긴축 전환,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이 언급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3년부터는 하락하여 실적발표에서는 1~2% 수준으로 거시 불확실성이 언급되는 수준이다.

둘째, AI 리스크 언급 비중을 보면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Q&A 세션이 발표문에 비해 1분기 가량 언급비중이 선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장이 AI 관련한 투자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선제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는 패턴이 지난 3년간 반복되었다.

셋째, 2026년 들어 AI 리스크 언급비중이 급락하였지만 전체 리스크는 비중이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리스크 자체의 언급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AI를 리스크 언어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2023년부터 이어져 온 하이퍼스케일의 공격적 투자의 기저에 AI 기술 발전 전망에 대한 당위성이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였다면, 이제는 기업과 시장 모두에게 공감대로 형성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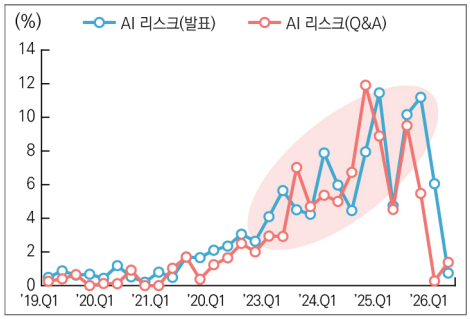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텍스트 지수]

(1) 전체 리스크 언급 비중



주: 리스크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전체문장×100, 특정 주제와 무관한 전반적 리스크·불확실성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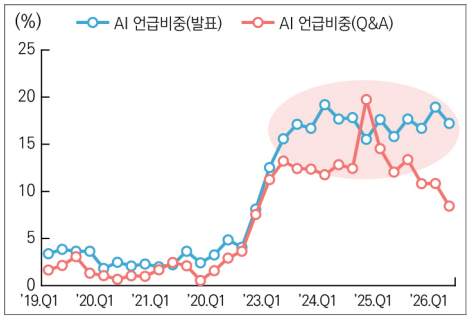
(2) AI 리스크 언급 비중



주: AI 주제 문장 가운데 리스크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 전체문장×100, AI와 연결된 리스크·우려 논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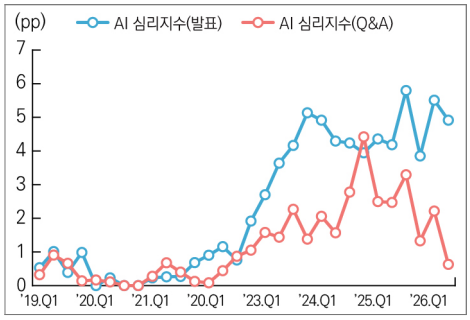
넷째, AI에 관한 심리지수는 전 기간에 걸쳐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즉 AI와 관련한 문장 중 긍정적 톤의 문장이 부정적 톤의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이다. 그 값은 Q&A 보다 발표문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I에 대한 언급 비중도 높고 낙관도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도 관찰되지 않았다.

(3) AI 언급 비중



주: AI 주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전체문장×100, 실적발표에서 AI의 언급 비중

(4) AI 심리지수



주: AI 주제 문장 중(긍정-부정)÷ 전체문장×100, AI에 대한 낙관적vs.우려적 톤의 순 방향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설비투자에 있어 AI 관련 기업이 반도체 2개사에 집중되어 있어 AI 집중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상장기업 설비투자에서 AI 집중도가 한국은 26%, 미국 23%, 두 나라를 제외한 여타 경제(5% 미만)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인다.[58] 2026년 6월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집중 위험으로 작용한다.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사이클 조정이 우리 경제에 큰 하방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의 크기와 지속가능성을 시의성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 혁명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예상밖의 설비투자 확대 국면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정 국면의 위험을 완충하는 데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58) Rishabh, K., & Shreeti, V. (2026). The geography of AI firms. BIS

제6절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 2027년 전망

▪ **202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3.0	3.7	4.7	4.2	4.2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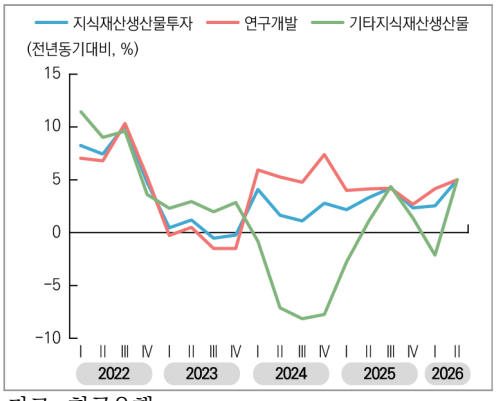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 콘텐츠 사업의 제한된 성장세
• 기업의 AI 전환	•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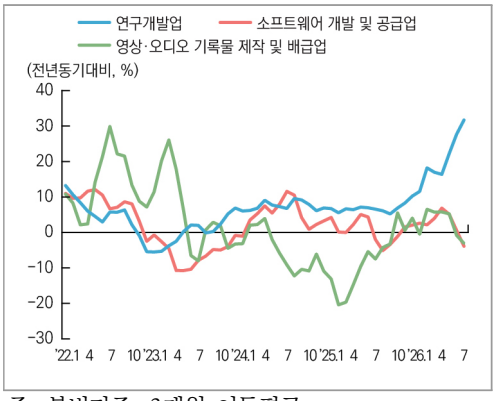
202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1% 성장할 전망이다. 그간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회복세에 더해, 2027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가 성장 동력으로 가세하면서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57]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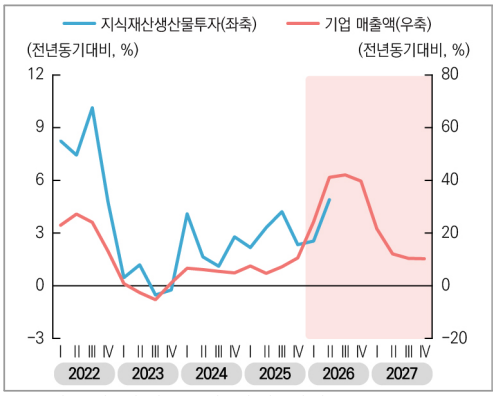
[그림 Ⅱ-58]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주: 불변기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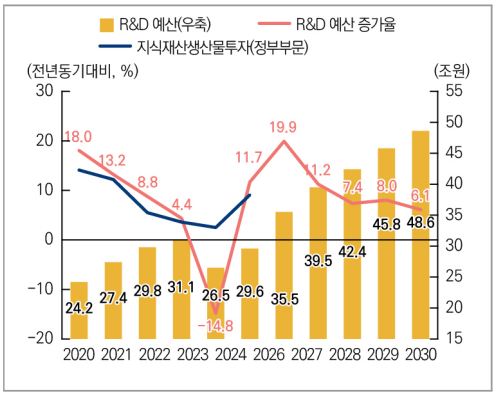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그림 Ⅱ-59]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기업 매출액 추이



주: 매출액 상위 50개 기업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ALUE search, FnGuide, 한국은행

[그림 Ⅱ-60] 정부 R&D 예산추이



주: 명목치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유형별로 살펴보면,[59] 먼저 기업 실적 개선이 연구개발 투자를 뒷받침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은 2026년 전년대비 153% 증가한 데 이어 2027년에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관련 서비스업인 연구개발업까지 2026년 들어 뚜렷한 생산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의 AI 전환이 투자 확대를 이끌고 있다. Claude,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 도구를 구독형(SaaS)으로 도입해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문서 작성·데이터 분석·코딩 보조 등 실무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60] 여기에 국내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업스테이지와 같은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산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61]

59)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유형별 비중은 2025년 기준 연구개발이 73.4% 그리고 기타지식재산생산물이 26.6%를 차지하고 있다.
60)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51.8%가 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 중이며, 이는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이자 인터넷 상용화 초기보다 8배 빠른 확산 속도로 평가하고 있다.(한국은행(2025.08), BOK 이슈노트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제2025-22호)
61)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업스테이지의 '소버린 AI 확보를 위한 차세대 AI 모델 개발' 사업에 5,6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승인했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300억원, 민간 자금 4,300억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부[62] R&D 예산도 2026년 35.5조원에서 2027년 39.5조원으로 전년대비 11.2% 확대 편성되면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한편, 영상 제작 및 배급업 등 콘텐츠 산업은 성장세가 제한적이다. 극장 부문은 2026년 상반기 대형 흥행작에 힘입어 관객 수와 매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으나, 아직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방송 부문은 광고 매출 둔화와 함께 지상파를 중심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의 업황 부진은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연구인력 인건비 상승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2)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9.6%이다.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3.9% 성장 예상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4.2	4.1	3.9	3.7	3.5	3.9	3.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 평균 성장률인 3.9%와 같은 수치다. 중기전망에서도 민간부문에서는 매출액, 인건비 등 기업의 투자 여건이, 정부부문에서는 R&D 지출 규모와 일관성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AI 시장의 빠른 성장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주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AI 시장은 2025년 2,442억 달러에서 2030년 8,270억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2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같은 기간 40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26.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4] 세계 및 국내 AI 시장 규모 전망(2025-2030)

(억달러,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성장률 (CAGR) (2025~2030)
세계	2,442	3,150	4,040	5,140	6,490	8,270	27.6
국내	40	52	67	84	106	132	26.9

자료: 대외경제연구원(2026.4), Statista Market Insights(2025.3)

이러한 AI 시장의 확대는 AI 모델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구축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연계되는 분야의 투자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국·중국 등 주요 AI 선도국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초거대 AI 모델 및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헬스케어·교육·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스타트업도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AI 기술을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기술 및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AI의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인재 양성, 연구개발 및 AI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의 AI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민간의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간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7절 대외거래

1. 2027년 전망

- **2027년 총수출**은 4.2%, **총수입**은 5.5% 증가할 전망
- **2027년 통관수출**은 10.0%, **통관수입**은 9.0% 증가할 전망
- **2027년 경상수지**는 4,4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총수출	4.3	10.4	7.9	9.0	4.5	3.9	4.2
총수입	3.3	7.4	7.9	7.6	6.1	5.0	5.5
상품수출(통관)	3.8	48.2	59.1	54.0	19.3	2.6	10.0
상품수입(통관)	0.0	16.8	26.9	22.0	14.0	4.6	9.0
경상수지	1,231	1,910	2,390	4,300	2,250	2,150	4,40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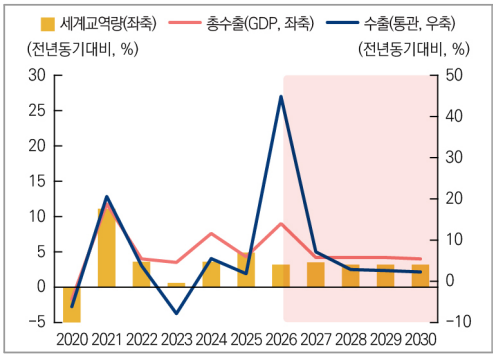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	• 미국 관세정책 영향 지속
• 세계 교역 회복	• 중국 기업의 확장세

2027년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컴퓨터 등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AI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63]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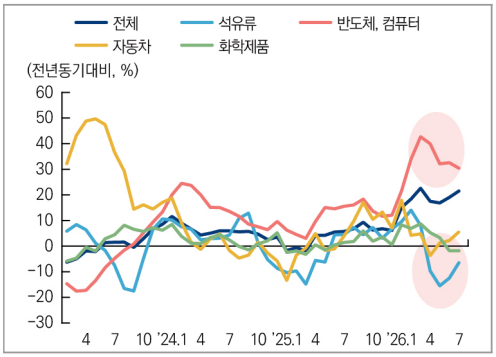
63)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IMF와 World Bank의 최신 전망치를 참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Ⅱ-61] 수출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관세청, IMF, World Bank,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

[그림 Ⅱ-62] 수출 물량지수 추이



주: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확대가 202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 반도체의 경우 일부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생산 및 공급 계획이 확정되는 주문제작형 수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수출 성장세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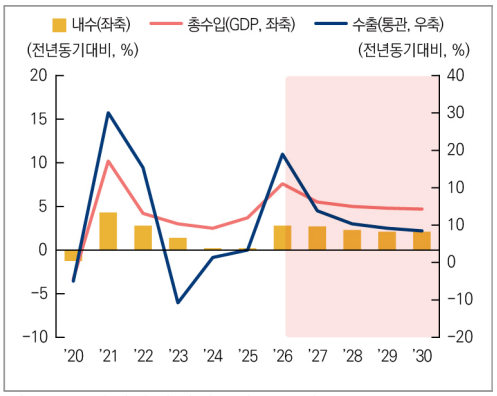
다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재무 부담 확대가 투자 지속성을 제약할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투자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 감소 등 재무적 압박이 누적되고 있고, 최근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 및 신용여건 변화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력 인프라 병목도 투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신·증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메모리반도체 회사들은 메모리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기술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또한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가 공급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4) 김원혁,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나보포커스 제166호」, 국회예산정책처, 2026.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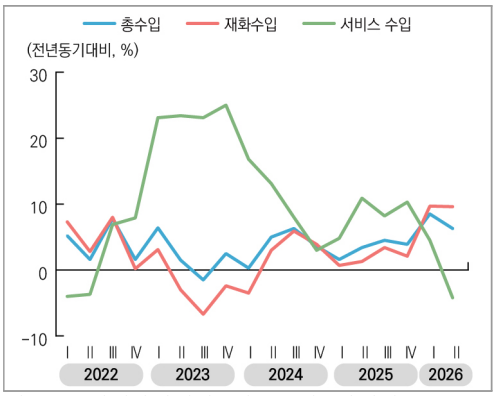
한편, 반도체를 제외한 비IT 수출은 회복세가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일반기계·화학 등 주요 품목은 글로벌 경기회복의 영향을 받겠으나, 미국의 관세정책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증가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이 세계 교역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경우, 우리 수출에도 직·간접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Ⅱ-63] 수입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Ⅱ-64]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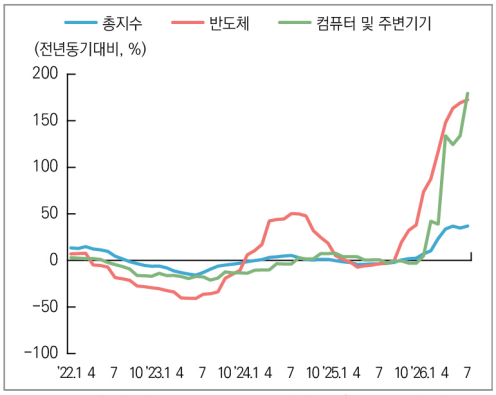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관세청

2027년 총수입(국민계정, 실질)은 전년대비 5.5%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용 원·중간재 수입과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설비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3.0%,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은 39.9% 증가했으며 관련 수입의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확대에 따라 서비스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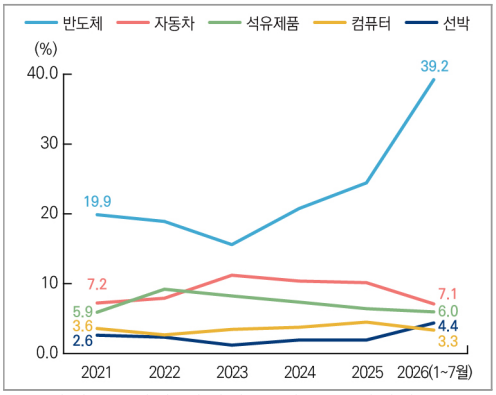
2027년 통관수출은 AI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컴퓨터는 2026년 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181.1%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027년 증가율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부족 상태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컴퓨터 등 IT 품목의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비IT 품목의 경우, 자동차 등의 현지생산 확대와 중국업체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해외시장 경합이 심화되고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65] 반도체 및 컴퓨터 수출가격 증가율



주: 수출가격지수 = 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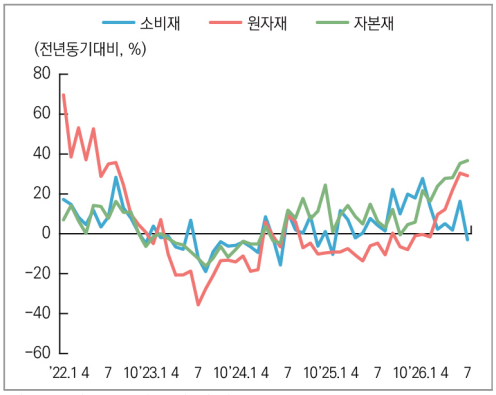
[그림 Ⅱ-66] 주요 통관수출 품목 비중



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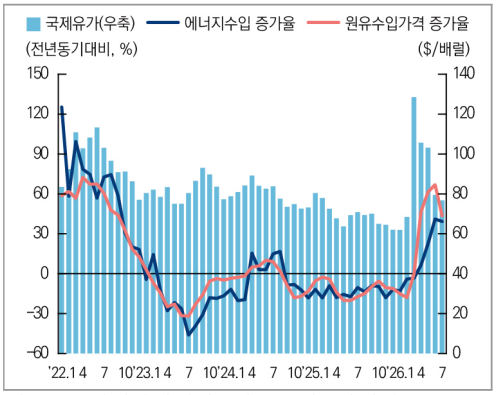
2027년 통관수입은 수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자본재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이, 수출 증가에 따라 관련 중간재 수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등도 소비재 수입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본재·중간재 대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2026년 중동전쟁의 여파로 증가하였으나, 2027년에는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67] 성질별 통관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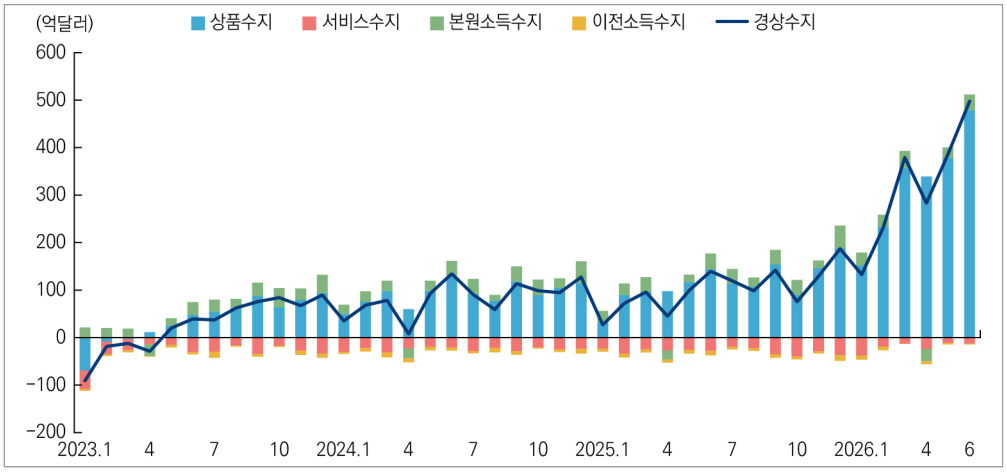
[그림 Ⅱ-68]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관세청

2027년 경상수지는 4,400억 달러 흑자로 전년(4,300억 달러 예상) 대비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유가는 하락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연구개발 서비스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흑자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Ⅱ-69]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1% 성장할 전망
- **2026~2030년 중 총수입**은 연평균 5.5% 성장할 전망
- **2026~2030년 중 통관수출**은 연평균 15.6% 성장할 전망
- **2026~2030년 중 통관수입**은 연평균 9.3% 성장할 전망
- **2026~2030년 중 경상수지**는 연평균 4,47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총수출	9.0	4.2	4.2	4.2	4.0	6.2	5.1
총수입	7.6	5.9	5.1	4.8	4.7	4.8	5.5
통관수출	54.0	10.0	5.0	4.7	4.3	7.2	15.6
통관수입	22.0	9.0	6.0	5.0	4.4	5.9	9.3
경상수지	4,300	4,400	4,500	4,550	4,600	725	4,47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총수출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 평균 성장률인 6.2%에 비해 1.1%p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컴퓨터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정책, 미·중 무역갈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통관수출의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15.6%로 예상된다.[65] 반도체 가격 여건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AI 관련 수요 지속과 공급물량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 평균 성장률인 4.8%보다 0.7%p 높은 수준이다. 중기적으로도 설비투자 등 내수 확대와 수출용 중간재 수입 수요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확대에 따라 서비스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통관수입의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9.3%로 전망된다.

65) 이례적으로 높았던 2026년을 제외한 평균 성장률은 6.0%다.

경상수지는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47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 평균 실적치인 725억달러 흑자대비 대폭 확대된 수치다. 주력 수출품의 성장세와 유가 수준을 고려하면 상품수지의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미투자 확대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지속될 전망이다.

[BOX 9]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상하방 리스크 점검을 통한 성장경로 시나리오 분석

최근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경기가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HBM에 더하여 추론용 AI 관련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폭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생산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다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규모가 매출 대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재무부담과 전력망 병목 등 투자 집행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역사상 반도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진 국내 경제구조 상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속도에 따라 성장경로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AI 투자의 상하방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GDP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확대 속도를 둘러싼 리스크는 상방과 하방으로 나뉜다. 먼저 상방으로는 AI 인프라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연초 제시한 자본지출 계획을 분기 실적발표마다 상향 조정해온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다. 반면, 하방요인으로는 재무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화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현금흐름(FCF)이 자본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조달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전력망 병목도 하방리스크로 지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6년 계획된 데이터센터 물량(16GW) 가운데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5GW이며 나머지는 지연되고 있으며, 전력망 접속 및 공급능력 확보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다. 이는 변압기·개폐장치 등 핵심 전력설비의 생산능력이 단기간 내에 확충되기 어려운 데다, 이들 부품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제약까지 겹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요인을 반영하여 기본(baseline)·상방·하방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기본 시나리오는 앞서 살펴본 상하방 요인이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

게 우세하지 않은 채 현재의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증가율 경로를 상정하고 있다. 상방 시나리오는 AI 인프라 선점 경쟁이 지속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이 기준 전망 대비 15% 상향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년 자본지출 가이던스가 연초 약 6,400억달러 수준에서 최근 약 7,350억달러 수준으로 약 14.8% 상향된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전력망 및 인프라 제약에 따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지연과 함께 AI 투자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이 나타나면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30% 감소하고, 이에 따라 메모리 수요 및 가격이 동시에 둔화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AI 투자 확대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투자 조정 시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변화가 메모리반도체 구매액을 거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2027년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규모, 자본지출 내 메모리반도체 구매액 비중,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을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수출액 변화를 산출하였다. 먼저 2027년 자본지출 규모는 컨센서스 전망(Goldman Sachs, 2026.06)을 반영하여 1조 600억달러로 전제했다. 이 중 메모리반도체 구매액 비중은 37%로 설정했는데, 이는 2026년 기준 하이퍼스케일러의 메모리 구매액을 추정하여 전체 자본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66]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64.3%)[67]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변화를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방 및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기준(baseline) 자본지출 대비 각각 15% 증가 및 30%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산출된 반도체 수출 변화를 수출입 전망모형에 투입하여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별(상방+15%, 하방–30%)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방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2%p 증가, GDP 디플레이터는 0.4%p 상승하여 명목 GDP가 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4%p 감소, GDP 디플레이터는 0.8%p 하락하여 명목 GDP가 1.2%p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시나리오별 GDP 파급효과]

설정 시나리오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
상방	+0.2%p	+0.4%p	+0.6%p
하방	-0.4%p	-0.8%p	-1.2%p

다만, 이번 분석은 먼저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GDP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장기 파급영향과 수출 증가가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로 파급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메모리반도체에 한정한 분석으로 최근 AI 투자와 관련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장비 등 수출은 고려하지 않아 그 영향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68] 그리고 중동전쟁, 미국의 관세정책과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교역량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결과는 AI 인프라 투자 변동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66) 이는 2026년 기준 전체 메모리반도체 시장(1,200조원)에서 서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약 60%)을 계산하고 주요 빅테크기업과 네오 클라우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비중(약 60%)으로 계산한 메모리 구매액을 당해 자본지출규모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이며 자세한 분석 내용은 반도체 7월: 실적전망치 상향 조정 지속(송명섭, 2026.06.22.)을 참조할 수 있다.

67) 트렌드포스(2026.09)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DRAM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각각 39.4%, 24.9%로 총 64.3%로 조사됐다.

68) 관련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42호(2026.07.23.) 중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참조할 수 있다.

제8절 소비자물가

1. 2027년 전망

▪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1	2.5	2.8	2.7	2.7	2.1	2.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임금 등 비용 상승 압력	• 국제 유가 하향 안정
• GDP 갭 플러스 전환	• 공급망압력 완화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망된다. 2026년 상반기 2.5%, 하반기 2.8%로 연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상반기 2.7%, 하반기 2.1%로 상승률이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중 물가 상승을 주도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2029년에 이르러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2026년 5월 3.1%, 6월 3.2%까지 상승한 후 7월 2.8%로 낮아졌다. 반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2.5%, 6월 2.5%, 7월 2.6%로 소폭 상승하였다. 품목별 기여도는 2026년 7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78% 가운데 공업제품이 1.24%p, 서비스가 1.46%p를 차지하였고, 농축수산물과 전기·수도·가스의 기여도는 각각 0.07%p, 0.01%p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공업제품 기여도가 1월 0.56%p에서 6월 1.47%p로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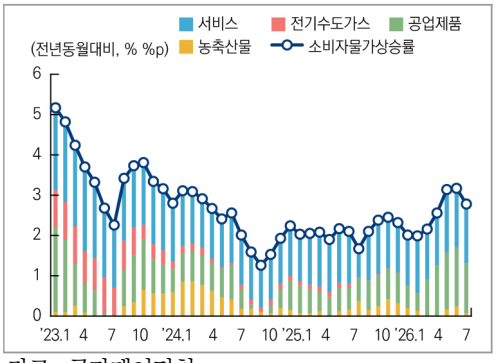
황소정 경제분석관(sjhwang@assembly.go.kr, 6788-4656)

[그림 Ⅱ-7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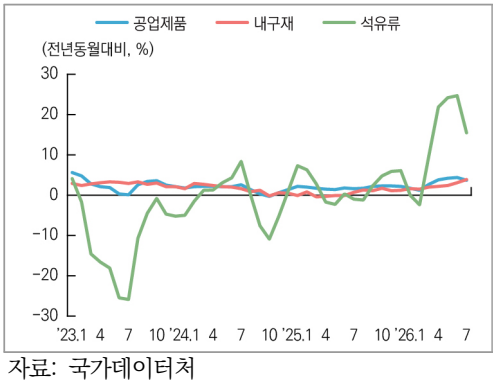
[그림 Ⅱ-7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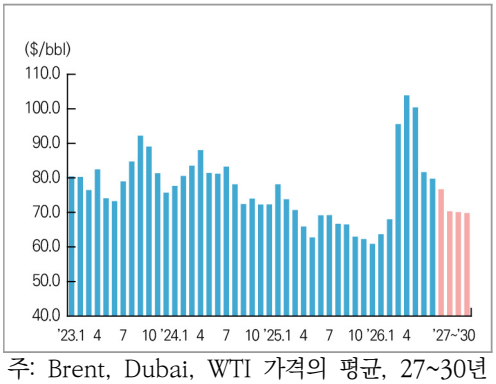
공업제품 물가 상승은 석유류가 주도하였다. 2026년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는 2026년 1월 0.0%에서 4월 21.9%, 5월 24.2%, 6월 24.7%까지 상승하였다가 7월 들어 15.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공업제품 물가는 1월 1.7%에서 6월 4.4%로 상승하였다. 내구재 물가가 1월 1.6%에서 7월 3.9%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여타 공업 제품으로 일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69]는 2026년 1월 배럴당 63.7달러에서 4월 103.9달러까지 상승한 후 7월 79.8달러로 하락하였다. 2027년 이후 국제유가는 2030년 69.8달러까지 완만하게 하향 안정될 예상으로, 점진적인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Ⅱ-72]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Ⅱ-73] 국제원유가격



주: Brent, Dubai, WTI 가격의 평균, 27~30년 국제유가 전제치
자료: World Bank「Pink Sheet」, 국회예산정책처

69) Brent, Dubai, WTI 가격의 평균

다만 2026년 3월 발발한 중동 전쟁이 9월 현재 7개월째 이어지면서 종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 여파로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전제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70] 2026년 상반기 유가 급등기에 석유류 가격 상승이 내구재 등 여타 공업제품으로 일부 전이된 점을 감안하면, 유가가 재상승할 경우 그 영향이 에너지 품목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물가 경로에 걸쳐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70) 중동 전쟁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Box 6]에서 분석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3% 상승 예상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2.7	2.4	2.2	2.0	2.0	3.1	2.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2025년 평균 3.1%보다 0.9%p 낮은 수준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공급망압력의 해소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주된 하방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GDP갭 플러스 전환은 각각 공급측, 수요측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GSCPI)[71]는 2026년 1월 0.47에서 4월 1.84까지 상승한 후 7월 0.81로 낮아졌다. 공급망압력지수가 높아질 경우 물류비와 부품 조달비용을 높여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공급망 압력 완화는 2027년 하반기 이후 물가 둔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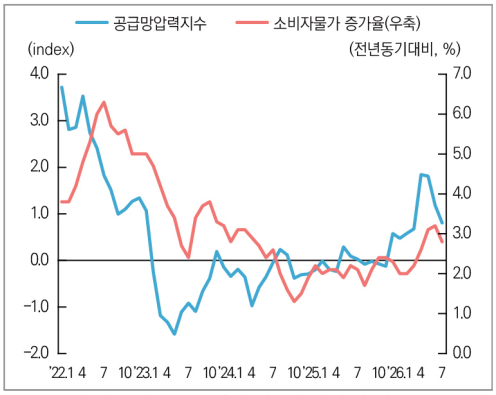
또한 중기 상방 요인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중 체감온도(Heat Index[72]) 35℃ 이상 기록 일수로 보면, 지난 20년 간 이상 고온 현상의 주기가 짧아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이 반복될 경우 농산물과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기후플레이션[73]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냉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비용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71) 뉴욕연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GSCPI,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는 7개 경제권(미국,유로존,중국,일본,한국,대만,영국)을 대상으로 27개 변수(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PMI 하위지표 등)를 지수화 한 것으로 글로벌 공급측의 제약의 정도를 나타낸다.

72) HeatIndex 35는 일평균 열지수가 35℃를 초과한 날의 연간 일수를 나타내는데, 기온에 상대습도를 결합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더위를 기준 한다. 35℃는 미국 NWS(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나눈 위험 등급에서 32~41℃ 구간(Extreme caution, 매우주의)에 해당하여, 이 지수는 위험 수준의 더위가 연중 몇 일 지속되는가를 세는 빈도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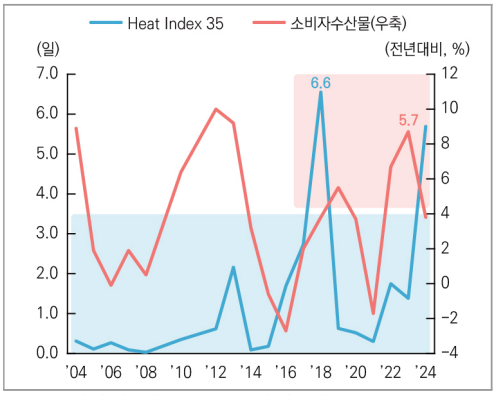
73)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폭염, 가뭄, 홍수 등)가 농축산물 작황 부진, 물류 차질 등 공급 측 충격을 일으켜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리는 경제 현상을 의미하며,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그림 Ⅱ-74]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



주: 소비자물가~공급망압력 시차상관계수 5~6개월(r≈0.76)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그림 Ⅱ-75] Heat Index 35와 농축수산물 물가



주: 우리나라 연중 35℃ 이상 기록 일수
자료: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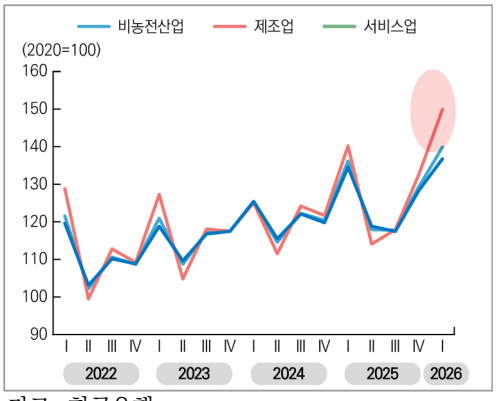
수요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과 GDP갭의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간당 명목임금지수(2020=100)는 2026년 1분기 비농전산업 139.9로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제조업은 149.9로 6.9%, 서비스업은 136.7로 1.6% 상승하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임금 상승은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한편, 인건비 비중이 높은 개인서비스와 외식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실제로 개인서비스 물가는 2026년 7월 3.5%로 헤드라인 물가(2.8%)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의 물가 기여도는 1.46%p로 공업제품(1.24%p)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갭은 2023년 이후 마이너스였으나 금년 말이나 내년 초 플러스로 전환될 예상이며, 실질 GDP 예상 성장 경로도 전망 기간 중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급등이 반영된 2026년 4월 2.9%까지 높아진 후 7월 2.7%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중 향후 5년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변동이 없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6년 5월 3.1%, 6월 3.2%로 3%를 상회한 국면에서도 단기 기대의 상승폭은 0.3%p에 그쳤고 장기 기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2027년 이후 물가가 하향 안정될 경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76] 시간당 명목임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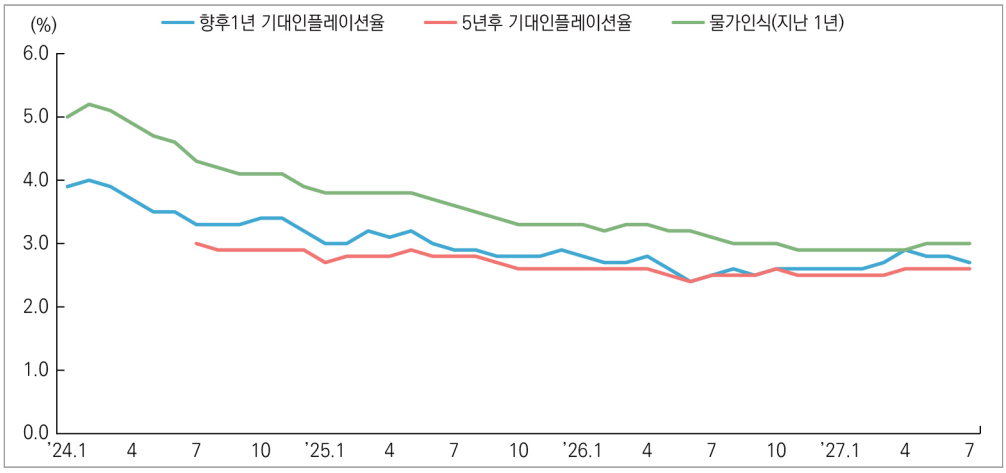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Ⅱ-77] GDP갭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Ⅱ-78]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III

생산전망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2027년 및 중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1절 2027년 전망

국민계정에서 생산 GDP[74]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구성된다. 총부가가치는 경제활동별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농림어업과 광업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생산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아,[75] 본 보고서에서는 두 부문을 '기타'로 통합하여 전망하였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생산 GDP 및 이를 구성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 산업 부문과 순생산물세[76]는 모두 실질 기준으로 측정·전망된 값이다.

2027년 생산 GDP 성장률은 작년 전망(2025년 9월)[77] 2.1% 대비 0.6%p 상승한 2.7%로 전망하였다. 총부가가치가 작년 전망치(2.2%)보다 0.6%p 높은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순생산물세는 작년 전망치(1.2%)보다 0.1%p 높은 1.3%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총부가가치 전망치의 상향 조정은 반도체 업황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세 확대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별로 전망 차이의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2027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작년 전망(2.1%)보다 2.2%p 상향 조정한 4.3%로 전망하였다. 2025년 말부터 인공지능(AI)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통계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kwonil@assembly.go.kr, 6788-3781)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74) 생산 측면에서 파악한 GDP를 이하 '생산 GDP'로 약칭한다(한국은행 공식 용어는 '생산국민소득').
75) 「2025년 국민계정(잠정)」 기준 GDP 대비 비중은 농림어업 1.4%, 광업 0.1% 수준이다.
76) 순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그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수입세(관세 포함), 수출세, 기타생산물세로 구분된다. 생산물보조금은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수출 등에 대해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7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 2025.9.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미국 내 투자 규모와 연동해 관세 감면)를 예고하는 등 광범위한 보호무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2027년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3월 중동전쟁 이후 수출가격이 인상되며 증가했던 화학,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의 강한 성장세가 여러 하방요인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부가가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2027년 2.4% 성장이 전망되어, 작년 전망치(2.1%) 대비 0.3%p 상향 조정하였다. 2027년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 안정에 따른 국내외 여행객 증가로 운수업의 성장세도 전망된다. 통관수출(10.2%)과 통관수입(9.0%) 및 설비투자(6.4%) 전망치의 상향으로 수출입 및 투자 관련 서비스업의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국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78]도 2027년에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올 7~8월 기준금리가 25bp(0.25%)씩 연속 인상되면서 소비 증가가 제약될 전망이다.[79] 또한 고령층 비중의 증가로 민간의 소비성향 상승이 제약[80]되는 등 민간소비(-0.3%p)도 하향 조정되고, 반도체 업황 호조의 서비스업으로의 낙수효과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설업 부가가치는 2027년 1.1% 성장이 전망되어, 작년 전망치(3.2%) 대비 2.1%p 하향 조정하였다. 작년 전망에서는 2027년에는 건설업 경기 부진의 기저효과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주택 수요 침체로 인해 신규 착공

78) 한국은행,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 지역 미시데이터로 살펴본 파급효과」, BOK 이슈노트 제 2026-20호, 2026.8.31.
79) 한국은행은 금리(2.5% → 3.0%) 0.5%p 인상의 효과로 연간 가계의 이자 부담이 6조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80)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이슈분석·심층연구(경제상황 평가·전망), 2025.6.5.

과 수주가 동시에 위축되는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며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까지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 등의 동반 상승으로 건설업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업황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업 부가가치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민간 건설수주 회복과 정부의 SOC 확대로 인한 공공 건설 증가,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설비 증설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가가치는 이번 전망에서는 1.5% 성장이 전망되어 작년 전망치(1.9%) 대비 0.4%p 하향 조정하였다. 산업 부문에서 2027년 전망은 작년 전망 대비 제조업이 2.2%p 상향, 서비스업이 0.3%p 상향되었으나, 반도체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하향 조정하였다.

[표 Ⅲ-1] 2027년 생산국민소득 수정 전망(전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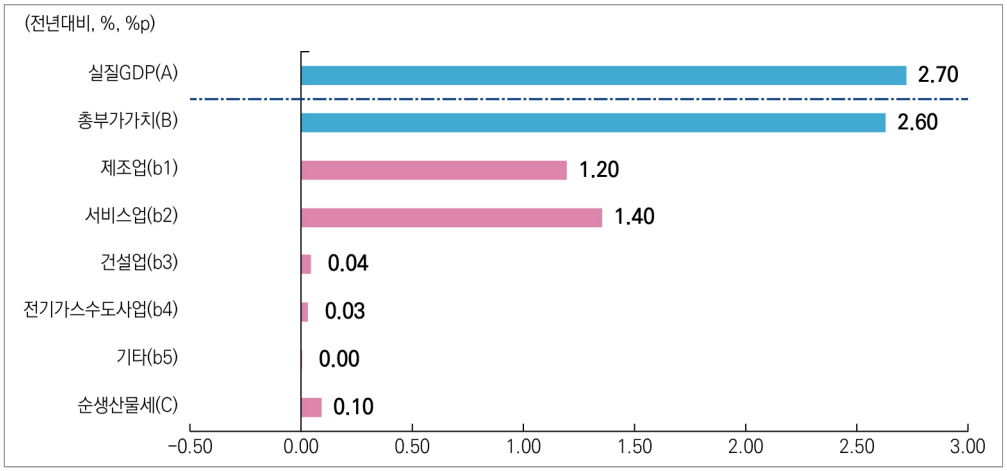
(단위: %, %p)

	'25.9월 전망	'26.9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2.1	2.7	0.6
총부가가치	2.2	2.8	0.6
제조업	2.1	4.3	2.2
서비스업	2.1	2.4	0.3
건설업	3.2	1.1	-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9	1.5	-0.4
기타	1.6	0.3	-1.3
순생산물세	1.2	1.3	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생산 GDP 전망치 2.7%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총부가가치가 2.6%p, 순생산물세가 0.1%p로 분석되었다. 생산 부문별로는 제조업 1.2%p, 서비스업 1.4%p, 건설업 0.04%p,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0.03%p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1] 2027년 생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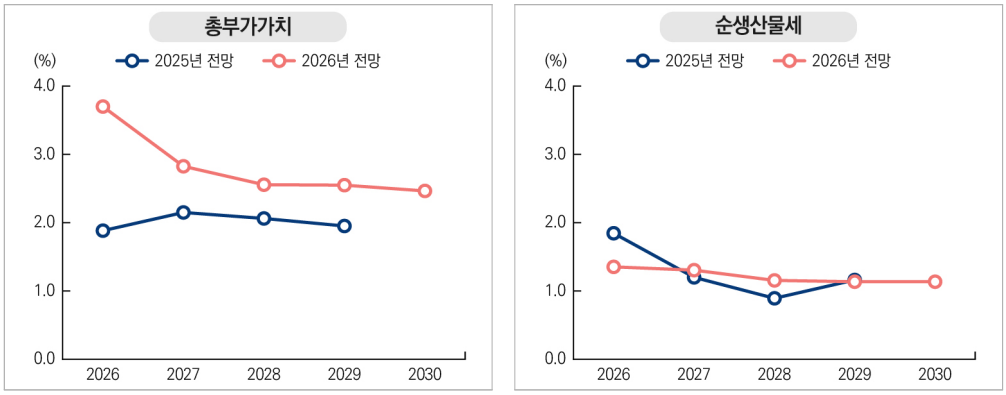


주: A=B+C, B=b1+b2+b3+b4+b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2절 중기 전망

생산 GDP 성장률의 2027년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2.7%로 전망된다. 총부가가치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2.8% 성장을 나타낼 전망으로, 지난 중기 전망의 5년(2025~2029년) 평균 성장률 1.8%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순생산물세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1.2%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지난 중기 전망의 5년(2025~2029년) 평균 성장률 0.9%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Ⅲ-2] 총부가가치 및 순생산물세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4.1%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중기 전망의 5년(2025~2029년) 평균 성장률 1.8%보다 2.3%p 높은 수준인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HBM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2026~2027년 기간 중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2027년 전망(제조업 4.3%, 작년 전망 대비 2.2%p 상향)의 흐름이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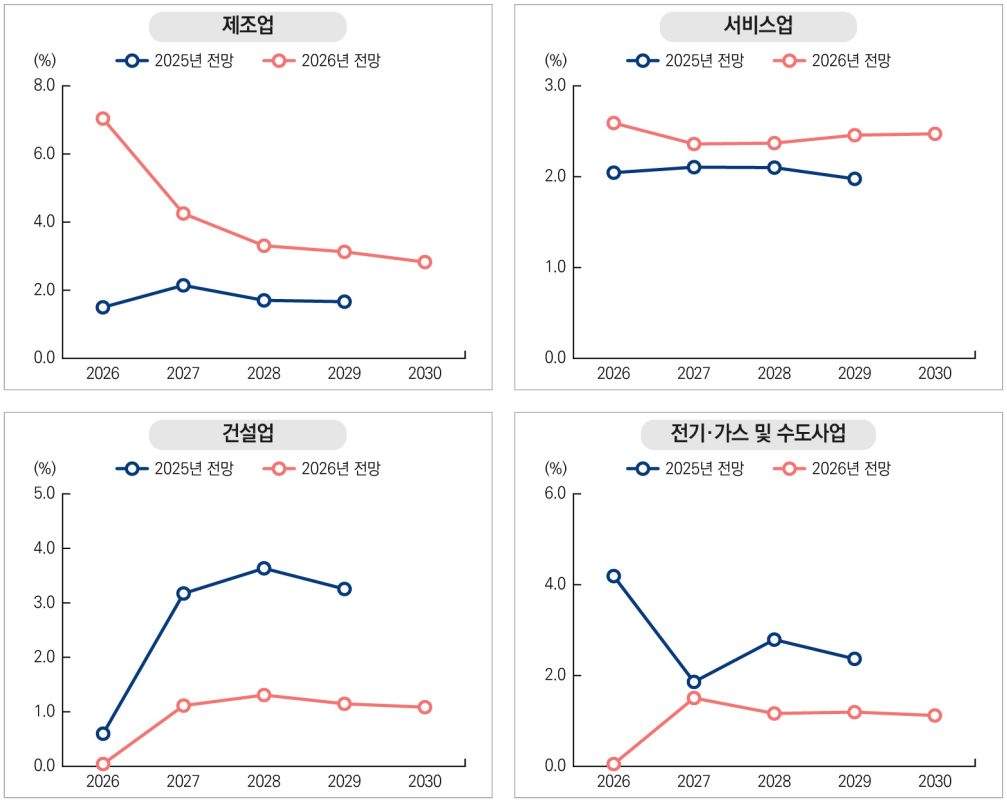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2.4%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중기 전망의 5년(2025~2029년) 평균 성장률 1.9%보다 0.5%p 높은 수준이다. 2026년 2.6%를 기록 후 2027년 이후 2.4~2.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 이는 중기적으로 고령인구 증가로 가계의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중기 전망의 5년(2025~2029년) 평균 성장률 0.7%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2024~2025년 기간 중 부진하였던 건설업 부가가치는 2027년 중 증가 전환한 후 2028~2030년에는 낮은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급등한 원자잿값과 인상된 인건비가 분양가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악화된 건설사의 수익이 중기적으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6~2030년 기간 중 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중기 전망의 5년(2025~2029년) 평균 성장률 2.6%보다 1.6%p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3] 세부 산업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2장 2027년 및 중기 전망

제1절 제조업

1. 2027년 전망

▪ **2027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3%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4	6.9	7.1	7.0	5.0	3.5	4.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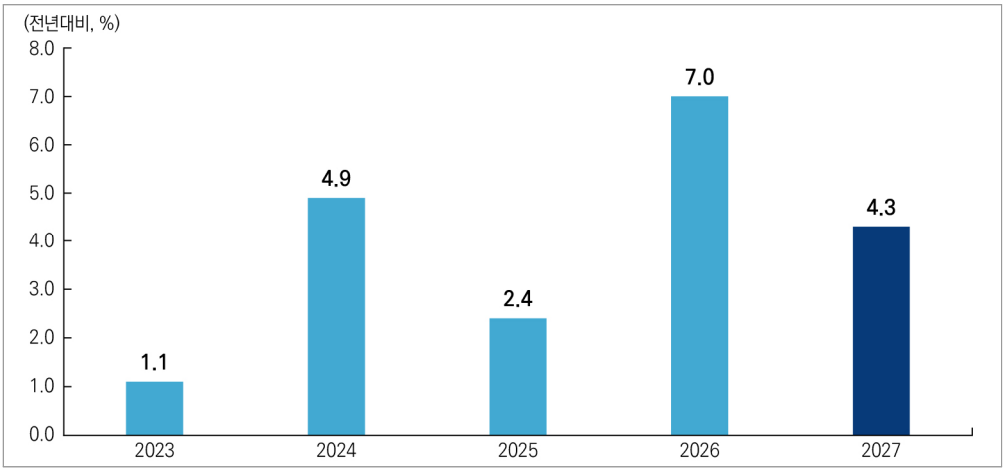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고성능 반도체 수요 지속	• 미국 관세·수입규제 강화
• 세계교역 증가세 확대	• 중국발 공급과잉·가격경쟁 심화
	• 에너지·원자재 조달 불안

2027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026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고, 세계교역 증가세 확대도 수출과 생산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강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는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원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공급 차질을 통해 제조업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기환 경제분석관(kihwan@assembly.go.kr, 6788-4678)

[그림 Ⅲ-4]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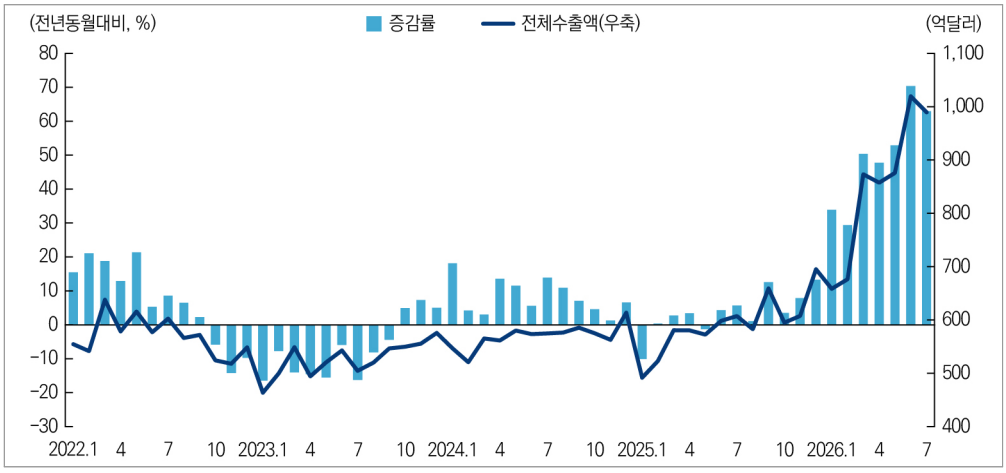
2027년 세계경제성장률[81]은 3.1%로 2026년(2.8%)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의 관세조치 등은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교역량은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AI·반도체 등 관련 제품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차질과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불확실성은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들어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액은 2026년 1월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어 6월에는 70.4% 증가하였으며, 7월에도 6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월간 수출액도 6월 1,019.6억달러로 1,000억달러를 상회한 데 이어 7월에는 989.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분기 이후 수출 증가세가 한층 확대되면서 최근 수출은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1)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Ⅰ부 동향의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에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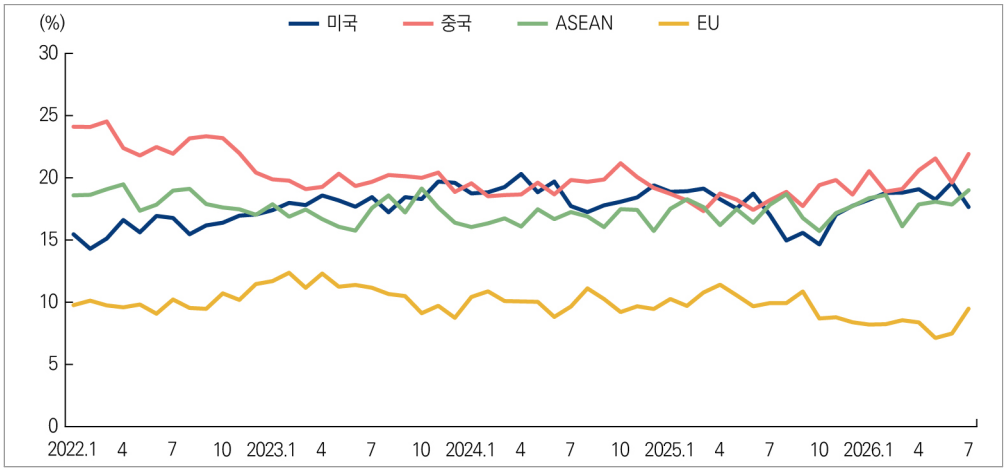
[그림 Ⅲ-5]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무역 상대국별로는 2026년 들어 중국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5년 대체로 18% 내외에서 등락하였으나, 2026년에는 20% 안팎으로 높아져 7월에는 21.9%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수출 비중은 대체로 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도 2026년 들어 16~19%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반면 EU의 수출 비중은 10%를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최근 수출 증가와 함께 중국의 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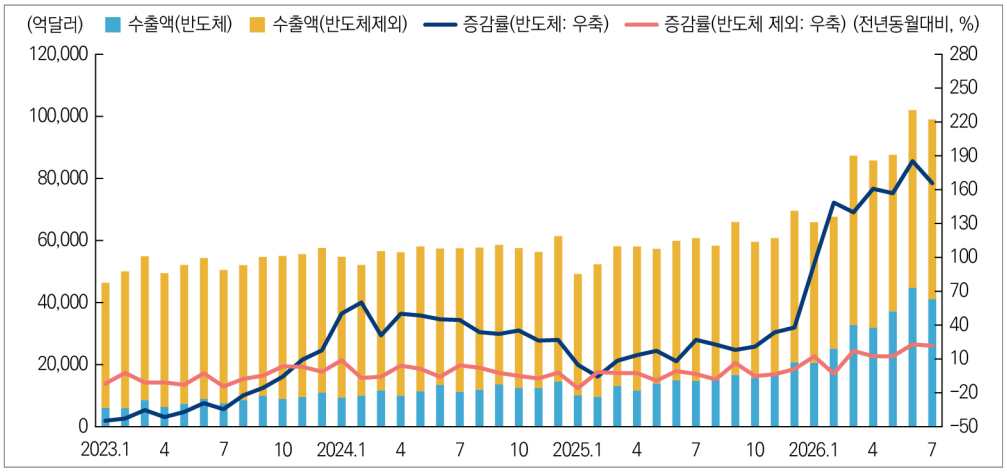
[그림 Ⅲ-6] 주요 무역 상대별 수출액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6년 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연초부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6월과 7월에는 2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상회했고,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78.8% 증가한 410.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같은 달 전체 수출액의 41.4%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크게 끌어올렸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3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27.3%, 25.9% 증가했다. 최근 수출은 반도체가 높은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출도 회복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함께 뒷받침했다.

[그림 Ⅲ-7] 반도체·비반도체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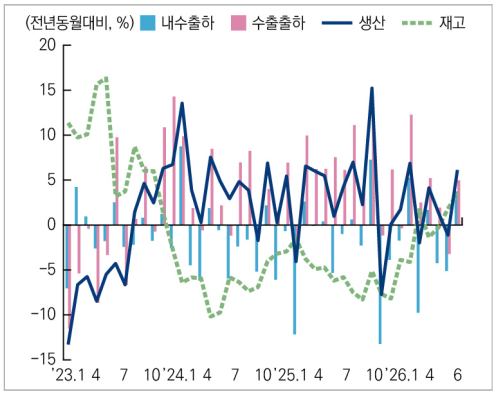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어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 개선이 여타 업종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수출출하는 연초부터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했다. 반도체는 연초 AI 관련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를 견인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3.0% 증가한 반면 재고는 7.7% 감소했고, 4월에도 수출출하는 22.4% 증가하고 재고는 13.7% 감소해 수출 수요 확대가 생산과 재고 조정을 뒷받침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출하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재고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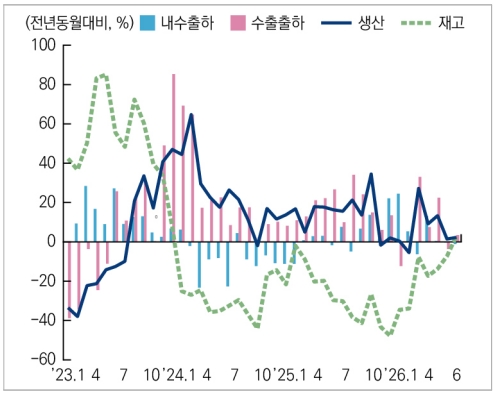
가로 전환되면서 연초의 가파른 확장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6월 반도체 생산과 수출출하는 각각 2.2%, 3.4% 증가했고 재고는 3.0% 증가로 전환됐다. 같은 달 제조업 전체 생산은 6.1% 증가해 반도체 생산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 생산 반등이 반도체의 높은 생산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타 업종의 개선도 함께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8] 제조업 생산·출하·재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Ⅲ-9] 반도체 생산·출하·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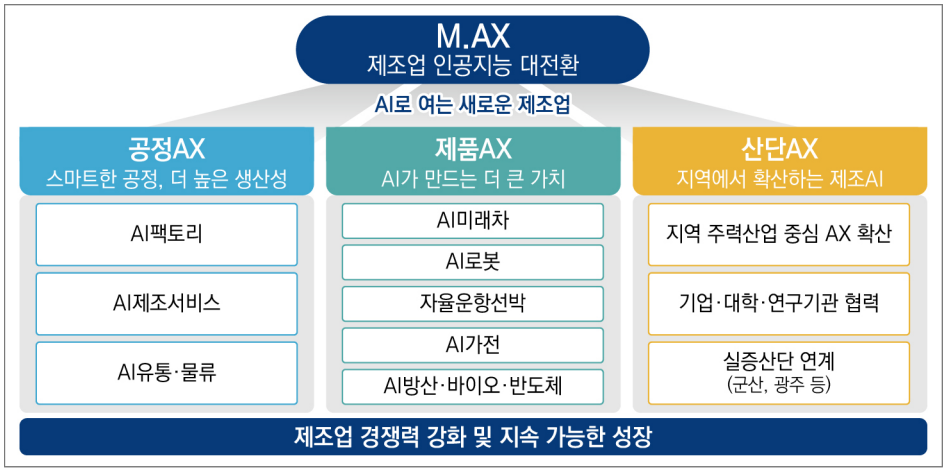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BOX 10] 제조업 AI 전환(M.AX) 정책의 주요 내용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여건에 대응하여 설계·생산·공급망 등 제조 전 과정에 산업 인공지능(AI)을 접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82]

정부는 M.AX를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AX, AI를 활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AX,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확산하는 산단AX의 세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25년 9월 10개 분야로 출범한 이후 2026년 2월 산단AX 분과가 추가되면서 현재 총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M.AX 주요 추진 분야]



자료: 본 이미지는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M.AX 정책은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공정·제품 중심의 AI 전환에서 지역 확산과 제도·금융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26년에는 산단AX 분과 신설과 「제조AI 2030 전략」 발표, 산업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시행 등이 이어졌으며,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유망기업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상반기까지 AI팩토리 170개가 보급되었고, 로봇

용접·무인검사 등 제조현장의 AI 활용과 로봇·자율운항선박 등 AI 기반 제품 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산단AX도 군산·광주 등 10개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M.AX는 단기적인 제조업 경기변동보다는 AI 도입을 통한 공정 효율화와 제품 고부가가치화, 제조현장으로의 AI 활용 확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I팩토리 보급과 제품 개발 등 상당수 사업이 확산 또는 기술개발 단계에 있고 주요 정책 목표도 2027~2030년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별 사업에서 나타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지속되는지와 함께 이러한 성과가 지역 산업단지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82) 산업통상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0년대 8.3%에서 2020년 이후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제시된다.

가. 반도체

-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8.1% 증가할 전망
  - AI 데이터센터에서 비롯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2027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9.4% 증가할 전망
  - 2026년의 이례적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나, AI 인프라 투자발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세는 지속

반도체 시장조사업체(WSTS,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 6,555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108.1% 증가한 수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이다. 이러한 큰 폭의 상향 조정은 2025년 말 이후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83] 2026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9,250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302.1% 급증할 전망인데, 이는 이전에 전망했던 전년대비 '성장 둔화' 흐름과는 정반대로, HBM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서버 수요가 D램 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가 HBM 생산으로 전환하며 범용(레거시) D램 공급이 축소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D램 가격은 2025년 4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26년 1분기에는 전분기대비 70% 이상 상승하며 정점을 찍었고, 2분기 들어서는 상승폭이 30~50%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었다.[84] 그러나 메모리 공급 정상화와 긴급 재고 확보 수요의 완화 등으로 하반기 상승폭은 한 자릿수~20%대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2027년 메모리 시장 증가율이 35.6%로 2026년(302.1%)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연간 전망과도 방향이 일치한다.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83) 2025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약 7,956억 달러, 전년대비 26.2% 증가) 역시 직전 전망치(약 7,009억 달러, 11.2% 증가)를 상당폭 상회한 바 있다.
84) ZDNet Korea, 「D램 가격 상승률, 1분기 70%→2분기 30~50%로 둔화 전망」, 2026.4.12.

2027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2조 1,424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미주(31.3%)와 아시아·태평양(29.6%)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유럽(21.3%)과 일본(20.6%)도 2026년의 고성장 흐름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5	2026	2027	2025	2026	2027
미주	2,565	5,971	7,841	31.4	132.8	31.3
유럽	547	935	1,133	6.7	70.9	21.3
일본	447	612	738	-4.3	36.8	20.6
아시아 태평양	4,397	9,037	11,712	30.3	105.5	29.6
합계	7,956	16,555	21,424	26.2	108.1	29.4

자료: WSTS('26.8월)

반도체 수요를 대변하는 세계 IT시장 규모는 2026년 6조 3,69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용 IT 수요를 대표하는 데이터센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각각 62.5%와 15.5%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IaaS) 지출이 29.3% 증가하며 새로운 고성장 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Ⅲ-3] 세계 IT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5	2026	2025	2026
IT 시장 매출액	55,770	63,690	10.7	14.2
데이터센터 시스템	5,060	8,220	51.6	62.5
소프트웨어	12,710	14,680	13.9	15.5
IT 기기	7,900	8,680	9.7	9.8
IT 서비스	14,920	15,700	3.8	5.3
IaaS*	2,220	2,870	25.3	29.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2,960	13,540	3.3	4.4

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가트너가 2026년 자료부터 별도 항목으로 구분 발표
자료: Gartner('26.7월)

반도체 시장조사업체(WSTS)의 전망을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6년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대비 302.1% 증가한 성장률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85] 로직(Logic) 반도체도 42.4%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며, 마이크로(24.7%)·아날로그(11.3%) 반도체 역시 두 자릿수 성장으로 확대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메모리(35.6%), 로직(28.4%), 마이크로(21.5%)가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날로그(7.1%)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Ⅲ-4] 집적회로(IC) 부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5	2026	2027	2025	2026	2027
집적회로	7,010	15,535	20,330	29.9	121.6	30.9
아날로그	865	963	1,031	8.7	11.3	7.1
마이크로	849	1,058	1,285	7.9	24.7	21.5
로직	2,995	4,264	5,474	38.8	42.4	28.4
메모리	2,300	9,250	12,540	39.0	302.1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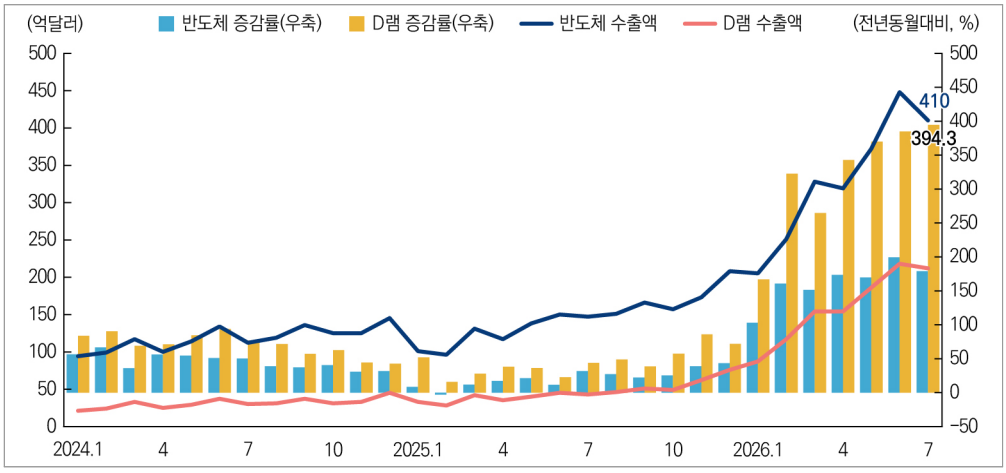
자료: WSTS('26.8월)

2026년 반도체 수출은 매월 전년동월대비 10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1월 102.8%로 출발한 증가율은 점차 확대되어 6월 199.5%(44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7월에는 410억 달러(+178.8%)로 증가율 자체는 다소 낮아졌지만 절대 금액은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86]

반도체 중에서도 D램 수출이 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D램 수출 증가율은 1월 166.6%에서 7월 394.3%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2.4%에서 7월 51.7%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고성장률은 2025년 동월 실적 자체가 이미 전년대비 증가한 상태여서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수치다. 그럼에도 2026년 1월(205억 달러)에서 6월(448억 달러)까지 수출액이 2배 이상(118%) 늘어난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높은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Box 11 참조).

85) WSTS, "Global Semiconductor Market records exceptional growth in Q2 2026", 2026.8.
86) 다만 6월(448억 달러)에서 7월(410억 달러)로 전월대비 금액이 줄어든 점은, 증가율의 기저효과(2025년 동월 실적이 이미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상대적 둔화)로 보인다.

[그림 Ⅲ-10] 반도체 수출액과 D램 수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AI 서버용 GPU·가속기 수요에 힘입어 2023년 이후 대체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으며, 특히 2025년 2분기 이후로는 4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TrendForce에 따르면 상위 10개 파운드리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026년 1분기 479억 5천만 달러(+3.7%)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87] 다만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체는 2025년 2분기(14.6%)를 정점으로 3분기 8.1%, 4분기 2.6%로 둔화된 뒤 1분기 들어 소폭 반등하는 모습으로, 매출액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성장 동력은 다소 약화되는 국면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1분기 실적이 통상적인 계절적 패턴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2024년 1분기(-4.6%)와 2025년 1분기(-5.5%) 모두 상저하고를 나타내는 계절성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던 반면, 2026년 1분기는 오히려 증가(+3.7%)했다. 이는 AI 서버용 GPU·가속기 수요가 파운드리 업계의 전통적인 계절 변동성을 압도할 만큼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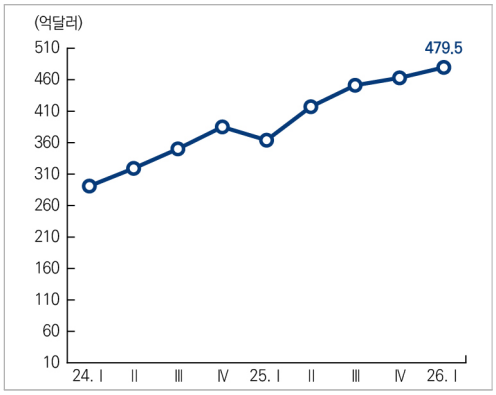
87) TrendForce, “Strong AI Demand and Early Consumer Electronics Inventory Build Drive Top 10 Foundries to 3.7% QoQ Revenue Growth in 1Q26”, 2026.6.12.

88)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걸프 지역 AI 데이터센터 피격과 미국 국채금리가 20개월래 최고 수준(2025년 1월 이후 최고, 2026년 8월 기준 약 4.7%대)까지 오른 점은 이러한 AI발 수요 확대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로 지목된다.

[그림Ⅲ-12]의 상위 10개 기업의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TSMC 쏠림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TSMC 점유율은 2025년 3분기 71.0%까지 올랐다가 4분기 70.4%로 소폭 조정된 뒤 2026년 1분기 72.3%로 관측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4개 분기만 보면 7.3%(25.Ⅱ)→6.8%(25.Ⅲ)→7.1%(25.Ⅳ)→6.5%(26.Ⅰ)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2024년 1분기(11.0%)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점유율이 41% 가까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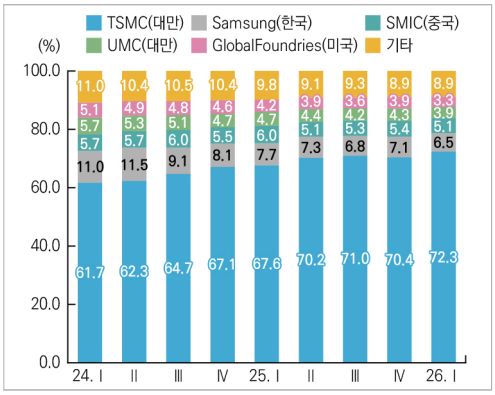
TSMC·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8개 기업의 점유율 합은 2026년 1분기 기준 약 20% 내외이며, 파운드리 시장은 TSMC 1강 체제 아래 삼성전자를 포함한 2~3위권이 경쟁하는 구조를 보인다.

[그림 Ⅲ-11] 파운드리 매출액 추이 (상위 10개사)



자료: TrendForce

[그림 Ⅲ-12]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 추이 (상위 1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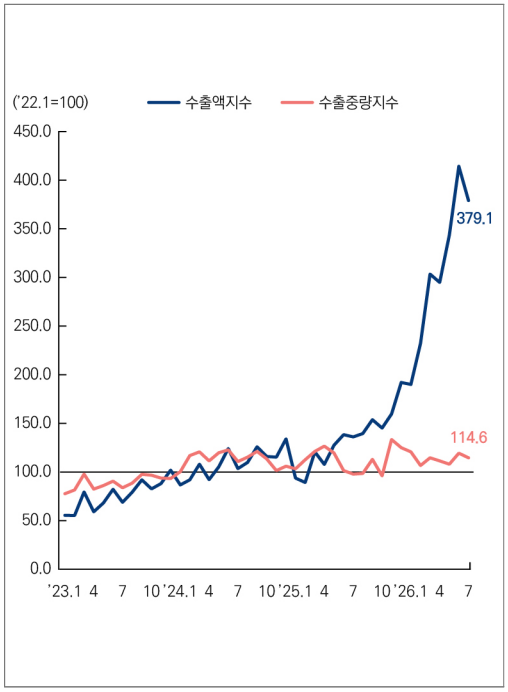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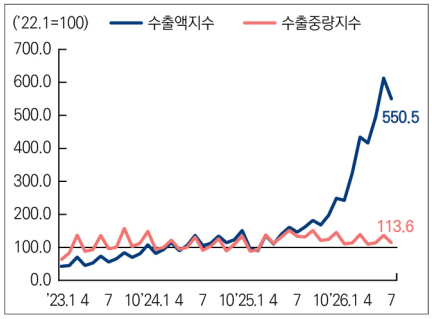
[BOX 11] 반도체 수출 증가 점검

2026년 6월 반도체 수출액은 448.1억 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7월에도 410.1억 달러로 높은 실적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호조는 하위 반도체 품목별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 1월[89] 대비 2026년 7월 수출액지수(2022.1=100)는 반도체 전체 379.1, 메모리 550.5로 크게 증가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121.0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출중량지수[90]는 각각 114.6, 113.6, 92.0으로 수출액 증가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메모리는 수출중량이 13.6%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5.5배로 뛰어 격차가 가장 컸고, 시스템반도체는 수출액 증가(21.0%) 자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수출중량은 오히려 8.0% 줄어 메모리와는 성격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등 가격 및 제품구성 변화가 수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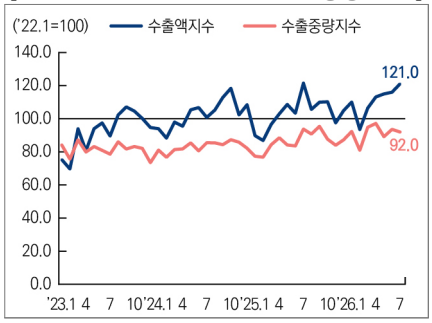
[반도체 전체 수출액 및 수출중량 지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및 수출중량 지수]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 및 수출중량 지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89) 2022년 1월 관세청 HSK 품목분류가 세계관세기구 HS2022 개정에 맞춰 개편되어 비교 시점으로 선정하였다.
90) 수출액지수와 수출중량지수는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별 수출입 통계(MTI 4자리 기준)를 이용

연도별 누적 기여도로 보면, 전체 반도체 하위 품목별 수출액 증감은 시기와 무관하게 메모리가 주도해왔다. 2022~2023년 반도체 전체 수출액이 23.7% 감소했을 때도 메모리가 -17.3%p로 감소분의 73%를 차지했으며, 이후 회복 국면에서 메모리의 영향력은 매 구간(73%→85%→97%→98%)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2024년 증가율 43.9% 가운데 37.4%p(85%), 2024~2025년 22.2% 가운데 21.6%p(97%)를 메모리가 차지했고, 2025년 1~7월 대비 2026년 1~7월 증가율(165.3%)에서는 그 비중이 162.0%p(98%)까지 높아졌다. 반면, 시스템반도체는 -6.1%p(2022~2023)→5.0%p(2023~2024)→0.1%p(2024~2025)→2.9%p(2025.1~7~2026.1~7)로 구간별 등락이 뚜렷했으나, 메모리에 비하면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개별소자반도체와 실리콘웨이퍼(MTI: 8314+8315)는 두 품목을 합쳐도 4개 구간 모두 -0.3%p~1.5%p에 그쳐, 반도체 수출증감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

[연도별 반도체 수출액 증가(누적)에 대한 하위 품목별 기여도 분해]

(단위: %, %p)

비교 구간	반도체(831) 수출액 증가율	기여도			
		메모리 (8311)	시스템반도체 (8312)	개별소자 (8313)	실리콘웨이퍼 (8314,8315)
2022~2023	-23.7	-17.3	-6.1	-0.1	-0.2
2023~2024	43.9	37.4	5.0	0.8	0.7
2024~2025	22.2	21.6	0.1	-0.1	0.6
2025.1-7 ~2026.1-7	165.3	162.0	2.9	0.3	0.1

주: 수출액(달러)만을 이용한 산술적 기여도 분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 2022년 1월을 100으로 산출하였고, 본문의 수출중량은 세관 신고 무게(g)로, 품질·성능 변화를 반영하는 물량 개념과는 다르다. 반도체 전체(831)는 메모리반도체(8311)·시스템반도체(8312)·개별소자반도체(8313)·실리콘웨이퍼(8314, 8315)의 합과 일치하며(2022.1~2026.7 전 기간), 실리콘웨이퍼는 동일 품목명(실리콘웨이퍼)으로 등록된 8314·8315 두 코드를 합산해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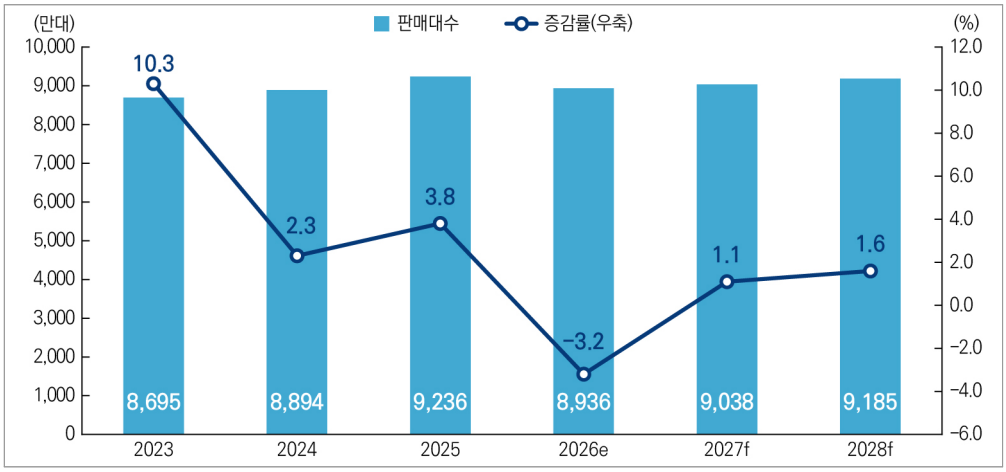
91) 본 비교는 수출액과 수출중량의 격차를 가격 요인으로 분해하지 않고, 두 지표의 실제 변화만 제시하였다.

나. 자동차

-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중동전쟁으로 위축되었던 상반기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에 신흥국 수요에 힘입어 소폭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27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연된 수요가 실현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초 발생한 중동전쟁으로 상반기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 소폭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더불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둔화되던 수요가 신흥국 수요 회복에 힘입어 소폭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7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9,038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연된 수요가 실현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13]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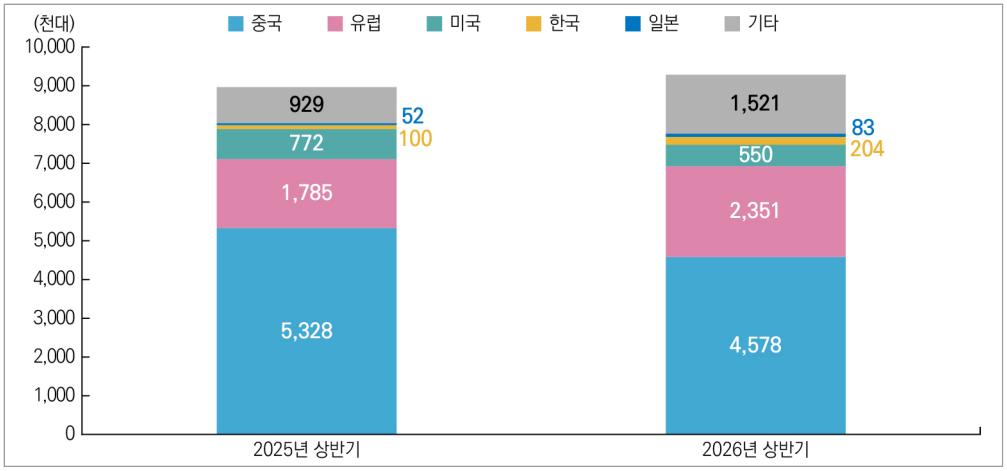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자료: Global Data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동력 자동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년 상반기에 BEV, PHEV, FCEV[92]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신흥시장에서의 보급이 확대되며 3.6%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주요 보급 정책의 종료와 기준강화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었지만, 유럽, 일본, 신흥시장의 규제강화, 보급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였다.

[그림 Ⅲ-14]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 규모



주: 친환경 자동차는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FCEV)를 포함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중국의 2026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26년 세금 감면혜택 및 이구환신[93] 보조금에 대한 기준 강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1% 감소하였다. 미국의 2026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25년 10월 이후 IRA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8.8% 감소하였다. EU의 2026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CO_2 배출규제 강화, 주요 회원국

92) BEV는 배터리 전기자동차,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FCEV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의미한다.
93) 이구환신(以舊換新)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인센티브 재개, 보급형 전기차 모델의 출시 확대 등으로 31.7% 증가하였다. 일본의 2026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61.1% 증가하였고, 남미, 호주, 인도 등 기타국가의 2026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판매 또한 전년대비 63.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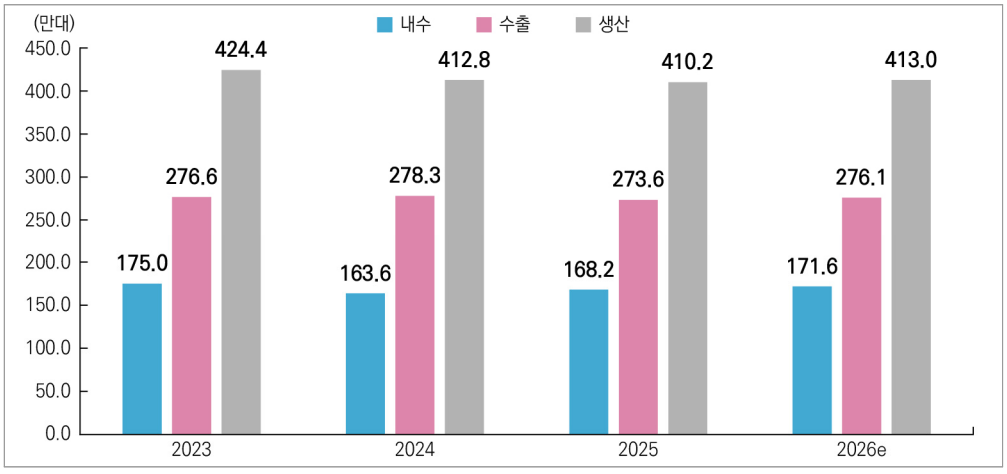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94]한 친환경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중국 내수 시장 경쟁 심화와 공급과잉을 피한 해외진출을 확대하면서 중국산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New Energy Vehicle, NEV)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한 235.5만대(전체 수출대수의 46.2% 수준)를 기록하였다. BYD, Geely 등 중국계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브라질, 헝가리 등에 생산시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2026년 한국의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71.6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276.1만 대, 생산은 0.7% 증가한 413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상반기 내수판매는 부품사 화재[95]의 영향과 하반기의 신차출시에 대한 대기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증,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보조금 개편 이전의 선구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85.1만 대를 기록하였다. 단지, 내수판매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의 판매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2026년 상반기 내수판매 증가는 수입 자동차 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국산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한 65.8만 대가 판매된 반면, 수입 자동차는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BYD 등 수입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하며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19.3만 대가 판매되었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44.1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211만 대를 기록하였다. 2026년 상반기 판매된 자동차 중 57.8%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한 49.1만 대를 기록하였다.[96]

94) 한국의 친환경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95) 2026년 3월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핵심 엔진 밸브 공급망 차질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완성차 생산이 축소되는 영향이 있었다.
9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년 하반기 자동차산업 전망," 2026. 7. 16.

2026년 하반기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86.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 상반기 부품사 화재로 인하여 이연된 수요의 실현, 하반기 주요차종의 신차 출시 등 판매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2026년 상반기 생산차질이 빚어지며 이연된 물량과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 북미 수출 증가세, 중동지역 수출의 점진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과 과잉공급을 피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132만 대(-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은 하반기 국산 자동차의 내수 회복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202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97]

[그림 Ⅲ-15] 국내 자동차 시장 추이



주: e는 추정치를 의미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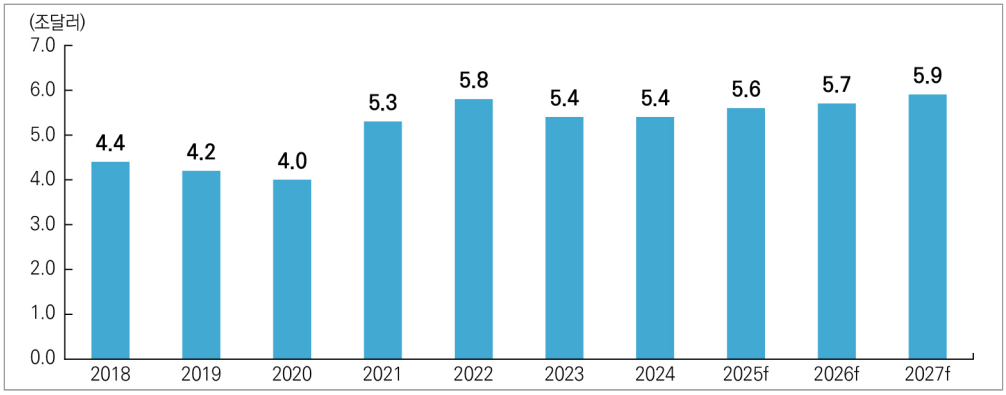
97)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년 하반기 자동차산업 전망," 2026. 7. 16.

다. 화학

- **2026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5.7조 달러로, 전년대비 2.0% 증가할 전망
  - 중국 범용제품의 공급 과잉, 일부 전방산업의 수요 정체, 중동전쟁 등으로 석유화학의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배터리·바이오 및 친환경 화학소재 등 정밀화학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기인
- **2027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5.9조 달러로, 전년대비 3.5% 증가할 전망
  -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용 특수화학 소재, 배터리·바이오 및 친환경 화학소재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다만, 국내 석유화학 생산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범용제품의 국내 수입 증가, 범용 NCC 부문의 사업재편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세계 화학시장 규모(매출 기준)는 2027년 약 5.9조 달러로 전년대비 3.5% 증가할 전망이다.[98] 기초 석유화학은 중국의 생산시설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으로 마진 압박과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반면,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용 특수화학소재, 배터리·바이오 및 친환경 화학소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세계 화학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Ⅲ-16] 세계 화학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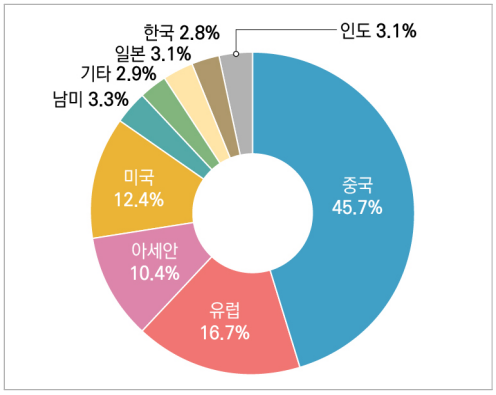
주: 2018~2024년 실적치, 2025~2027년 전망치
자료: CEFIC, Business Research Company

98) 화학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으로 구분된다. 석유화학은 석유제품(나프타 등)이나 천연가스를 열분해하여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유기용매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등을 제조한다. 정밀화학은 이들 원료로 전방산업에 사용될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중국의 화학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기초 유분, 범용 합성수지,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생산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화학제품 생산량은 2024년 세계 화학생산의 45.7%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의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 높은 에너지 가격, 저가 수입재 증가로 생산이 둔화되면서 화학생산이 16.7%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렴한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원가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건설, 가전 등 전방산업의 약세로 인해 화학제품 생산이 2024년 전년대비 1.2%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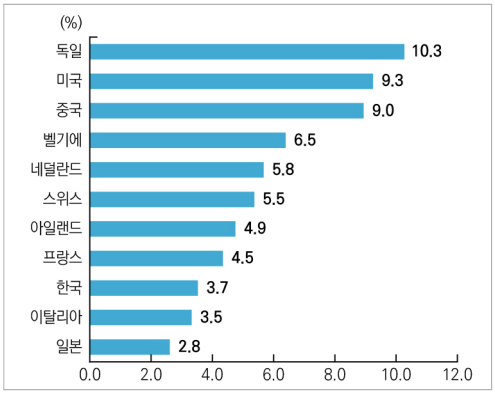
한편, 화학제품의 수출 규모는 2024년 1.7조 달러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024년 기준 0.8조 달러로 가장 높고, 아시아(0.7조 달러), 북미(0.2조 달러), 남미(0.03조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독일이 10.3%로 가장 높고, 미국(9.3%), 중국(9.0%), 벨기에(6.5%), 네덜란드(5.8%) 등의 순이다.[99]

[그림 Ⅲ-17] 세계 화학생산 비중



주: 2024년 기준
자료: CEFIC

[그림 Ⅲ-18] 국가별 화학제품 수출 비중



주: 2024년 기준
자료: Statistia

99) Statista, “Chemical industry worldwide - statistics & facts,” Dec. 2025, 〈https://www.statista.com/topics/6213/chemical-industry-worldwide/#topicOverview, 접속: 2026.9.9〉

국내 화학산업[100]의 생산액은 2024년 기준 약 559조원(광의의 화학산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생산의 26.7%를 차지한다.

이 중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약 114조원(제조업 생산 대비 5.4%)으로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2024년 부가가치는 24조원(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3.2%)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다. 한편,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도 2025년 42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1% 감소하였는데, 주요 수출국은 중국(165억 달러), 인도(31억 달러), 미국(28억 달러), 베트남(26억 달러), 튀르키예(21억달러)의 순이다. 특히 튀르키예 수출이 전년대비 82.5% 증가하였는데, EU의 대러시아 제재 확대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101], 튀르키예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의 증가[102] 등에 기인한다.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118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37억 달러), 일본(26억 달러), 미국(18억 달러), 대만(6억 달러), 독일(5억 달러) 등의 순이다.[103]

석유화학산업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일시적인 단가 상승 및 수익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내수 부진 및 글로벌 공급과잉, 사업재편 등으로 3대부문(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생산은 2026년 7월 누계 1,100만톤(전년동기대비 -6.7%)으로 감소하였다.[104][105] 내수의 경우 국내 경기회복 지연,[106] 전방산업 제품인 플라스틱, 고무 제품 등의 수입대체 등으로 시장이 축소되면서 3대부문의 국내수요는 2026년 7월 누계 480만톤(전년동기대비 -6.8%)으로 감소하였다.[107] 수출의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설비가동률

100) 화학산업은 범위에 따라 광의의 화학산업과 협의의 화학산업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화학산업은 산업분류번호 20번(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광의의 화학산업은 이 외에도 17번(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번(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번(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번(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번(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포함한다.(한국석유화학협회, 「2026 석유화학 편람」 참조)

101) Energy News, "South Korean government orders reorganization and capacity reduction or petrochemical firms," August 20, 2025.

102) Sener, Bahar, 이요섭, 「2025 튀르키예 진출전략」, KOTRA, 2024.

103) 한국석유화학협회, 「2026 석유화학 편람」, 2026.

104)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백만톤): ('23년) 223 → ('24년) 226 → ('25년) 231 → ('26년 p) 237(+2.2%)
3대부문 국내 생산(백만톤) : ('23년) 21.5 → ('24년) 21.1 → ('25년) 19.8 → ('26년 1~7월) 11.0(-6.7%)
중국의 對세계 합성수지 수출(백만톤): ('23년) 20.5 → ('24년) 25.6 → ('25년) 30.6 → ('26년 1~7월) 19.7(+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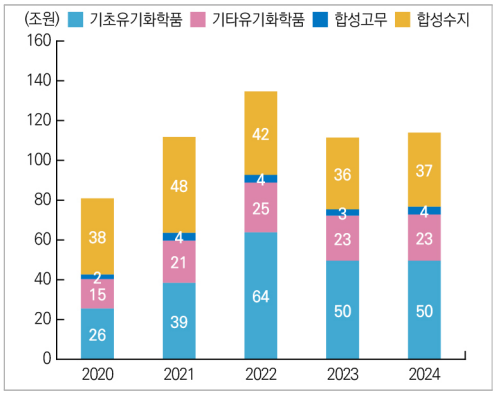
105) 석유화학협회 사업재편 자율협약(2025년 8월)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체질 개선이 단행되고 범용설비가 축소되면서 생산량이 NCC 부문에서 약 110만톤 감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6년 9월 NCC사인 HD현대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의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가 공식 출범하였다.

106) 건설투자(전기대비, %) : ('24년) -2.5→ ('25년) -9.7 → ('26년 1~2Q) -1.5

107) 3대부문 국내 수요(백만톤) : ('23년) 10.1 → ('24년) 9.3 → ('25년) 9.3 → ('26년 1~7월) 4.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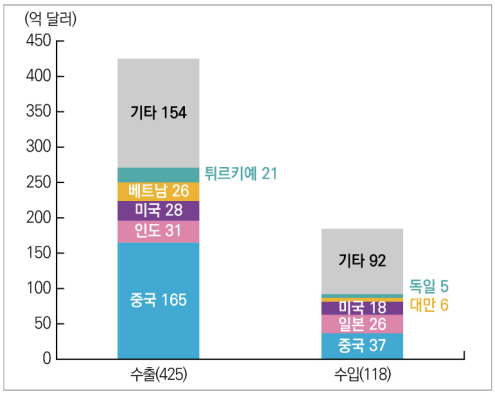
하락으로 수출 물량이 10.1% 감소하였지만, 원료(원유, 나프타) 가격 상승에 연계한 제품 단가는 19.8% 상승하면서 2026년 7월 누계 수출액은 약 2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다. 참고로 석유화학의 채산성 지표인 스프레드(에틸렌-나프타)가 중동전쟁 직후 2026년 3월 톤당 167달러에서 4월에 톤당 345달러로 상승하여 손익분기점(톤당 250달러)을 일시적으로 상회하였다.[108]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상반기 2.6%로 전환되었다.[109] 다만, 이런 상황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중동전쟁의 종전이 지연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산 에틸렌, 합성수지 등 범용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에틸렌 가격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스프레드(에틸렌-나프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동전쟁 종전으로 2027년 유가가 안정되어도[110]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11] 참고로,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5년 약 5,823만톤에서 2030년 7,916만톤으로 35.9%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Ⅲ-19] 석유화학 생산액



주: 2024년 기준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그림 Ⅲ-20] 석유화학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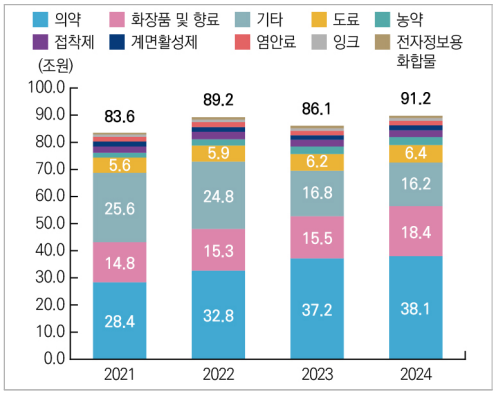
주: 1. ( )는 전체 수출입액을 의미
2. 2025년 기준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108)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달러/톤) : ('26.2월) 90 → (3월) 167 → (4월) 345 → (5월) 209 → (6월) 186 → (7월) 107
109) 한국화학산업협회,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2026.9.9.
110) 유가(달러/배럴): ('25년) 67.7 → ('26년p) 90.8 → ('27년p) 76.7 → ('28년p) 70.3 → ('29년p) 70.1 → ('30년p) 69.8
111)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의 단가 하락은 원유 가격 상승 시 도입된 원료로 인해 영업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되는 기초화학 제품을 공급받아 자동차, 전자, 섬유, 건축, 의료, 농업 등에 필요한 염·안료, 도료·잉크, 계면활성제, 접착제, 첨가제, 의약, 화장품·향료, 농약 등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밀화학의 생산은 2024년 91.2조원으로 제조업 생산 대비 4.4%를 차지한다. 정밀화학산업 생산은 2020년 이후 연평균 6.5%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도 제조업 대비 6.3%(47.3조원)로 석유화학산업(3.2%)을 상회하고 있다. 업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의약이 38.1조원(41.8%), 화장품 및 향료 18.4조원(20.1%), 도료 6.4조원(7.0%)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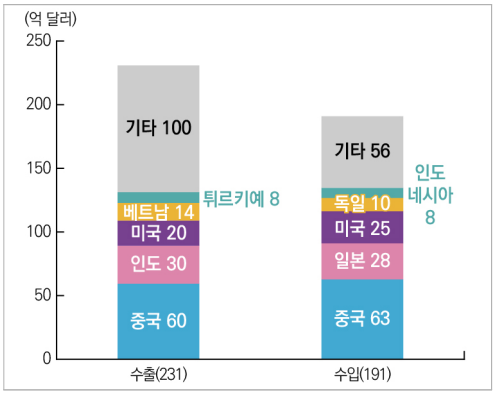
정밀화학산업[112]의 수출은 2025년 231억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비누치약 및 화장품으로 115억 달러(정밀화학 제품 수출 대비 49.7%)이며, 이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도 정밀화학원료(56억 달러, 24.3%), 염료 및 안료 도료(14억 달러, 6.0%) 등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60억 달러(전체 수출액 대비 25.8%), 인도 30억 달러(12.9%), 미국 20억 달러(8.6%), 베트남 14억 달러(6.0%), 튀르키예 8억 달러(3.6%)의 순이다. 정밀화학 수입은 2025년 191억 달러로 전년(220억 달러) 대비 15.2%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63억달러, 전체 수입액 대비 32.9%), 일본(28억 달러, 14.8%), 미국(25억 달러, 13.2%), 독일(10억 달러, 5.5%), 인도네시아(8억 달러, 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 정밀화학 생산액



주: 2024년 기준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그림 Ⅲ-22] 정밀화학 수출입



주: 1. ( )는 전체 수출입액을 의미
2. 2025년 기준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112) MTI(22)를 기준으로 집계

라. 철강[113]

- **2026년 세계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치나, 2027년에는 2.2% 증가하며 회복세 확대 전망
  -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는 반면, 인도와 미국·유럽 등에서 수요 증가
  - 글로벌 공급과잉 확대와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로 철강산업의 가격·수익성 회복은 제한
- **2026년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나, 2027년에는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완만한 개선 전망
  - 건설경기 부진으로 2026년 내수 회복은 제한되나 생산조정과 수출 개선이 이를 보완하고, 2027년에는 세계 수요 확대와 국내 인프라 투자로 완만한 회복 예상
  -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EU의 통상·탄소규제 강화로 회복폭은 제한될 전망

2026년 세계 철강 수요[114]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17억 2,400만 톤으로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는 2025년 10월 전망에서 2026년 세계 철강 수요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6년 4월 전망[115]에서는 이를 0.3%로 1.0%p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2027년에는 세계 철강 수요가 17억 6,200만 톤으로 2.2%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77)

113) 철강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용어	의미	비고
철강 수요 (steel demand)	• 최종 수요산업(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에 실제 투입되는 철강재의 소비량	수요 지표
철강 생산 (steel production)	• 일정 기간 동안 제철소에서 실제 생산한 철강량	공급 지표
조강 생산능력 (steelmaking capacity)	• 제철소가 보유한 설비로 연간 생산 가능한 최대 조강량 • 실제 조강 생산량보다 일반적으로 큰 수준	구조적 공급 지표
초과 생산능력 (steel excess capacity)	• 조강 생산능력 – 실제 수요(수요대비 남는 설비능력)	공급과잉 지표 (가격·수익성과 밀접)

114) 세계 철강시장 전망은 World Steel Association의 「Short Range Outlook」(2026.4.)과 OECD의 「OECD Steel Outlook 2026」(2026.6.4.)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15) World Steel Association, 「Short Range Outlook」, 2026.4.

지역별로는 중국과 여타 국가 간 차별화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시장 조정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2026년 철강 수요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고, 2027년에는 부동산시장 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도는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자본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6년 7.4%, 2027년 9.2% 증가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도 기술·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각각 1.7%, 2.0%, EU·영국은 인프라·국방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1.3%, 3.0%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표 Ⅲ-5] 세계 철강 수요 전망

지역	2025년		2026년f		2027년f	
	물량(mmt)	증감률(%)	물량(mmt)	증감률(%)	물량(mmt)	증감률(%)
전세계	1,718.2	-1.9	1,724.1	0.3	1,762.0	2.2
중국	796.0	-7.1	784.1	-1.5	784.1	0.0
인도	159.8	8.0	171.6	7.4	187.4	9.2
EU·영국	144.9	3.8	146.7	1.3	151.2	3.0
미국	90.9	2.0	92.4	1.7	94.3	2.0
한국	43.6	-8.8	43.7	0.3	44.2	1.1

주: 완제 철강제품(finished steel products) 기준, f는 전망치.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Short Range Outlook」, 2026.4.

수요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은 지속될 전망이다. OECD[116]에 따르면 세계 조강 생산능력은 2025년 24억 4,500만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117] 2028년까지 최대 약 1억 3,900만톤의 신규 생산능력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철강 과잉설비는 2025년 6억 4,000만톤에서 2028년 7억 4,500만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6] 세계 철강 생산능력 및 과잉설비 전망

구분	2025년	2028년 전망
세계 조강 생산능력	24.45억톤	24.92~25.84억톤
과잉설비	6.40억톤	7.45억톤
설비가동률	약 76%	74% 이하

자료: OECD, 「OECD Steel Outlook 2026」, 2026.6.4.

116) OECD, 「OECD Steel Outlook 2026」, 2026.6.4.
117)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의 단기전망(SRO)에서 철강 수요는 완제 철강제품(finished steel products) 기준인 반면, OECD의 생산능력 및 과잉설비는 조강(crude steel) 기준이므로 수치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내수 부진과 높은 생산능력이 글로벌 철강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25년에도 11억톤을 상회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최대 3,860만 톤의 신규 설비가 계획되어 있다. 중국뿐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및 중동에서도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어 2027년 세계 철강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국제 철강가격과 기업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및 수입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와 EU의 수입쿼터 축소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118] 시행은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BOX 12 참조).

2026년 국내 철강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내수 회복이 제한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은 연초 예상보다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5월 발표한 하반기 전망[119]에서 철강재[120] 내수를 전년대비 0.4% 감소한 4,341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생산은 6,336만 톤으로 0.2%, 수출은 2,836만 톤으로 0.4%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2025년 말 생산과 수출 감소를 예상했던 전망과 비교하면 업황에 대한 판단이 다소 개선된 것이다.

[표 Ⅲ-7] 2026년 국내 철강재 수급 전망

구분	2026년 전망	전년대비 증감률	주요 전망 요인
생산	6,335.6만 톤	0.20%	신규 설비 가동, 생산 감소세 진정
내수	4,341.3만 톤	-0.40%	건설 부진, 범용 봉형강·판재 수요 약세
수출	2,835.6만 톤	0.40%	일부 지역·품목 수출 회복
수입	841.3만 톤	-2.50%	내수 부진, 무역규제 강화
수출액	305.5억 달러	0.90%	하반기 가격·물량 일부 개선

주: 철강재 기준으로 조강(crude steel) 생산량과는 통계 범위가 다름
자료: 산업연구원(KIET),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13대 주력산업편」, 2026.5.26.

11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대해 EU 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이 적용 대상이다.
119) 산업연구원(KIET),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13대 주력산업편」, 2026.5.26.
120) 철강재는 조강(crude steel)을 압연·가공하여 생산한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 등 최종·중간 철강제품을 의미한다.

국내 철강 내수는 2025년에 이어 4,000만 톤 초반에 머물면서 과거 5,000만 톤 수준으로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근·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가 약한 가운데, 자동차와 일부 AI·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요가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자동차 생산이 1.3% 증가하는 반면 일반기계는 0.9%, 조선은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방산업별 철강 수요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세계철강협회 집계 기준으로 2026년 1~7월 한국의 조강생산은 3,74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고, 7월에는 570만 톤으로 6.4% 증가하였다. 이는 2024~2025년의 생산 감소 이후 낮은 기저와 생산조정 진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출도 상반기 부진에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철강 수출액은 21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EU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로 대EU 수출 여건은 악화되었으나, 미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 등에 따른 판재류 수요가 일부 보완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2026년 국내 철강산업은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겠으나, 생산조정 진전과 일부 수출시장 및 인프라 관련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은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 및 신흥국의 생산능력 확대와 미국·EU의 수입규제, CBAM에 따른 탄소비용 부담 등은 업황과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2027년 국내 철강산업은 건설투자 감소세 완화와 주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다.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의 투자가 철강 수요를 뒷받침하고, 대외 수요여건 개선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탄소규제가 지속되면서 회복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BOX 12] 미국·EU의 철강 통상규제 강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및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중심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EU는 2026년 7월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EU의 철강 관련 통상규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조치	성격
미국	Section 232에 따른 철강 관세 강화	관세를 통한 수입규제
EU	연간 무관세 쿼터 1,830만톤, 초과분 50% 관세	수입쿼터·관세를 통한 수입규제
EU CBAM	수입 철강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부담	탄소비용 부과를 통한 환경·통상규제

자료: The White House; European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국은 2025년 6월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추가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다. 이후 2026년 4월 관세 부과방식을 개편하여 철강 함량가치가 아닌 제품 전체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철강으로 구성된 주요 품목에는 50%, 일부 파생상품에는 25% 등의 추가관세를 적용하였다. 다만 2026년 6월에는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2027년 말까지 15%로 한시 인하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규제를 시행하였다. EU 전체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는 1,834만 5,922톤으로 2024년 대비 약 47% 축소되었으며,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철강의 최초 용해·주조 국가를 확인하는 'melt and pour' 추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증빙 의무는 2026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역외 철강 수출국의 EU 시장 접근여건이 이전

보다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철강은 주요 적용 대상품목으로, EU 수입자는 수입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부담하게 된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계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최초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은 2027년에 이루어진다. CBAM은 관세나 쿼터처럼 수입물량을 직접 제한하지 않지만,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제품에 추가적인 수출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2025.6.3.;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6.4.2.; 「Further Adjusting the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6.6.1.; European Commission, 「EU Steel Regulation」, 2026;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Definitive Regime」, 2026.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4.1%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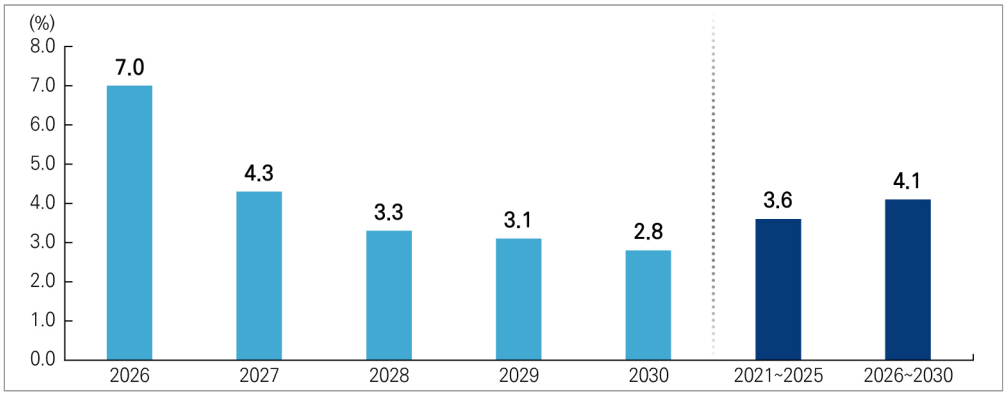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7.0	4.3	3.3	3.1	2.8	3.6	4.1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성장률(3.6%)에 비해 0.5%p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제조업이 7.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AI 관련 투자 확대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세계교역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제조업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가 지속되면서 향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Ⅲ-23] 중기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절 서비스업

1. 2027년 전망

▪ **2027년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4%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7	3.3	1.9	2.6	2.2	2.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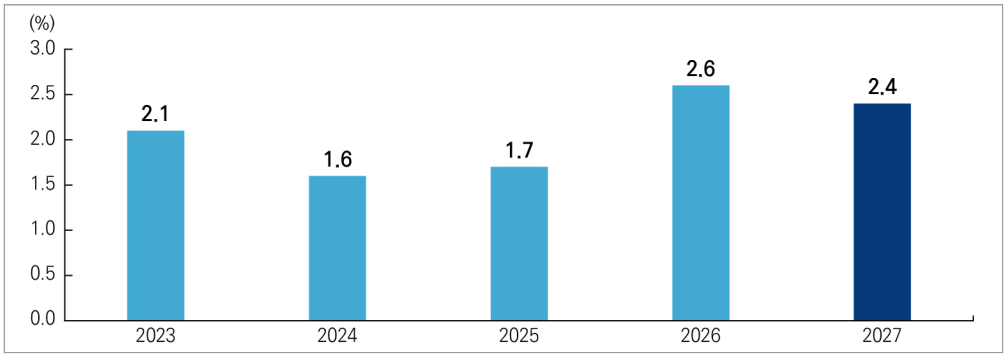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주요 제조업의 설비 및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기계장비 및 관련 서비스업 수요 증가	• 대출잔액 증가 및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지속
•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	• 전년도 주식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

2027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2%p 감소한 2.4%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26년 2.6%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대출잔액 증가 및 고금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지속 등에 기인하며, 상반기 2.2%, 하반기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24]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감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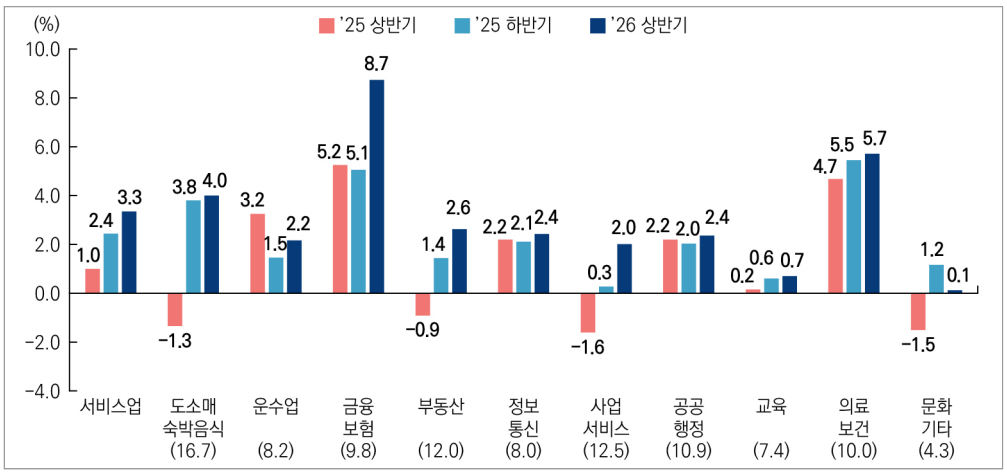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2026년 상반기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6년 상반기 3.3%로 전년도에 비해 2.3%p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상반기 1.0%의 낮은 성장률과 일부 업종의 가파른 성장에 기인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8.7%), 의료보건업(5.7%),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4.0%)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화기타업(0.1%), 교육업(0.7%), 사업서비스업(2.0%), 정보통신서비스업(2.4%), 부동산업(2.6%) 등이 평균(3.3%)을 하회하였다.

[그림 Ⅲ-25] 서비스업의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주: ( )는 2025년 서비스업 내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보험업의 경우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급증,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주주환원 강화 등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으로 국내 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의료보건업의 경우 고령자 증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이연되었던 의료 수요가 회복된 데 주로 기인한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년도 상반기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1.3%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제조용 전기장비의 수요 확대,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종료에 따른 친환경차 판매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추세는 2026년 하반기와 2027년에도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망치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요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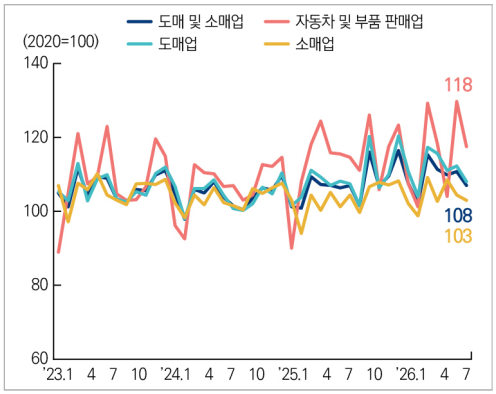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의 상방요인은 주요 제조업의 생산 및 설비투자, 친환경차의 수요 증가세 지속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사회 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요 제조업의 설비 및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B2B 거래의 증가로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업의 경우 주요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지속되면서 기계장비 관련 도매업 생산지수가 2024년 하반기부터 우상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설비 투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정밀 측정기기, 진공펌프 등 관련 산업용 기계·설비의 공급 및 유통(도매)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제조업 전반에서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자동화(FA) 설비, 협동로봇, 자동화 물류장비(AGV[121]/AMR[122])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용 공구, 구동장치(모터·감속기), 자동 제어기기 도매업체의 출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신설과 국내외 전력망 신설·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공장 증설로 인해 변압기, 차단기, 전력변환장치 등 중전기 및 전기·기계 장비 도매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의 생산지수가 2026년 7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하였다. 이는 2026년 3월 부품사 화재 영향과 하반기 신차 대기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증가, 가격경쟁력을 지닌 전기차 수요 확대,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2026년 상반기 49.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내수판매의 57.8%를 차지한다.[123] 정부는 2027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전년대비 32.8%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202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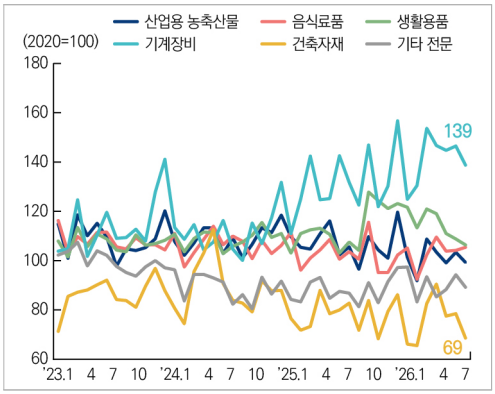
121) AGV(Automated Guided Vehicle)는 무인운반차로, 바닥에 부착된 자기 테이프, 와이어, QR코드 등 지정된 경로로 이동한다.
122) AMR(Autonomous Mobile Robot)는 자율 이동 로봇으로, 라이다(LiDAR)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스스로 공간의 지도를 만들고 주행한다.
123) 차종별로는 전기차가 19.9만대(전년동기대비 113.6%), HEV가 29.0만대(-0.9%), FCEV가 0.3만대(146.5%) 판매되었다.

[그림 Ⅲ-26] 도소매업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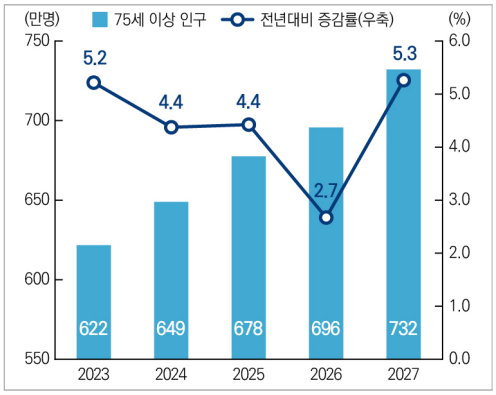
[그림 Ⅲ-27] 업종별 도매업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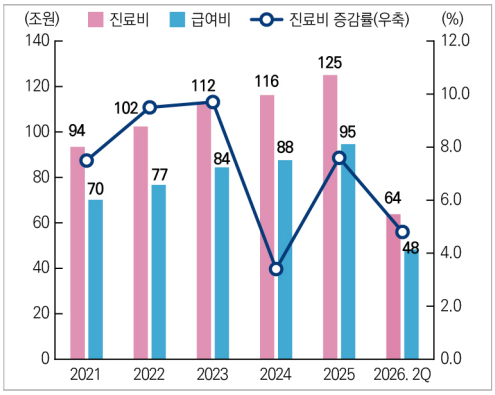
둘째, 인구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는 2026년 말 696만명(중위 기준)으로 전년대비 2.7%씩 증가에 그쳤으나 2027년에는 732만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2021년 약 94조원에서 2025년 125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다만, 2026년 2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로 다소 둔화되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평균 의료수가를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1.65%로 책정하였다.[124]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확대에 따른 진료비 상승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8] 75세 이상 인구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그림 Ⅲ-29]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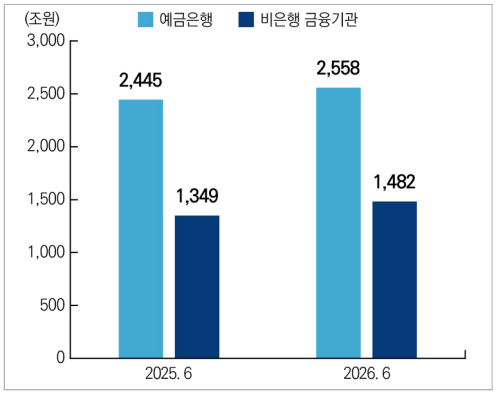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24) 의료수가 평균증가율(전년대비, %): ('23년) 1.98 → ('24년) 1.98 → ('25년) 1.96 → ('26년) 1.93 → ('27년) 1.65

하방요인으로 대출잔액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전년도 주식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 감소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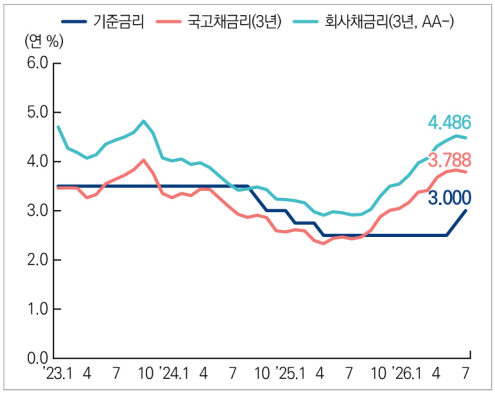
첫째, 대출잔액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6월 기준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잔액은 4,04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247조원) 증가하였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1,48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1.9%)과 2025년(4.5%)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산운용회사(80조원, 전년대비 39.4%)와 신탁회사(20조원, 전년대비 42.9%)를 중심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가계신용도 2026년 6월 2,02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0조원)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재정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증가 및 수급 부담, 금리인상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물량 증가로 국고채(3년물)와 회사채(3년물, AA-)가 2025년 5월을 저점으로 2026년 8월 3.788%, 4.486%로 상승하였다. 최근 금융당국도 중동발 유가 상승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3.0%로 인상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2026년 하반기에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서비스업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25]

[그림 Ⅲ-30] 대출잔액 현황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Ⅲ-31]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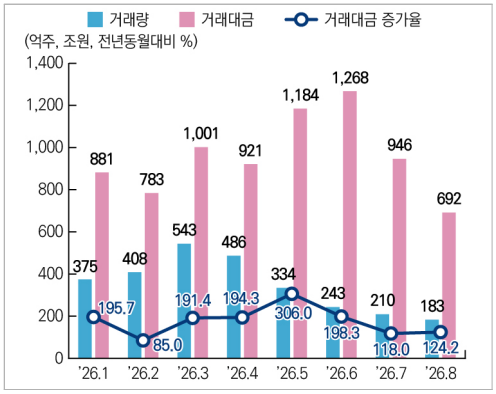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25) 2025년 하반기 서비스업 성장률은 확장적 재정활동으로 상반기(1.0%)에 비해 다소 높은 2.4%를 기록하였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2027년 시장금리는 2026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고채(3년물)와 회사채(3년물, AA-) 금리는 2027년 각각 3.5%, 4.0%로 전년대비 0.1%p, 0.3%p 하락할 전망이다.

둘째, 전년도 주식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 감소를 들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주주가치 환원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주식거래 대금과 자산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식거래대금은 2026년 6월 누계 6,03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8.3% 늘었고,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 계약고) 규모도 2,30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26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세,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가계부채와 환율 불안 등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였다. 이는 차익실현과 중동지역의 갈등 재고조 등과 더불어 주식거래대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주식거래대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보험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2] 주식거래대금 추이



주: 주가는 평균치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Ⅲ-33] 코스피와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2.4%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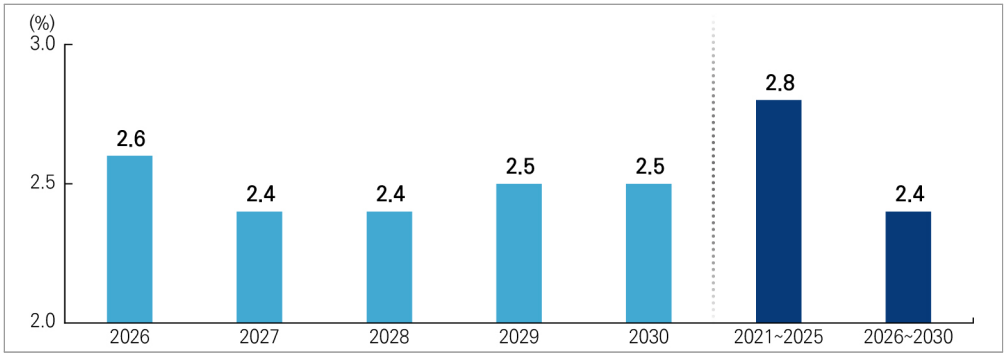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2.6	2.4	2.4	2.5	2.5	2.8	2.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2.4% 증가하며, 지난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상승률(2.8%)을 0.4%p 하회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비성향 제약[126]과 산업별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확대 등에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 2026~2030년 금리가 연평균 3.04%로 과거 5년(2.77%)에 비해 0.27%p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공장 증설,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 설비투자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인프라 개발 투자는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6~2030년 동안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4%, 3.8%로 경제성장률 2.7%를 상회하면서 하방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4] 중기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126)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50~60대의 소비성향이 둔화되고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루·이승희,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25.4.)

제3절 건설업

1. 2027년 전망

▪ **2027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9.2	-3.8	3.5	0.0	1.5	0.8	1.1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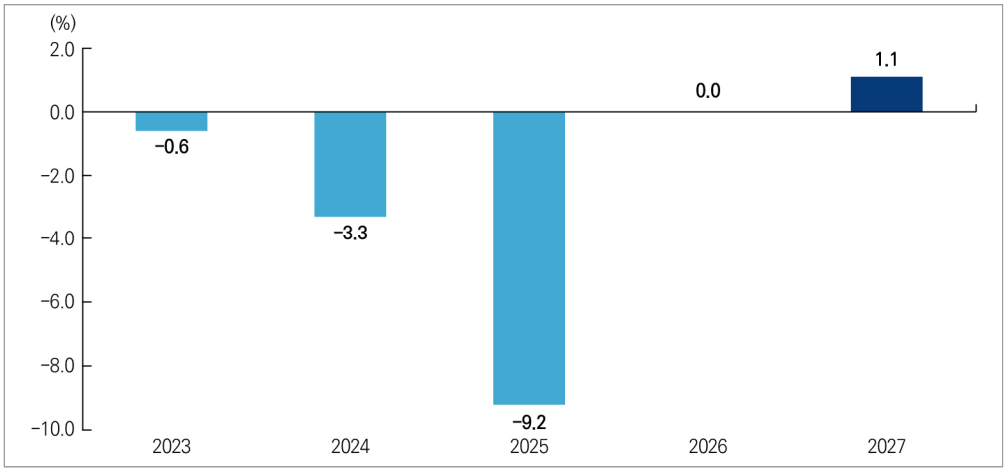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차세대 산업 기반시설 투자 확대	•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착공 지연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	• 높은 수준의 건설비용

2027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성, 건설비용의 증가 등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차세대 산업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주택공급 확대 계획 등에 힘입어 건설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상반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하반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상반기의 부진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상반기에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건설수주, 공공과 토목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그림 Ⅲ-35]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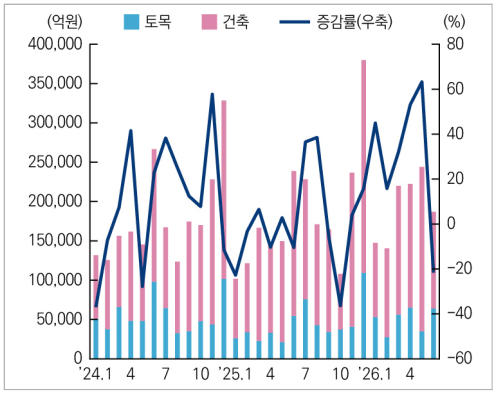
2026년 9월 1일 의결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7년 SOC 예산은 전년도(27.7조 원)보다 4.0% 증가한 28.9조 원이 책정되었다. SOC 예산을 통하여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서비스 실시를 위한 예산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지역의 철도, 도로망 준공 예산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또한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SOC 토목 건설 사업 중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같이 진척 상황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어 예산이 삭감되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127]에 더하여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128]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중이 큰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착공 물량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주택공급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금액을 26조 3,000억원에서 47조 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129] 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127)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 9. 7.
128)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 8. 13.
129)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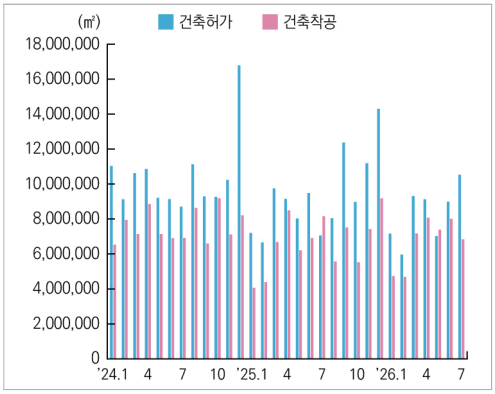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건설수주는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25.8% 증가하였다. 2026년 하반기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연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수주에서 착공, 기성으로 이어지는 시차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000호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약 3만 호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수주에서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36] 건설수주액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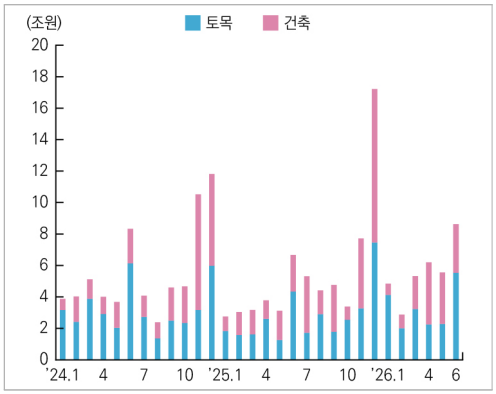
[그림 Ⅲ-37] 건축허가 대비 건축착공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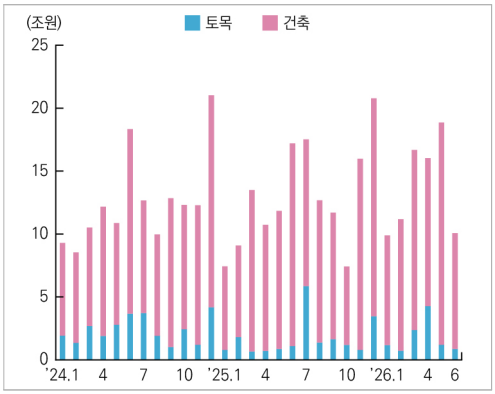
공공부문의 건설수주는 2026년 들어 토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 중 토목의 비중은 58.2%에 이르고 있다. 2026년 6월 공공부문 건설수주의 회복 또한 토목의 전월대비 증가세에 의지한 것이다. 반면 민간부문의 건설수주는 압도적으로 건축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민간부문 건설수주액 중 건축의 비중은 87.1%이다. 2026년 6월 건축이 전월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민간부문의 건설수주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Ⅲ-38] 공공 공종별 건설수주액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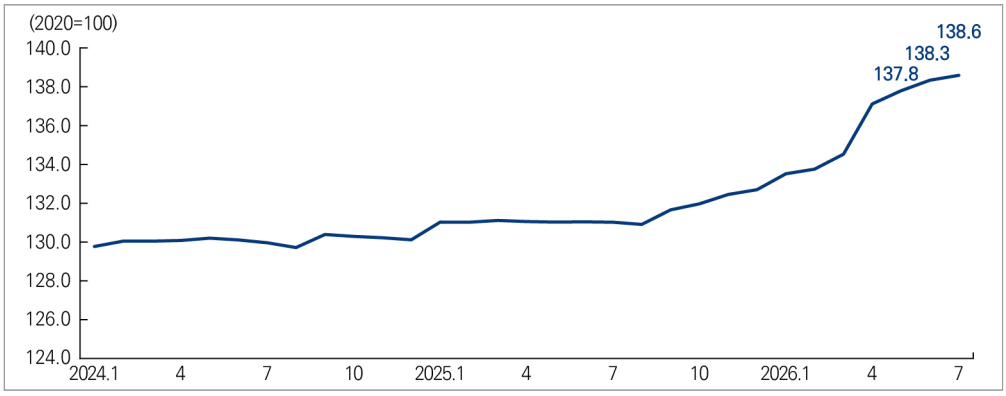
[그림 Ⅲ-39] 민간 공종별 건설수주액



자료: 국가데이터처

높은 수준의 건축비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건설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건설공사비지수[130]는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2025년 8월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6년 3월의 134.5에서 4월의 137.1로 급증한 후 2026년 7월까지 138.6(잠정)[131]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목건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달의 144.2에서 144.0으로 안정되는 추세이나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는 지난달의 136.0에서 136.5로 증가하였다.

[그림 Ⅲ-40] 건설공사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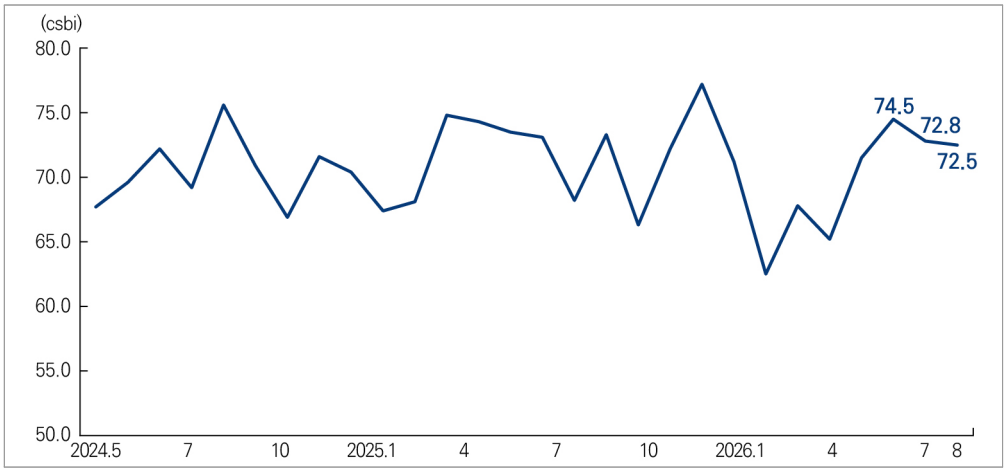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130)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작성된 가공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131) 건설공사비지수는 5월 137.8, 6월 138.3, 7월 138.6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건설업의 종합실적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132]는 2026년 8월 72.5로 전망되며 이는 6월의 74.5, 7월의 72.8 대비 감소한 것이다. 최근 CBSI의 움직임은 건설기업들은 건설경기의 회복세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41] 종합실적지수 추이



주: 2024년 5월에 지수 개편, 2026년 8월 수치는 전망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2) 종합실적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는 경기실사지수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건설기업들이 체감한 경기수준을 나타낸다.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건설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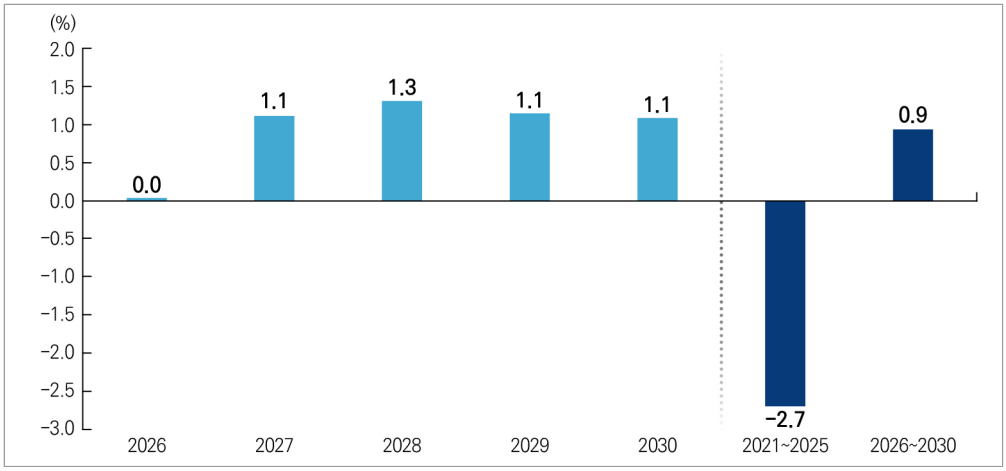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0.0	1.1	1.3	1.1	1.1	-2.7	0.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는 평균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의 평균 상승률 -2.7%보다 3.6%p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2025년에 전년대비 9.2% 감소하며 건설 경기의 최저점을 지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7년 SOC 예산은 28조 9,000억으로 전년대비 4.0% 가량 증가하며 차세대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와 PF 대출 문제의 안정화 등의 계획 또한 SOC 예산과 더불어 일정대로 집행된다면 건설업 경기에 일정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42] 중기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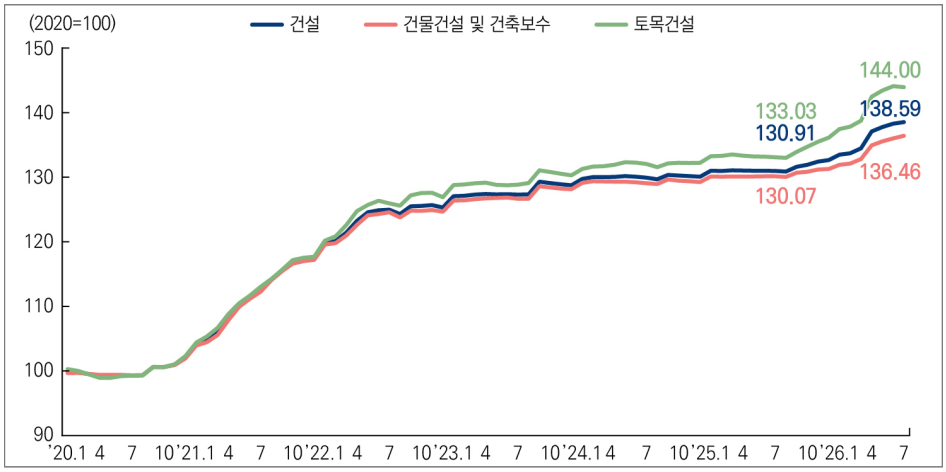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13]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원인

2026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건설투자는 1.5%, 건설업 부가가치는 3.8% 각각 감소하였다. 이러한 건설업 부진은 202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건설공사비의 지속적 상승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건설공사비의 상승은 분양가 상승, 사업 지연 및 중단, 건설사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연쇄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최근 건설공사비의 증가는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원인과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철근값 급등,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전쟁과 시멘트 공급 대란,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6년 3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라 건설자재비가 상승한데 기인한다. 2025년 8월(130.91)부터 2026년 7월(138.59)까지 최근 1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5.9%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건물공사비지수(130.07→136.46)는 4.9%, 토목공사비지수(133.03→144.00)는 8.2% 상승하였다.

[건설공사비지수 추이]



자료: 한국건설기술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건설공사비지수」.

아파트 건설비는 2020년 1m²당 150만 4천원에서 2025년 192만 7천원으로 28.2% 증가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단가표가 시공사 요구액 대비 약 20% 정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3.3m²당 아파트 공사비는 2020년 595만 5천원에서 2025년 약 763만 2천원으로 167만 7천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산출된다.

[건물신축단가표]

(단위: 원/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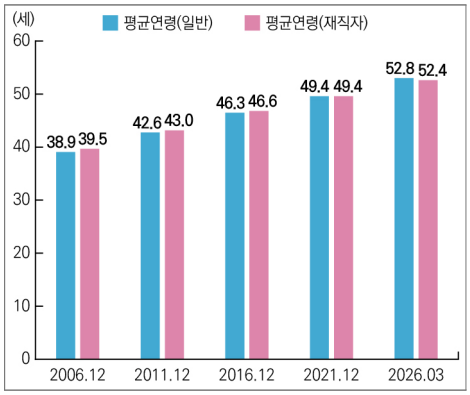
	2020	2025	증가율
다가구 주택	1,606,930	2,079,879	29.4
아파트	1,503,878	1,927,375	28.2
연립주택	1,829,834	2,329,450	27.3
오피스텔	1,597,091	1,945,741	21.8
근린생활시설	1,517,854	1,920,997	26.6
공장	832,375	1,053,375	26.6

주: 2020년은 2021년 적용, 2025년은 2026년 적용 단가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각 연도.

건설공사비가 최근 다시 급등한 것은 건설 현장의 인력 및 생산성 문제, 주거 품질 요구 수준 향상, 재건축·재개발의 특수성 등에 기인한다. 우선 건설 현장에서 공사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생산성 저하를 유발해 예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동일한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 교육 및 점검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점도 한 원인이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제로에너지 설비, 가변형 평면 설계, 지하 주차장 공간 확대 등 입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고급 사양 도입이 공사비 상승을 견인하였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도심지 공사의 어려움과 더불어, 지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처리, 고급 브랜드 요구 추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초고층 설계나 커뮤니티 고급화 경쟁이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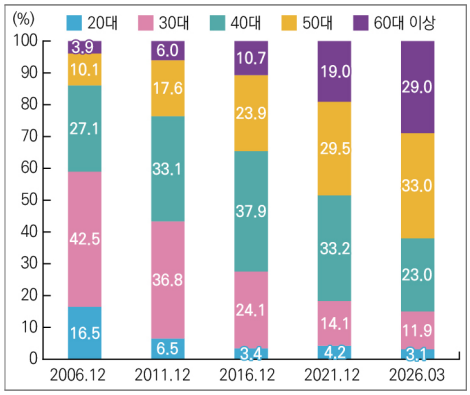
133) 이경태, "공사 기간 및 비용 중심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시사점," 2026. 4.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 변화]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 연령 비중 변화]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복지 요건이 강화되며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과 같은 법정·제도적 비용 증가 또한 전체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간접비 항목 요율 변화]

항목	적용기준	2023	2024	2025	2026
산재보험료	노무비 +외주비×30%	3.267%	3.223%	3.500%	3.700%
고용보험료	노무비 +외주비×30%	1.752%	1.750%	1.800%	1.800%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	2.30%	2.53%	2.53%	3.40%

주1: 적용 노무비율은 2026년 3월 신고분(2025년 귀속 및 2026년 개산)부터 기존의 30%에서 29%로 하향 조정
2: 퇴직공제부금은 직접노무비 기준(하한 설정)
자료: 이경태, "공사 기간 및 비용 중심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시사점," 2026. 4.

Ⅳ

소득전망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2027년 및 중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1절 2027년 전망

1. 국민총소득

2027년 국민총소득은 7.1%로, 지난 전망(2025년 9월) 대비 3.3%p 상향 조정되었다. AI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생산 증가와 수출가격 상승으로 명목 GDP 증가율 전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대외자산 축적에 따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GNI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용자보수는 지난 전망(4.1%) 대비 2.8%p 상향된 6.9% 증가로 전망된다. 지난 전망 이후 나타난 반도체 부문의 전례 없는 고실적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액의 특별급여 지급 가능성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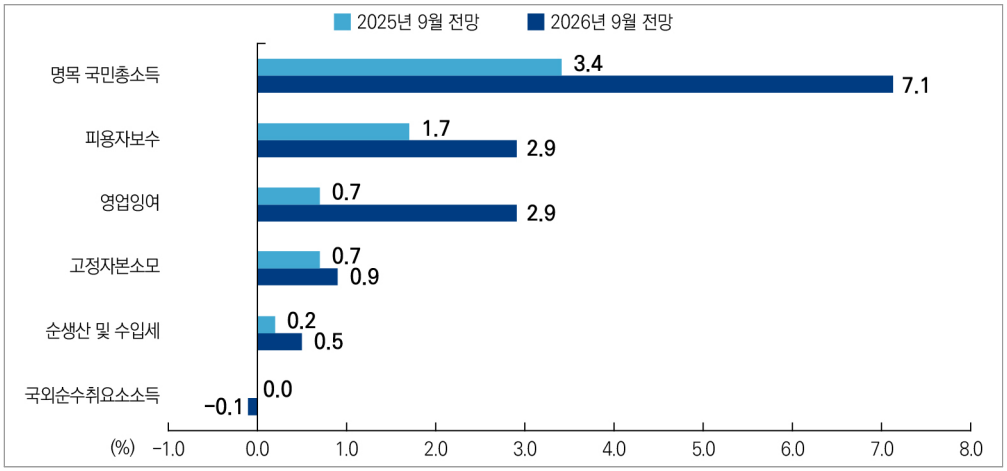
영업잉여는 지난 전망(4.0%) 대비 5.4%p 상향된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전망 이후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와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영업잉여 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전망(3.6%)보다 1.3%p 상향된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감가상각률이 높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자본스톡에서 지식재산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GDP 및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수정 전망되었다.

2027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6년 1~7월 생산 및 수입세 관련 주요 6종 국세수입의 누계는 96.7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81.2조원에서 19.1% 증가하였다. 아울러 2027년 명목 GDP와 총수입이 지난 전망의 3.9%, 2.8%에서 각각 7.3%, 5.5%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였다.

인구전략분석과(psad@assembly.go.kr, 6788-4749)

[그림 Ⅳ-1] 2027년 국내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 고용 및 임금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전망(11.4만명) 대비 6.6만명 상향된 18.0만명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지난 전망의 전제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 정부의 2027년 노인일자리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다. 취업자 수 전망의 상향 조정에 따라 실업률은 2.9%로 지난 전망(3.0%)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지난 전망(3.2%) 대비 3.3%p 상향된 6.5%로 전망하였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대규모 특별급여 지급의 영향과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 수요 증가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제2절 중기 전망

1. 국민총소득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률의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8.4%로 지난 전망(2025.9월)의 2025~2029년 연평균 3.7%보다 높아졌다. 이는 2026년의 높은 증가율이 포함된 영향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중기 업황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출 호조가 당초 예상보다 지속됨에 따라 명목 GNI와 GDP 전망경로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데 기인한다.

피용자보수의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5.2%로 지난 전망의 5년(2025~2029) 평균인 4.2% 대비 1.0%p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지난 전망에 고려하지 않은 반도체 부문 특별급여의 영향이 이번 전망에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 다만 2028년부터는 반도체 부문 특별급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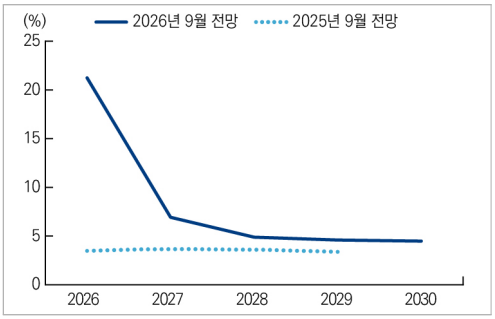
영업잉여의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전망(2025~2029년) 대비 14.8%p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지난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던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에는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점자 완만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고정자본소모의 중기전망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전망(2025~2029년)의 연평균 4.2% 증가율보다 1.0%p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에는 명목 GDP 중기 전망 상향 조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의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6.4%로 지난 전망대비 3.6%p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명목 GDP의 중기 전망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2026년 세수 실적 개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이 7%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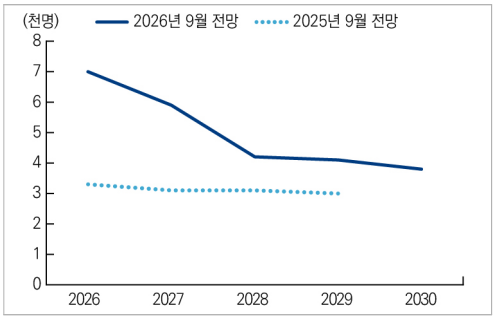
인구전략분석과(psad@assembly.go.kr, 6788-4749)

[그림 Ⅳ-2] 국민총소득 전망 비교 – 5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Ⅳ-3]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전망 비교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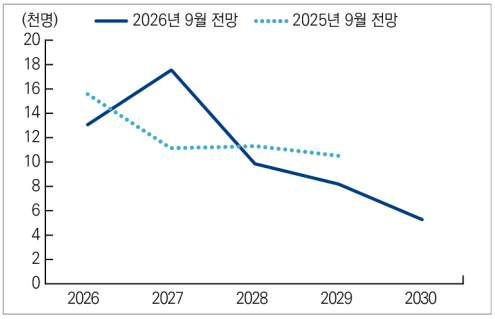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고용 및 임금

2026~2030년 기간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평균 11.1만명, 증가율은 연평균 0.4%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전망의 5년(2025~2029) 평균인 13.5만명, 0.5% 대비 2.5만명, 0.1%p 하락한 수치다. 지난 전망과 시계가 겹치는 4개년(2026~2029) 중 2027년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향조정되었다. 여기에는 총고용에 대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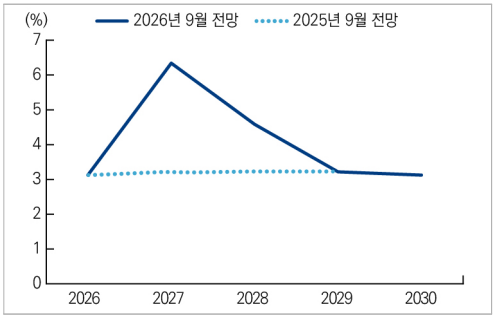
2026~2030년 기간 중 명목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2%로 전망되며 지난 전망 대비 0.9%p 상향 조정되었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특별급여 효과가 상당부분 이어지다가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고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Ⅳ-4] 취업자 증감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Ⅳ-5] 임금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장 2027년 및 중기전망

제1절 국민총소득

1. 2027년 전망

▪ **2027년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전년대비 7.1%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4.4	21.8	21.7	21.8	9.5	4.9	7.1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반도체 가격 호조 및 수출 증가 지속	•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 대외자산 축적 및 해외투자수익 증가	

2027년 명목 국민총소득(이하 'GNI')은 전년대비 7.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AI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GNI가 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이러한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완화되면서 증가율은 낮아지겠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국내 생산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GNI는 국내 생산활동에 따른 소득(국내총소득, 이하 'GDI')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소득인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합하여 산출하는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134] 최근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대외자산 축적은 해외투자소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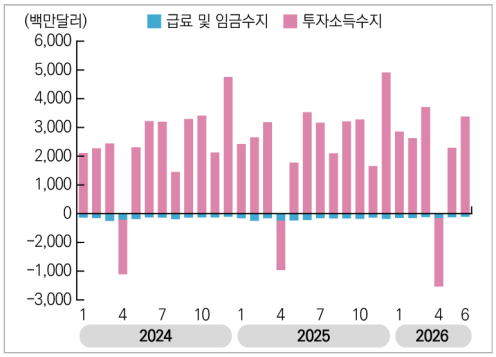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34)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지출부문의 본원소득수지 전망(본고 II장 교역부문 참고)과 국회예산정책처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소득 지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요인과 함께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화표시 수취소득의 원화 환산액 감소가 반영되면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년대비 4.0%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수출 증가로인한 경상수지 증가가 확대되고 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해외투자수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GNI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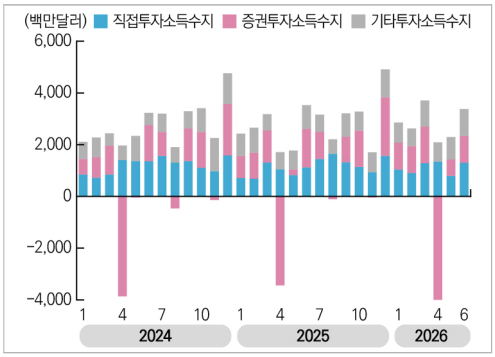
최근 본원소득수지에서 근로소득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회하고 있으며, 투자형태별로는 직접투자 및 기타투자소득이 대체로 순수취를 나타내는 가운데 증권투자소득은 배당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6] 본원소득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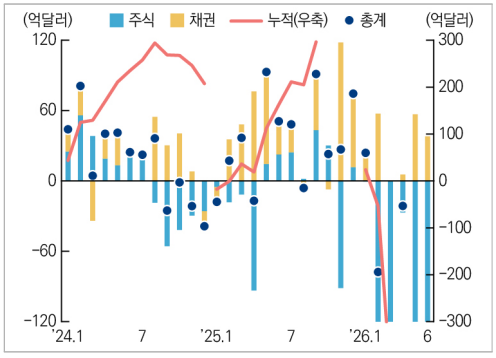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7] 투자형태별 국외투자소득 순수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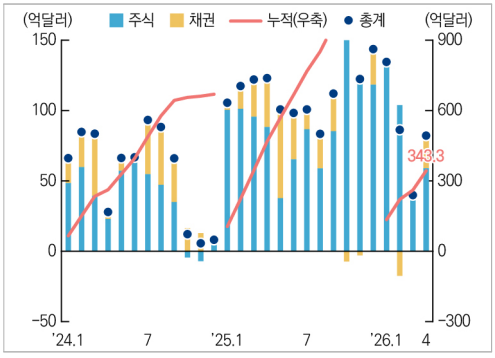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8] 외국인 국내 투자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9] 거주자 해외투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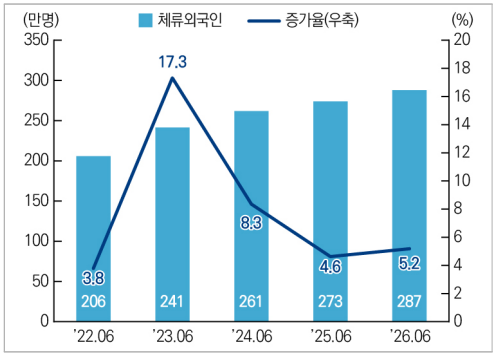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내부 환율전망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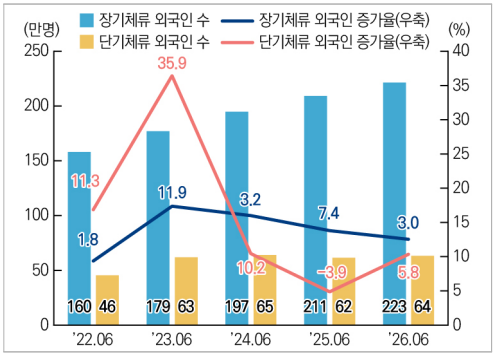
한편 체류 외국인과 취업자격 체류인력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국내 노동공급과 생산활동을 확대하는 요인인 동시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을 통해 2008년부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에 차감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135] 2026년 6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약 28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취업자격별로도 전문인력은 11.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한 반면, 단순기능인력은 49.2만명으로 4.8% 감소하였다. 이러한 체류구조 변화는 외국인 인력 증가가 국외 근로소득 지급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는 효과를 일부 제약할 수 있다.

[그림 Ⅳ-10] 체류 외국인 수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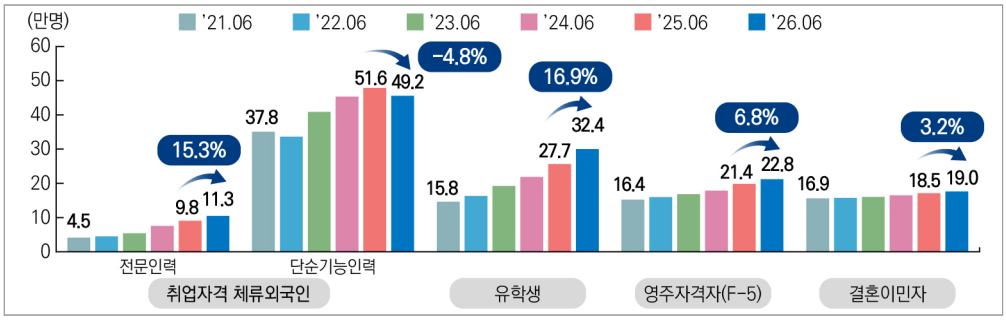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그림 Ⅳ-11] 장단기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 법무부

[그림 Ⅳ-12] 체류 자격별 현황



자료: 법무부

135) 국제수지에서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성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며,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 외국인 취업자가 늘더라도 이들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서 국외 근로소득 지급은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제한될 수 있다.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연평균 8.4% 성장 예상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국민총소득(GNI)	21.8	7.1	5.0	4.7	4.6	5.5	8.4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1	-4.0	5.5	2.4	1.5	19.0	2.2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2.0	7.1	5.0	4.7	4.6	5.5	8.5
국민처분가능소득(NDI)	26.4	7.7	5.0	4.7	4.5	5.0	9.4

주: 1. 2020년 말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하 원고에서 동일
2.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하 원고에서 동일
3.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중 명목 GNI는 연평균 8.4%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NI가 21.8% 크게 증가한 이후, 2027년 7.1%, 2028년 5.0%, 2029년 4.7%, 2030년 4.6%로 증가율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의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제외하면 2027~2030년에는 연평균 5%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26년 6.1% 증가한 뒤 2027년에는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GNI의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6년 교역조건 개선과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증가가 영업잉여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영업잉여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1.6%에서 2026년 30.1%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피용자보수 비중은 같은 기간 46.9%에서 41.9%로 낮아지고, 고정자본소모는 22.0%에서 19.2%, 순생산 및 수입세는 8.1%에서 7.5%,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5%에서 1.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러한 소득구조 변화는 중기에도 상당 부분 지속될 전망이다. 영업잉여 비중은 2027년 30.7%에서 2030년 31.8%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피용자보수 비중은 41.8%에서 40.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의 비중도 전반적으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2026년 국민소득의 큰 폭 증가가 영업잉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중기에도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Ⅳ-1] 2026~2030년 국민총소득 성장률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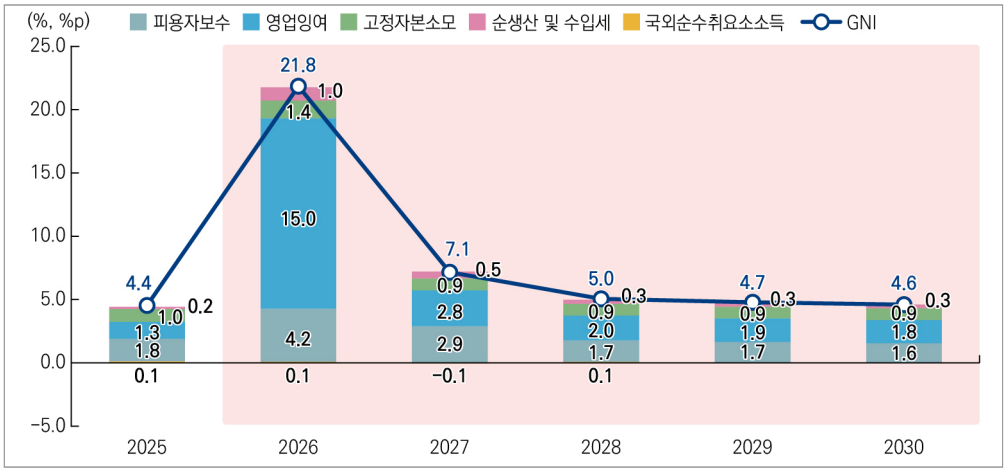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4.4	21.8	7.1	5.0	4.7	4.6
피용자보수	46.9	41.9	41.8	41.5	41.2	40.9
영업잉여	21.6	30.1	30.7	31.1	31.5	31.8
고정자본소모	22.0	19.2	18.8	18.8	18.8	18.9
순생산 및 수입세	8.1	7.5	7.5	7.4	7.4	7.3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5	1.3	1.2	1.2	1.1	1.1

주: 음영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다만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2026년에는 영업잉여의 기여도가 15.0%p로 가장 크지만, 2027년에는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기여도가 각각 2.8%p와 2.9%p로 낮아지며, 이후에도 각 소득항목의 기여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면서 GNI 증가율은 4~5%대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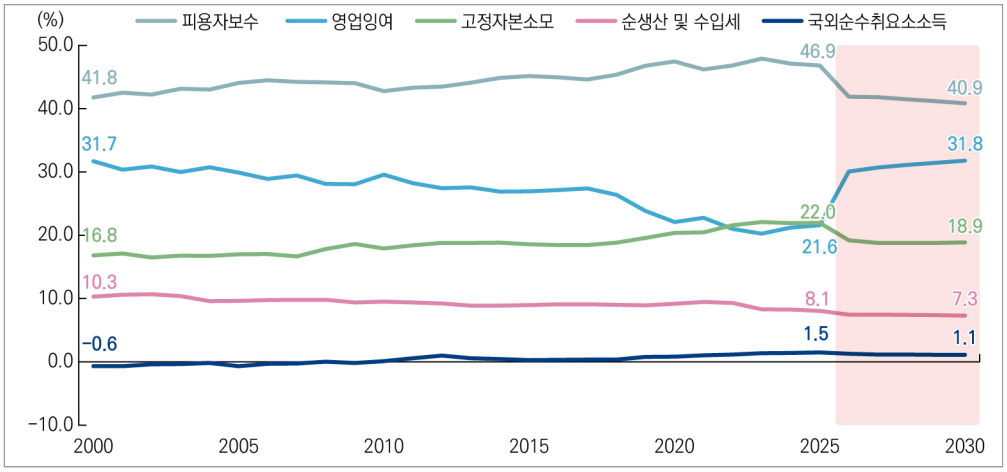
[그림 Ⅳ-13] 2026~2030년 국민총소득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의 소득항목별 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해 왔다. 피용자보수 비중은 2000년 이후 대체로 40%대 중후반에서 유지된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2000년대 초 30%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0년대 초에는 2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26년의 영업잉여 증가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영업잉여 비중 하락 추세를 크게 되돌려지는 모습으로, 국민소득 증가의 귀속구조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Ⅳ-14] 국민총소득 구성비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국민총소득의 분배

▪ **2026~2030년 중 가계 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연평균 4.5% 성장 예상
– 총저축율은 연평균 45.6% 예상

(전년대비, %,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2.0	7.1	5.0	4.7	4.6	5.5	8.5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7.0	5.9	4.2	4.1	3.8	4.9	4.5
총저축율(%)	44.1	45.4	45.8	46.2	46.5	34.6	45.6
1인당 GNI(만원)	6,391	6,843	7,183	7,525	7,875	4,718	7,163
1인당 HGNDI(만원)	3,115	3,298	3,435	3,576	3,714	2,529	3,428

주: 1.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 1인당 소득은 NABO인구전망을 이용하여 전망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가계 자산소득 및 투자소득 증가	• 수출호조의 가계소득 파급 시차
• 특별급여로 인한 피용자보수 상승	• 비소비지출 부담

국민총소득은 국민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분배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해 동안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은 일차로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에 분배되고, 이차로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되고, 마지막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와 저축 간에 재분배되는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홍지은 경제분석관(jehong@assembly.go.kr, 6788-4472)

경제주체별 분배로 볼 때, 2026~2030년 동안 가계총처분가능소득[136] 성장률은 연평균 4.5%로 전망되어, 같은 기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8.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영업잉여 증가가 기업부문에 집중되어 가계로의 소득 파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내수경기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그 파급에도 시차가 존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27년 상방요인으로는 가계 자산소득 및 투자소득 증가와 특별급여로 인한 피용자보수 상승을 들 수 있다. 기업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방향에 힘입어 배당소득[137]을 중심으로 가계의 재산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특별급여 확대도 피용자보수 증가를 통해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하방요인으로는 수출호조의 낙수효과 시차와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특별급여로 인한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해당 연도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는 반영되지만, 실질적인 특별급여 지급은 보통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 소득의 증가분이 곧바로 가계의 현금 유입 및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수출 호조가 가계에 실질적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차는 특별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2027년을 거치며 점차 해소되어, 중기전망상 하방요인으로서의 의미는 점차 옅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가계소득 항목의 구성을 2016년과 비교해보면, 임금 및 급여와 이전소득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영업잉여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소득의 비중은 15.9%에서 23.8%로 크게 늘어난 반면, 영업잉여의 비중은 13.2%에서 7.9%로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비소비지출의 경우, 세부담과 사회부담금이 모두 증가하여 가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압박이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

---

136)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소득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소비와 저축 등에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으로 정의한다. 가계소득이 정체되면 소비 위축 및 내수 성장 둔화로 이어지므로, 분배와 소비 기반"을 보강하는 지표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피용자보수와 정부최종소비지출, 총저축을 설명변수로 하는 ARDL(1) 모형을 구성하여 전망하였다.

137) 2026년 코스피 시가총액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산배당 및 분기배당(삼성전자는 3분기 특별배당 30조원 발표분 포함)으로 2026년 3분기까지 각각 38.7조원, 1.9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발표하였다. 각 기업 주식의 개인투자자 지분율(삼성전자 17.5%, SK하이닉스 10.3%)을 적용하여 추정한 가계 귀속 배당소득을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전망치에 순증 반영하였다.

[표 Ⅳ-2]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단위: 조원, %)

	가계순처분가능소득	소득(+)				비소비지출(-)	
		임금 및 급여	영업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경상세	사회부담금
2025년	1,426	1,080	113	185	339	147	143
		(75.7)	(7.9)	(12.9)	(23.8)	(10.3)	(10.0)
2016년	964	714	128	119	153	76	72.4
		(74.0)	(13.2)	(12.3)	(15.9)	(7.9)	(7.5)

주: 1. 가계부문 순처분가능소득(NDI)은 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한 값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을 의미하며 명목가로 산출함. ( )는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2. 이전소득은 사회수혜금(수혜금, 구호금, 장학금, 기부금 등)과 순기타경상이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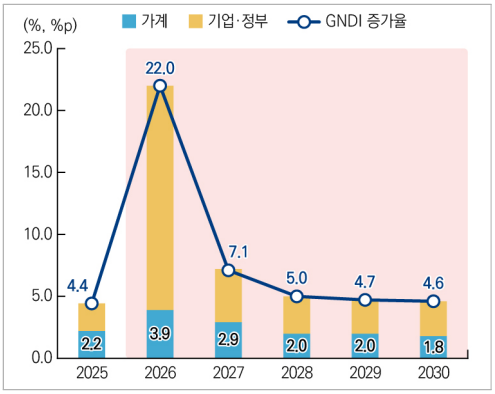
전망기간 중 연도별 흐름을 보면,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26년 7.0%를 기록한 이후 2027년 5.9%, 2028년 4.2%, 2029년 4.1%, 2030년 3.8%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26년 22.0%까지 급등한 이후 2027년 7.1%로 큰 폭 하락하고, 2028~2030년에는 완만하게 수렴해가는 흐름을 함께 반영한다. 2026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큰 폭 증가는 주로 기업·정부 부문의 기여에 의해 주도된 반면 가계 부문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부문에 집중된 소득 증가가 가계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6년 6,391만원에서 2030년 7,875만원으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HGNDI)은 같은 기간 3,115만원에서 3,714만원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나, 가계 몫의 증가 속도가 국민소득 전체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의 체감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총저축률은 2026년 44.1%로 전년대비 9.0%p 상승하여 관련 통계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최종소비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국민소득 증가가 최종소비 증가를 상회하면서 총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30년에는 46.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기업투자 확대가 고용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최종소비지출이 확대되면서 총저축률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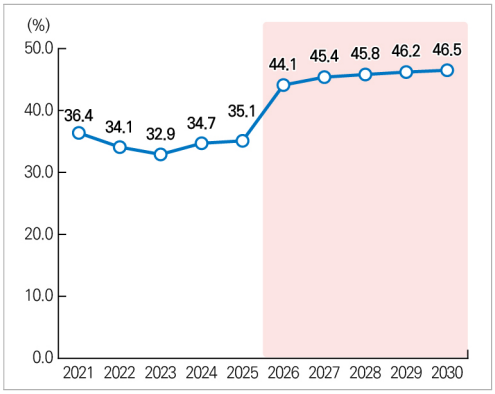
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수 확대에 따른 조정효과는 본 전망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림 Ⅳ-15] 경제주체별 분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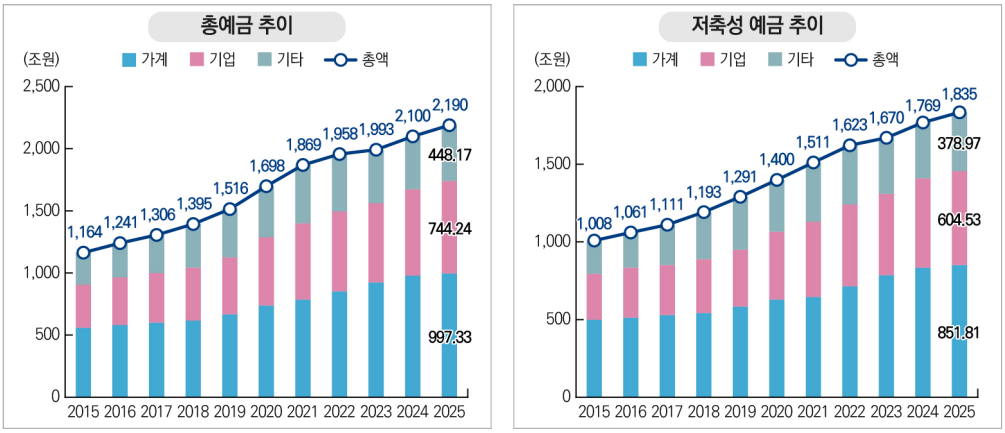
[그림 Ⅳ-16] 총저축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저축 관련 지표를 보면 예금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순저축의 흐름은 제도부문별로 상이하다. 예금은행의 총예금은 2015년 1,164조원에서 2025년 2,19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저축성예금도 1,008조원에서 1,835조원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기준 총예금은 가계 45.5%, 기업 34.0%, 기타 20.5%로 구성되며, 저축성예금도 가계 46.4%, 기업 32.9%, 기타 20.7%로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그림 Ⅳ-17] 예금주별 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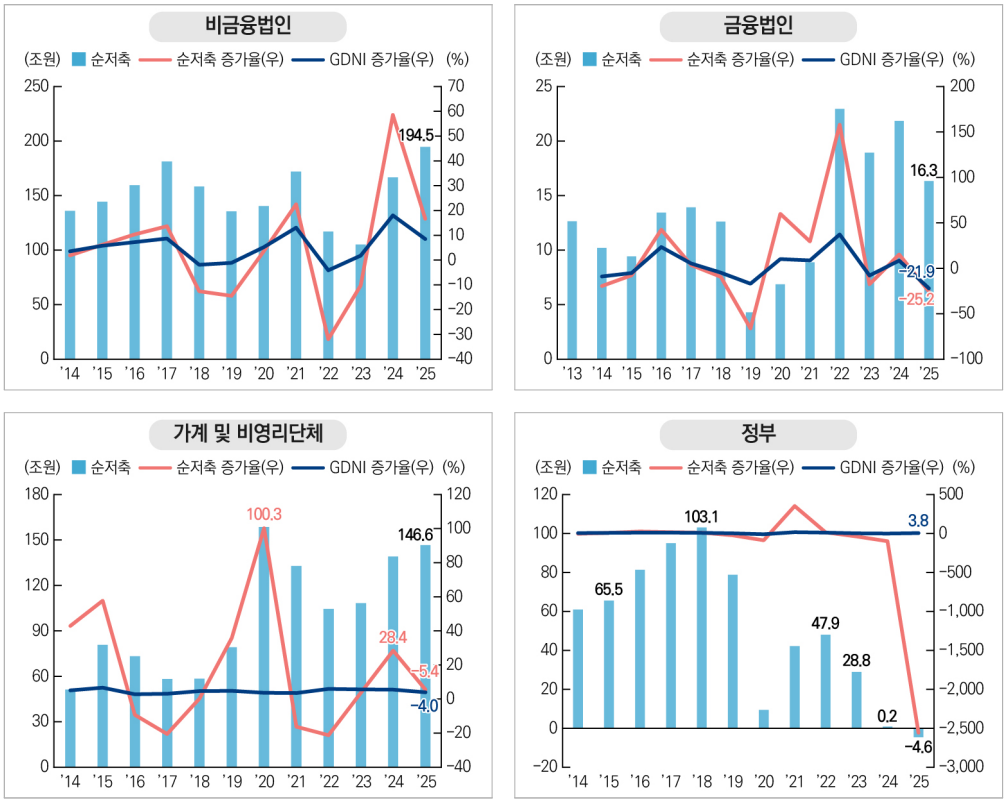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순저축을 보면 비금융법인은 최근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가계와 정부는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금융법인의 순저축은 연도별 변동성이 크지만 2025년에는 크게 확대되어 제도부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가계 순저축은 2020년 크게 증가한 이후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순저축은 2018년 103조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4.6조원으로 음(-)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경제의 순저축은 기업과 가계가 주로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부문의 저축 여력은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이러한 최근 동향을 고려하면 2026년 총저축률의 큰 폭 상승은 기존의 저축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이례적인 증가에 따른 수준 변화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8] 제도부문별 순저축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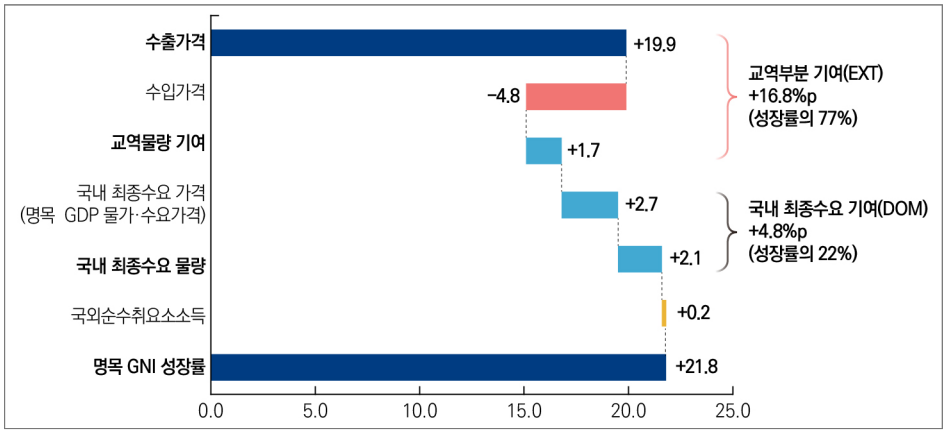
[BOX 14] 반도체 호황의 소득귀착
: 늘어난 국민소득(GNI)은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가

2026년 상반기 명목GNI는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용자보수는 7.5% 증가하는 데 그쳐, 국민소득의 큰 폭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동일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박스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요인을 분해하고, 늘어난 소득이 소득항목별로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와 교역조건 개선

2026년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21.8%)을 분해하면 교역부문(수출·수입)의 기여가 16.8%p로 전체의 77%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교역가격 기여는 15.1%p(전체의 69%)였다. 반면 교역물량의 기여는 1.7%p에 그쳤다. 국내 최종수요는 가격 2.7%p, 물량 2.1%p를 합해 4.8%p(22%) 기여하였다. 즉 상반기 명목 GNI의 이례적 증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교역가격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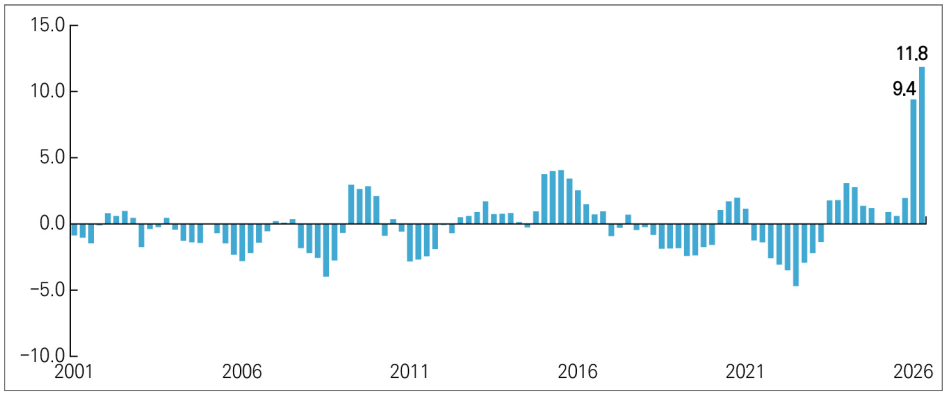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명목GNI 성장률의 요인별 기여도]



주: 1. 명목 GNI 항등식(C+I+X-M+국외순수취요소소득)에 따른 전년동기 대비 기여도(%p), 물량은 전년동기 가격·가격은 당기 물량 기준
2. 합계는 반올림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 구매력 확대는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2026년 1분기와 2분기 두 증가율의 격차는 각각 9.4%p와 11.8%p로, 과거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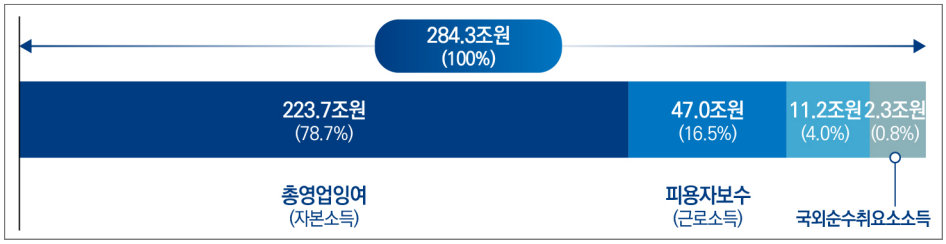
[실질GDI와 실질GDP 증가율 격차(%p)]



주: 실질GDI 전년동기비 증가율에서 실질GDP 전년동기비 증가율을 차감한 값(%p)

그러나 늘어난 국민소득이 모든 소득항목에서 유사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상반기 국민총소득 증가분 284조원 가운데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으로 78.7%를 차지하였다.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으로 16.5%, 순생산·수입세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분은 각각 11.2조원과 2.3조원이었다.

[2026년 상반기 국민총소득(GNI) 증가분의 부문별 배분]



주: 1. 전년동기대비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분을 소득항목별로 분해
2. 총영업잉여는 자본소득, 피용자보수는 근로소득을 주로 나타내지만 경제주체의 최종 처분가능소득과 일치하지는 않음

나. 과거 주요 교역조건 개선기의 부문별 소득 귀착

과거 주요 교역조건 개선기의 국민소득과 주요 소득항목 변화는 당시 경기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09년과 2015~2016년에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이 교역조건 개선을 주도하였다. 반면 2023~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출가격 개선이 나타나 최근과 보다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교역조건 개선이 나타난 기간과 원인에 차이가 있어 동등비교는 안되지만, 피용자보수는 국민소득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인 반면,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특히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2015~2016년에는 국민소득이 6.2% 증가하는 동안 총영업잉여가 11.3% 증가하였고, 수출가격이 개선된 2023~2024년에는 총영업잉여 증가율이 15.0%로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교역조건 개선기의 부문별 소득 증가율]

(단위: %)

교역조건 개선기	주요 요인	국민총소득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2009년 (4분기)	원자재가격 하락	4.2	3.8	5.9
2015Q1-2016Q2(6분기)	국제유가 하락	6.2	3.5	11.3
2023Q3~2024Q4(6분기)	수출가격 개선	14.8	10.5	15.0

주: 실질GDI 증가율과 실질GDP 증가율 격차가 +1.0%p 이상인 기간의 소득항목별 명목 성장률이며, 2009년은 분기 소득자료가 없어 연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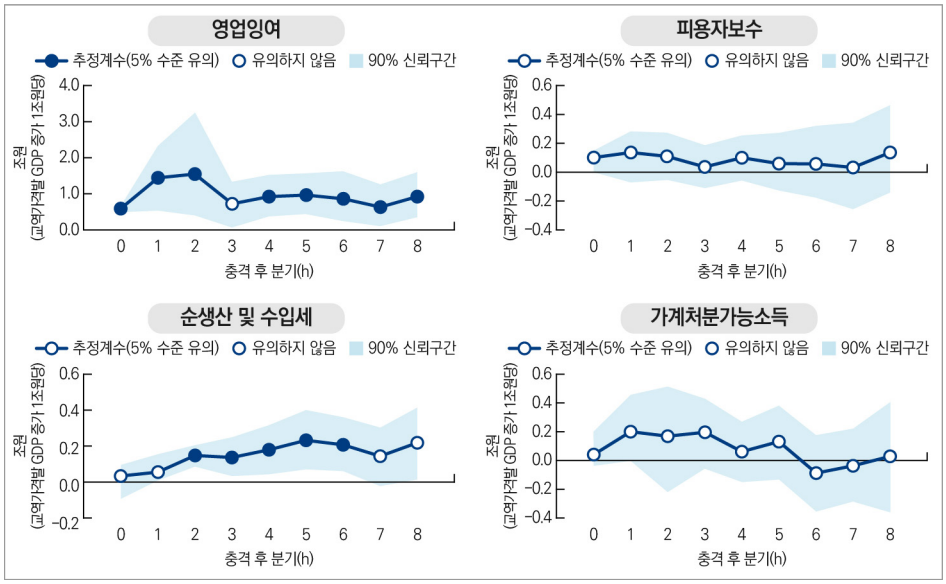
이는 교역조건 개선이 국민소득을 늘리더라도 소득항목별 배분은 개선의 원인뿐 아니라 당시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과 같이 수출가격 상승이 교역조건 개선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늘어난 국민소득이 먼저 기업의 영업잉여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일부가 임금·성과급, 배당, 세금 및 이전 등의 경로를 거쳐 가계에 전달되므로, 국민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증가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 2026년 국민소득 증가의 부문별 귀착

교역가격 요인과 주요 소득항목의 동태적 효과는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138]으로 추정하였다. 교역가격 요인은 수출·수입 가격 변화에 따른 명목GDI 증가 기여분으로 측정하고, 그에 대한 총영업잉여·피용자보수·순생산및수입세·가계처분가능소득의 반응을 충격 발생 후 8분기까지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영업잉여는 교역가격 요인 증가와 함께 비교적 크고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피용자보수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서는 일부 시점에 양(+)의 추정치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순생산및수입세는 2~6분기 후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여 영업잉여와 함께 영업잉여와 함께 비교적 지속적인 증가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이 분석은 관측된 교역가격 변화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치를 교역가격 변화만의 인과적 효과나 소득항목별 배분 비율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교역가격 충격에 대한 소득항목별 반응]



주: 1. 국소투영법 추정치로, 교역가격에 의한 명목GDI 증가 1조원당 각 소득항목의 h분기 후 누적 변화액(조원)
2. 실질GDP 성장률(당기·1기 시차)을 통제한 추정치. 음영은 90% 신뢰구간이며, 채워진 점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계수, 빈 점은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나타냄
3. 표본은 2010년 1분기~2026년 2분기 분기자료. 신뢰구간과 유의성은 와일드 부트스트랩 기준이며, 부트스트랩 t통계량은 Newey-West 표준오차(Bartlett 커널, 대역폭 h+1)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시사점

2026년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분은 소득항목별로 볼 때 총영업잉여 증가로 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와 국소투영법 추정에서도 교역가격 요인과 총영업잉여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반면 피용자보수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유의한 반응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 분석만으로 가계소득으로의 전달 규모와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근의 높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가계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분석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과거 평균적인 소득항목별 반응을 추정한 것으로, 최근 반도체 호황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향후 지급될 수 있는 특별급여·성과급 증가 효과는 별도로 식별하지 못하며, 확대된 기업소득이 설비투자와 고용·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기업실적 개선이 특별급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가계소득으로의 파급효과는 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반응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호황의 성과가 가계로 이어지는 정도는 임금과 특별급여 뿐 아니라 투자·고용 확대와 배당·세금·이전 등 분배 경로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가계처분가능소득과 기업투자, 조세수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38) Jordà, Òscar. "Estimation and Inference of Impulse Responses by Local Proj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5 (1): 161-182. 2005

제2절 피용자보수

1. 2027년 전망

▪ **2027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6.9%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피용자보수	3.8	9.0	6.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특별급여	• 임금근로자 증가세의 둔화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율 증가	

피용자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6년 9.0%, 2027년 6.9%로 전망된다. 피용자보수는 사용자가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비임금 급여와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 중 2026년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임금근로자 급여 부분으로, 반도체 업종의 역대 최대 규모 영업이익 달성에 따라 예상되는 특별급여 지급에 기인한다.[139] 단, 국민계정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계상하므로 해당 특별급여의 원인이 발생한 2026년에 피용자보수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지급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수 있어 임금상승률에 반영되는 시점은 더 늦을 수 있다.

2027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026년 대비 추가 상승이 전망되며, 이에 따른 특별급여 추가 상승 예상분이 2027년 피용자보수 전망에 반영되었다. 이 밖에도 2026년부터 2033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매년 0.5%p 인상,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0.1%p 인상 등을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139) FnGuide의 주요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참고하여, 당해연도 영업실적 개선에 연동되어 차년도에 성과급 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도 당해연도 피용자보수에 반영하였다.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5.2%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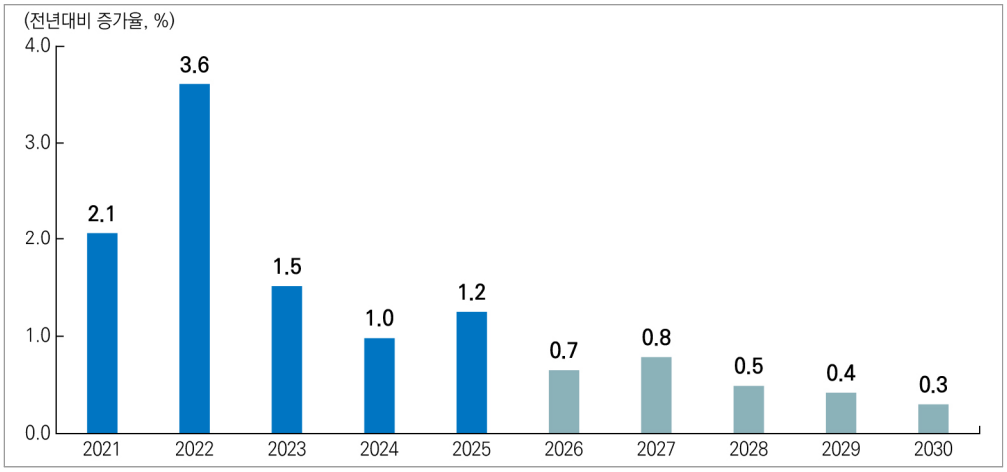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9.0	6.9	4.1	4.0	3.8	5.2	5.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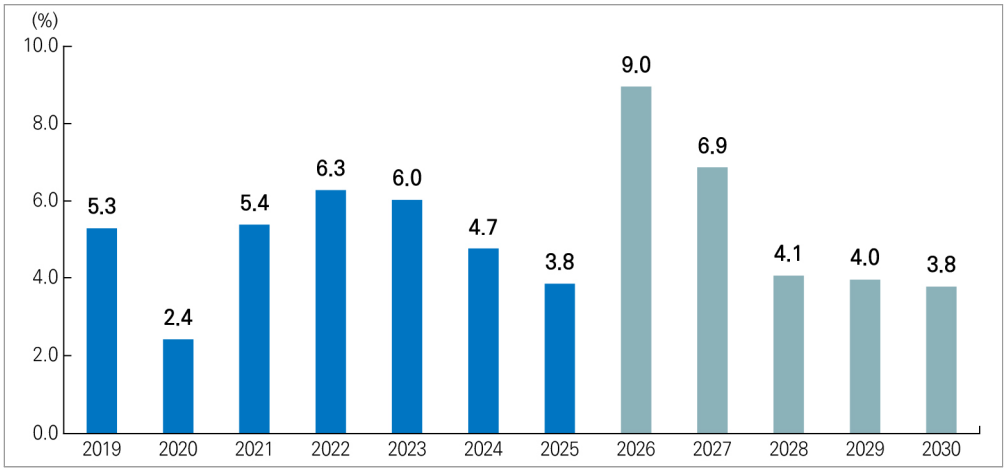
2026~2030년 기간 중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이후에는 특별급여 상승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즉 2027년 수준의 특별급여가 이후 추가 상승 없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 대비 증가율 전망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8~2030년의 피용자보수 전망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임금상승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 및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 등에 대한 전망이 반영되었다.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전망기간의 최종연도로 갈수록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그림 Ⅳ-19] 임금근로자 증가율



주: 2025년까지는 실측치, 2026~2030년은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Ⅳ-20]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주: 2025년까지는 실측치, 2026~2030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제3절 영업잉여

1. 2027년 전망

▪ **2027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9.4%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영업잉여	6.3	69.5	9.4

주: 1)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 관련 반도체 업황 개선	• 일부 비IT 업종의 회복 지연

2026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69.5% 증가하고 2027년에는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가세는 기업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업잉여 증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40)141)] AI 관련 반도체의 구조적 수요 증가는 수출 단가 상승 및 기업 수익성으로 직결되어, 2026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FnGuide('26.8.31일 기준)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89조원(+222.5%), 2027년은 1,313조원으로 3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섹터별로는 전기·전자 기업의 영업이익이 2026년 3분기에는 전년동분기대비 237.8%, 4분기에는 42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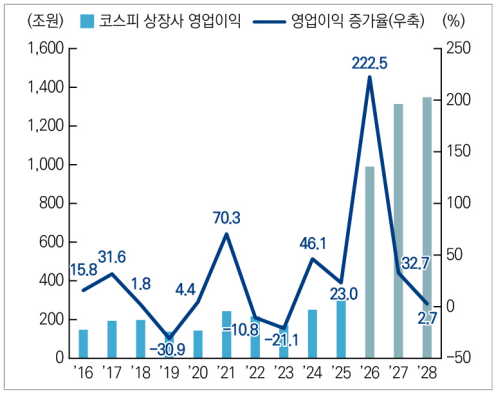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140) 소득발생계정의 균형항목인 영업잉여(영업잉여 = 총산출 − 중간소비 − 피용자보수 − 고정자본소모 − 순기타생산세)는 기업회계의 영업이익(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과 개념상 유사하나 통계적 정의와 회계처리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141) 2025년 기준 영업잉여 대비 상장사 영업이익 비율은 52.2%, 비금융법인 영업잉여 대비 상장사 영업이익 비율은 74.2%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잉여는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 영업이익의 영향을 반영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실제로 영업잉여 증가율이 급증했던 2021년(11.6%)과 2024년(11.7%)에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각각 70.3%, 46.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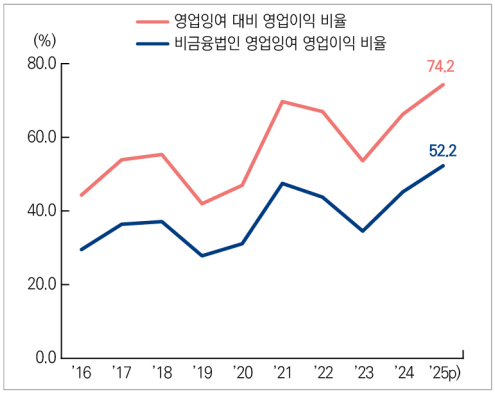
다만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체 수익성 상승을 주도하면서 산업 간 수익성 개선폭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 수익성 개선의 업종별 차이는 영업잉여의 증가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의 증가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Ⅳ-21]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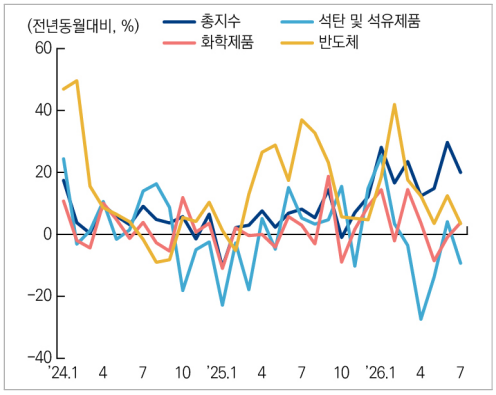
주: 2026~2028년은 시장 컨센서스 수치
자료: FnGuide('26.8.31일 기준)

[그림 Ⅳ-22] 영업잉여 대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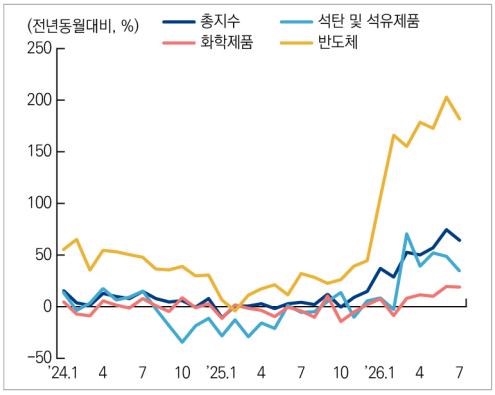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nGuide

[그림 Ⅳ-23] 수출물량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24] 수출금액지수



자료: 한국은행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영업잉여**는 연평균 17.2%로 예상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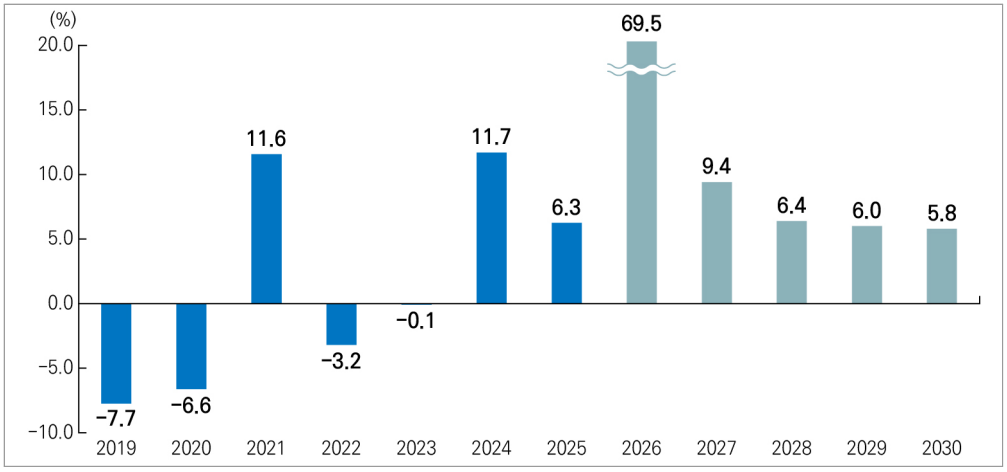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69.5	9.4	6.4	6.0	5.8	5.1	17.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영업잉여는 연평균 1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이후에는 2026년의 큰 폭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증가세도 점차 낮아지면서 영업잉여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업잉여 증가율은 2028년 6.4%, 2029년 6.0%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5.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비IT 부문의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과 중기적인 임금 상승에 따른 피용자보수 증가는 기업부문의 영업잉여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영업잉여는 기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인건비, 수출가격 및 기업별 수익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국민소득 분배항목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Ⅳ-25]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주: 2026~2030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제4절 고정자본소모

1. 2027년 전망

▪ **2027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대비 1.5%p 감소한 4.9%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고정자본소모	4.7	6.4	4.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R&D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 증가	• 2020년 이후 누적된 건설투자 부진

2027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6년 고정자본소모는 6.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마모, 노후화 및 경제적 진부화 등에 따른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이 진부화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고정자산도 고정자본소모에 반영된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구조가 자본 및 기술집약형으로 변화할수록 고정자산의 경제적 진부화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정자본소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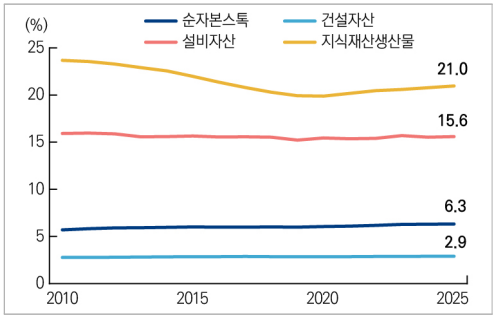
특히 지식재산생산물은 다른 유형의 고정자산에 비해 감가상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식재산생산물에 R&D, 소프트웨어 등 기술 변화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거나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명이 짧아 감가상각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 고정자산에서 지식재산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는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고정자산 중 지식재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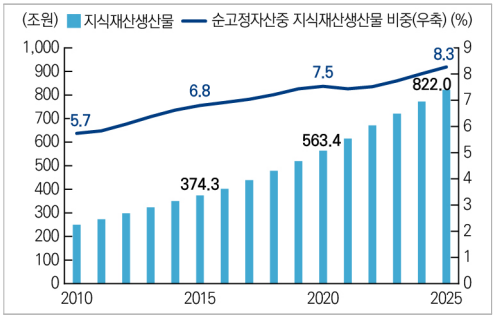
산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25년 8.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감가상각 속도가 빠른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자본스톡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Ⅳ-26] 자산별 감가상각률 비교



주: 실질 가치로 환산된 자산별 감가상각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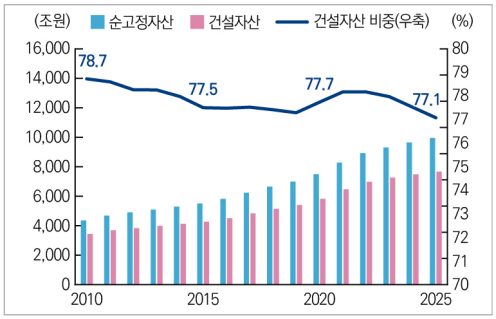
[그림 Ⅳ-27]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 비중



주: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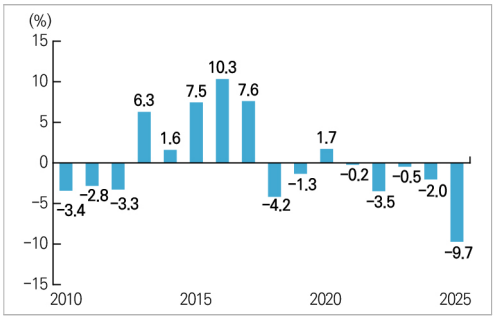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고정자산에서 건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건설자산의 축적 추이는 전체 고정자본소모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는 건설자산 스톡의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다. 신규 건설투자의 감소는 자본스톡의 순증을 둔화시키며, 이에 따라 향후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 확대가 고정자본소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건설투자의 둔화는 건설자산 스톡의 축적을 제약함으로써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Ⅳ-28] 순고정자산 중 건설자산 비중



주: 명목 순고정자산 중 명목 건설자산 비중을 표시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29]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주: 실질 건설투자를 표시
자료: 한국은행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5.2%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6.4	4.9	4.9	4.9	4.9	7.1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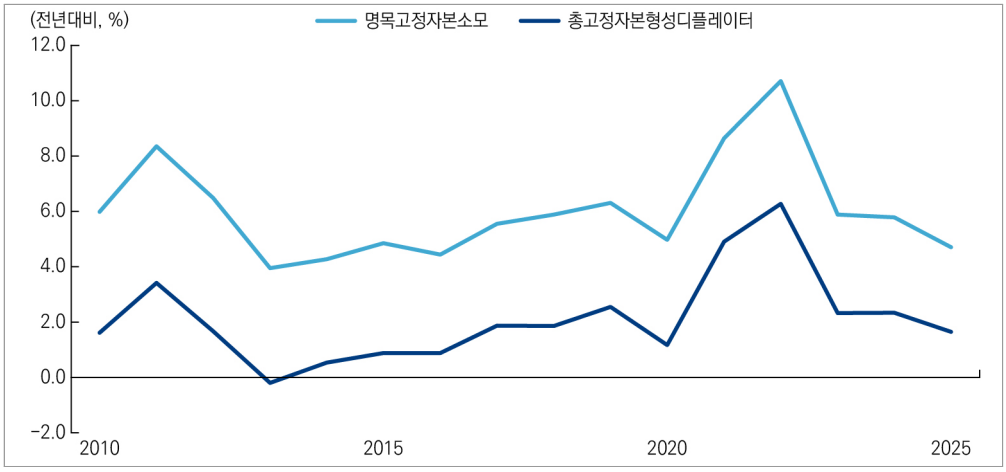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의 평균 증가율인 7.1%보다 1.9%p 낮은 수준이다.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인다. 이는 실질 고정자본소모를 명목가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의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고정자본소모에 대한 별도의 디플레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정자본소모의 가격변동은 해당 자산의 총고정자본형성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역시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30] 명목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및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비교



자료: 한국은행

2026년 이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목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6~2030년 명목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5.2% 증가하고, 2030년에는 전년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절 순생산 및 수입세

1. 2027년 전망

▪ **2027년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은 7.2%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9	11.6	13.8	12.8	9.1	5.7	7.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명목 GDP 증가	• 일시적 세수 증가요인 정상화
• 생산 및 수입 관련 세수 증가	•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2027년 순생산 및 수입세[142]는 전년대비 7.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명목 GDP가 전년대비 7.5%, 총수입이 3.1% 증가하고 생산 및 수입 관련 세수기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19년(184.0조원)부터 2022년(219.9조원)까지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대규모 세수결손 속에 수입 감소 등으로 203.2조원(-7.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2024년(215.2조원, +5.9%)과 2025년(219.2조원, +1.9%)에 걸쳐 완만히 회복하였고, 2026년에는 자산시장 호조와 수출 급증이 맞물리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108.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실적의 호조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경제활동도 견조한 흐름을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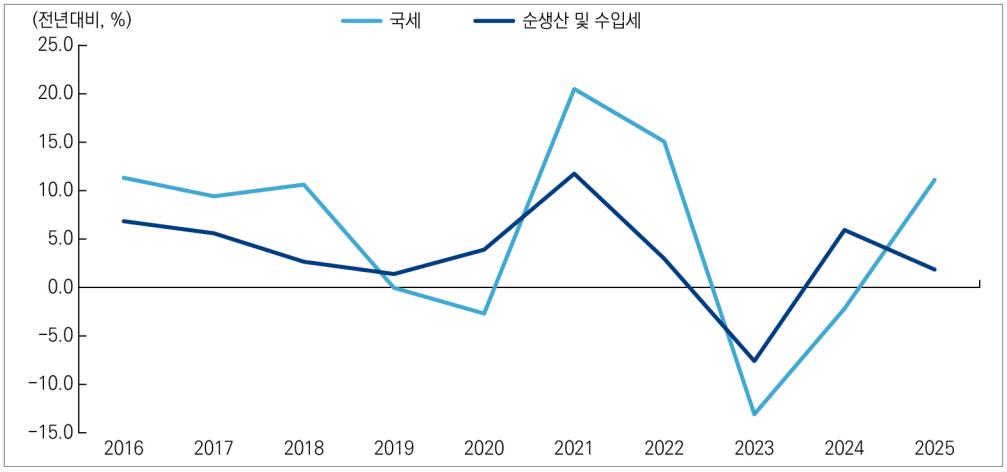
142)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값으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본원소득 중 정부에 1차로 분배되는 몫이다. 또한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입도 포함하므로, 국세만을 현금주의로 집계한 국세수입 실적과는 차이가 있다.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에는 명목 GDP 성장률, 총수입, 총수출을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생산 및 수입세 관련 국세 6개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과 기타 세목 수입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유지하면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3.8%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 전망의 기저가 되는 2026년의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은 전망 모형 결과와 함께 국세수입 진도율 및 상반기 국세수입 누계 실적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을 위한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순생산 및 수입세를 구성하는 세목별 과거 추이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주요 결정 요인이 되는 거시경제변수를 선별해 낼 필요가 있으나, 한국은행은 순생산 및 수입세 산출에 활용된 세목별 실적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입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 및 수입세 수입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순생산 및 수입세와 현금주의에 기반한 국세수입 실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6~2025년 현금주의 국세수입과 발생주의 순생산 및 수입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준값의 상관계수는 0.95,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72로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수입 실적은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Ⅳ-31]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먼저 생산 및 수입세의 세목별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계정상 생산 및 수입세는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수입 등에 부과되는 생산물세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또는 생산활동 자체에 부과되는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표 Ⅳ-3] 2025년 생산 및 수입세 실적 및 세목별 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세목	수입규모	비중	세목	수입규모	비중
국세	- 부가가치세	79.2	60.9	- 종합부동산세	4.7	85.5
	-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0.2	- 인지세	0.8	14.5
	- 관세	7.6	5.8			
	- 개별소비세	8.5	6.5			
	- 농어촌특별세	9.2	7.1			
	- 증권거래세	3.4	2.6			
	- 교육세	5.7	4.4			
	- 주세	3.2	2.5			
	계	130.0	100.0	계	5.5	100.0
지방세	- 취득세	26.0	35.5	- 재산세	15.1	76.2
	- 지방소비세	25.9	35.4	- 주민세	2.8	14.1
	- 지방교육세	7.2	9.9	- 지역자원시설세	1.9	9.7
	- 자동차세	7.5	10.2			
	- 담배소비세	3.5	4.8			
	- 등록면허세	2.2	3.0			
	- 레저세	0.9	1.2			
	계	73.0	100.0	계	19.8	100.0
	총계	203.0		총계	25.3	

주: 지방세는 2025년 잠정 실적임
자료: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2026년 1~7월 국세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총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하였다. 특히 생산 및 수입세 관련 주요 6개 세목 가운데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가 전년동기대비 348.5%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13.1%)와 개별소비세(9.2%)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주요 6개 세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코스피 거래대금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182.5% 증가하였으며, 연간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96.2%로 국세 세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7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제한적이었다.

[표 Ⅳ-4] 2026년 1~7월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1~7월	2026년 1~7월	증감액	증감율	진도율 ('26년)
■ 총국세	232.6	274.0	41.4	17.8	66.0
■ 일반회계	225.7	258.8	33.1	14.6	64.9
○ 내국세	209.3	242.0	32.6	15.6	65.7
- 소득세	77.1	89.3	12.2	15.8	65.3
- 법인세	47.4	51.8	4.4	9.3	51.2
- 상속증여세	10.2	11.4	1.2	11.4	67.0
- 부가가치세	61.4	69.4	8.1	13.1	80.2
- 개별소비세	5.0	5.5	0.5	9.2	61.3
- 증권거래세	1.8	8.2	6.4	348.5	77.8
- 인지세	0.5	0.4	△0.0	△1.7	57.5
- 과년도 수입	5.9	5.9	△0.0	△0.5	95.7
○ 교통·에너지·환경세	7.4	7.4	0.0	0.4	57.1
○ 관세	4.3	4.7	0.4	9.3	64.5
○ 교육세	3.3	3.2	△0.1	△3.7	56.9
○ 종합부동산세	1.3	1.5	0.2	14.7	32.6
■ 특별회계	6.9	15.2	8.3	120.8	90.9
○ 주세	2.3	2.1	△0.1	△5.8	67.7
○ 농어촌특별세	4.6	13.1	8.5	182.5	96.2
생산 및 수입세 관련 주요 6개 세목 합계	**81.2**	**96.7**	**15.5**	**19.1**	**-**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2026년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에는 취득세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반영하였다. 2026년 주택 매매거래량[143] 추이를 살펴보면, 1~7월 누계 기준 45만 9,45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1.3%, 지방은 5.9%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7만 9,884건으로 3.9% 증가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7월 전국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하여 최근 월별 흐름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143) 취득세수와 주택거래량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지현, 「서울시 취득세수의 예측오차 분석 – 부동산 대책 간의 영향을 중심으로」(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표 Ⅳ-5] 최근 3년 1~7월 주택 매매거래량

(단위: 건, %)

구분	전체 누계		1~7월 누계				
	'24년	'25년	'24.7.	'25.7.	'26.7.	'26년 전년동기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642,576	726,111	379,047	422,476	459,459	36,983	8.8
수도권	305,988	370,641	180,360	221,281	246,381	25,100	11.3
서 울	93,418	126,806	53,809	76,851	79,884	3,033	3.9
지 방	336,588	355,470	198,687	201,195	213,078	11,883	5.9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2026년에는 공제항목인 정부 보조금 규모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유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3월 지급비율을 50%에서 70%로, 5월 지급한도를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확대함에 따라 상반기 유가연동보조금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3분기에도 높은 유가 수준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144]

2027년 전망의 하방 요인은 2026년의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에 있다. 2026년 세수 증가에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 수준의 상승과 주식 거래대금 및 수입의 높은 증가세가 함께 작용하였다. 증권거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수준의 상승 효과는 2027년에도 유지되지만, 세율 조정에 따른 전년대비 증가율 제고 효과는 2026년에 대부분 반영된다. 또한 주식 거래대금과 수입 증가세도 2026년의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7년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순생산 및 수입세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 9.1%에서 하반기 5.7%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 재화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곧바로 부가가치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수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므로, 수출이 급증할수록 환급 규모도 함께 커져 부가가치 세수의 상방압력 일부를 상쇄한다. 실제로 2026년 5월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 증가로 오히려 감소(-0.3조원)하였다. 이처럼 기저효과 소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2027년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은 현재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144) 국토교통부,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2026.5.12.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예상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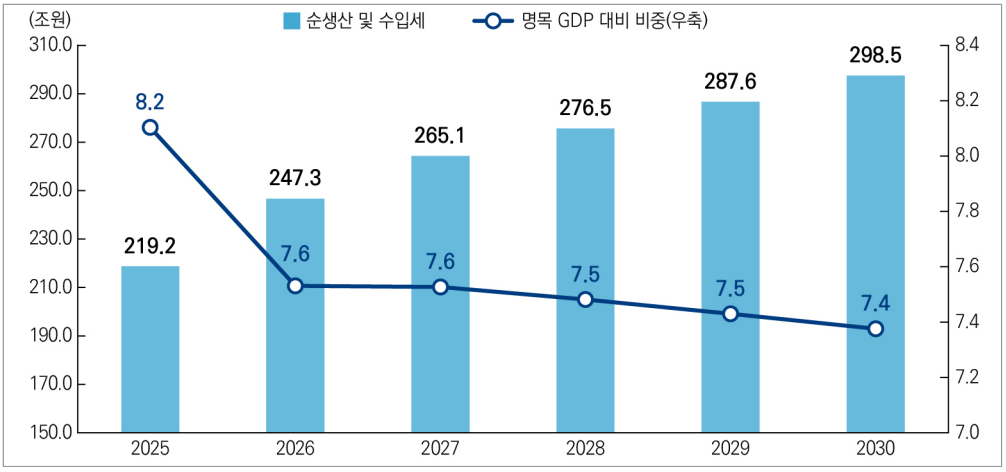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12.8	7.2	4.3	4.0	3.8	2.8	6.4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중 순생산 및 수입세는 연평균 6.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증가율 2.8%보다 3.6%p 높은 수준이다. 2026년에는 세수 및 수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12.8% 증가하고, 2027년에도 명목 GDP의 높은 증가세 등에 따라 7.2% 증가할 전망이나, 명목 GDP 증가율을 소폭 하회하면서 GDP 대비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증가율은 2028년 4.3%, 2029년 4.0%, 2030년 3.8%로 점차 평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순생산 및 수입세 규모는 2026년 247.3조원에서 2027년 265.1조원으로 증가한 뒤, 2030년 298.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32]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 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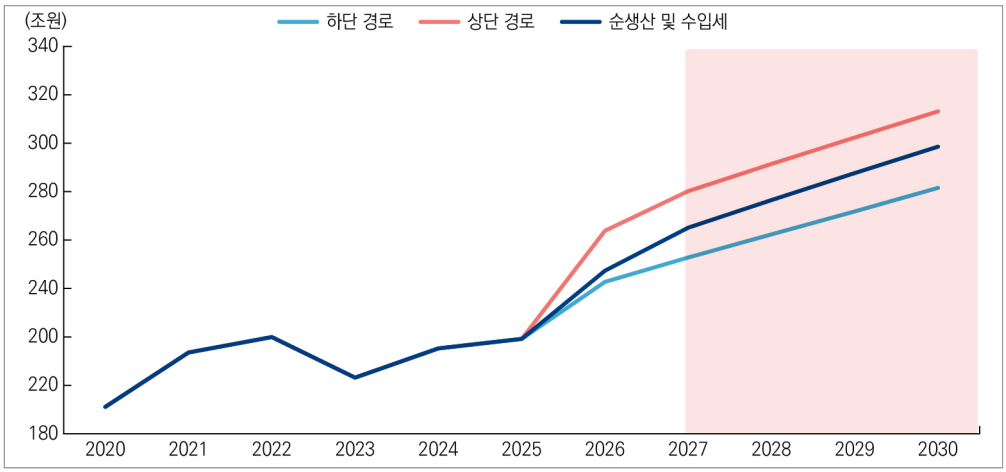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데이터처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2000년대 이후 대체로 8.5%~10.7% 사이에서 등락해 왔으며, 평균적으로는 9.5% 안팎을 유지해 왔다. 이 비중은 2021년 9.6%까지 높아졌으나, 2023년 세수결손 국면에서 8.4%까지 낮아진 이후 2024년 8.4%, 2025년 8.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26~2027년에도 이 비중은 반등하지 않고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6~2027년 명목 GDP 증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도체 등 수출 품목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으로 GDP 증가분의 일부가 세수 기반으로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율에 비해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이 낮게 형성되면서 비중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8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율이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격차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비중이 7% 중반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중기 전망을 산출하였다. 이 경우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 GDP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며, 2030년에는 298.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비중이 과거 평균(9.5%) 쪽으로 반등하거나 반대로 7%대 중반보다 더 낮아질 경우 전망치는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Ⅳ-33]은 순생산 및 수입세에 대한 전망 범위를 보여준다.

[그림 Ⅳ-33]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 범위



주: 전망 범위는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 GDP 대비 비중 변화 경로 및 반도체 실적 호조의 정상화 가정 등에 근거한 시나리오 예측을 의미하며, 통계적 신뢰구간을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6절 고용

1. 2027년 전망

▪ **2027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8.0만명(0.6%) 증가할 전망
▪ **202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2.9%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만명,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수 증감폭 (증감률)	19.3 (0.7)	10.7 (0.4)	16.1 (0.6)	13.4 (0.5)	18.8 (0.7)	17.2 (0.6)	18.0 (0.6)
고용률	62.9	62.5	63.2	62.9	62.6	63.2	62.9
실업률	2.8	3.2	2.5	2.8	3.3	2.5	2.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민간소비 개선세	• 농림어업 등의 고용 감소세 지속
• 건설투자 반등 전망	
• 노인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2027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8.0만명(0.6%)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2.9%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2.9%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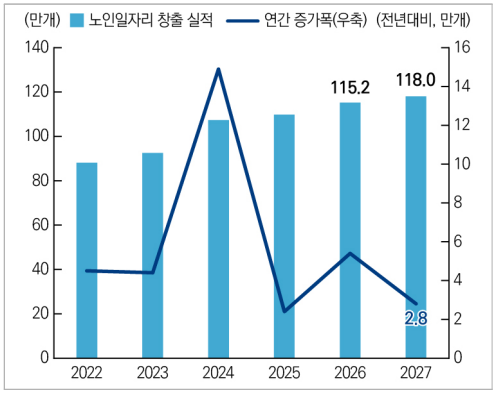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는데, 이로 인한 노동수요 진작 효과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어 2024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업 고용 감소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수를 2026년 115.2만 개에서 2027년 118만개로 늘리는 한편 인턴 학기제 도입으로 대학생의 취업전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같은 정책적 개입으로 예상되는 고용량 변화를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한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최근 10만명 내외의 감소폭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고령화 추세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40.2%에 달하여, 최근의 가파른 감소세는 고령 농가의 은퇴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의 하방요인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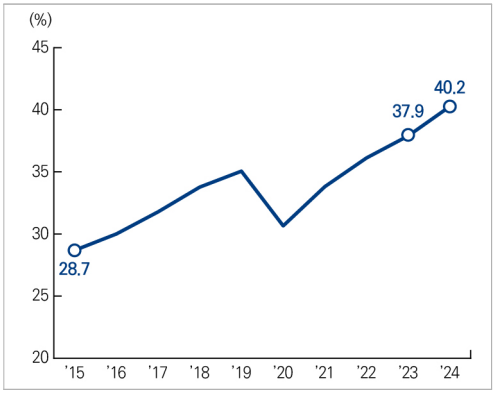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 규모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은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62.9%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높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여 202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2.9%를 기록하겠다.

[그림 Ⅳ-34] 노인일자리 현황



주: 2026년 및 2027년 수치는 실적치가 아닌 목표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그림 Ⅳ-35] 70세 이상 농가 비중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1.1만명(0.4%) 증가할 전망
- **2026~2030년 중 실업률**은 연평균 2.9%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만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취업자 증감폭 (증감률)	13.4 (0.5)	18.0 (0.6)	10.1 (0.3)	8.4 (0.3)	5.4 (0.2)	37.3 (1.1)	11.1 (0.4)
고용률	62.9	62.9	63.0	62.9	62.9	62.1	62.9
실업률	2.8	2.9	2.9	2.9	3.0	2.9	2.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1.1만명(0.4%)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의 평균 고용률은 62.9%, 평균 실업률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2028년 중에는 내수 회복, 건설투자 증가 등의 여파로 10만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겠으나, 2029년부터는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연도별로 고용률은 62.9%, 실업률은 2.9%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겠다.

제7절 임금

1. 2027년 전망

▪ **2027년 명목임금상승률**은 6.5%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3.1	2.7	3.7	3.2	9.7	3.3	6.5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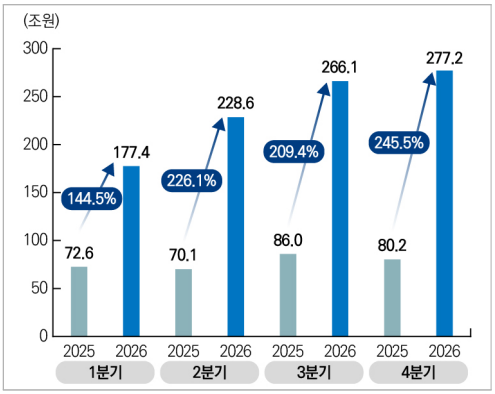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 관련 반도체 업황 지속	• 저임금 일자리 증가
• 경기 회복에 따른 노동 수요 증가	• 일부 비IT 부문 회복 지연

2027년 명목임금상승률은 6.5%를 기록할 전망이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대규모 특별급여 지급의 영향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145] 민간소비 회복과 설비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 등의 경기 개선세도 이어지면서 노동수요를 자극해 명목임금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다. 민간소비 회복은 서비스업의 업황 개선과 인력 수요 확대를 통해 임금 상승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26년 2.7%, 2027년 2.4%로 예상되어 실질구매력 보전을 위한 임금 조정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 상승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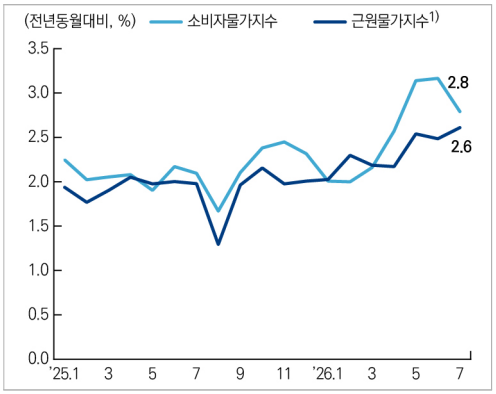
145) 본 전망에서는 20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FnGuide 컨센서스를 참고하여 ('26.9.10일 기준 1개월 컨센서스) 영업실적 개선에 연동되어 2027년 상반기에 성과급 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반영하였다.

[그림 Ⅳ-36]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주: 2026년 2분기부터는 시장 컨센서스 수치 ('26.8.31일 기준)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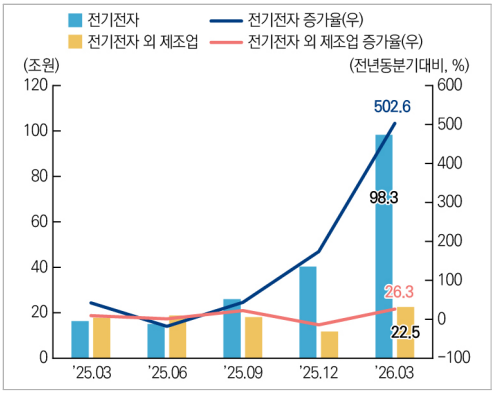
[그림 Ⅳ-37] 소비자 물가상승률



주: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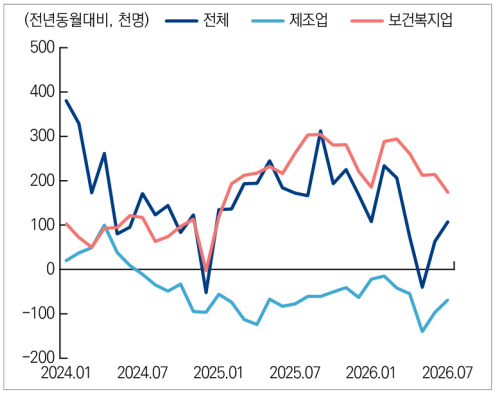
한편 경기 개선의 고용 및 임금 파급 정도에는 업종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은 생산 증가에 비해 고용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일부 비IT 부문의 회복 지연도 노동수요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고용 증가가 보건·복지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이나 단시간근로자를 중심으로 나타날 경우 고용구성 변화가 월평균임금 상승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Ⅳ-38] 제조업 영업이익 및 증가율



자료: FnGuide

[그림 Ⅳ-39]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명목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2%로 예상

(전년대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3.2	6.5	4.7	3.3	3.2	3.6	4.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2%로 전망된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특별급여 효과는 2028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고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명목임금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고용구성 변화는 임금상승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보건복지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146]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특정 업종의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낮아지는 고용구성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명목임금의 구성항목 중 특별급여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성과급 지급시기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특별급여의 변동성 확대가 임금상승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높은 수익성이 성과급 등으로 반영될 경우 특정 연도의 명목임금상승률이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는 반면, 높은 특별급여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다음 연도에는 임금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기적인 명목임금의 추세는 정액급여와 물가·생산성 등 기초여건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형성되는 가운데, 특별급여의 변동에 따라 연도별 상승률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146)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관련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임금 수준은 2025년 기준 약 240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약 421만원)의 약 57% 수준이다(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V

지속성장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2027년 및 중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1절 2027년 전망

1.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잠재성장률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중장기적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치에 기반하여 관측되는 변수가 아닌 경제이론과 통계적 기법에 의해 추정되는 변수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잠재GDP[147]가 노동투입, 자본투입, 기타요소투입 등 요소투입량의 잠재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각 연도의 잠재GDP의 증가율, 즉,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각 요소투입량의 잠재치는 추세부분과 순환부분으로 분리한 후, 추세부분을 요소투입량의 변동으로 추출하는 HP 필터링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정방법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첫째, 실질GDP 성장률의 중기 전망이 이전 전망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거나, 둘째, 잠재GDP를 결정하는 노동과 자본 및 기타요소의 잠재치에 대한 중기 전망치가 달라지게 될 때 전망치가 수정된다. 중기 실질GDP 성장률의 상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추세인 중기 잠재성장률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중기 시계에서 각 연도별 잠재성장률을 이전 전망에 비해 상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잠재성장률을 2025년 10월 전망치 대비 0.5%p 상향조정한 2.3%로 전망하였다. 2027년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폭 상향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질GDP 성장률의 2025년 실적치 및 2026~2029년 중기 전망치가 2025년 10월 전망치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 10월 전망에서는 2025~2029년 동안 연도별 실질GDP 성장률을 1.0%, 1.9%, 2.1%, 2.0%, 1.9%로 각각 전망하여 연평균 1.8%로 전망하였지만, 2026년 9월 전망에서는 2025~2029년 동안 연도별 실질GDP 성장률을 1.1%(실적치), 3.5%,

경제분석총괄과(eacd@assembly.go.kr, 6788-3780)

147) 잠재GDP와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의 주어진 기술여건과 생산요소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생산수준과 그 증가율을 의미한다.

2.7%, 2.5%, 2.5%로 각각 전망하여 연평균 2.5%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 전망치에 비해 상당폭 상향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이전 전망치를 상향하여 전망하게 되었다. 다만, 잠재성장률 추정에 이용되는 HP 필터방식은 2026~2027년의 실질GDP 성장률의 급등 전망을 추세에 반영하게 하여 잠재성장률을 과대 추정하는 끝점편의(endpoint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끝점편의로 인한 추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터 민감도(λ)를 조정하여 표본 끝단을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 V-1] 2027년 잠재성장률 수정 전망

(단위: %, %p)

	'25.9월 전망	'26.9월 전망	차이
잠재성장률	1.8	2.3	0.5
실질GDP 성장률	2.1	2.7	0.6

다음으로 노동, 자본 및 기타요소 등 각 생산요소의 중기 전망치가 수정되면서 각 생산요소의 중기 잠재치에 대한 전망도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수정되었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0.2%p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p 하향되었고 자본의 기여도는 0.7%p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p 하향되었으며, 기타요소의 기여도는 1.7%p로 기존 전망치 대비 0.6%p 상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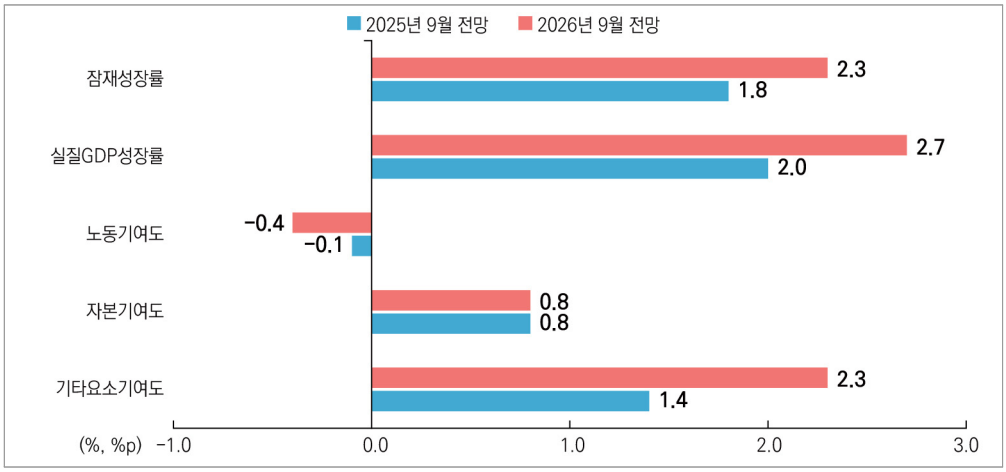
중장기 주당평균노동시간의 감소추세가 심화되면서 총노동투입량의 중장기 전망치가 감소하면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기존 전망치에 비해 소폭 하향되었다. 또한 2022~2025년까지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이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후 연도의 생산자본스톡[148]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 되어 2026년과 2027년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7년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소폭 하향되었다.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하향조정되었지만,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에 비해 0.5%p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이외의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이전 전망치에 0.6%p 상향되었다.

148) 생산자본스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 누적액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영구재고법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22~2025년 기간 중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생산자본스톡의 증가를 둔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투입요소별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

투입요소별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는 2027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정되었다. 자본의 기여도는 0.8%p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반면, 노동의 기여도는 -0.4%p로 기존 전망보다 하향조정되었다. 이는 취업자 증가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도 2.3%p로 지난 전망대비 0.9%p 상향조정되었다.

[그림 Ⅴ-1] 2027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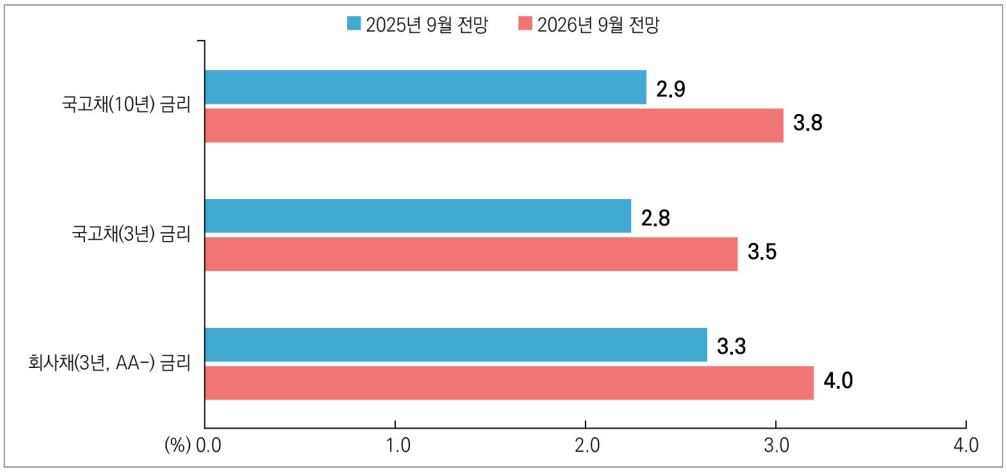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주당평균노동시간의 감소추세가 심화되면서 총노동투입량의 중장기 전망치가 감소하면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기존 전망치에 비해 조금 하락하였다. 반면 2025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던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은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2026년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자본투입량 증가의 둔화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하였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하락하고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에 비해 0.3%p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이외의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이전 전망치를 웃돌게 되었다.

3. 금리

2026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세 개선, 2월말 발생한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망을 수정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된 상황을 고려하였다. 2027년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2025년 9월 전망에 비교하여 각각 0.7%p, 0.9%p, 0.7%p 상향 조정되었다.

[그림 V-2] 2027년 금리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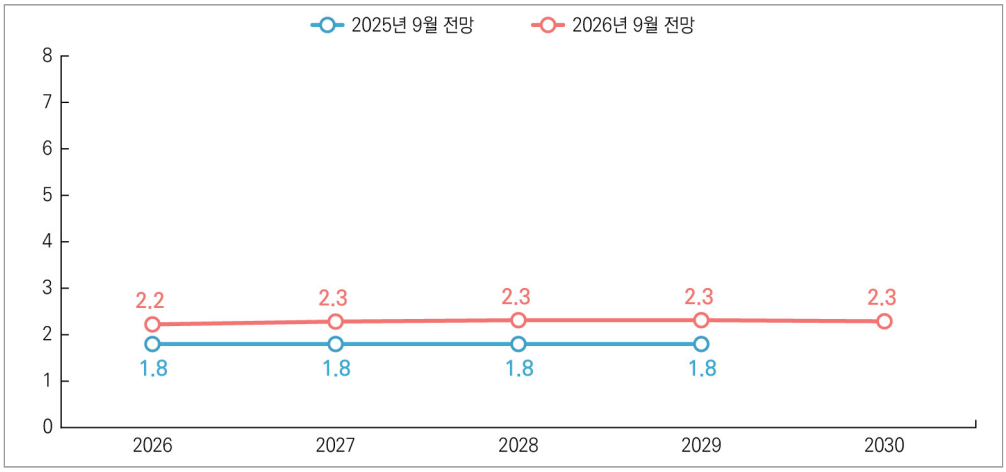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

1.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의 중기 전망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3%로 지난 중기 전망(2025.9) 대비 0.6%p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치의 상향조정은 첫째,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중기 전망이 지난 전망(2025.9)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중장기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성장률인 실질GDP 성장률의 실적치와 중장기 전망치가 변동하게 되면 잠재성장률도 전망치도 변동하게 된다. 중기시계에서 2025년 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기시계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2026년 이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인프라에 대한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잠재성장률의 상방요인인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이전 전망에 비해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V-3] 잠재성장률 전망치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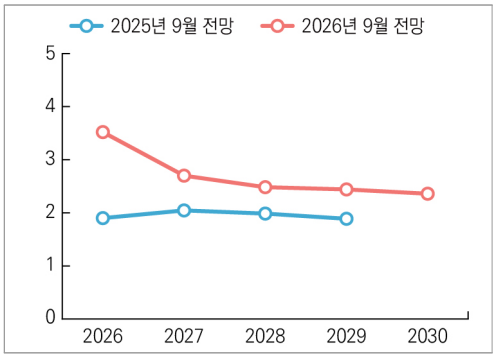
셋째, 이번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부터 인공지능(AI)의 도입률(diffusion rates)의 정도에 따라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잠재성장률 전망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말 생성형 AI가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생산과정에서 AI의 도입과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장과 직무에서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는 중기시계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잠재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AI로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도입 직후 바로 나타나지 않으며, AI가 생산과정과 경제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확산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AI의 도입률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생성형 AI의 출시 5년 이후인 2027년 이후부터 AI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점진적으로 거시경제 전체적인 잠재성장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전망에 반영하였다.[149]

149) 자세한 내용은 [BOX 15] 참조.

2.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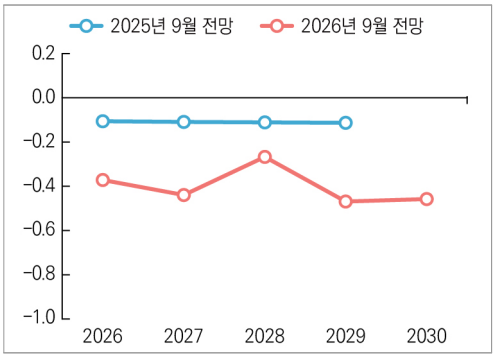
노동투입 기여도의 중기전망은 2026~2030년 평균 −0.4%p로, 지난 전망(2025년 9월)의 −0.1%p에 비해 0.3%p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총노동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자본투입 기여도는 2026~2030년 평균 0.8%p로 지난 전망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본스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본스톡 증가율의 변화가 제한적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타요소 기여도는 2026~2030년 평균 2.4%p로, 지난 전망의 1.1%p에 비해 1.3%p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반면 노동기여도는 하락하고 자본기여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차이가 기타요소 기여도의 확대로 나타났다.

[그림 V-4] 실질GDP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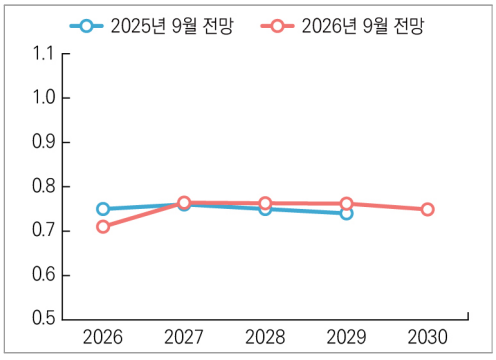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5] 노동기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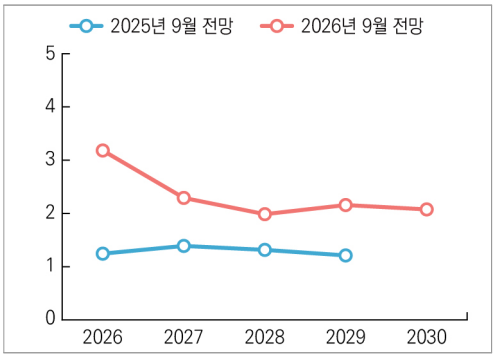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6] 자본기여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7] 기타요소기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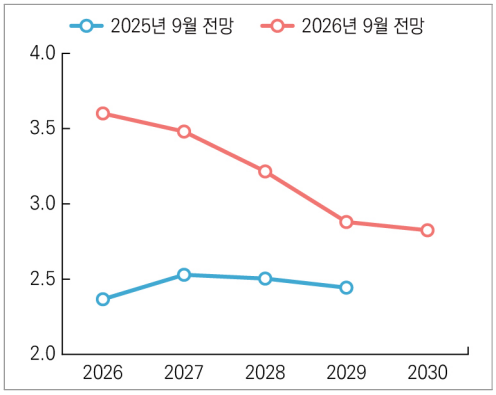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금리

2026년 경제 성장세 개선, 중동 지역 분쟁 발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전환 등을 반영하여 금리 전망을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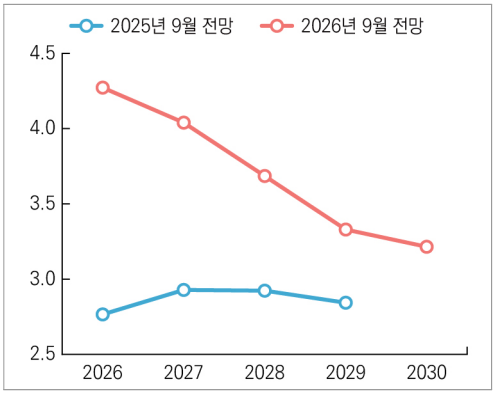
최근 나타난 경제성장률 개선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리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또한 향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V-8] 국고채(3년) 금리 중기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9] 회사채(3년, AA-) 금리 중기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장 2027년 및 중기전망

제1절 잠재성장률

1. 2027년 전망

▪ **2027년 잠재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2.3%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

	2025	2026	2027
잠재성장률	2.1	2.2	2.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주당평균근로시간의 감소
•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	• 생산자본스톡 증가율 둔화
• AI 활용률(diffusion rates) 증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중장기적 추세인 잠재성장률은 실적치에 기반하여 관측되는 변수가 아닌 경제이론과 통계적 기법에 의해 추정되는 변수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실질GDP 성장률을 추세부분과 순환부분으로 분리한 후, 추세부분을 잠재성장률의 변동으로 추출하는 HP 필터링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기타요소투입 등의 요소투입량의 잠재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잠재성장률의 변동요인을 제시한다.

2027년 잠재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은 실질GDP 성장률이 2.7%로 전망되기 때문에 2026년 잠재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경제분석관(gskim01@assembly.go.kr, 6788-4670)

잠재성장의 투입요소를 노동, 자본 및 기타요소로 구분하고 각 투입요소 잠재치의 잠재성장률 기여도의 변화를 통해 2026년과 2027년의 잠재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표 V-2] 연도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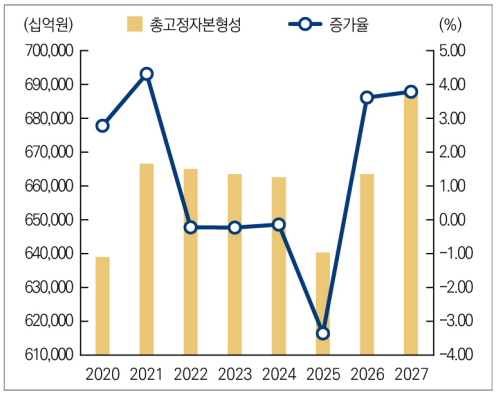
연도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기타요소
2020	2.42	-0.26	1.10	1.55
2021	2.45	-0.22	1.11	1.53
2022	2.35	-0.18	0.99	1.51
2023	2.26	-0.14	0.86	1.52
2024	2.23	-0.13	0.79	1.55
2025	2.14	-0.13	0.65	1.60
2026	2.22	-0.14	0.68	1.66
2027	2.28	-0.16	0.70	1.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14%p, 2027년 -0.16%p로 2024~2025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총노동투입량, 즉, 「취업자수×평균노동시간」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인구증가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평균노동시간은 통상적으로 주당평균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2020년 이후 총노동투입량은 평균노동시간의 추세적인 감소 및 인구감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계속 음이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2025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보였고 및 주당평균노동시간의 감소폭도 둔화되어 전체적인 총노동투입량이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음이지만, 그 값은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2026년과 2027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의 증가추세가 예상되지만, 주당평균노동시간의 감소폭이 더 커서 전체적인 총노동투입량의 감소폭이 이전 시기보다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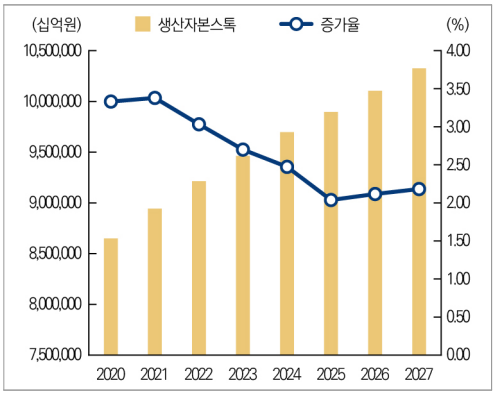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68%p, 2027년 0.7%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까지 지속되었던 감소추세가 2026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총자본투입량, 즉, 경제전체의 생산자본스톡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자본스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 누적액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영구재고법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22~2025년 기간 중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이 감소하였고 이는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의 증가를 둔화(생산자본스톡 증가율 감소)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율의 감소로 인해 2022~2025년까지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1.11%p에서 0.65%p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그림 V-10]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주: 2026~2027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11] 생산자본스톡 추이



주: 2025~2027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반면 2026년 이후에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인프라 관련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인 총고정자본형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V-10]). 이러한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는 2026~2027년의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율을 이전 시기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그림 V-10]) 이에 따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이전 시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1.66%p, 2027년 1.72%p로 모두 1%p 이상의 양(+)의 기여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자본과 노동 등 단일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한 잠재성장률 기여분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계산할 때, 노동은 시간 단위로, 자본은 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두 투입요소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할 뿐, 질적인 측면은 고려할 수 없다. 반면 생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자동화·AI로의 전환) 등에 의한 노동과 자본의 질적 향상은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생성형 AI의 도입과 확산은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말 생성형 AI가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생산과정에서 AI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장과 직무에서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는 중기시계에서 총요소생산성(TFP), 즉, 기타요소의 생산성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잠재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도입 직후 바로 나타나지 않으며, AI가 생산과정과 경제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확산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AI의 도입률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생성형 AI의 출시 5년 이후인 2027년 이후부터 AI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점진적으로 거시경제 전체적인 기타요소의 생산성 증가 혹은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7년의 잠재성장률과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각각 0.01%p를 추가하여 반영하였다.[150] 이러한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AI가 생산과정에 실제 도입·활용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 AI 확산률(diffusion rates)에 의해 결정되며, AI 확산률은 잠재성장률의 상방요인이 된다.

150) "국회예산정책처(2026.6),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OECD 주요국 비교」, NABO 대외경제 동향 & 이슈(제6호)"에 의하면 생성형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우리나라는 10년간 누적 약 4.0%, 연평균 0.4%의 생산성 증가(총요소생산성 증가 혹은 기타요소 생산성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AI 확산률이 S자 형태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초기 2~5년간 생산성 증가는 0.01%~0.03% 증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BOX 15]를 참조.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3%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2.2	2.3	2.3	2.3	2.3	2.3	2.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6년 2.2% 수준에서 2027년 2.3%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 2028~2030년에는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전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3%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소수점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점검하여 보면, 2026년 2.22%에서 2028년 2.31%까지 증가한 후 2030년에는 2.29%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6~2030년 시계 내에서 잠재성장률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9년 이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3] 연도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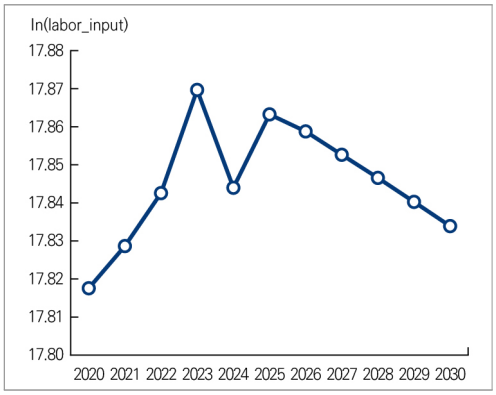
연도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기타요소
2001~2005	5.2	0.2	2.3	2.5
2006~2010	4.2	0.1	1.9	2.1
2011~2015	3.2	0.1	1.5	1.6
2016~2020	2.8	-0.2	1.4	1.6
2021~2025	2.3	-0.2	0.9	1.5
2026~2030	2.3	-0.2	0.7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산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전망을 통해 향후 잠재성장률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2030년 동안 연평균 −0.2%p로 이전 5년(2021~2025년) 동안의 연평균 기여도(-0.2%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음(-)의 기여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 기준으로 기여도를 살펴볼 때,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1년 −0.22%p에서 2025년 −0.13%p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2026년 −0.14%p에서 2030년 −0.20%p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6~2030년 시계 내에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음의 기여도를 가지며,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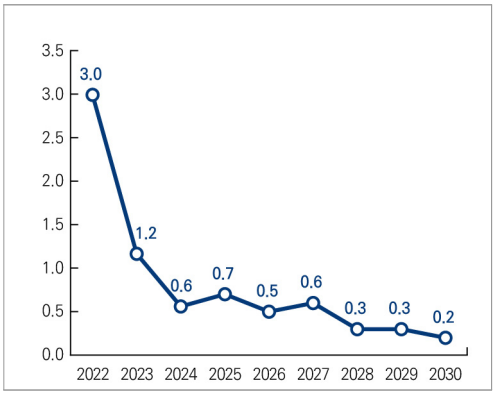
총노동투입량은 (주당)평균노동시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2025~2030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4.6%에서 64.9%로 증가할 전망이고, 취업자수 증가율은 0.7%에서 0.2%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주당평균노동시간은 38.2시간에서 36.3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평균노동시간의 감소가 경제활동참가와 취업자수 증가를 압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노동투입량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향후 5년간 음(-)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V-12] 총노동투입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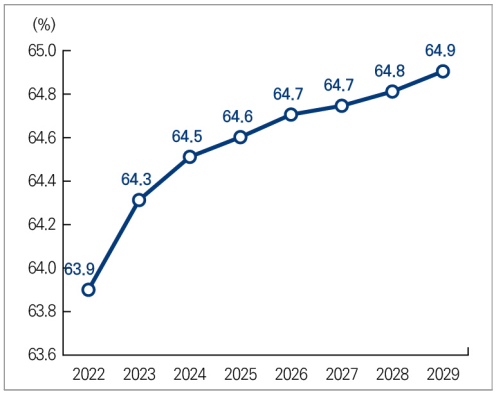
주: 총노동투입량은 「취업자수×평균노동시간×(365/7)」으로 계산되며, 2026년부터는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13]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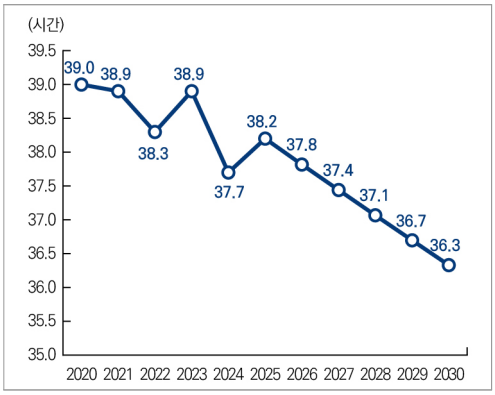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V-14]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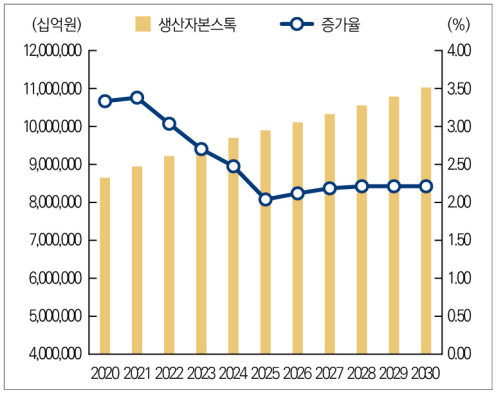
[그림 V-15] 주당평균노동시간 전망



주: 2026년부터는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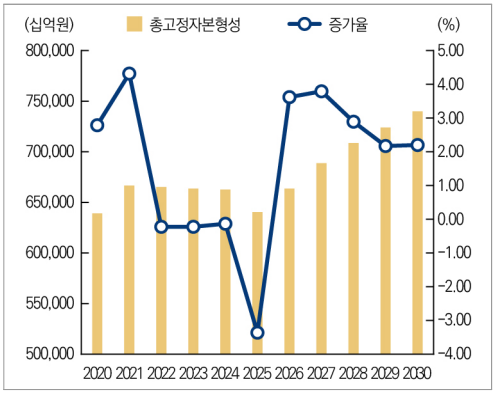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2030년 동안 연평균 0.7%p로 전망된다. 이는 이전 5년(2021~2025년)에 비해 연평균 0.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2026년 이후 연간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6년 0.68%p, 2027년 0.7%p, 2028년 0.71%p, 2030년 0.71%p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6~2030년 시계 내에서는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자본투입량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추세와 자본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추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V-16] 총생산자본스톡 전망



주: 2025년부터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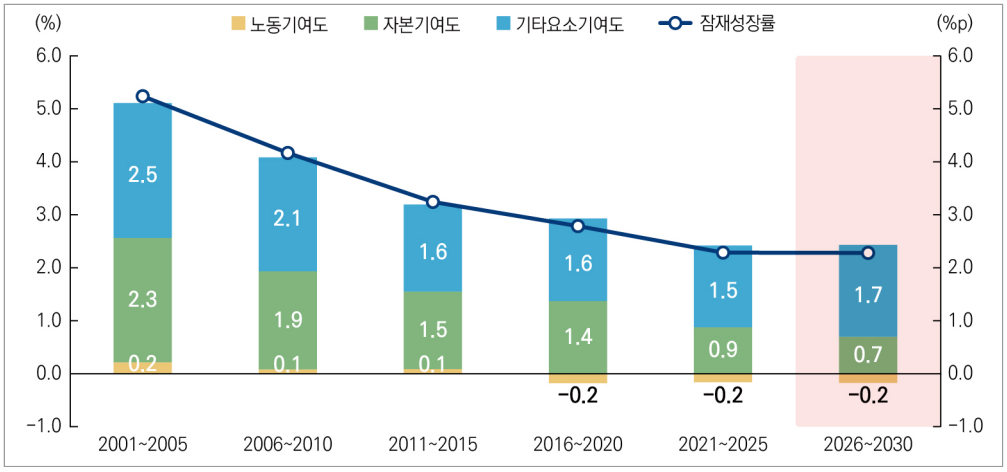
[그림 V-17] 총고정자본형성 전망



주: 2026년부터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2025년 동안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동안의 총생산자본스톡의 증가율도 상당폭 감소하여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해당 기간 동안에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26년에는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이 3.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7년에는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9년 2.2%, 2030년 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5년 2.0%까지 하락하였던 총생산자본스톡의 증가율이 2026년에는 2.1%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8년 이후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22~2025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2026년 이후 부터는 총고정자본형성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면서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율 하락세가 꺾이고 이후 반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중기시계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V-18]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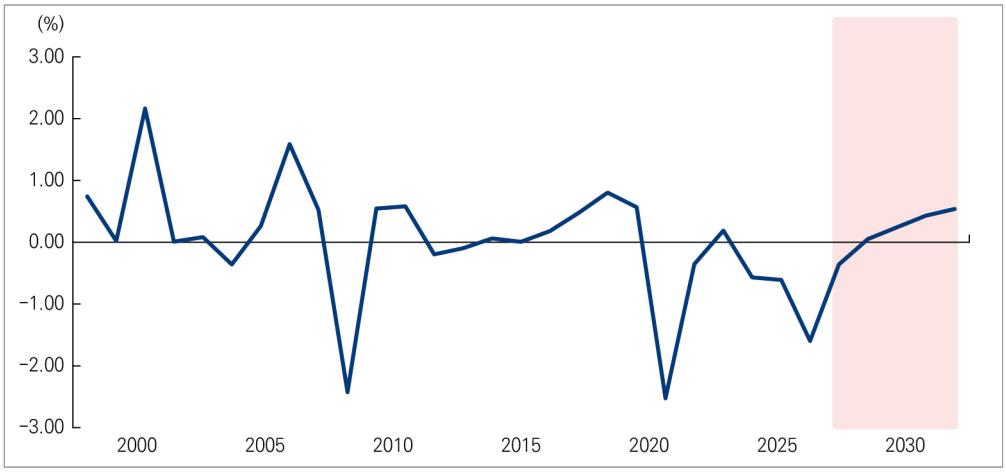
다음으로 향후 5년간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의 평균은 이전 5년에 비해 0.2%p 증가한 1.7%p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제외한 기타요소가 잠재성장률에 기여한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요소에는 노동과 자본의 기술적 결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AI 전환 및 디지털전환 등에 의한 성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과 자본에 비해 기타요소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번 잠재성장률 전망에서부터 생성형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에 반영하여, 2027~2030년까지의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평균 0.01~0.03%p 반영하였다.

따라서 2026~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노동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AI와 반도체 관련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AI의 활용률 제고로 인한 생산성 개선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GDP갭률은 실질GDP과 잠재GDP 추정치 간 차이의 비율로 정의되며, GDP갭률이 양(+)이면 초과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 음(-)이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압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2026년에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면서 GDP갭률이 음(-)의 값을 유지하였지만, 2027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상회하면서 GDP갭률이 양(+)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림 V-19] 연도별 실질GDP갭률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BOX 15]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추정

Acemoglu(2024)의 이론적 방법론 토대로 최근의 OECD(202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추정한다.

Acemoglu(2024)는 Hulten' theorem을 이용하여 AI로 인한 미시적인 생산성 향상을 거시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과 GDP의 증가로 연결시켰다. AI의 생산성 증가를 결정하는 모수값을 생성형 AI의 초기단계에서 조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생산성 증가를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OECD(2025)는 G7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산업별 AI 노출도와 도입률을 기존 문헌을 토대로 계산하여 각 국가별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도출하였다.

AI로 인한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가 미시적 생산성 증가,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도입률의 곱으로 결정(식 1)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Delta \ln TFP = \sum_{j=1}^{J} \delta_j \Delta \ln TFP_j = \bar{\pi} \times \sum_{j=1}^{J} \delta_j ex_j \times \sum_{j=1}^{J} \delta_j ado_j \quad (1)$$

여기서 $\Delta \ln TFP$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로그값, δ_j는 j산업의 GDP(부가가치) 비중, $\bar{\pi}$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 ex_j는 j산업의 평균 AI 노출도, ado_j는 j산업의 AI 도입률 증감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 산업별 가중평균 AI 노출도 ($\sum_{j=1}^{J} \delta_j ex_j$), 산업별 가중평균 AI 도입률 증감($\sum_{j=1}^{J} \delta_j ado_j$) 등 3가지 항목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와 산업별 가중평균 AI 도입률 증감($\sum_{j=1}^{J} \delta_j ado_j$)은 기존 문헌과 OECD의 조사자료를 참조, 산업별 가중평균 AI 노출도는 OECD 및 ILO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는 AI가 전체적인 직무수준(task level)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실험적인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인 0.3를 적용하였다.

AI의 미시적 생산성 증가를 연구한 기존 7개 선행연구의 추정치의 평균값(0.37)에 과대 추정 가능성을 감안하여 표준오차를 반영하여 0.3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산업별 가중평균 AI 도입률은 OECD(2026)[151]가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OECD(2026)는 AI 도입률(adoption rates)을 AI가 실제 생산과정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각국별 설문조사와 미시데이터[152]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OECD(2025)는 각국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2025년 기준) 수준의 AI 도입률을 구한 후, AI 도입률이 향후 S자 형태의 시간적 추세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기존 GPT 기술인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초기 도입률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중기 이후에는 도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도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을 반영하였다.

OECD(2026)에 의하면 향후 10년 간 미국, 영국, 한국 등의 AI 도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AI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은 2026년 현재 도입률은 6% 수준이고 10년 후에는 도입률이 50%로 추정되어 도입률이 44%p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은 2026년 현재 도입률은 5% 수준이고 10년 후에는 도입률이 48%로 추정되어 도입률이 4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값들을 토대로 AI 생산성 증가 추정 결과AI의 산업별 노출도와 이를 부가가치로 가중평균한 AI 노출도 및 AI의 산업별 도입률의 차이가 국가간 생산성 증가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계산결과에 의하면 AI로 인한 한국의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는 4.4%p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44%일 것으로 추정된다.

151) OECD(2026), 「AI meets trade : Global linkages and the cross-country distribution o the gains from AI」,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152) 직전 2주 이상 적어도 1번 이상 직무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임.

제2절 성장기여도

1. 2027년 전망

▪ **2027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노동은 -0.4%p, 자본은 0.8%p, 기타요소는 2.3%p로 전망

(전년대비 %, %p)

	2025	2026	2027
경제성장률	1.1	3.5	2.7
노동	-0.2	-0.4	-0.4
자본	0.7	0.7	0.8
기타요소	0.6	3.2	2.3

주: 1.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 구성항목은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취업자 수 증가	• 근로시간 단축
•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	• 생산자본스톡 증가세의 제한적 확대
• 기업의 AI 전환	

2026년과 2027년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3.5%와 2.7%로 전망되며, 경제성장률과 투입요소의 변화에 따라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기여도는 두 해 모두 -0.4%p를 기록하는 반면, 자본기여도는 0.7~0.8%p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타요소 기여도는 2026년 3.2%p에서 2027년 2.3%p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취업자 수와 주당평균노동시간을 결합한 총노동투입량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2026년과 2027년 취업자 수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보건·사회복지 및 디지털 분야의 인력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0.5%, 0.4%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정 경제분석관(eunjungkang@assembly.go.kr, 6788-4680)

반면 주당평균노동시간은 일·생활 균형 확산과 단시간·유연근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1.0%, 2027년 1.1% 감소할 전망이다.[153] 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취업자 수 증가 효과를 상회함에 따라 총노동투입량은 각각 0.6%, 0.7% 감소하고,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두 해 모두 -0.4%p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V-4] 노동의 성장기여도 전망 및 결정요인 추이

(단위: %p, 전년대비 %, %)

연도	노동기여도	총노동투입량	결정요인 추이		
			취업자 수	주당평균 노동시간	경제활동 참가율
2025	-0.2	-0.2	0.6	-0.9	64.6
2026	-0.4	-0.6	0.5	-1.0	64.7
2027	-0.4	-0.7	0.4	-1.1	6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0.7%p를 기록한 후 2027년에는 0.8%p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2025년 3.4% 감소하였으나,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3.6%, 3.8%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생산자본스톡 증가율도 2025년 2.0%에서 2026년 2.1%, 2027년 2.2%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신규 투자가 기존 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투자 회복이 자본스톡 증가율과 자본기여도의 큰 폭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54] 이에 따라 자본기여도는 2027년에도 0.8%p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편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확대는 자본기여도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등이 위축될 경우 자본기여도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3)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는 2025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4) 자본축적식 $K_t = (1-\delta_t)K_{t-1} + I_t$에 따르면 자본스톡 증가율은 $\Delta K_t / K_{t-1} = I_t / K_{t-1} - \delta_t$로 나타난다. 따라서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더라도 신규 투자가 기존 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자본스톡 증가율의 상승폭은 제한된다. 본 전망에서 2025~2027년 총고정자본형성이 전년도 생산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6~6.8% 수준이다.

[표 V-5] 자본의 성장기여도 전망 및 결정요인 추이

(단위: %p, 전년대비 %)

연도	자본기여도	총생산자본스톡	결정요인 추이	
			총고정자본형성	감가상각
2025	0.7	2.0	-3.4	4.6
2026	0.7	2.1	3.6	4.6
2027	0.8	2.2	3.8	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실질GDP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차감한 성장회계상 잔차로 산출된다. 2026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3.5%로 높아지는 반면 노동기여도는 -0.4%p, 자본기여도는 0.7%p에 머물면서 기타요소 기여도가 2025년 0.6%p에서 3.2%p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7%로 낮아지고 자본기여도가 0.8%p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기타요소 기여도는 2.3%p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타요소에는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가동률 상승, 산업 간 자원 재배분, 노동의 질적 변화 및 측정오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기타요소 기여도의 확대를 순수한 기술혁신이나 기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6]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전망 및 결정요인 추이

(단위: %p, 전년대비 %)

연도	기타요소기여도	결정요인 추이		
		실질GDP 성장률	노동기여도	자본기여도
2025	0.6	1.1	-0.2	0.7
2026	3.2	3.5	-0.4	0.7
2027	2.3	2.7	-0.4	0.8

주: 구성항목은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자본과 기타요소는 양(+)의 성장기여도를 보이며, 노동은 음(-)의 성장기여도를 보임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4%p로 예상
-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0.7~0.8%p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2.3%p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전망

(전년대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경제성장률	3.5	2.7	2.5	2.5	2.4	2.5	2.7
노동	-0.4	-0.4	-0.3	-0.5	-0.5	0.6	-0.4
자본	0.7	0.8	0.8	0.8	0.7	0.9	0.7
기타요소	3.2	2.3	2.0	2.2	2.1	1.0	2.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중기전망에 따르면 2026~2030년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4%p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자본은 연평균 0.7%p, 기타요소는 2.3%p 기여하며, 기타요소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2026~2030년 노동기여도는 연평균 -0.4%p로, 이전 5년(2021~2025년)의 0.6%p에서 1.0%p 하락할 전망이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155] 주당평균노동시간 감소의 영향이 이를 상회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기여도는 같은 기간 0.9%p에서 0.7%p로 낮아지는 반면, 기타요소 기여도는 0.9%p에서 2.3%p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2030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이전 5년보다 0.3%p 높아지며, 성장의 중심도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보다 기타요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55)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층·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보건·사회복지 및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수요 확대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2024~2029년 중 36.7만명 증가한 후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26),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표 V-7]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p)

연도	경제성장률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노동	자본	기타요소
2000~2004	4.9	0.3	2.3	2.2
2005~2009	4.3	-0.1	1.9	2.5
2010~2014	3.1	0.6	1.5	1.0
2015~2019	2.2	-1.1	1.4	2.0
2021~2025 (이전 5년)	2.5	0.6	0.9	1.0
2026~2030 (향후 5년)	2.7	-0.4	0.7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산

제3절 금리

1. 2027년 전망

- **2027년 국고채(3년) 금리**는 전년대비 0.1%p 하락한 3.5%를 기록할 전망
- **2027년 국고채(10년) 금리**는 전년대비 0.1%p 하락한 3.8%를 기록할 전망
- **2027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전년대비 0.3%p 하락한 4.0%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고채(3년)	2.4	3.4	3.8	3.6	3.6	3.3	3.5
국고채(10년)	2.7	3.8	4.1	3.9	3.9	3.6	3.8
회사채(3년, AA-)	3.0	4.0	4.5	4.3	4.2	3.9	4.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경제 성장세 개선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완화
•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2026년과 국고채(3년, 10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는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며 기조 전환을 하였고, 8월 27일에 두 달 연속 인상하며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또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향후 물가상승률의 둔화와 경제 성장세의 완화에 따라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국고채(3년물) 금리는 상반기 3.4%, 하반기 3.8%, 연간 3.6%로 예측되고, 2027년 상반기 3.6%, 하반기 3.3%, 연간 3.5%로 전년대비 0.1%p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국고채(10년물) 금리는 상반기 3.8%, 하반기

4.1%, 연간 3.9%로 예측되며, 2027년 상반기 3.9%, 하반기 3.6%, 연간 3.8%로 전년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상반기 4.0%, 하반기 4.5%, 연간 4.3%로 전망되고, 2027년 상반기 4.2%, 하반기 3.9%, 연간 4.0%로 전년대비 0.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리 변동 요인으로 경제의 성장세 개선과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수출 호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세 개선과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채 추가 발행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AI 관련 채권 발행 확대[156] 등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AI 기업들의 추가 자본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외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 전망의 단기적 상승 요인임과 동시에 중장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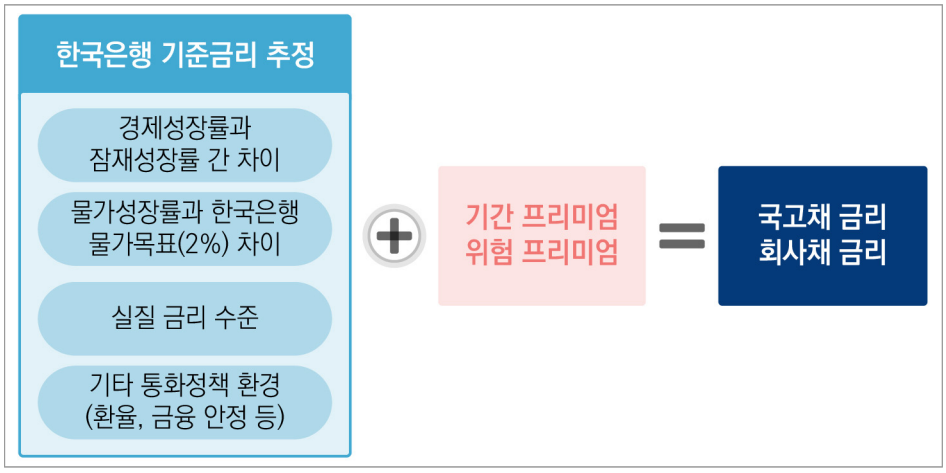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6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3.0%를 기록하여 한국은행 정책목표 수준인 2%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세도 상향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경제의 과열을 완화하고 있어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56) AI 관련 기업의 공모 달러채 발행액은 2023년 290억 달러에서 2026년 8월까지 2,300억 달러로 크게 증가(강현주,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6.)

[BOX 16] 우리나라 금리 전망 방식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 전망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157]을 기초로 모형을 구축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정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기준금리와 국채 간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과 국채와 회사채 간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 등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전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잠재성장률 및 전망치, 물가상승률 및 전망치, 장기균형실질금리 및 전망치 등 기초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국고채/회사채 금리 전망 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57)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목표치 2%와의 차이인 물가상승률갭,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차이인 총산출갭, 장기균형실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aylor, John B., "Discretion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 39, North-Holland, 1993.).
기준금리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 α_π(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목표치) + α_y(경제성장률 − 잠재성장률),
α_π, α_y는 각각 물가상승률갭(inflation gap)과 총산출갭(output gap)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2. 중기 전망

▪ **2026~2030년 중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연평균 각각 3.2%, 3.4%, 3.8%를 기록할 전망

– 지난 5년(2021~2025년)에 비해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은 각각 연평균 0.4%p, 0.4%p, 0.3%p 상승할 전망

(전년대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2025	2026~2030
국고채(3년)	3.6	3.5	3.2	2.9	2.8	2.8	3.2
국고채(10년)	3.9	3.8	3.4	3.1	3.0	3.0	3.4
회사채(3년, AA-)	4.3	4.0	3.7	3.3	3.2	3.5	3.8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6~2030년 국고채(3년, 10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 전망을 위해 최근 경제 성장세 개선과 중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을 고려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였다. 금리 전망 방식과 기초자료는 제1절 2027년 전망에서 설명한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을 기초로 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정 모형을 중장기로 확장하고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가산금리를 고려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국고채(3년, 10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3년) 금리는 2026~2030년 연평균 3.2%로 전망되어 2021~2025년의 연평균 금리인 2.8% 대비 0.4%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 전망치는 2027년 3.5%, 2028년 3.2%, 2029년 2.9%, 2030년 2.8%로 예상된다. 국고채(10년) 금리는 2026~2030년 연평균 3.4%로 전망되어 2021~2025년의 연평균 금리인 3.0%보다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 전망치는 2027년 3.8%, 2028년 3.4%, 2029년 3.1%, 2030년 3.0%로 전망된다. 회사채(3년, AA-) 금리는 2026~2030년 연평균 3.8%로 전망되어

2021~2025년의 연평균 금리인 3.5%보다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3년, 10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의 2026~2030년 연평균 전망치가 2021~2025년 연평균 금리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최근 글로벌 중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 물가 상승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정부 지출 및 부채 확대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유럽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금리 부문 중기 전망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의 전망 수치를 근거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침체, 지정학적 분쟁 확대, 전 세계 무역 갈등 심화 등과 같이 우발적인 요소에 의한 우리나라 경제의 여건 변화, 단기적인 가산금리 변동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인 변화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금리의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경제 여건에 의하여 느리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NABO Economic Outlook for 2027)

발간일	2026년 9월 3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더서울미디어㈜ (tel 02 · 2274 · 3588)

ISSN 3058-552X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6-002180-10
ISSN	3058-552X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